

K o r e a n S o c i a l T r e n d s 2 0 0 8



발간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경제적 풍요가 양적인 충실도를 의미한다면, 질적인 충실도는 인간 개개인의 다양한 가치관에 대응한 사회적·문화적 욕구충족의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발전의 정도가 낮은 단계에서는 개개인의 욕구가 경제적 풍요라는 단선적인 목표를 중시하지만, 사회발전의 진전과 개인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가족, 교육, 문화, 여가, 주거, 보건, 복지, 환경, 안전 등에서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즉, 사회의 발전과 함께 개인의 가치관이나 개인적·사회적 관심분야는 다양해지고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얼마나 충족되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될 것이다.

국가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할 때, 국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현재 국가가 어떤 발전단계에 있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분야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또 적절한 발전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는 그 명칭은 다소 다르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의 ‘삶의 질’의 측정지표로서 통계청이 「한국의 사회지표」를 매년 작성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13개 분야에 걸쳐 488개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 통계는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와 측면에 대해 계량화된 수치를 통해 현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숫자의 나열이 갖는 무미건조함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지표 통계가 갖는 의미를 좀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보고서를 출판하고 있는데, 이는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통계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Social Indicators, 영국, 호주, 캐나다의 Social Trends 등이 그 대표적인 사회보고서(social report)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동향』은 『한국의 사회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석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단계와 한국인의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발간되는 보고서이다. 그 기본틀에 대한 연구는 통계개발원의 주도하에 에스콰이어학술문화재단의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참여하여 수행되었다. 통계개발원은 앞으로 사회동향보고서를 연차보고서로서 매년 지속적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본 보고서는 사회동향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인 만큼 12개 전 분야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앞으로는 매년 주제를 달리하면서 특정 주요 사회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한국의 사회동향 2008』 연구는 에스콰이어학술문화재단 석현호 이사장의 연구책임과 9명의 TF가 구성되어 수행되었다. TF에 참여한 공동연구자는 구혜란 박사(한국사회과학자료원), 강상진 교수(연세대학교), 박경숙 교수(서울대학교), 이재열 교수(서울대학교), 장지연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조병희 교수(서울대학교), 최진호 교수(아주대학교), 이희길 박사(통계개발원), 심수진 주무관(통계개발원)이다. 이들은 보고서 체계를 설계하고 2008년도 보고서의 집필과 편집을 담당하였으며, 이 분들 외에도 공성용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권순만 교수(서울대학교), 김경근 교수(고려대학교), 김선희 박사(국토연구원), 김옥 교수(배재대학교), 김재익 교수(세명대학교), 박찬임 박사(한국노동연구원), 배영 교수(송실대학교), 윤옥경 교수(경기대학교), 윤인진 교수(고려대학교), 이선이 교수(아주대학교), 이성용 교수(강남대학교), 전광희 교수(충남대학교), 정무권 교수(연세대학교), 정진주 교수(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최섯별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최석호 교수(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가 집필자로 참여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편집위원을 비롯한 집필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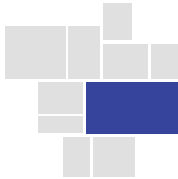
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통계개발원은 담당집필자의 견해를 존중하였다.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서를 집필하도록 요청하였을 뿐, 특정한 결론이나 관점을 유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에서 포함된 모든 내용은 해당 집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통계청 혹은 통계개발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8. 12.

통계개발원장 이 재 형

한국의 사회동향 2008

Korean Social Trends 2008



연구수행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협력기관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편집자 석현호 (에스콰이아학술문화재단 이사장)
이희길 (통계개발원)
구혜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
심수진 (통계개발원)

집필자 강상진 (연세대학교)
공성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권순만 (서울대학교)
김경근 (고려대학교)
김선희 (국토연구원)
김 욱 (배재대학교)
김재익 (계명대학교)
박경숙 (서울대학교)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배 영 (숭실대학교)
윤옥경 (경기대학교)
윤인진 (고려대학교)
이선이 (아주대학교)
이성용 (강남대학교)
이재열 (서울대학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전광희 (충남대학교)
정무권 (연세대학교)
정진주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조병희 (서울대학교)
최섿별 (이화여자대학교)
최석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최진호 (아주대학교)

디자인 김대훈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윤수연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서론 · 1

I. 인 구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 6

출산력의 급격한 하락 · 17

국제이주인구의 증가 :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 24

II. 가족과 가구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 32

가구 구성의 변화와 노인가구의 급증 · 42

초혼연령과 미혼율의 상승 · 49

III. 교 육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 60

최근 학교교육 성취도의 변화 · 73

교육수준의 비약적 상승 · 79

IV. 노 동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 90

고용의 안정성과 비정규직 · 101

중·고령자 노동시장과 근로생애 · 106

V. 소득과 소비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 114

소득분배와 빈곤율의 추이 · 123

교육비 지출수준과 구성의 실태와 변화 추이 · 130

VI.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 140

문화예술 향유실태 · 149

관광산업의 성장과 입출국 여행객수의 증가 · 156

VII. 주거와 교통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 164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 175

대도시권 통근·통학의 광역화 • 182

VIII. 보 건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 192

과다한 의료비 부담 • 202

나이지지 않는 주관적 건강상태 • 207

IX. 복 지

복지 부문의 주요 변화 • 216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문제 • 22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빈곤문제 • 236

X. 환 경

환경 부문의 주요 변화 • 246

대기오염 수준의 변화 • 254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 • 261

XI. 사회안전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 268

자연재난, 어떻게 변했나 • 280

증가하는 ‘흉악범죄’ • 284

XII. 사회통합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 292

투표참여의 감소와 세대 간 차이 • 303

가치관과 일상생활에서의 세대격차 • 309

용어해설 • 318

표 목차

- 010 <표 I-1> 고령화 속도의 국제비교
- 018 <표 I-2> 출생아수, 조출산율, 합계출산율 및 출생성비:1970-2007
- 019 <표 I-3> 연령별 출생아수의 구성비:1980-2007
- 021 <표 I-4> 시·도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2007
- 028 <표 I-5> 국제결혼 추세:1997-2007
-
- 033 <표 II-1> 가족과 가구구성의 변화:1975-2005
- 034 <표 II-2> 65세 이상 노인의 가구형태:1980-2005
- 034 <표 II-3> 국가 간 초혼연령 비교
- 043 <표 II-4> 인구 및 가구 변동 추이:1980-2005
- 047 <표 II-5> 전체 가구 중 노인가구 비율의 변화:1980-2005
- 047 <표 II-6> 65세 이상 인구의 세대구성:1990, 2000, 2005
- 050 <표 II-7> 시·면부 및 성별 평균 초혼연령:1975-2007
- 053 <표 II-8> 성별 코호트의 도달 연령대 미혼율
- 055 <표 II-9> 성·연령별 미혼자의 거주형태:1995, 2000, 2005
-
- 063 <표 III-1> 고등교육기관 재적 학생수:1970-2007
- 065 <표 III-2> 각급 학교의 학급규모별 학급수:2007
- 067 <표 III-3> 각급 학교의 학급당 교사수:1980, 2007
- 067 <표 III-4> 국·공립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1970-2007
- 069 <표 III-5> 각급 학교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1970-2007
- 070 <표 III-6> 한국과 OECD 국가의 각급 학교별 학생 1인당 평균 공교육비:2004
- 070 <표 III-7> 한국 중등학생의 국제 학업성취도 순위
- 072 <표 III-8> 한국 중등학생의 수학 관련 심리적 특성과 학습전략:PISA 결과
- 074 <표 III-9> 지역별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추이:2003-2005
- 075 <표 III-10> 부모의 학력수준별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추이:2003-2005
- 075 <표 III-11> 지역별 중학교 학업성취도 추이:2003-2005
- 076 <표 III-12> 부모의 학력수준별 중학교 학업성취도 추이:2003-2005
- 077 <표 III-13> 지역별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추이:2003-2005
- 077 <표 III-14> 부모의 학력수준별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추이:2003-2005
- 080 <표 III-15> 교육단계별 취학률:1970-2007

- 082 <표Ⅲ-16> 교육단계별 진학률:1970-2007

- 094 <표Ⅳ-1> 성·연령별 비임금근로자 비율:2007
- 096 <표Ⅳ-2> 성·연령별 임금근로자 비율:2007
- 099 <표Ⅳ-3> 기업규모별 월평균 임금 및 근로조건(5~9인 사업체 기준):2006
- 104 <표Ⅳ-4> 한시적 근로와 시간제 근로 비율의 국제비교:2006
- 104 <표Ⅳ-5>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분포:2001-2007
- 105 <표Ⅳ-6>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산업별 월평균 임금 및 시간당 임금 수준(정규직 대비):2008
- 109 <표Ⅳ-7> 종사상 지위별 고령취업자의 비율:2007
- 109 <표Ⅳ-8> 직업별 고령취업자의 비율:2007
- 109 <표Ⅳ-9> 성·연령별 저임금근로자의 비율:2002
- 111 <표Ⅳ-10> 생애 첫 일자리와 주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2007

- 120 <표Ⅴ-1>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의 지출항목별 지출액과 구성 비율:2007
- 126 <표Ⅴ-2> 시장소득에 대한 가처분소득의 소득분배 개선 및 빈곤감소 효과:1990-2007
- 132 <표Ⅴ-3> 교육비 지출구성비:1982-2007

- 144 <표Ⅵ-1>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극장매출액, 관객수 및 1인당 연평균 관람횟수:1996-2005
- 147 <표Ⅵ-2> 여가활용 방법:1984-2007
- 148 <표Ⅵ-3> 여가활동별 평균 활용시간 비교:1999, 2004
- 158 <표Ⅵ-4> 숙박 및 당일 관광 총 일수:1995-2006
- 159 <표Ⅵ-5> 내국인 해외여행객의 여행지 순위:1997-2005
- 159 <표Ⅵ-6> 국적별 외국인 입국자 수와 순위:2006

- 165 <표Ⅶ-1> 주택보급률:1970-2006
- 166 <표Ⅶ-2> 연간 주택 건설실적:1980-2006
- 170 <표Ⅶ-3> 최초 주택마련 시기 및 평균 소요년수와 평균 이사횟수:1987-2004
- 171 <표Ⅶ-4> 자가용 등록대수 및 가구당 자가용 대수:1980-2005
- 171 <표Ⅶ-5> 가구당 월평균 교통비 지출:1985-2005
- 172 <표Ⅶ-6> 통근·통학 교통수단:1990-2005
- 173 <표Ⅶ-7> 지역별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교통문제:1997, 2001, 2004
- 176 <표Ⅶ-8> 지역별 가구의 주거시설 비율의 변화:1980-2005
- 177 <표Ⅶ-9> 주택형태별 방당 인원수의 변화:1970-2005

178	〈표 VII-10〉 시도별 자가소유율:1992-2004
180	〈표 VII-11〉 시도별 주택만족도와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1992-2004
183	〈표 VII-12〉 시도별 통근·통학자의 이용 교통수단:2005
185	〈표 VII-13〉 시도별 주요 교통수단별 소요 통근시간:2005
186	〈표 VII-14〉 통근·통학 방향별 대도시권의 통근·통학 인구와 비율:2005
187	〈표 VII-15〉 대도시권 통근자의 통근방향별 평균 소요시간:2005
187	〈표 VII-16〉 대도시권 통근자의 통근방향별 승용차 이용률:2005
188	〈표 VII-17〉 통근방향별 수도권 통근자의 특성:2005
194	〈표 VIII-1〉 성별 2주간 유병률:1995-2006
196	〈표 VIII-2〉 사망원인별 인구 10만명당 사망률:1995-2007
197	〈표 VIII-3〉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1995-2006
198	〈표 VIII-4〉 운동실천율과 비만율:1998, 2001, 2005
198	〈표 VIII-5〉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의 추이:1985-2006
199	〈표 VIII-6〉 의료시설의 추이:1985-2005
203	〈표 VIII-7〉 4대 질환 진료비와 환자부담률:2003-2004
205	〈표 VIII-8〉 가계지출 중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1986-2004
210	〈표 VIII-9〉 거주지별 주관적 건강상태:1998, 2001, 2005
211	〈표 VIII-10〉 가구소득별 주관적 건강상태:1998, 2001, 2005
212	〈표 VIII-11〉 취업자, 전업주부, 무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1998, 2001, 2005
219	〈표 IX-1〉 전체의료비 중 공공지출 의료비 비율:1985-2006
223	〈표 IX-2〉 노인인구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1999-2006
223	〈표 IX-3〉 사회복지시설수:1996-2006
224	〈표 IX-4〉 양로시설수:2000-2006
224	〈표 IX-5〉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2005, 2007
225	〈표 IX-6〉 아동복지 수요자수:1996-2006
226	〈표 IX-7〉 보육시설수:1996-2006
237	〈표 IX-8〉 월평균 최저생계비:2008, 2009
239	〈표 IX-9〉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유형:2007
240	〈표 IX-10〉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제활동 및 고용 상태:2007
247	〈표 X-1〉 총인구, 국민소득, 도시화율 및 수도권 집중도:1960-2006

247	〈표 X-2〉 지목별 토지이용 구성비:1984-2006
248	〈표 X-3〉 최종 에너지소비량(TOE)과 1인당 최종 에너지소비량:1985-2006
248	〈표 X-4〉 오수 및 폐기물 발생량:1981-2005
249	〈표 X-5〉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도:1997, 2001, 2005
250	〈표 X-6〉 대도시 대기오염도와 대기오염에 대한 체감도:1997, 2001, 2005
250	〈표 X-7〉 대도시 대기오염도(아황산가스(SO ₂)와 오존(O ₃)):1990-2006
251	〈표 X-8〉 4대강의 수질오염도:1985-2007
252	〈표 X-9〉 상수도의 급수량과 보급률 그리고 하수도의 처리시설과 보급률:1980-2006
252	〈표 X-10〉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현황:1998-2005
253	〈표 X-11〉 환경예산 및 지출 비율:1992-2006
253	〈표 X-12〉 환경보호지출:2001-2005
257	〈표 X-13〉 대도시별 오존주의보 발령일수와 발령횟수:1996-2006
263	〈표 X-14〉 국내 온실가스 부문별 배출량:1990-2005
264	〈표 X-15〉 각 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비교
265	〈표 X-16〉 국민 1인당 및 GDP 100만원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1990-2005
265	〈표 X-17〉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2005-2020
274	〈표 XI-1〉 국가 간 산업재해 비교
275	〈표 XI-2〉 국가 간 자동차 10,000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비교:2005
277	〈표 XI-3〉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2005
278	〈표 XI-4〉 자살자수의 국제비교
278	〈표 XI-5〉 연령대별 사망원인 1순위 사망률:2006
279	〈표 XI-6〉 연령별 자살충동 여부 및 이유:2006
281	〈표 XI-7〉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1996-2005
282	〈표 XI-8〉 남북한 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수와 이재민수 비교
283	〈표 XI-9〉 인명피해 순위로 본 역대 태풍
283	〈표 XI-10〉 재산피해 순위로 본 역대 태풍
285	〈표 XI-11〉 '흉악범죄' 발생 추이:1996-2006
287	〈표 XI-12〉 '흉악범죄' 유형별 발생건수와 발생률:1996-2006
294	〈표 XII-1〉 개업변호사 및 공증사무소 증가 추이:1997-2007
296	〈표 XII-2〉 일반신뢰의 국제비교
299	〈표 XII-3〉 불법폭력시위 발생건수 및 부상 경찰관수:1993-2007

300	〈표 XII-4〉 주관적인 계층귀속감의 변화:1999, 2003, 2006
300	〈표 XII-5〉 주관적 계층귀속감에 따른 본인과 자식세대 계층이동가능성에 대한 인식:2006
301	〈표 XII-6〉 UNDP 남녀평등지수 및 여성권한척도의 한국순위와 점수:1999-2006
301	〈표 XII-7〉 연도별 인터넷 이용률:1999-2006
305	〈표 XII-8〉 도시규모별 투표여부(2006년 지방선거)
306	〈표 XII-9〉 연령별 투표여부(2006년 지방선거)
308	〈표 XII-10〉 민원서비스 만족도:1999, 2003, 2006
310	〈표 XII-11〉 가족가치, 성역할규범, 가부장 가치에 대한 연령집단별 차이:2006
311	〈표 XII-12〉 북한에 대한 인식:2006
311	〈표 XII-13〉 일의 가치에 대한 찬성도와 시간사용 선호도:2005
312	〈표 XII-14〉 연령별 신문 이용정도:2007
313	〈표 XII-15〉 연령별 TV 이용시간:2007
314	〈표 XII-16〉 정보격차지수:2004-2007

그림 목차

007	[그림 I-1] 인구성장률:1930-2005
008	[그림 I-2] 인구 100명당 출생아수와 사망자수:1930-2005
009	[그림 I-3] 연령구성:1960-2005
010	[그림 I-4] 합계출산율과 이상자녀수 추이:1976-2006
011	[그림 I-5] 동아시아 국가 합계출산율 추이:1950-2004
012	[그림 I-6] 연령별 기대여명의 변화:1970, 2006
013	[그림 I-7] 연령별 조사망률(생명표):1930-2006
014	[그림 I-8] 인구의 지역 분포:1949-2005
015	[그림 I-9] 시도별 순이동률:1970-2007
020	[그림 I-10] 연령별 출산율:1970-2007
022	[그림 I-11] 합계출산율 추이의 국제비교:1950-2007
025	[그림 I-12] 국내 외국인근로자 체류현황:1987-2008
026	[그림 I-13] 직종별 합법체류 외국인근로자수:1987-2008
035	[그림 II-1] 초혼연령:1925-2005
035	[그림 II-2] 조혼인율:1990-2007

- 036 [그림 II-3] 결혼에 대한 태도:1998, 2006
- 037 [그림 II-4] 조이혼율:1970-2007
- 037 [그림 II-5] 조이혼율의 국제비교
- 038 [그림 II-6] 이혼에 대한 태도:1998, 2002, 2006
- 038 [그림 II-7] 65세 이상 노년의 총소득 대비 소득구성비:1994, 1998, 2004
- 039 [그림 II-8] 신체적 돌봄의 제공자:1994, 2004
- 039 [그림 II-9]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1998, 2006
- 040 [그림 II-10] 가사분담 실태와 기대:1998, 2006
- 044 [그림 II-11] 가구원수별 가구분포의 변화:1980-2005
- 046 [그림 II-12] 세대별 가구분포의 변화:1980-2005
- 047 [그림 II-13] 65세 이상 인구의 연령별 세대구성:2005
- 051 [그림 II-14] 초혼의 연령별 분포:1990-2007
- 052 [그림 II-15] 20~30대의 미혼율:1990-2005

- 061 [그림 III-1] 각급 학교별 취학률:1970-2007
- 064 [그림 III-2] 학급당 학생수:1980-2007
- 066 [그림 III-3] 각급 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1980-2007
- 068 [그림 III-4] 각급 학교의 도서관 좌석당 학생수와 학생 1인당 장서수:1997, 2007
- 071 [그림 III-5] 교육수준별 월평균 임금수준:2000-2006
- 083 [그림 III-6] 학업중단율:1970-2006
- 084 [그림 III-7] 25세 이상 인구의 학력구성비:1975-2005
- 085 [그림 III-8] 성별 평균 교육년수:1975-2005
- 085 [그림 III-9] 아버지 학력별 자녀의 고등교육 접근율
- 086 [그림 III-10] 주요 OECD 국가 고등교육 이수율:2007

- 091 [그림 IV-1] 경제활동참가율:1989-2007
- 092 [그림 IV-2] OECD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 비교(남성, 15~64세):1987, 1997, 2007
- 092 [그림 IV-3] OECD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 비교(여성, 15~64세):1987, 1997, 2007
- 093 [그림 IV-4] 한국과 주요국의 실업률:1987-2007
- 094 [그림 IV-5] 비임금근로자의 유형별 비율:1983-2007
- 095 [그림 IV-6]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비율:1983-2007
- 096 [그림 IV-7]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의 변화:1987, 2007
- 097 [그림 IV-8] 취업자의 직업 분포의 변화:1987, 2007

- 097 [그림 IV-9] 월평균 총근로시간의 추이:1980-2006
- 098 [그림 IV-10] OECD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 비교(최장 근로 및 최단 근로 각 5개국):2006
- 098 [그림 IV-11] 제조업 분야의 연평균 임금상승률:1985-2006
- 102 [그림 IV-12]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의 추이:1985-2005
- 103 [그림 IV-13] OECD 국가의 성·연령별 평균 근속년수:2004
- 107 [그림 IV-14]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1983-2007
- 107 [그림 IV-15] OECD 국가 50~59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비교:1987, 1997, 2007
- 108 [그림 IV-16] OECD 국가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비교:1987, 1997, 2007
- 110 [그림 IV-17] 평균 생애근로기간:2007
-
- 115 [그림 V-1]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분위별 실질소득 변화:1982-2007
- 116 [그림 V-2] 가구주의 연령별 소득수준:2007
- 116 [그림 V-3] 가구주의 직업별 소득수준:2007
- 117 [그림 V-4] 가구유형별 소득구조:2007
- 118 [그림 V-5] 가구소득과 지출 규모 및 평균 소비성향:1982-2007
- 118 [그림 V-6] 도시 근로자 가구의 지출 구성:1982-2007
- 119 [그림 V-7]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구성:1982-2007
- 120 [그림 V-8] 가구주의 연령별 지출수준:2007
- 121 [그림 V-9] 가구주의 연령별 지출구조:2007
- 121 [그림 V-10] 소득과 소비수준에 대한 만족도:1999, 2003, 2007
- 122 [그림 V-11] 연령별 소득 및 소비수준 만족도:2007
- 122 [그림 V-12] 연령별 현 소득수준에 대한 평가:2007
- 122 [그림 V-13] 연령별 장래소득에 대한 기대:2007
- 124 [그림 V-14] 지니계수의 변화 추이:1990-2007
- 125 [그림 V-15] 소득 5분위 배율의 변화 추이:1990-2007
- 125 [그림 V-16] 빈곤율의 변화 추이:1990-2007
- 127 [그림 V-17] OECD 국가의 지니계수 비교:2006
- 128 [그림 V-18] OECD 국가의 빈곤율 비교:2006
- 128 [그림 V-19] 계층별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견해:2007
- 129 [그림 V-20] 계층별 빈부격차 감소에 대한 견해:1999, 2003
- 131 [그림 V-21] 가구소득과 교육비 지출:1982-2007
- 131 [그림 V-22] 소득 증가율과 교육비 증가율:1983-2007
- 131 [그림 V-23] 소득, 총비출 및 소비지출 중 교육비 지출의 비율:1982-2007

- 132 [그림 V-24] 항목별 교육비 지출액:1982-2007
- 133 [그림 V-25] 소득분위별 교육비 지출액:1982-2007
- 134 [그림 V-26] 소득분위별 교육비 지출 비율:1982-2007
- 134 [그림 V-27] 소득분위별 교육비 지출구성비:2007
- 135 [그림 V-28] 가구주 연령별 교육비 지출액:2007
- 135 [그림 V-29] 가구주 학력별 교육비 지출액:2003-2007
- 136 [그림 V-30] 가구주 학력별 교육비 지출구성비: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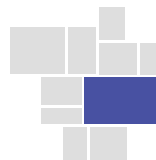
- 141 [그림 VI-1] 문화산업별 매출액:2005
- 142 [그림 VI-2] 신간도서 발행종수와 발행부수:1987-2006
- 145 [그림 VI-3] 문화예술시설 수:1995-2005
- 146 [그림 VI-4] 예술행사 개최횟수:1996-2006
- 150 [그림 VI-5]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관람률:1984-2007
- 151 [그림 VI-6] 문화예술행사 관람률:1997-2008
- 151 [그림 VI-7] 문화예술행사 연평균 관람횟수:1997-2008
- 152 [그림 VI-8] 성별 문화예술종류별 관람률:2000, 2008
- 153 [그림 VI-9] 연령별 문화예술종류별 관람률:2000, 2008
- 154 [그림 VI-10] 직업군별 문화예술종류별 관람률:2000, 2008
- 157 [그림 VI-11] 출입국자수:1962-2006
- 158 [그림 VI-12] 관광 수입과 지출:1962-2006
- 159 [그림 VI-13] 해외여행 목적지 분포:1980-2005

- 167 [그림 VII-1] 주택 유형별 가구 분포:1970-2005
- 168 [그림 VII-2] 주택의 점유형태:1975-2005
- 169 [그림 VII-3] 도시지역 주택유형별 매매가격 지수:1992-2007
- 179 [그림 VII-4] 국가별 자가소유율 비교:2001
- 179 [그림 VII-5] 주택만족도와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1992-2004
- 181 [그림 VII-6] 주택구입방법:1992-2004

- 193 [그림 VIII-1] 평균수명:1971-2006
- 195 [그림 VIII-2] 결핵 신환자수:1985-2006
- 195 [그림 VIII-3] 당뇨병과 고혈압 유병률:1998, 2001, 2005
- 196 [그림 VIII-4] 암 발생률:1999-2002

- 200 [그림 VIII-5] 1인당 연평균 내원일수:1990-2005
- 200 [그림 VIII-6] 국민의료비 지출:1985-2004
- 201 [그림 VIII-7] 국민의료비 지출 재원별 비중:1986-2004
- 204 [그림 VIII-8]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 비율:1994-2005
- 204 [그림 VIII-9] 총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2004
- 208 [그림 VIII-10] 한국인의 주관적 건강상태:1986-2006
- 209 [그림 VIII-11] OECD 국가의 주관적 건강상태 비교:2005
- 210 [그림 VIII-12] 혼인상태별 주관적 건강상태:1998, 2001, 2005
- 212 [그림 VIII-13] 종사상 지위별 주관적 건강상태:1998, 2001, 2005
-
- 217 [그림 IX-1] 건강보험 적용인구:1984-2006
- 218 [그림 IX-2] 건강보험 급여총액:1984-2006
- 219 [그림 IX-3] 국민연금 가입자수:1988-2006
- 221 [그림 IX-4] OECD 국가의 GDP 대비 사회보장비지출 및 공공지출의 비율:2003
- 222 [그림 IX-5]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1995-2006
- 226 [그림 IX-6] 등록 장애인수:1995-2006
- 229 [그림 IX-7] 인구계층별 인구구성비 추계:1970-2050
- 230 [그림 IX-8] 주요 OECD 국가의 노인부양비:2000, 2050
- 230 [그림 IX-9] 주요 OECD 국가의 노인 빈곤율:2000
- 231 [그림 IX-10] 성별·연령별 및 학력별 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2004
- 233 [그림 IX-11]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규모:1988-2007
- 234 [그림 IX-12] 국민연금재정 추계:2008-2078
- 237 [그림 IX-13] 4인 가구 최저생계비:1999-2008
- 238 [그림 IX-14]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2001-2007
- 238 [그림 IX-15] 지역별 기초생활보장수급률:2007
- 239 [그림 IX-16]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원수별 구성비율:2007
- 240 [그림 IX-17]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중 고용상태별 취업자수:2001-2007
- 241 [그림 IX-18] 소득과 재산기준을 고려한 차상위계층의 규모:2003
- 241 [그림 IX-19] 최저생계비에 근거한 빈곤율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2001-2005
-
- 256 [그림 X-1]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체감 정도:1997, 2001, 2005
- 257 [그림 X-2] 대도시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1995-2007
- 258 [그림 X-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1999-2004

259	[그림 X-4] 이동오염원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1999-2004
259	[그림 X-5]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오염원별 기여율:2004
262	[그림 X-6] 지구 온난화 발생메커니즘
269	[그림 XI-1] 지진발생 빈도:1978-2007
270	[그림 XI-2] 황사발생 일수:1960-2007
271	[그림 XI-3] 서울지방 월별 평균 황사발생 일수:1960-2007
272	[그림 XI-4] 연도별 화재발생 건수:1950-2006
272	[그림 XI-5]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1955-2006
273	[그림 XI-6] 산업재해자율:1965-2006
275	[그림 XI-7] 교통사고 사망자수:1973-2007
276	[그림 XI-8] 형법범률:1983-2006
277	[그림 XI-9] 교도관 대비 1일 평균 수용인원:1983-2006
278	[그림 XI-10]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1997-2006
282	[그림 XI-11] 월별 평균 태풍발생 건수:1998-2007
283	[그림 XI-12] 5개년 평균 기온의 변화:1912-2005
288	[그림 XI-13] 강간범죄자의 연령분포 추이:1996-2006
289	[그림 XI-14] 주요 국가의 인구 10만명당 강간범죄율:1993-2003
293	[그림 XII-1] 국민고충민원 접수건수:1994-2007
295	[그림 XII-2] 인구 10,000명당 민사사건 접수건수:1997-2006
296	[그림 XII-3] 한혈자 중 개인한혈과 단체한혈의 비중:1994-2007
297	[그림 XII-4] 기관에 대한 신뢰도:1996, 1997
298	[그림 XII-5] 부패인식지수:1997-2006
301	[그림 XII-6] 연령별 인터넷 접근정도 추이:2000-2007
304	[그림 XII-7] 지방선거 투표율 변화:1995-2006
304	[그림 XII-8]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변화:1988-2008
304	[그림 XII-9] 대통령선거 투표율 변화:1987-2007
313	[그림 XII-10] 성·연령별 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2007
313	[그림 XII-11]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2006, 2007



서론

『한국의 사회동향』은 통계 보고서인 『한국의 사회지표』에 상응하여 발간되는 연차적 정기 간행물로서, 한국 사회의 '삶의 질'과 관련된 주요 사회 변화와 상황을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설명해주는 서술형 통계보고서이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방대한 양의 통계를 제공해 주고 있으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 보고서를 보고 우리의 '삶의 질' 상황이 어떠하며, 또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기란 쉽지가 않다. 『한국의 사회동향』은 『한국의 사회지표』의 이러한 한계성을 보완해 주기 위하여 간행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변화양상뿐 아니라 부문별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되 다양한 지표들의 시계열적인 비교와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사회의 삶의 질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아울러 한국 사회의 삶의 질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 하되, 가능한 한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정보들이 쉽게 전달 되도록 서술하고자 하였다. 불가피한 부문별 전문용어는 보고서의 끝에 용어해설을 첨부하였다.

『한국의 사회동향』은 『한국의 사회지표』에 상응하는 주제 설명형 보고서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보고 부문들을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와 거의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 간행물은 새로이 계획된 주제 서술형 보고서인 만큼 주요 변화와 이슈들이 적절하게 포함되고 제기될 수 있도록 부문 구성과 각 부문의 세부영역들을 다소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인구, 가구와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와 교통, 정보와 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정부와 사회참여 등 1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국제비교가 별도로 들어가는데, 『한국의 사회동향』에서 크게 수정, 보완된 부문 구성과 세부영역들은 다음의 4가지이다. 첫째, 『한국의 사회지표』에 독립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와 통신을 문화와 여가 부문의 세부영역으로 통합시켜 구성하였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과 국제기구들의 지표체계에 포함시키지 않는 정보와 통신 부문을 한국에서 독립적인 부문으로 포함시킨 이유는 급속한 정보화 과정이 삶에 질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을 문화와 여가 부문의 한 세부 영역으로 통합시킨 주된 이유는 이 부문의 삶의 질 관련 사회 지표들이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정보와 통신의 매체 문제는 TV, 신문 등 대중의사소통 매체들과 함께 문화와 여가 부문에 통합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안전 부문과 정부와 사회참여 부문을 '사회의 질'의 개념적 요소를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세부영역들을 확장 개편하였다. 『한국의 사회지표』의 안전 부문은 거의 모두가 범죄와 사고 영역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의 사회동향』에서는 부문 명칭을 '사회안전'으로

바꾸고 자연 및 산업재해 영역을 개발하여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정부 사회참여 부문도 ‘사회 통합’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사회의 질’ 개념의 핵심적 요소인 사회응집, 신뢰 등의 세부영역들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비교는 독립 부문으로 구성하지 않고 각 부문별 총괄요약과 주제 논문들에서 국제비교를 가능한 한 최대한 다루도록 하였다. 『한국의 사회동향』에 실리는 논문들은 어떤 부문의 어떤 주제이든 국제비교의 맥락에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회동향』은 위와 같이 『한국의 사회지표』의 구성을 수정, 보완하여 인구, 가족과 가구,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보건, 복지, 환경, 사회안전, 그리고 사회통합 순서로 총 12개의 부문들로 구성되었다. 각 부문의 세부영역 구성은 아래와 같다.

인 구 : 인구구성, 출생, 사망, 인구이동, 장래인구추계

가족과 가구 : 가족구조, 가족형성, 가족관계

교 육 : 교육기회, 교육자원, 교육성과(또는 효과)

노 동 : 노동력인구, 고용형태와 근로조건, 실업과 구직활동, 노사관계

소득과 소비 : 소득수준과 소득분배, 소득보장제도, 소비와 지출, 경제적 생활안정

문화와 여가 : 문화유산, 문화산업과 문화예술활동, 여가와 스포츠, 정보와 통신

주거와 교통 : 주택수급, 주거환경과 주거의 질, 주거비용, 교통편의, 통근과 통학

보 건 : 건강과 질병, 건강의식과 건강행태, 의료제도와 의료이용

복 지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환 경 : 환경오염물질배출, 환경의 질, 자연자원의 이용, 환경관리

사회안전 : 생태적 위험, 기술적 위험, 사회경제적 위험

사회통합 : 정치참여, 법치, 평등, 사회갈등과 응집

『한국의 사회동향 2008』에는 이 12개 부문으로 구성해서 각 부문별로 동일하게 주요 변화를 서술해 주는 논문 한 편과 중요 이슈를 다룬 주제 논문 2편으로 편집해서 모두 12편의 부문별 주요 변화 논문과 24편의 주제 논문을 수록하였다. 각 부문의 주요 변화를 서술하는 논문들은 세부영역별로 주요 시계열적 통계와 국제비교 통계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형태로 기술되었고 주제 논문들은 횡단적 및 시계열적 통계를 이용하여 사회인구학적 집단 간의 차이 또는 주로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집단들에 관심을 두고 기술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주로 이용한 자료는 『한국의 사회지표』와 『사회통계조사』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통계청을 비롯한 정부의 중앙부처들에서 산출되는 통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을 포함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자료가 많이 이용되었고 한국종합사회조사, 세계가치관조사 등 대학의 연구소들에서 산출하는 자료도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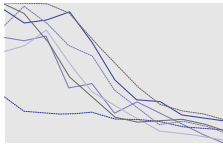
연구책임자 석 현 호

알려두기

1. 본 보고서에 실린 모든 내용은 해당 집필자들의 견해이며, 통계청 혹은 통계개발원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2. 이 보고서는 통계개발원에서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3.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통계개발원에서의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4. 이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통계개발원의 소유입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08

Korean Social Trends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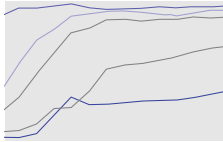


Population

Household & Family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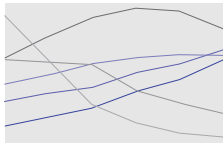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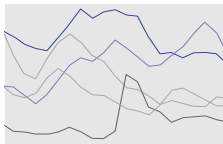
Housing & Transportation



Health

Welfare

Environment



Social Security

Social Cohesion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 박경숙 6

출산력의 급격한 하락 • 전광희 17

국제이주인구의 증가: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 윤인진 24

I. 인 구

Population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인구 현상은 개인의 생활방식과 밀접히 연관되며 경제조직, 정치제도, 국가 특성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조건이다. 현 지구상의 인구는 국가별로 경제, 정치, 문화적 조건과 연관되어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 북미, 호주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고, 기대여명이 높으며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다. 새로운 생산지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는 출산율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사망률이 빠르게 개선된 결과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여러 사회들에서는 사망률이 높아 많은 인구가 조기 사망을 경험하고 있다.

자본과 노동의 흐름이 지구화되면서 인구현상의 지구적 연계도 강화되고 있다. 국제이주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유출국가나 유입국가의 지배적인 사회, 문화, 경제구조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1995~2000년 사이 230만의 순 이주인구가 저소득국가에서 고소득국가로 이동하였고, 이중 아시아 출신 이주자가 130만에 이른다고 한다(UN., International Migration 2002). 한국은 20세기 초반부터 매우 압축적인 인구변동을 경험하였다. 인구성장 정도는 인구폭증에서, 저성장, 인구감소로 단기간에 변하였다. 인구성장률의 변화는 사망률, 출산율, 인구이동의 동학에 따른다. 현재 한국의 인구는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저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인구변화는 가족, 경제, 복지구조의 체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인구의 동학이 복잡해지고 인구현상의 국가 간 연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한국의 인구는 또한 지역 간 편차가 크다. 이는 편중된 산업정책과 도시화가 수반한 인구 불균형 현상 때문이다. 산업화의 불균등한 발전에서 자원이 취약

한 지역에서는 과다 진출과 재생산인구의 감소가 이어졌고 그 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노동력이 취약한 지역은 산업, 문화자원이 더욱 취약해지는 순환관계가 만들어졌다. 균형적 발전은 지역 간 균형적 인구구조와 떨어질 수 없으며 이는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발전 노력의 결과에서 현실화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의 총인구, 인구구성과 인구동태에서 일어난 주요 변화를 살펴본다. 총인구부문에서는 인구성장의 주요 동향을, 인구구성에서는 연령구조의 변화를, 인구동태에서는 출산, 사망, 이동(국내이동과 국제이동)의 주요 동향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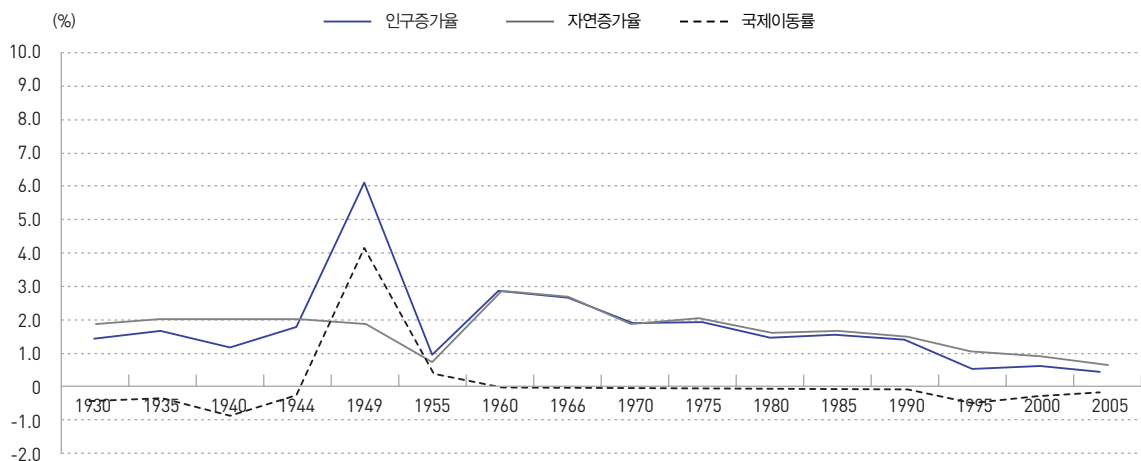
인구성장의 추이와 동향: 인구폭증에서 저성장으로

한 국가의 인구성장은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에 따른 자연증가와 국가 간 이동 크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조선시대의 인구는 1% 이내의 낮은 성장률을 보

이는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지니고 있었으며, 1910년 이후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식민지, 해방, 6.25전쟁과 같은 정치적 격동기 동안 국제이동의 규모가 컸으며, 종전 이후 인구성장률의 변화는 대부분 자연증가율의 변화에 기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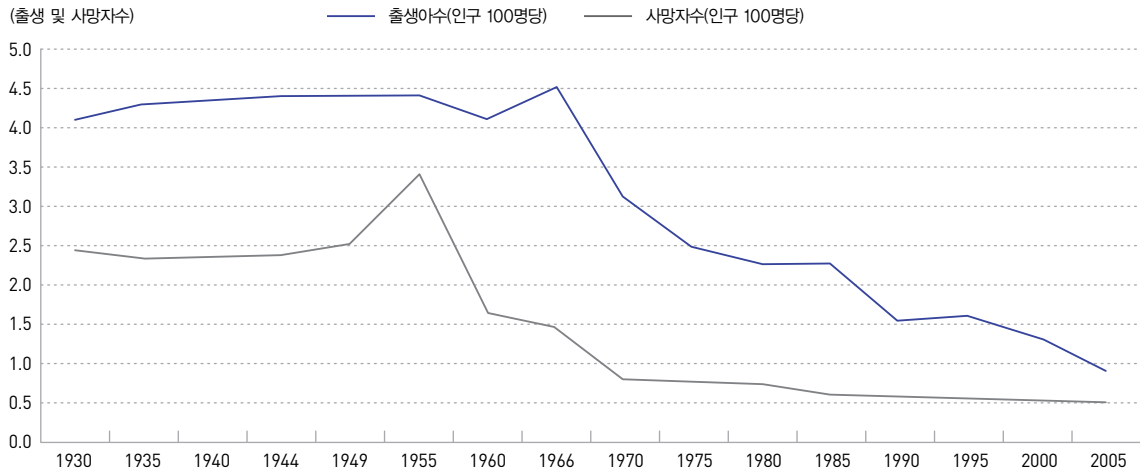
인구변천이 시작된 191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인구성장이 최고에 달한 시기는 [그림 I-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해방 이후부터 1970년에 해당된다. 1945~1949년 남한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6.1%로 사상 최고의 기록을 보였는데 이 중 4.2%가 해외로부터의 국제이동의 효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한국전쟁(1950~1953년) 동안 높은 사망률과 북한으로부터의 인구유입, 피난민 이동 등으로 또 한번의 커다란 인구 변화가 이루어졌다. 한국전쟁이 종료된 후 인구성장은 주로 자연증가율의 상승에 따른다. 전쟁 동안 연기되었던 결혼과 출산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1955~1960년 사이 베이비 붐(baby boom)

[그림 I-1] 인구성장률: 1930~2005



출처 : 통계청, 『인구대사전』, 한국인구학회편, 2006

[그림 I-2] 인구 100명당 출생아수와 사망자수 : 1930-2005



출처 : 통계청, 『인구대사전』, 한국인구학회편, 2006

현상이 일어났다. 전쟁을 겪으면서 사망률이 크게 상승하였지만 전후 항생, 면역약품의 확대와 함께 사망률도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I-2]).

한편 1960년 후반부터 자연증가율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66년 자연증가율은 2.7%에서 1985년 사이에는 1%로 크게 줄어들었고, 1990년대 중반까지 다소 안정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급하게 줄어들고 있다. 1970년 초반부터 자연증가율이 급속히 감소한 것은 무엇보다 출산율 하락의 영향이 크다. 1966년 출생률은 인구 100명당 4.1명에서 1985년에는 1.6명, 그리고 2005년에는 0.9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 시기 동안 사망률은 꾸준히 개선되었지만 출생률 감소폭이 더 커서 인구성장률이 더욱 둔화된 것이다. 최근의 낮은 출산율은 한국보다 출산율 감소가 일찍 전개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과 비교해도 더욱 낮은 수치이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 수준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 한국의 인구는 2020년 경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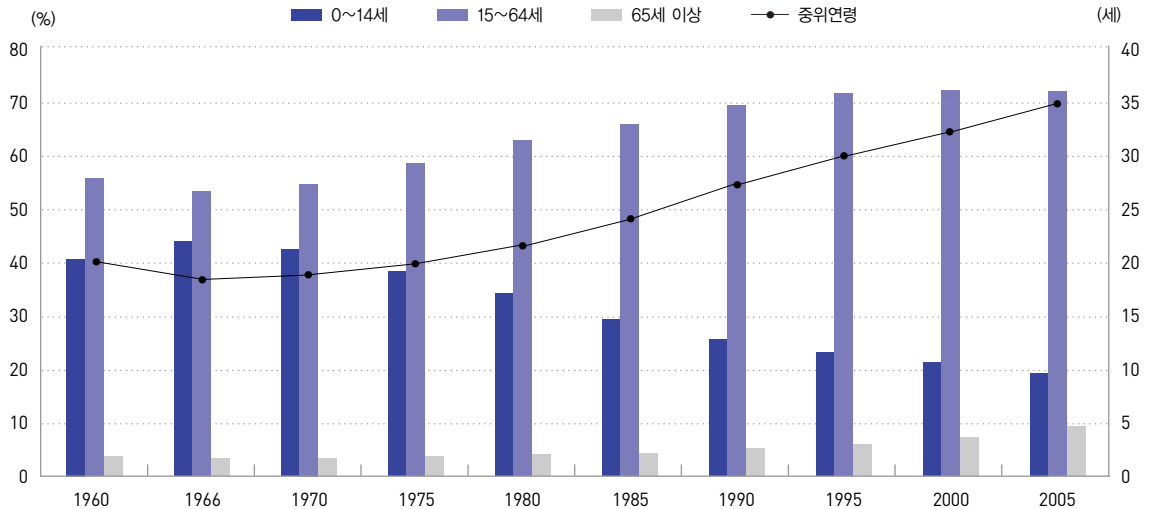
추정되고 있다.

인구구성의 변화 : 소년화에서 고령화로

인구성장률이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변화되면서 인구구성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졌다. 자연증가율이 가장 컸던 1966년 중위연령은 18.3세로 이는 1925년의 중위연령(20.5세)보다 낮은 수치이다. 이후 중위연령은 크게 상승하였는데 1980년에는 22.2세, 1990년에는 27세, 2000년에는 32.1세, 2005년에는 35세로 추정된다. 중위연령의 분포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1960년대 중반까지는 오히려 인구구조가 소년화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그림 I-3]).

연령구조의 변화는 주요 연령집단의 구성비 변화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0~14세의 유소년 인구는 1925년 전체 인구의 39.5%를 차지하였지만 1966년에는 43.5%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15~64세 인구의 구성비는 약간 감소하였다. 전체 인구의 고령화수

[그림 I-3] 연령구성: 1960-2005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준을 가리키는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는 약간의 증감을 보이지만 크게 변하지 않았다. 1966년 이후에는 유소년의 구성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이전 시기 높은 출산율을 보인 코호트가 청장년층으로 진입하면서 생산인구의 구성비는 200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1966년 15~64세 구성비는 전체인구의 53.2%에서 2000년에는 71.7%로 크게 상승하였다. 2000년 시점은 생산인구 구성이 최대치에 이른 시점이다. 최근 인구구조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련해서 인구보너스(demographic bonus)라는 개념이 소개되었다. 이는 인구연령 구조상 생산력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 경제성장률도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의 인구는 지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동안이 생산에 가장 효율적인 인구구조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생산 인구수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생산체제와 고용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산인구의

구성비는 계속해서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는 1966년에서 2005년 기간 동안 3.3%에서 9.3%로 크게 상승하였다. 그리고 향후 20~30년 동안 인구성장을 주도한 코호트들이 노년에 진입하면서 노년 인구 구성비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흔히 고령화의 속도를 가늠하는 근거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7% 이상에서 14%로 배가되는 시간을 사용한다. 한국의 경우, 고령인구의 구성비가 배가되는 기간은 18년 정도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는 한국 사회처럼 1960년대까지 출산율이 매우 높게 유지되다가 이후 급속하게 감소한 여러 아시아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예상되고 있다(표 I-1).

급속한 고령화는 출산율과 사망률이 하락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출생률의 감소는 새로 태어나는 인구 구성비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구의 고령화

〈표 1-1〉 고령화 속도의 국제비교

국 가	7% 도달년도	14% 도달년도	소요기간(년)
프랑스	1864년	1979년	115
스웨덴	1887년	1972년	85
미 국	1942년	2015년	73
영 국	1929년	1976년	47
독 일	1932년	1972년	40
일 본	1970년	1994년	24
한 국	2000년	2018년	18

주: 소요기간은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7%에서 14%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
출처: 통계청, 『인구대사전』, 한국인구학회편,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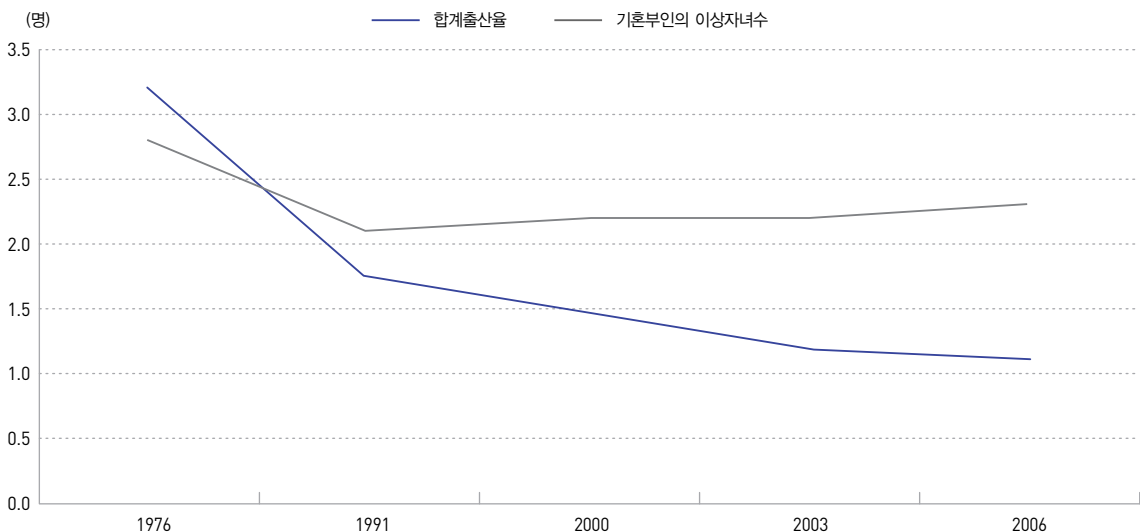
에 영향을 준다. 한편 사망률의 감소는 주로 어떤 연령집단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고령화의 효과 혹은 소년화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유소년과 노년층에서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사망률이 개선되는 초반에는 유소년 사망률이 크게 감소되어 그 결과 인구의 연령구성이 보다 젊어지게 된다. 한국의 연령구조가 1925년에 비해 1966년이 더 젊은

것은 출산율 수준이 별로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아 사망률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사망률의 감소에 따른 연령구조 변화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1970년 초반까지는 소년화의 효과가 있었고,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고령화의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최근 사망률 개선은 고령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한국이 경험하는 급속한 고령화는 무엇보다 출산율 감소의 영향이 크다.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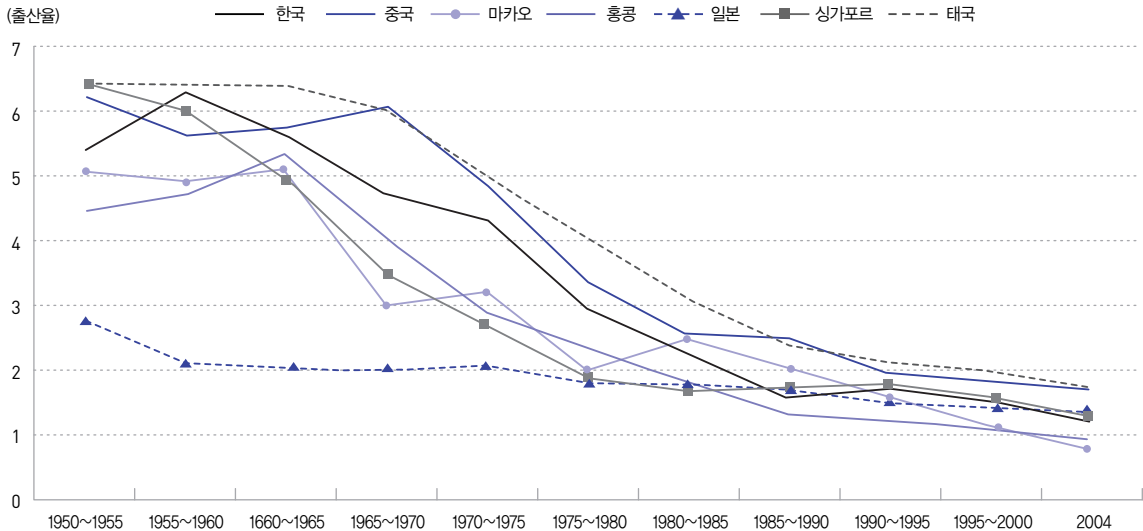
한국 여성의 출산력은 1960년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가임연령 여성의 합계출산율, 즉 여성 한 사람이 평생 낳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TFR)는 1960~1965년 6명에서 1975년에는 3.5명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1983년 이후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크게 떨어졌다. 2007년의 합계출산율은 1.26명

[그림 1-4] 합계출산율과 이상자녀수 추이: 1976~2006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그림 I-5] 동아시아 국가 합계출산율 추이: 1950-2004



출처: ESCAP, "Population Data Sheet", 2004

으로, OECD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 1.6명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진 것과는 달리 일반 기혼여성들이 기대하는 이상자녀수는 1970년 이래 2명 수준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그림 I-4). 현재의 낮은 출산율은 자녀를 원하지만 그것이 허락치 않는 환경에서 유발된 현상이라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삶의 질을 우려케 하는 중요한 징표가 되고 있다.

급속한 출산율의 저하는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그림 I-5). 이 지역에서 일본을 제외하면 대부분 1960년대 중반까지 매우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다가, 이후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중국은 1960년대 초반까지 출산율이 5~6명 수준이었으나 1965년 이후 급속하게 떨어지면서 1980년대에 2~3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 이후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태국은 1970년대 이후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매우 낮아졌다. 홍콩은 보다 완만하게 감소되었지만 1980년 이후 인구대체 수준으로 출산율이 떨어졌다. 결국 일본을 제외한다면 5~6명에서 2명 수준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약 15~20년 정도 걸렸고 다시 5~10년 정도 경과하면서 2명 수준 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출산율이 떨어졌다(그림 I-5).

한국사회에서 1990년 이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는 것은 무엇보다 결혼연령의 상승 영향이 크다. 한국 여성의 결혼연령은 1960년 21.5세에서 2000년 26.5세로 크게 늦어졌다. 출산은 주로 20대에서 30대 초·중반에 집중되는데, 20대 후반의 미혼율이 증가하면서 전체 여성의 출산율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또한 결혼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출산속도가 늦어져 출산율이 줄어든 영향도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결혼연령의 연장에 따른 출산율의 감소 효과가 큰 것은 한국사회의 독특한 특징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서유럽의 여러 사회에서는 결혼연령이 늦지만,

합계출산율이 1.5~1.7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는 파트너십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과 가족·노동 양립 서비스의 발달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서유럽에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출산율 사이에도 뚜렷한 관계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사이에 정의 관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에서 결혼연령의 연장이 출산율 감소에 크게 영향을 준 것은 경제활동과 가족역할의 양립문제를 해결해주는 사회 환경이 미비된 결과일 수 있다. 사회안전망의 결핍과 재생산의 위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저출산을 경험한 동아시아 사회의 공통된 사회 맥락일 수 있다.

사망률 감소와 역학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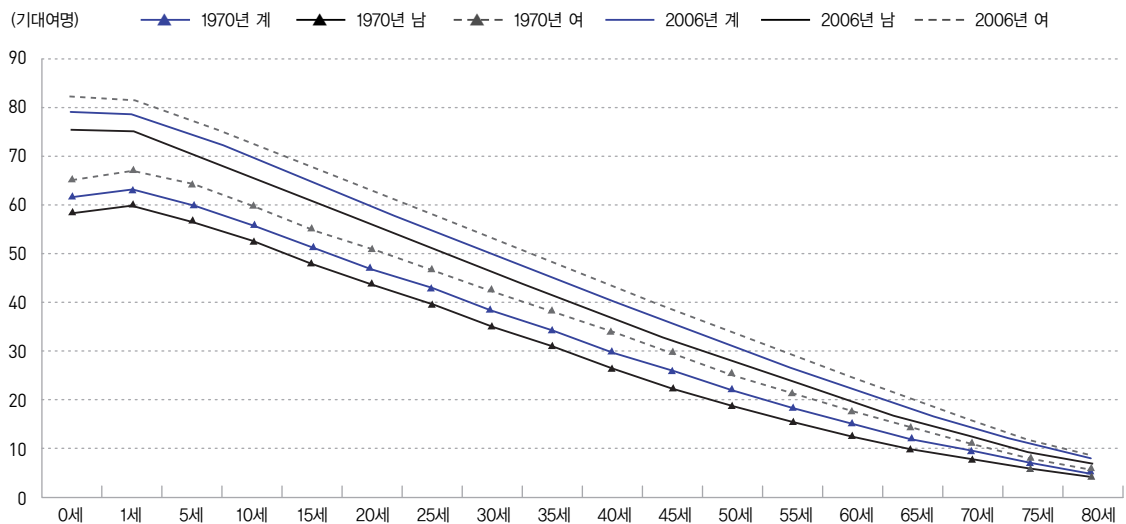
사망률의 감소는 영양, 생활수준, 현대의학, 보건의료 정책 등의 복합적 효과에 의해 설명된다. 선진국

들의 사망률 감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향상된 생활수준과 영양이 건강수준을 높이고 질환에 대한 면역, 저항력을 키운 주요요인으로 지적된다. 경제개발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 나라들에서도 사망률이 개선된 사례가 많이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영양수준의 향상과 국가의 적극적인 의료·보건정책, 현대적 의료기술과 약제의 보급지원, 식량·영양공급과 보건의료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발전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사망률 변천은 20세기 초반에 시작되었다. 연령별 사망률에 기초하여 산출한 기대수명이 1910년에는 23세 안팎이었지만 1960년에는 52세로 증가하였고, 1980년대 말에는 남녀 모두 평균 70세를 넘어섰다. 2006년 남녀 기대수명은 각각 76세와 82세이다([그림 I-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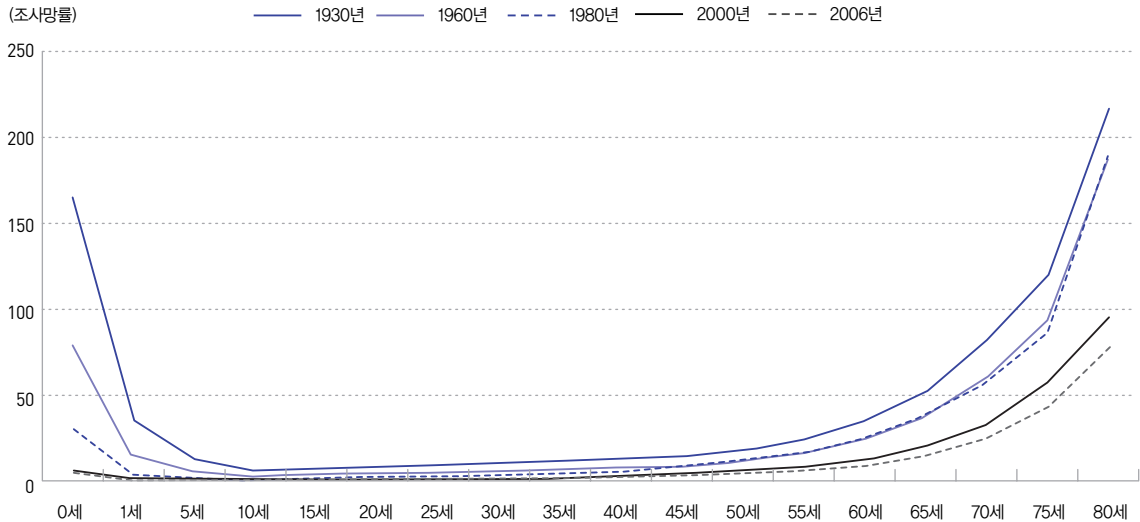
이렇게 평균 기대수명이 급속히 늘어난 것은 연령별 사망률이 크게 감소한 결과이다. 모든 연령층에서

[그림 I-6] 연령별 기대여명의 변화: 1970, 2006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그림 I-7] 연령별 조사망률(생명표): 1930-2006



사망률이 감소하였지만 특히 영유아와 노년에서 사망률이 개선된 정도가 두드러진다. 생명표 상의 0세에서 사망률은 1930년에는 인구 1,000명당 165명, 1960년에는 79명, 1980년에는 31명, 2006년에는 4.6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1980년 초반까지는 영아사망률이 크게 개선되었고 그 이후에서는 노년사망률이 두드러지게 개선되었다(그림 I-7).

이렇게 연령별 사망률이 감소된 것은 질환체계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 주된 사망원인은 천연두, 폐렴, 결핵과 같은 전염성질환과 호흡기계 및 소화기계 질병이었다. 사망률 개선은 이런 질환에 대한 예방, 저항 효과가 증대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1966년의 사망원인질환도 이와 유사한 구조를 띠어 호흡기, 소화기, 신경계 및 감염성 기생충 질환이 주된 사망원인이었다. 이런 사망원인 구조는 1980년 이후 크게 전환되었다. 신생물(암), 순환기, 손상 등에 따른 사망이 주된 원

인이 된 것이다. 2007년 사망원인을 보면, 악성신생물(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 3대 요인으로 전체 사망자의 48.3%를 차지하고 있고, 자살이 4대 원인으로 상승한 특징을 보인다.

사망률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남녀 차이이다. 대체로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의 사망률이 남자보다 낮지만, 남녀가 사망위험에 노출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그 차이가 축소되거나 확대된다. 한국에서는 남아선호사상이 강하고 모성건강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1970년대까지는 유아와 20대에서 여성의 사망률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1980년 이후에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중장년층에서는 오히려 사망률의 차이가 최근까지 증가하였다. 1960년 평균수명은 남녀가 각각 51세와 54세였는데, 1975년에는 각각 60세와 68세로, 1985년에는 64.5세와 72.8세로 크게 벌어졌다. 이후 격차가 서서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여성이 81.9세, 남성이 75.1세가 되었

다. 이런 변화는 중년층 이상에서의 남성의 사망률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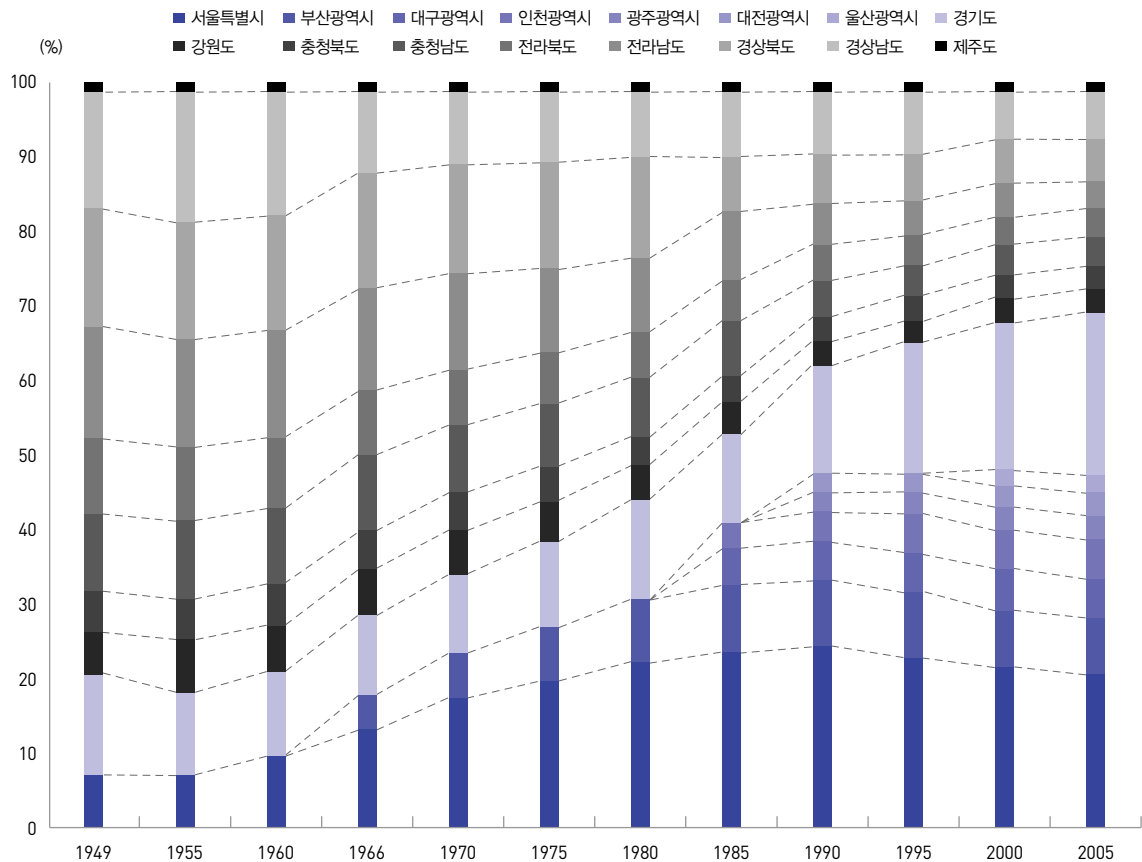
도시화와 지역 간 인구분포의 변화

한국의 인구분포는 빠르게 도시화되었다.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1960년 28%에서 2005년 81.5%로 증가하였다. 이제는 인구의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지만 도시규모별 인구의 집중 정도는 차이가 크다. 가장 인구가 집중된 서울의 인구는

1960년 2,445,402명에서 1990년 10,603,250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서울의 인구증가율은 1955년에서 1970년까지 연평균 8.4%로 매우 폭발적이었다. 그 이후 서울의 인구성장률은 서서히 낮아졌고 1990년 이후부터는 인구가 오히려 조금씩 감소했다. 그러나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2005년 수도권 인구는 전체 도시인구의 59%, 전체인구의 48.1%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I-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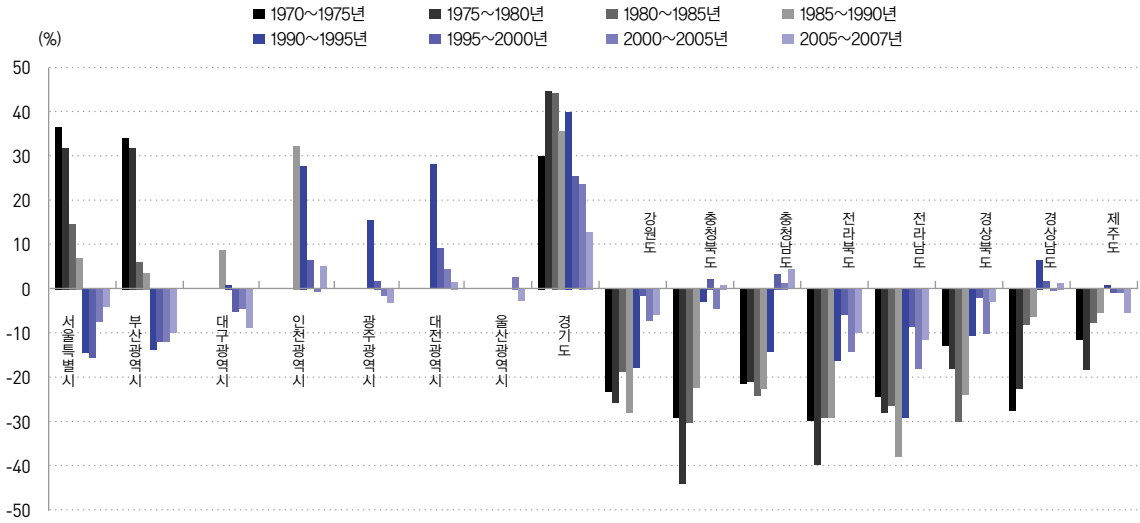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규모별 성장률 차이 때문에 지역별 인구규모가 크게 변화되었다. 경기도를 제외

[그림 I-8] 인구의 지역 분포: 1949-2005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그림 I-9] 시도별 순이동률: 1970-2007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한 대부분의 도지역의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196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서울과 경기의 인구가 거의 4배로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는 50~74%로 줄어들었다. 강원도와 전남은 197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였고, 충북, 전북은 1975년 이후부터, 경북은 대구가 광역시로 승격된 1985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낸다.

이러한 지역별 인구규모의 변화는 무엇보다 이출과 이입 인구의 차이 때문이다. 1960년대부터 대규모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대량 이동하였다. 서울로의 순이동률(이입률-이출률)은 1980년까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이후 서서히 둔화되다가 1990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이출초과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1990년 이후 경기지역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증가한 것과 관련된다. 경기지역은 1975년 이후 순이동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다.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 신주거지로서의 개발 등이 이 지역으로 인구가

대량으로 유입된 원인이 된다. 부산과 대구도 최근 5년간 이출초과를 보여 이동을 통해 인구를 잃고 있다. 이출인구는 창원, 울산과 같은 공업지역이나 양산, 김해 등 새로운 주거지로 이동하여 대도시 주변 지역으로의 교외화가 진행되었다(그림 I-9).

대부분의 도지역은 1980년까지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였다. 1990년대에도 이출초과 현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농촌인구가 이미 크게 줄어든 상태이므로 이동인구의 규모가 이전만큼 크지 않았다. 1995년 이후 충북, 충남, 경남지역에서는 이입초과 현상이 일어났다.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은 인구규모의 차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지역 간 인구격차의 주된 요인이었던 대규모의 이농은 주로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빠르게 전개되었다. 대부분의 도지역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990년에 이미 7%를 넘어섰으며 이후 매우 급속하게 그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국제이주의 추이

국제인구이동의 규모와 양상, 그리고 그 원인은 인구변천 단계마다 상이하게 전개되었다. 일제의 식민 통치, 해방,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국제이동은 경제적 이유 못지 않게 정치적 격변의 조건에서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 첫 대규모 국제인구이동은 일제시대 동안에 진행되었다. 1930년 이후 일제의 이출 장려, 강제징집, 경제적 궁핍, 항일투쟁 등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만주, 러시아, 일본 등으로 이주하였다. 한 추정에 따르면 1925~1935년 일본, 만주, 러시아 등으로 이주한 이민자의 수는 530,000명에 이른다(Kwon, 1977).

해방을 맞아 재외동포들의 상당수가 귀환하면서 이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1945~1949년 동안 250만 명의 재외동포와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들어왔다. 이 시기 남한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6.1%로 사상 최고의 기록을 보였으며 이 중 4.2%가 해외로부터의 이입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한국전쟁 기간 중에 북한과 남한 간에 많은 인구(피난민)의 유입과 유출이 있었다.

1970~1990년 시기는 한국인의 국제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특징을 지닌다. 상대적으로 과다한 노동력 공급과 선진국들에서의 저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맞물리면서 국가 주도의 노동이주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1960년대 초 독일로 간호사와 광부의 수출이 그 대표적 정책이다.

한편 개인수준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국제이주, 특히 미국으로의 이주가 크게 일어나 1970년부터 1990년까지 55만여 명이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한국인의 미국 이주는 1990년 이후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미국으로의 이민기회가 점점 더 제한되어왔기 때문이다. 미국이민이 제한되면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이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국가로의 이주는 다소 증가하였다.

1990년 이후 국제이주의 주류도 크게 전환되었다. 한국인의 국제이주가 크게 감소한 것과 반대로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입인의 증가는 크게 노동자와 결혼이주자로 나뉜다. 1991년에 45,449명의 외국인노동자가 국내에서 취업하였고 1995년에는 128,906명, 2000년에는 285,506명, 2008년에는 542,67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국제결혼이주자는 2000년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국제결혼건수의 통계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국제결혼건수는 2000년 12,319건으로 전체 혼인의 3.7%를 구성하였는데 2005년에는 43,121건수로 전체 혼인의 13.6%를 차지하였다(통계청, 2006).

이렇게 국제결혼이 증가한 것은 국제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배우자 선택의 계층화 현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박경숙(서울대학교)

참고문헌

- 한국인구학회(편), 2006, 『인구대사전』, 통계청.
- Kwon, Tai-Hwan, 1977, *Demography of Korea*, SNU.
- UN, 2002, *International Migration*, UN.

출산력의 급격한 하락

요 약

- 2007년 현재 출생아수는 1970년대 출생아수 100만 명의 절반 이고 합계출산율은 1/3 이하로 급감하였다.
-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체제는 경제, 문화, 사회적 요인이 중층 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여자 1명당 출생아수 2.08명)을 밑돌고, 영유아(0~4세) 인구가 고령자(65 세 이상) 인구보다 적어지는 사회를 ‘저출산 사회’ 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인구대체수준을 밑돌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영유아 인구가 325만 명으로 고령자 인구 340만 명보다 적어지면서 저출 산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다.

이 글에서는 1970년대 이래 출산력이 어떻게 감소 하여 왔는가를 총괄적으로 관찰하고, 조금 더 자세하 게 연령과 지역 간 출산율의 차이를 살펴본 다음, 마 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 추이를 다른 나라 와 비교해 보기로 하겠다.

출산력 감소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1970년 100만 명 수준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07년에는 50만 명대에 이르러 1970년과 비교할 때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표 I-2)).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은 1970년 31.2명에서 2007년 10.1명으로 1/3 이하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 가임여성 1명당 4.53명에서 점 차 감소하여 2007년 1.26명으로 3.27명 감소하였다. 또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는 1970년 109.5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0년에는 116.5명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7년 106.1명으로 낮아져 자연출생성비(104명)에 근접하고 있다.

〈표 1-2〉 출생아수, 조출산율, 합계출산율 및 출생성비:1970-2007

	출생아수	조출 생률	합 계 출산율	출생 성비
1970년	1,006,645	31.2	4.53	109.5
1975년	874,869	24.8	3.47	112.4
1980년	865,350	22.7	2.83	105.3
1985년	662,510	16.2	1.67	109.4
1990년	658,552	15.4	1.59	116.5
1995년	721,074	16.0	1.65	113.2
2000년	636,780	13.4	1.47	110.2
2005년	438,062	9.0	1.08	107.7
2006년	451,514	9.2	1.13	107.4
2007년	496,710	10.1	1.26	106.1

주: 1) 조출생률=(1년간의 총 출생아수/당해연도 연앙인구)×1,000

2)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3) 출생성비=여자 100명당 남아 수

출처: 통계청, 『2006 인구동태통계연보』, 2007; 『2007 출생통계 결과』 보도자료

2007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수는 496,710명으로 전년도 451,514명에 비해 45,196명 증가하여 하루 평균 1,361명이 출생한 셈이다. 2005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당 1.08명에서 1.26명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사회문화적인 요인과 제3차 베이비붐 효과, 곧 한국전쟁 이후 출생한 사람의 자녀가 혼인·출산연령기에 도달하여 나타난 인구학적 요인의 복합적 산물이다.

1980년대 중반 출산아수 감소의 원인으로는 고도 경제성장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 그리고 가족계획사업의 강력한 추진 등을 들 수 있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 출생아수 저하는 초혼연령 상승 및 20대의 미혼율이 크게 상승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un, 2005). 특히 최근 낮은 합계출산율은 미혼율 증가, 혼인연령 상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자녀양육 및 사교육비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작

용한 것이다. 한편, 1980년 중반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높은 출생성비는 합계출산율 1.3 이하에 해당하는 초저출산으로의 이행과정에서도 셋째나 넷째 이상의 출산순위에서는 출생성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1970년대의 여자 1인당 4.5명을 넘는 높은 출산율에서 10여년 만에 대체수준 이하의 대단히 낮은 출산율로 이행하는 출산력 변천은 세계 역사상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전반, 정확히 1983년은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이다. 1983년의 합계출산율은 2.08명으로 정지인구(국경을 넘는 인구가동이 없는 폐쇄인구를 가정하고 출생률과 사망률이 동일하여 인구성장률이 제로인 인구를 말하며 이것은 안정인구의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다)가 되기 위한 합계출산율의 부족분은 0.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980년대 당시 학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건이다. 현재 관찰되고 있는 초저출산으로의 이행과정은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이후, 한국사회가 경험했던 IMF 경제위기와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주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출산력 동향은 물론 장래인구전망과 관련하여, 성선희가 출산력 저하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셋째 이상의 출생순위에 대한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높은 피임효율성과 인공유산이 안전하게 시술될 수 있는 상황에서 출생순위별 남아선호는 출산력 저하의 템포를 오히려 가속화하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역사 이래 최악의 사태를 맞이한 2005년의 초저출산의 상태는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일부 여

성학자는 이러한 초저출산 체제의 탄생을 남성적인 한국의 사회적 관행에 대한 ‘여성의 복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또 최근의 저출산은 여성들의 교육과 고용수준의 향상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사회학자 K. 데이비스의 ‘20세기의 가장 조용한 혁명’이라는 표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노동력 참가율은 구미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그 비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률은 급속도로 상승하여 2007년 현재 남성의 진학률과 거의 동일한 상태에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80년 42.8%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7년 50.2%로 상승하는 등 여성 사회진출이 활발하다. 연령별로는 주 출산 연령층 가운데 25~2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여성들의 일과 출산·양육이 양립 불가능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명으로 역사 이래 최악의 수준을 기록한 후 2006년과 2007년에 1.13명과 1.26명으로 약간씩 회복세를 보였는데, 경제상태의 호전, 만혼화의 둔화, 다자녀 출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의 출산율 증가세는 그 기간이 대단히 짧아서,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월별 출생아수를 보면 2006년과 2007년의 ‘쌍춘년(雙春年)’이나 ‘황금돼지해’와 같은 문화·관습적 요인에 의해 결혼과 출산이 일시적으로 집중되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 문제로 인한 재정위기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출산율 반등에도 치명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농후하

다. 이는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책당국자나 인구전문가의 우려감을 심화시키고 있다.

연령별 출산력 패턴

주 출산연령층은 2000년까지는 25~29세였지만, 2005년 이후에는 30~34세로 변화였다(〈표 I-3〉). 20~24세 여성이 출산한 자녀의 구성비는 1980년 31.6%에서 2007년 6.5%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25~29세 여성이 출산한 자녀의 구성비는 1980년 41.7%에서 1990년과 1995년에는 54%대로 상승하다가 2007년에는 다시 37.9%로 감소하였다. 한편, 35~39세 여성이 출산한 자녀의 구성비는 1980년 5.2%에서 2007년 11.8%로 상승하여 혼인연령의 상승에 따른 만산화의 결과임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15~19세, 40~44세, 45~49세의 여성들은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 2.08명 이하로 떨어진 시점 이후부터는 약간씩 오르내리기는 하지만 출생아의 총수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

연령별 출산율(여자 1,000명당 출생아수)은 19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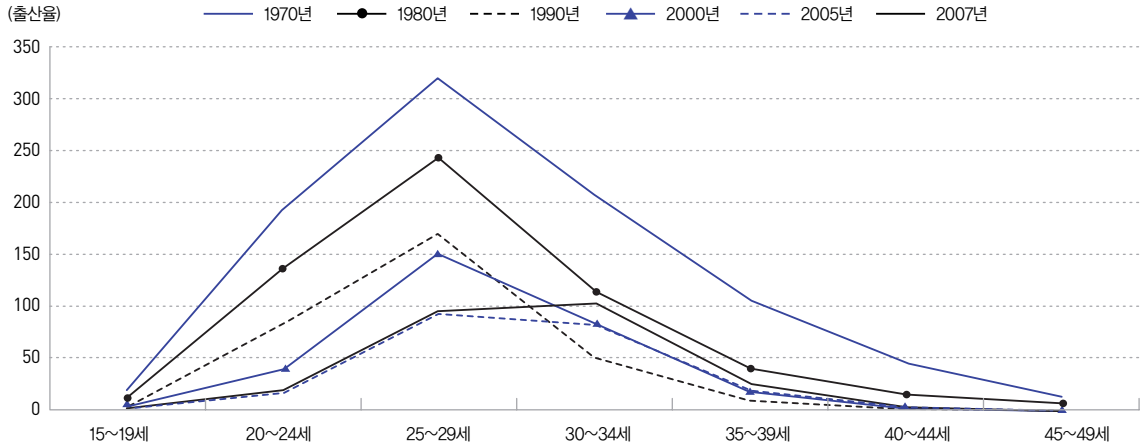
〈표 I-3〉 연령별 출생아수의 구성비: 1980-2007

(%)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15~19세	3.1	1.4	0.7	0.7	0.7	0.7
20~24세	31.6	26.6	11.7	7.5	6.8	6.5
25~29세	41.7	54.1	51.9	40.2	38.5	37.9
30~34세	15.9	15.4	29.0	40.9	42.0	41.8
35~39세	5.2	2.2	5.9	9.4	10.6	11.8
40~44세	1.9	0.3	0.8	1.2	1.2	1.3
45~49세	0.7	0.1	0.1	0.1	0.1	0.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그림 I-10] 연령별 출산율: 1970~2007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부터 2005년까지는 25~29세에서 정점에 이르고, 2007년에는 30~34세(여자 1,000명당 102명)에서 정점에 이르고 있다([그림 I-10]). 1990년까지는 20~24세가 30~34세보다 높은 연령별 출산율을 기록하다가, 2000년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역전되기 시작한다. 또한, 35~39세의 출산율은 1970년에 여자 1,000명당 106명이었다가, 1990년에는 10명으로 떨어졌으며, 이것이 반등하여 2007년에는 26명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40~44세에도 나타나지만, 35~39세만큼 현저하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45~49세의 경우에는 1970년에는 13명 수준이었으나, 1990년 이후에는 사실상 제로 상태에 돌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출산력 저하의 동향은 출생아수의 변화와 출산템포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1990년 이전까지는 출생아수의 변화가 출산율 저하의 주요인이지만, 1990년 이후 특히 2000년대를 지나면서 출생아수의 변화에 못지않게 혼인연령의

상승에 의한 출산템포가 출산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출산율의 특징

2007년 지역별 출생아수는 경기 125,600명, 서울 100,100명, 경남 33,200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의 출생이 전체의 5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지역별 합계출산율은 전남 1.53, 충남 1.50, 제주 1.48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 1.02, 서울 1.06, 대구 1.13의 순서로 낮게 나타났다(<표 I-4>).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전남 및 충남은 25~29세의 출산율이 127.9, 132.3으로 여타 지역보다 높다. 30세 미만 계층의 연령별 출산율은 서울이 모든 지역에서 최저 수준이며, 30세 이상 계층의 연령별 출산율은 제주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로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30~34세 출산율이 25~29세 출산

〈표 1-4〉 시·도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2007

	출생아수 (1,000명)	구성비율 (%)	합계출산율
전 국	496.7	100.0	1.26
서 울	100.1	20.2	1.06
부 산	28.2	5.7	1.02
대 구	22.2	4.5	1.13
인 천	26.5	5.3	1.25
광 주	14.7	3.0	1.26
대 전	15.7	3.2	1.27
울 산	11.9	2.4	1.40
경 기	125.6	25.3	1.35
강 원	13.6	2.7	1.35
충 북	14.9	3.0	1.39
충 남	20.5	4.1	1.50
전 북	17.1	3.4	1.37
전 남	17.7	3.6	1.53
경 북	24.9	5.0	1.36
경 남	33.2	6.7	1.43
제 주	6.1	1.2	1.48

출처: 통계청, 『2007 출생통계 결과』 보도자료

울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제주로 나타났다.

출생아 중 첫째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이 58.6%로 가장 높고 다음이 부산 56.5% 순이며 첫째 자녀의 비율이 낮은 지역은 제주 45.5%, 전남 46.1% 순이다. 출생아 중 첫째 자녀의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도로 전년보다 7,600명이 증가하였고 다음이 서울로 5,400명 증가하여 수도권에서 출생아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지역별 출생성비를 보면, 강원 108.4, 광주 108.0, 전남 107.6, 경남 107.2 순으로 높았으며, 나머지 지역은 자연출생성비(103~107)로 복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비가 낮은 지역은 대전 104.2, 경기 105.2, 제주 105.7 순서로 낮았다.

출산율 추이의 국제비교

한국의 최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한국을 포함하여 구미 선진국과 아시아의 출산력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그림 I-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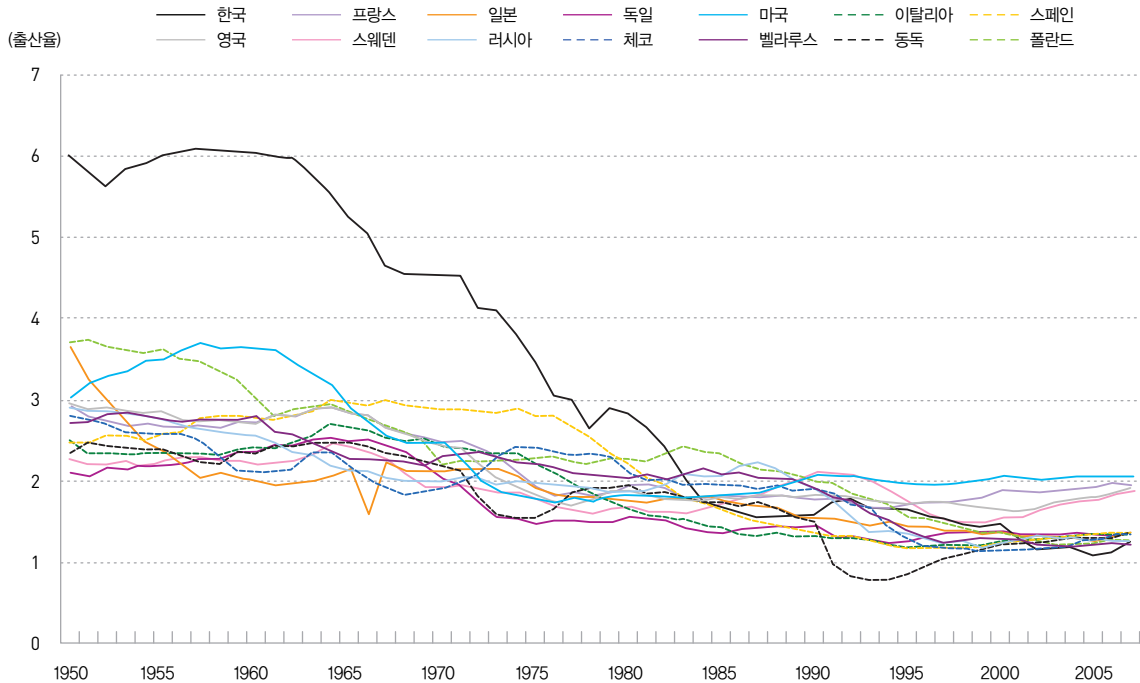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이 1960~1970년 및 1970~1980년에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1960~1970년에는 남유럽의 일부와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에서 감소하였으며, 특히 북유럽의 덴마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에서 출산력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 시기에는 한국은 제2차 베이비붐으로 출산율이 상승하였고 고출산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일본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났지만 합계출산율은 대체수준을 약간 웃도는 정도였다.

1970~1980년에는 모든 나라에서 출산력이 저하하였고, 특히 현저하게 출산력이 저하한 나라는 북유럽의 아일랜드, 노르웨이, 남유럽의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서유럽의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오세아니아의 오스트레일리아다. 이 시기에 이웃나라인 일본도 출산율이 저하되기 시작하였다.

1980~1990년에는 출산율이 상승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북유럽의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북미대륙의 미국과 캐나다가 이에 해당한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북유럽의 덴마크, 서유럽의 프랑스, 룩셈부르크가 출산율이 상승하였으며 벨기에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출산율이 저하하였다.

선진국의 40여 년 출산동향을 검토할 때, 저하경향이 두드러지며 대부분이 대체수준을 밑돌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선진국이 저출산의 함정에 빠진 듯한 느낌을 주지만 북유럽의 아이슬란드, 서유

[그림 I - 11] 합계출산율 추이의 국제비교: 1950~2007



출처: INED, Évolution de la fécondité(www.ined.fr), 각 년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럽의 프랑스, 북미의 미국이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빠른 속도로 출산력이 격감한 남유럽의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동유럽의 구 사회주의국가들이나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이 합계출산율 1.3 이하의 초저출산을 경험하고 있어서, 이들이 저출산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하는가에 따라 세계적 차원에서 선진국과 신흥공업국의 인구문제는 새로운 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연합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 유럽의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모두 출

산력 저하로 말미암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합계출산율이 2.0을 밑도는 나라가 20% 정도 존재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홍콩, 싱가포르, 한국 등 경제성장이 현저한 나라들이다. 이것은 저출산이 유럽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 합계출산율이 4.0인 나라도 20%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은 예멘,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앙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 분산되어 있다.

1970년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한국이 4.50인데 반하여 일본이 2.13, 태국 5.02, 대만 4.00으로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시의 세계 평균(1970~1975년 연

평균 4.4명)에 접근하였다. 그러나 홍콩, 싱가포르를 한국보다 빨리 출산력 변천이 진행되어 합계출산율이 각각 3.29와 3.10으로 한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 후, 한국의 출산력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여 최근에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낮아졌다. 이

때문에 유엔의 산하기구와 지역협력기관에서는 저출산을 우려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출산력 회복을 위한 국제적 공조의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전광희(충남대학교)

참고문헌

- INED(Institut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 2008. "La conjoncture des pays développés en chiffres", (www.ined.fr).
- Jun, Kwang-Hee, 2005. "Transition to Sub-replacement Fertility in South Korea: Implication and Prospect for Population Policy"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3(1): 26-57. Tokyo, Japan: The National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국제이주인구의 증가 :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요 약

- 2008년 6월 현재 한국 내 외국인수는 11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7년의 387,000명과 비교해서 135%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 외국인의 증가는 주로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기인한다.
- 2008년 6월 현재 외국인근로자수는 542,670명이고 결혼 이민자수는 118,421명으로, 이 수는 앞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한국사회의 다민족화와 다문화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국가 간 인구이동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된 현대를 ‘이주의 시대’ 라고 부른다. 2005년 기준으로 1억 9,100만 명의 인구가 자신이 태어난 국가를 떠나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국제연합(UN)은 추정한다. 국제이주자들은 이민, 노동, 망명, 결혼, 유학, 방문 등 다양한 목적으로 모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살면서 양쪽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2007년 한 해 동안 출국한 한국인은 1,362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6배 증가했고, 입국한 외국인수는 642만 명으로 역시 10년 전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법무부의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07년 8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단기체류자 포함)의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고, 2008년 6월 현재 11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에 외국인의 수가 387,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 10년 동안에 135%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직종의 기피로 인한 노동력 부족, 국제결혼의 증가, 동포에 대한 입국문화 확대 등으로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적 동포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의 증가에는 무엇보다 외국인근로자와 결혼 이민자의 몫이 컸다. 1980년대 말부터 입국하기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2008년 6월 현재 542,670명까지 증가하였다. 결혼이민자도 급증하여 2002년 34,710명에서 2008년 6월 현재 118,421명으로 6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는 2008년 5월 현재 58,007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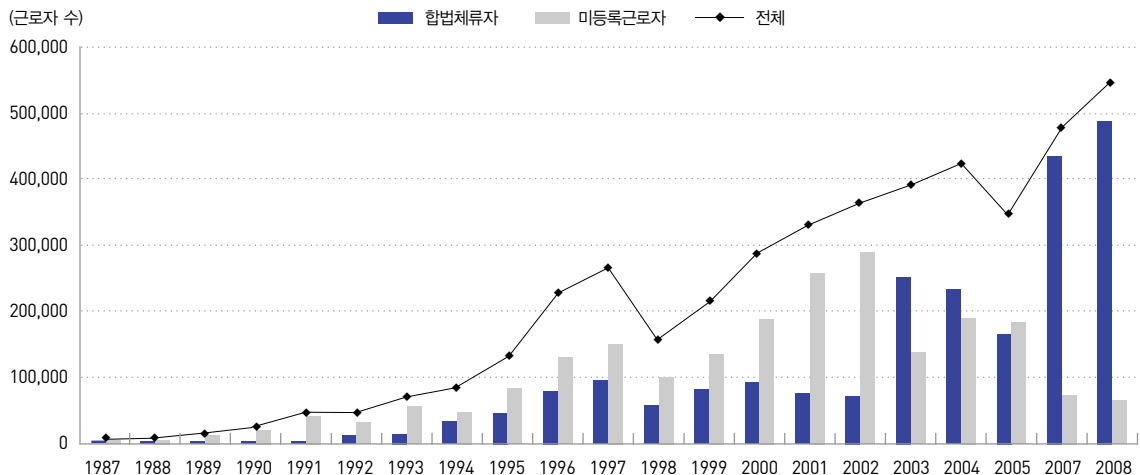
여기서는 국내 외국인 이주인구 중 가장 큰 집단인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규모, 분포, 이주 사유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은 기본적으로 1987년 이후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 부족 때문에 발생했다. 1987년 이후 강력한 노동운동으로 국내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전반적인 생활수준

의 향상으로 내국인 근로자들이 힘들고, 위협하고, 더러운 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생산직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었고, 특히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했던 중소기업의 생산 관련직에서 인력부족은 심각하게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이 합법화된 1992년 말부터는 해외에 지사를 둔 해외투자기업이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1993년 11월에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 수협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의 업종별 단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였다. 또한 방문 또는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외국인근로자수는 1991년에 45,449명에서 1995년에는 128,906명으로 증가하였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직후에는 그 수가 감소하였지만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0년 7월에는 285,506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규모는 당시 국내 전체 취업자의 약 1.2%, 임금근로자의 약 1.9%

[그림 1-12] 국내 외국인근로자 체류현황: 1987-2008



출처: 설동훈, 2006, "인구정책: 한국-이민정책", 『인구대사전』, 한국인구학회편, 2006

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후 외국인근로자수는 계속 증가해서 2008년 6월 30일 현재 542,670명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그림 I-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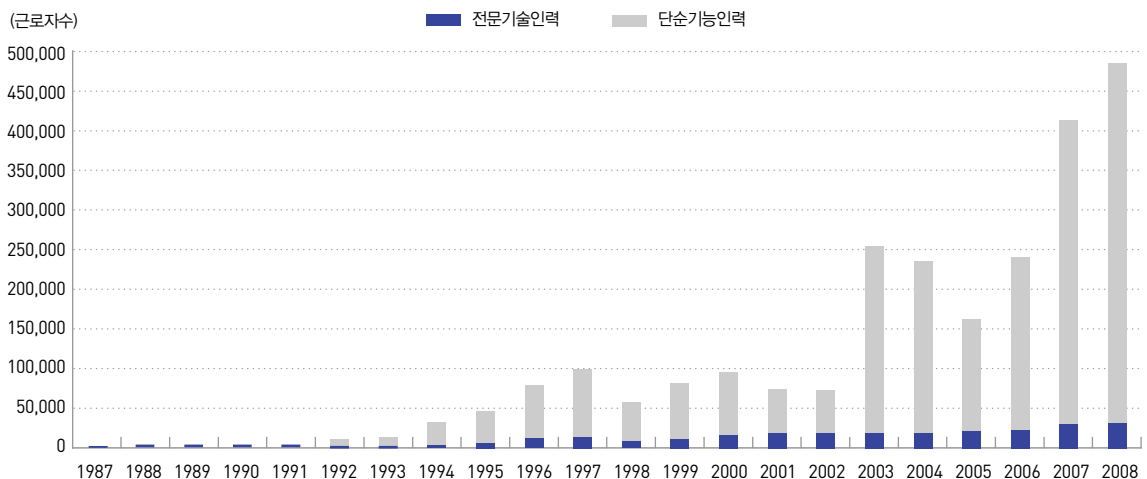
외국인근로자의 출신국도 다양해져서 2003년에는 90여 개국이었는데 2007년에는 120여 개국으로 늘어났다. 1990년대 초기에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에 집중되었던 주요 노동력 송출국도 이들 세 나라 외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의 나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2008년 현재에도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55.2%, 중국인(한족) 4.9%, 베트남·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인 25%, 몽고인 2.9%, 중앙아시아인 2% 순으로 조선족과 동남아 출신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아시아 노동유입국에 비교해서 낮은 편으로 1997년에 31%였던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2008

년에도 31%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2002년 이후 서비스업 분야로의 조선족 동포의 취업이 허용됨으로써 조선족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은 44.6%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외국인근로자가 종사하는 분야도 다소 확대되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97년에는 전문기술직(교수 및 연구, 회화지도, 기술지도, 전문 및 특정직업, 예술·홍행)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15,900명이었으나 2007년에는 31,300명으로 증가했다([그림 I-13]). 또한 외국인근로자 중에는 나이지리아와 가나에서 온 아프리카 외국인들이 외국인근로자 신분에서 벗어나 본국과의 국제무역에 종사하거나 장래의 사업을 개척하는 기업가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의 다수는 단순기능인력에 머물고 있으며,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근로자 중 93%가 단순기능인력이고, 5.5%가 전문기술인력, 예체능인력은 0.9%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외국

[그림 I-13] 직종별 합법체류 외국인근로자수 : 1987-2008



주: 전문기술인력은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홍행, 특정직업 사증 소지자를 가리킴.

출처: 설동훈, 2006, "인구정책: 한국-이민정책", 『인구대사전』, 한국인구학회편, 2006

인근로자 중 불법체류자는 62,073명으로 외국인근로자의 11.4%를 차지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단순기능 인력에 집중되어 있다.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은 특정 국가나 민족별로 집단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의 원곡동과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등은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인들과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지역공동체이다. 2008년에 시행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경기도에 39.6%(173,230명), 서울 24.7%(108,140명), 인천 7%(30,407명), 경남 6%(26,151명) 순으로 수도권에 71.3%가 집중되어 있다. 2007년과 비교해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외국인근로자는 각각 215%와 48% 증가한 것이다. 기업체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외국인근로자가 수도권으로 집중된 주된 이유이다.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증가는 외국인의 증가, 특별히 정주의 국인의 증가에 두 번째로 큰 몫을 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부터 2005년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59,000명을 넘으며,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도 80,000명을 넘는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국제결혼의 역사는 한국전쟁으로까지 올라간다. 한국전쟁 이후 연 40,000명의 주한 미군이 주둔하였는데, 1950년부터 1964년까지 6,000명 가량의 여성들이 미군의 배우자로서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결혼을 목적으로 해외로 이주하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었다.

1981년에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한 한국인 수는 6,187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1,113명으로 줄어들었다.

1992년 초반에 국제결혼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하면서 한국의 농촌 총각들이 중국 조선족 여성들과 혼인을 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통일교가 일본, 필리핀 여성들과 한국 남성들 간의 혼인을 주선하면서 비한인 아시아여성들이 결혼이민자로 입국하기 시작하였다(〈표 I-5〉).

2000년대에 들어서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의 소개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송출국도 다양하게 늘어났다. 이때부터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특히 2003년 이후에는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과의 결혼은 1990년 4,710건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43,121건으로 9배가 늘어났다.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의 비율은 1990년 1.2%에서 2005년에는 13.6%를 차지할 만큼 증가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절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지역 주민 대비 비율에서는 농촌지역이 월등히 높다. 2005년에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비율은 33%에 달했다.

결혼이민자의 국적 분포를 살펴보면 2008년 5월 현재 조선족 31.6%, 동남아 28.2%, 중국 22.1%, 일본 5.8%, 대만 3.3% 순으로, 중국 국적자(조선족 포함)가 다수이다. 결혼이민자는 세계화 흐름에 따라 전 지역에서 증가추세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여성(86.6%)이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국제결혼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증가하였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2006년

〈표 I-5〉 국제결혼 추세: 1997-2007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구성비율(%)
1997년	388,591	12,448	3.2	9,266	2.4	3,182	0.8
1998년	375,616	12,188	3.2	8,054	2.1	4,134	1.1
1999년	362,673	10,570	2.9	5,775	1.6	4,795	1.3
2000년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1년	320,063	15,234	4.8	10,006	3.1	5,228	1.6
2002년	306,573	15,913	5.2	11,017	3.6	4,896	1.6
2003년	304,932	25,658	8.4	19,214	6.3	6,444	2.1
2004년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2005년	316,375	43,121	13.6	31,180	9.9	11,941	3.8
2006년	332,752	39,690	11.9	30,208	9.1	9,482	2.8
2007년	345,592	38,491	11.1	29,140	8.4	9,351	2.7
1997~2007년	3,698,141	261,079	7.1	186,758	5.1	74,321	2.0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2007

25,000명, 2007년 44,000명, 2008년 58,0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이들은 전체 외국인 주민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6세 이하가 57.1%, 12세 이하가 32.2%로 전체의 89.3%를 차지한다.

통계청의 2006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자신을 포함하여 다문화 가구원(혼혈인 자녀, 외국인배우자 등)이 있는 개인은 전체 유효응답자 30,655명 중에서 110명으로 0.4%에 불과했다. 2008년 현재 외국인이 한국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사회가 다인종·다민족화가 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중 극소수만이 다문화 가족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다문화 가족은 인종, 민족, 문화적 소수자이며, 혈통적 민족주의와 문화적 동질성을 자랑으로 여기는 한국에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쉽다. 실제로 2006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서 자

신의 가족이 다문화 가족이라고 응답한 110명의 응답자 중에서 정부가 다문화 가구원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한 것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시급한 과제는 ‘사회적응을 위한 한글·문화교육 서비스’와 ‘기초생활 보장 등 경제적 지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인의 65.9%는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 가장 많이 거주(31.2%)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서울(29.2%), 경남(5.7%), 인천(5.5%) 순이다. 외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 역시 경기도에 27.0%(27,770명), 서울 23.4%(24,048명), 인천 5.9%(6,068명)에 집중하여서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 결혼이민자의 56.3%를 차지하였다.

외국인 주민들이 10,000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

를 살펴보면 서울 9군데(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용산, 광진, 동작, 성동, 서대문), 경기도 9군데(안산, 수원, 화성, 성남, 시흥, 부천, 용인, 고양, 김포), 인천에 2군데(남동, 서구), 충남 1군데(천안), 경남 1군데(김해)이다. 외국인 주민 중 조선족이 특별히 집중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4군데(구로, 영등포, 관악, 금천), 경기도 3군데(안산, 수원, 성남)이다. 동남아인들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도 화성, 안산, 시흥, 김포, 인천 남동, 경남 김해, 충남 천안으로 밝혀졌다.

1980년대 말부터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증

가로 한국사회는 인구학적으로 다인종·다민족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족은 아직 소수이며 다문화 가구원들은 피부색이 검거나 외모가 다르다거나, 개발도상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인구학적 다양성이 문화적 다양성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사회적 관용성을 높이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진정으로 다문화적인 사회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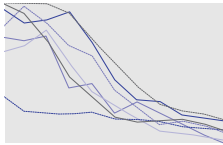
윤인진(고려대학교)

참고문헌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2008.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한국의 사회동향 2008

Korean Social Trends 2008



Population

Household & Family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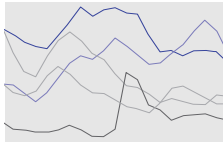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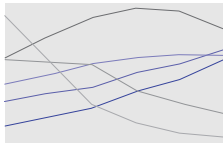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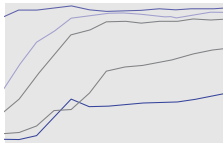
Health

Welfare

Environment

Social Security

Social Cohesion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 박경숙 32

가구 구성의 변화와 노인가구의 급증 • 이성용 42

초혼연령과 미혼율의 상승 • 이선이 49

II. 가족과 가구

Household & Family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현대 한국가족의 모습은 한 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다. 핵가족과 확대가족 이념이 동시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이런 가족주의 규범에서 벗어난 삶들도 증가하고 있다.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가족주의 규범에서 벗어나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규범과 갈등하면서 대안가족의 의미를 절실하게 찾고 있다. 국제결혼과 다문화의 경험은 혈통 또는 자연주의로 규정된 가족, 국가, 민족 개념을 상대화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넓히게 만든다. 사회의 주변으로 몰린 노년의 삶은 가족의 본래적 가치라고 간주되었던 효의 사회적 가치에 의문을 던지게 만든다.

이렇게 다양하게 변한 가족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학술적으로 조명되어야 하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삶의 주체와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데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가족은 또 얼마나 사람들의 기대를 구현하고 있는 것인가?

가족구조와 가족관계는 사회를 반영한다. 따라서 사회마다 가족의 고유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의한 지표를 개발하여 그 변화와 상황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가족의 변화와 상황을 가족구조, 가족형성, 가족관계 세 영역으로 나누어 주요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구조에서는 가구규모의 축소와 1인 가구의 증가, 직계가족의 감소와 같은 변화를 살펴보고, 가족형성 부분에서는 혼인연령의 지연과 이혼율 증가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가족관계에 크게 영향을 주는 부모부양과 부부간 일과 가족역할의 분담에 대한 태도와 행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과 가구 구성의 변화

가족은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지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집단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가족제도는 누가 가족성원에 포함되며 가족성원들 사이에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규정되는가와 관련하여 넓은 친족으로 구성된 확대가족과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가족은 경제생활과 사회 규범을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제도이다. 자영부문 비중이 큰 전통적 생산체제에서 가족은 생산의 기초 단위가 될 뿐 아니라 재생산과 부양기능을 수행해 왔다. 또한 가족을 통해 개인은 사회의 규범을 학습하고 자기 정체성을 발전시켰다. 한국의 가족은 이러한 전통 가족 형태에서 크게 변화했다.

한국 가족의 변화는 가구특성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가구원의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표 II-1〉). 일반가구의 가구원수는 1955년 5.7명에서 1980년에는 4.5명, 2000년에는 3.1명, 2005년에는 2.9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가구원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혈연가족 중 핵가족의 비중이 증가되고, 비혈연

가구 특히 1인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다. 최근 가구 형태의 변화는 핵가족이 지배적인 형태를 띠면서 비혈연가구와 1인 가구의 증가 및 직계가족의 감소로 특징될 수 있다. 혈연가구 중 부부 중심의 핵가족의 비율은 1966년 66.6%에서, 1975년 70.7%, 그리고 2005년 82.7%로 증가하였다. 핵가족은 대부분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지만, 최근에 오면 부부만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부부와 부모로 구성된 직계가족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여 1975년 21.6%에서 2005년 10.1%로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1인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 중 1960년 2.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15.5%, 그리고 2005년에는 20%에 육박하고 있다. 1인 가구는 젊은 연령층에서는 미혼율이 증가하고, 노년층에서는 자녀와의 독립거주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다.

가족구조의 변화는 특히 65세 이상 노년인구에서 두드러진다. 1980년대는 65세 이상 연령층의 84.9%가 자녀와 함께 살았지만 2005년에는 47.8%만이 자

〈표 II-1〉 가족과 가구구성 변화: 1975-2005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평균 가구원수	5.0	4.5	4.1	3.7	3.3	3.1	2.9
일반가구 중							
혈연가구 비율(%)	95.8	93.7	91.4	89.5	85.9	83.3	78.6
1인 가구 비율(%)	4.2	4.8	6.9	9.0	12.7	15.5	20.0
혈연가구 중							
핵가족 비율(%)	70.7	71.9	75.3	76.0	79.8	82.0	82.7
직계가족 비율(%)	21.6	18.8	17.0	14.9	14.8	11.2	10.1

주: 2000년까지는 표본자료를 이용 계산. 2005년은 65세 이상 인구의 총인구, 1인 가구, 세대구성 분포를 조합하여 재구성.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표 II-2〉 65세 이상 노인의 가구형태: 1980-2005

(%)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노 인 단 독	4.8	7.0	9.5	13.8	16.8	17.9
부 부	9.9	12.9	17.2	23.6	28.6	31.8
자 녀 동 거	84.9	78.2	71.9	61.6	53.8	47.8

주: 자녀동거는 2세대, 3세대, 4세대에 속하는 인구의 비율을 합한 값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녀와 함께 살고 있다. 반면 1인 가구와 부부단독 가구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출산율이 높았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단독, 부부중심의 가족관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것은 세대관계가 매우 크게 변화되었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한국의 가족구성 형태는 핵가족화, 확대가족가구의 감소, 단독가구의 증가로 변화되어 왔다. 가족구조에서 보면 핵가족이 지배적이고 확대가족 가구가 크게 감소하였지만, 가족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순수한 핵가족 관계라기보다는 광범위한 친족, 혈족 관계와 어우러져 있으며, 가족의 형성, 관계 측면에서 다양한 가족관계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만혼화

혼인은 가족 형성의 기초로서 법이나 관습에 의한 합법성이나 규범성을 가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배우자 선택은 누구보다 개인 당사자의 결정에 의하여 좌우된다. 자유로운 교제와 소통을 통해 친밀한 동반자를 선택하게 된다.

서양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법적인 혼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파트너십이 일반화되어 있기도 하다. 이렇게 배우자 선택권이 개인에게 주어지고 혼인의 가치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대안의 파트너십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서 혼인을 선택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2000년대 초 OECD 국가들의 평균 초혼연령은 대부분 남녀 모두 30대 초반이다. 2005년 한국인의 초혼연령은 남성 32세, 여성 28.8세이다. 1925년 남녀 초혼연령은 각각 20.68세와 16.47세였는데 무려 12세 정도 늦어진 셈이다(그림 II-1)). 이렇게 초혼연령이 늦어진 것은 미혼 시기가

〈표 II-3〉 국가 간 초혼연령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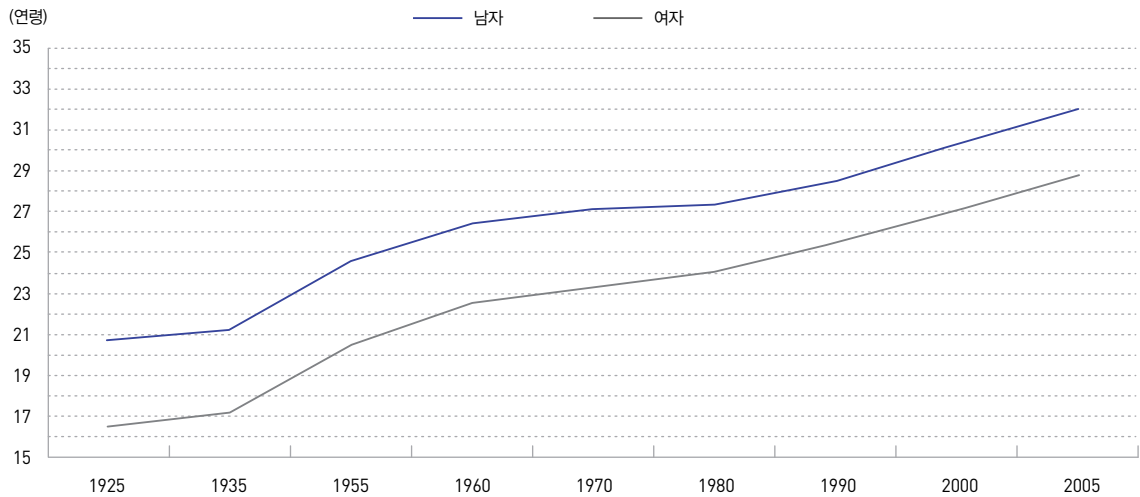
(연령)

국 가	여 자	남 자
한 국	27	30
프랑스	30	32
네덜란드	30	33
스위스	29	32
덴마크	31	33
노르웨이	31	34
스웨덴	32	35
아일랜드	31	32
헝가리	26	29
미 국	26	29
캐나다	27	30
호 주	29	31
일 본	29	31
싱가포르	27	30

주: 한국, 프랑스, 헝가리, 미국, 호주, 일본은 2000년,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싱가포르의 2001년,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캐나다는 2002년 자료임.

출처: UN Statistics Division, 「Indicators on Women and Men」, 2008

[그림 II-1] 초혼연령: 1925-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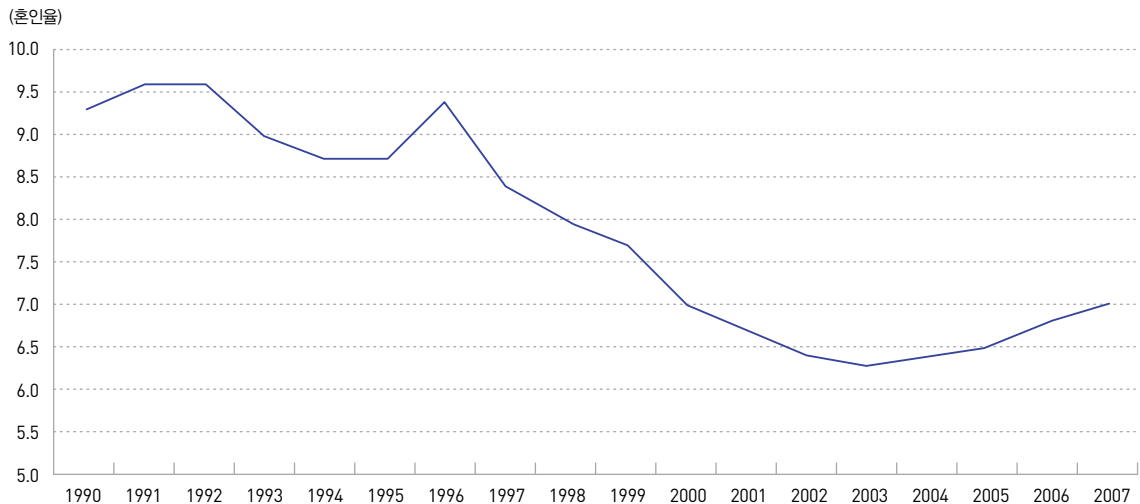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길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에는 남성은 20대 중후반, 여성은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게 지배적이었다. 남성의 경우 미혼율도 1970년대에 비해 크게 상승하여 2005년에는 20대 중반의 80% 이상이 미혼이

고, 30대 초반 미혼율도 크게 상승하여 1970년에는 6.4%였는데 2005년에는 41.3%로 증가하였다. 30대 후반의 미혼율도 2000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여 1990년 3.8%에서 2000년 10.6%로, 그리고 2005년

[그림 II-2] 조혼인율: 1990-2007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에는 18.4%로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 1970년 이후 지배적인 결혼 시기가 2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으로 이행하였다. 20~24세 여성의 경우 1970년만 해도 과반수가 결혼을 하였지만, 2000년에는 89.0%, 2005년에는 93.7%가 미혼상태에 있다. 25~29세 여성의 미혼율도 2000년 40.0%에서 2005년에 59.1%로 크게 상승하였다. 2000년 이후부터는 30대 초반의 미혼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결혼 형성이 지연되고 있는 경향은 인구 1,000명당 연간 혼인자 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혼인율은 1990년 9.3명에서 2003년에 가장 낮은 6.3명으로 하락하였다가 이후 조금씩 상승하여 2007년에는 7명이 되었다(그림 II-2).

이처럼 조혼연령이 늦어지고, 조혼인율이 하락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특히 지난 10여년 동안에 큰 폭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전 기간과는 구분된 사회 조건에서 청년기의 삶이 구성되고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

조혼연령이 늦어지는 것과 더불어 평생 혹은 장기간 혼인을 하지 않는 경향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가족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회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태도는 약화되고,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태도가 늘어나고 있다(그림 I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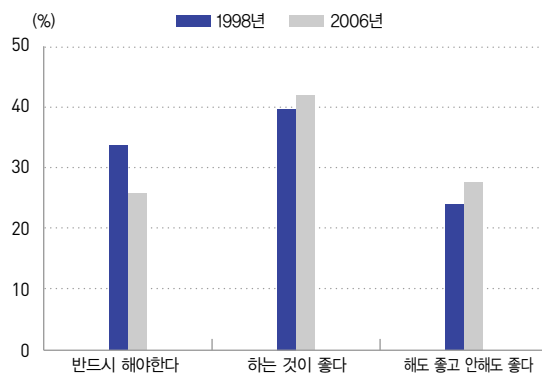
결혼을 당위적인 규범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크게 약화되었지만, 결혼은 아직 미래 삶을 구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출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자유롭게 파트너를 선택하게 되었지만, 용모, 실력,

집안배경 등이 배필감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맞선 정보업체를 통해 반려자를 찾는 사람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결혼 정보업체들에 등록되어 있는 남녀 수의 규모가 크듯이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으려는 기대와 노력은 결코 약하지 않다. 또한 국내에서 배우자를 구하기 힘든 남성들이 동남아시아 출신의 여성들과 속전속결로 결혼을 치루는 것도 현재 결혼 풍속도의 하나가 되었다.

이혼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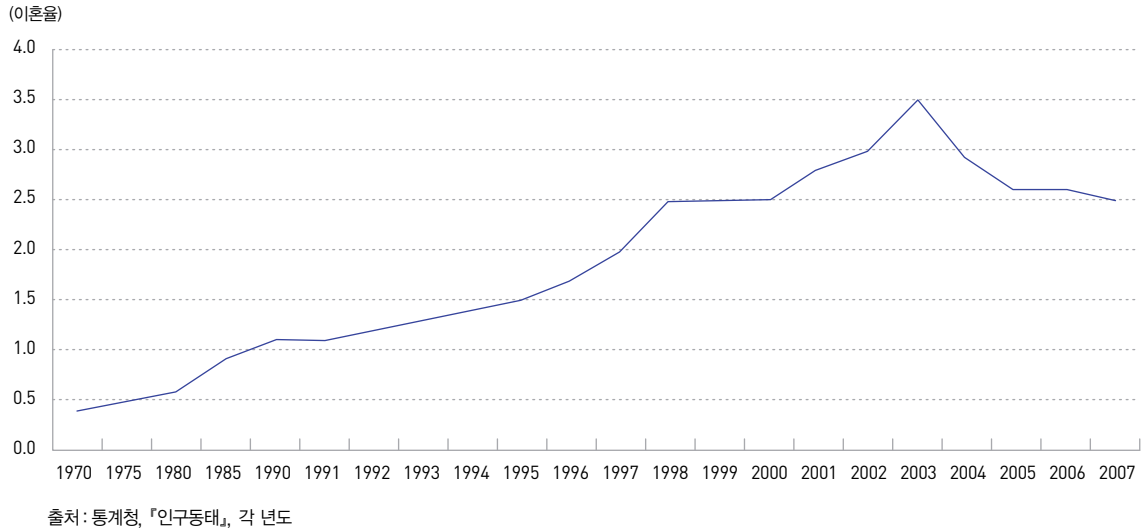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이혼을 금지하는 규범이 강하였다. 이런 규범 하에서 이혼여성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쉬웠고, 이혼가정 출신 자녀들은 커다란 상처를 받았다. 가족가치가 강하고 이혼에 대한 규범적 구속이 매우 강하여 설사 부부관계가 심각한 갈등을 겪더라도 이혼만은 하지 않는 경우가 지배적이었다. 이런 태도는 매우 낮은 이혼율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조이혼율의 추이를 보면 1990년까지만 해도 인구 1,000명당 1명

[그림 II-3] 결혼에 대한 태도: 1998, 2006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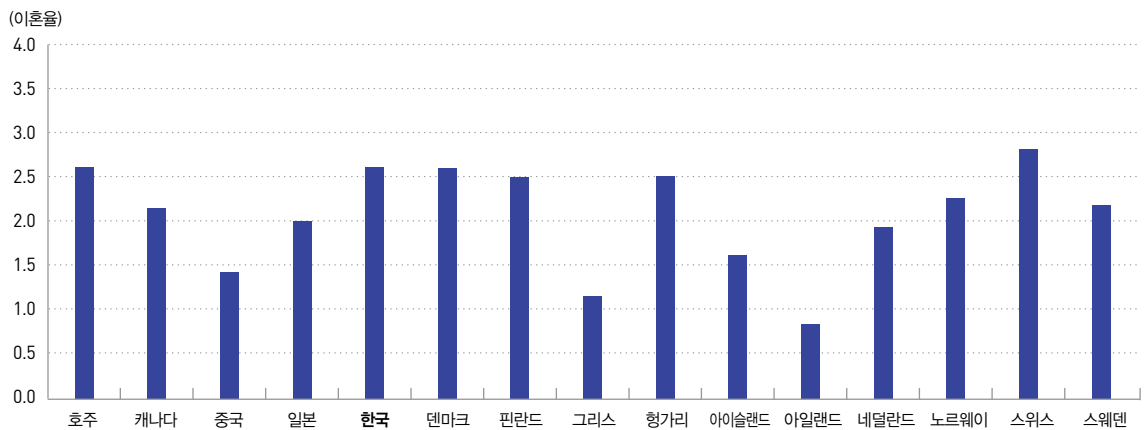
[그림 II-4] 조이혼율: 1970-2007



에 그쳤다([그림 II-4]). 그런데 1990년 중반부터 이혼건수와 이혼율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1.5명에서 1997년에는 2.0명, 1998년에는 2.5명으로, 그리고 2003년에는 3.5명까지 증가하였다. 이런 변화에는 1990년대

후반 사회전반을 휘감았던 경제위기가 가족위기로 이어진 영향도 있다. 이혼의 주된 사유로서 경제문제가 차지하는 구성비도 같은 기간 꾸준히 상승한 것에서 그 연관성을 가늠할 수 있다. 2004년부터는 조이혼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보인다.

[그림 II-5] 조이혼율의 국제비교



주: 캐나다는 2004년, 호주, 중국, 그리스는 2005년, 나머지 국가는 2006년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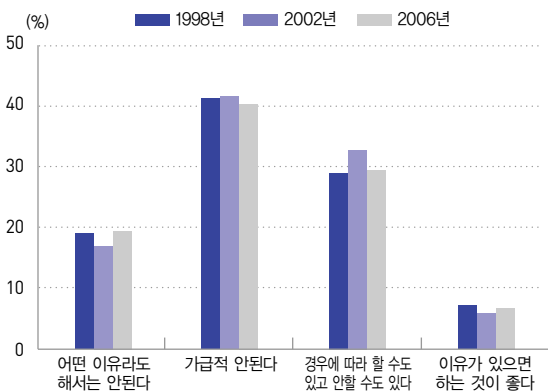
출처: UN Statistics Division, 『Indicators on Women and Men』, 2008

한국의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는 다른 나라들의 조이혼율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서구 몇 개 국가들과 중국 및 일본의 조이혼율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조이혼율이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5]).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재혼율도 증가하고 있다. 1990년 재혼율은 인구 1,000명당 1.6명에서 2005년에는 3.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혼율이 1990년대 중후반 이후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체로 이혼에 대해서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가 지배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 어떤 이유라도 해선 안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혼에 대해 상당히 숙려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6]).

[그림 II-6] 이혼에 대한 태도: 1998, 2002, 2006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노인부양의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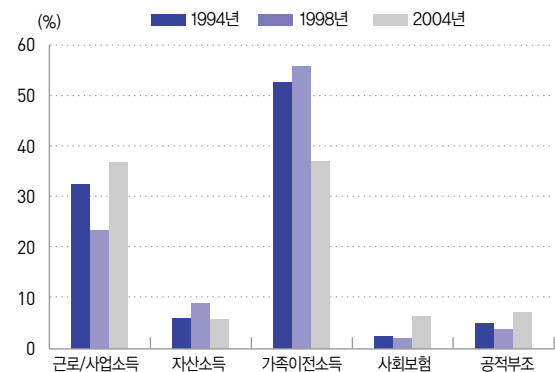
한국은 전통적으로 노부모가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식되었다. 그러나 자녀로부터

의 지원관계가 크게 변화되고 있는 점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자녀와의 동거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1980년 78.0%에서 2005년에는 47.8%로 감소하였다.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지원관계도 크게 변하였다. 한국 노인의 소득은 주로 가족이전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II-7]). 지난 10년 동안 주요 소득구성비에서 보면 근로소득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가족이전소득 비중은 크게 감소한 경향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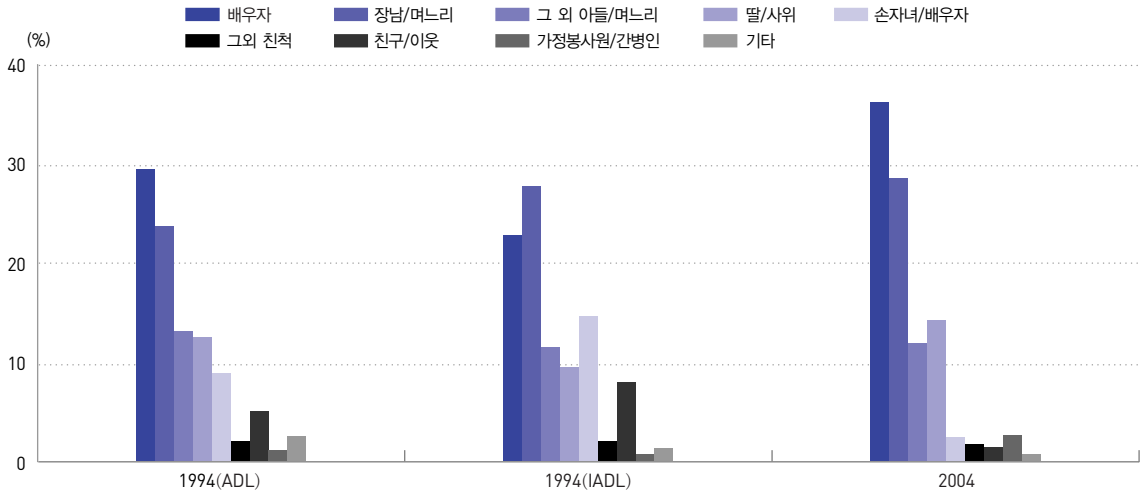
주된 소득원이 근로와 가족지원으로 구성되지만, 근로소득이나 가족지원의 규모는 제한적이다. 노인 대부분이 소득활동에서 벗어나 있고, 자녀로부터의 도움도 특별한 용돈이나 선물에 그쳐 근로와 가족이전으로 구성된 소득 수준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그림 II-7]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와 같은 사회복지 부문의 기여도가 증가하였지만 그 수준은 여전히 낮다.

[그림 II-7] 65세 이상 노년의 총소득 대비 소득구성비: 1994, 1998, 2004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생활실태조사』, 각 년도

[그림 II-8] 신체적 돌봄의 제공자: 1994, 2004



주: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은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앉기, 걷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며,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은 일상용품 사러가기, 전화걸기, 버스·전철 타기, 가벼운 집안일 하기 등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생활실태조사』, 각 년도

신체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의 제공자는 주로 가족이다. 가족 중에서도 주된 돌봄제공자는 배우자나 장남 또는 며느리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가족 돌봄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적 부담이나 신체적 탈진 못지않게 정서적 고갈 상태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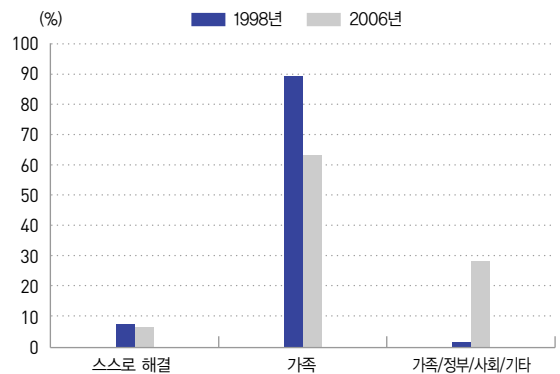
이처럼 노년기 소득과 서비스 지원은 많은 긴장과 부담을 가지면서 가족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노년의 가족부양이 주된 부양자뿐만 아니라 피부양자인 노부모 당사자에게도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식한테 걱정 안 끼치고, 남한테 짐이 되지 않고 사는 게 노년의 가장 큰 바람이 되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자녀가 노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은 지난 10년 동안 많이 약화되었다([그림 II-9]). 1998년과 2006년 세대주의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보면 가족

책임이라는 태도가 지배적이지만 그 비율이 89.9%에서 63.7%로 줄어들어 그다지 길지 않은 시점 사이에도 변화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부모와 자녀 사이에 독립적인 관계를 지지하는 태도가 강해지고 있다. 이는 노년의 활동적인 삶

[그림 II-9]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1998, 2006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을 선호하는 가치변화와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녀 도움을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힘든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심리변환으로 이해된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이 강조되면서, 친밀함과 돌봄 기대가 배우자로 이행하고 있는 부분도 관찰된다. 노후 동거 희망자는 배우자와만 함께 사는 것이 단연 선호된다. 노후에 요양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고 싶은 대상자도 자녀보다 배우자이다. 또한 사회적 요양서비스에 기대하는 태도도 강하게 나타난다.

부부간 성역할의 변화

과거 한국에서는 남녀 역할에 차이를 강조하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즉 남자는 사회 경제적인 역할을, 여성은 그런 남성과 가족을 돌보는 게 미덕이라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이런 성역할 분리 규범의 영향으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취약하였다. 지난 20~30년간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매우 높아졌고, 보다 동등한 사회참여를 지지하는 태도도 강해지고 있지만 이런 태도의 변화만큼 실제 남녀 역할관계가 평등하게 개선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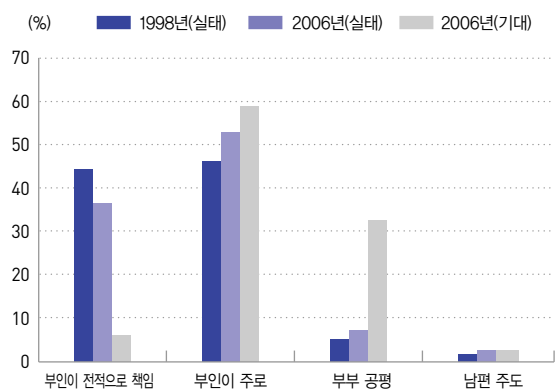
성역할에 대한 태도와 행위 사이에는 차이가 큰데, 이는 기혼부부의 일과 가사역할의 분담 실태와 태도의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II-10). 2006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가사역할은 부인이 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9.4%, '부부가 공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2.4%로 나타난다. 반면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9%에 그친다. 이렇게 태도 면에서 보면, 아직도 부인이 가사를 맡아야 한다는 규범이 강하지만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 일에 참여

해야 한다는 태도도 상당히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부부가 실제 가사를 분담하고 있는 방식에서는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비율이 7.9%에 그치고 있다. 실제 생활에서는 부인이 주로 하거나 부인이 전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일반적이다. 그리고 1998년과 2006년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부인이 주도적으로 가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44.3%에서 36.5%로 약간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지배적인 패턴은 여전하다.

가사가 부인에 의해 배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가계 책임에서는 공동으로 부담하는, 즉 맞벌이로 가계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녀 양육이나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남편의 소득만으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부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남편이 가사에 참여하는 경향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가사를 주로 여성이 담당하는 경향에서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불균등한 성역할 관계의 결과 많은 여성들

[그림 II-10] 가사분담 실태와 기대: 1998, 2006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은 일과 가족역할을 이중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일과 가족역할 수행에서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자녀에게 손이 많이 가는 시기에는 일을 하지 않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다시 일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가족역할을 위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일정한 공백기 뒤에 다시 노동시장에 돌아오는 M형 생애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여성이 일과 가족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긴장이 크다. 가부장제적 남성권위가 남아있었을 때는 많은 여성들이 일과 가족역할의 이중적 부담을 감내하였지만, 현재 맞벌이 여성들에게 이중적 부담은 불합리한 역할관계로 인지되는 부분이 크다. 많은 여성들은 맞벌이 부부라도 집안일은 여자가 맡아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으며 이런 태도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박경숙(서울대학교)

가구 구성의 변화와 노인가구의 급증

요 약

- 최근 우리 사회의 가족제도가 확대가족에서 핵가족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전환됨에 따라 3세대 이상 가구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1세대 가구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1980년 이후 우리 사회는 가구원수 1명 혹은 2명인 가구 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평균 가구원수는 감소한 반면 총가구수는 증가하였다.
- 노인가구의 비율과 노인단독가구의 비율도 1980년대부터 급증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전통가족은 부부가 노부모를 모시고 자녀들과 함께 사는 확대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확대가족은 1960년대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급격하게 서구 형태의 핵가족으로 전환하였다. 게다가 1990년대 이후에는 핵가족 형태마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와 서구의 개인주의 가치관 확산으로 인해 다양한 가족형태로 변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형태의 발생은 가구구조의 변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가구구성 및 변동이 다양한 가족형태로의 변동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을 통해 형성된 집단이다. 그러나 가구에는 가족성원이 아닌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구는 대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여기에서는 먼저 1980년대 이후 가구 및 가구원수와 세대구성의 변동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전통적 확대가족의 해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노인가구에 대해 관찰해 보기로 하겠다.

가구원수의 변동

〈표 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1980년 약 3,744만 명에서 2005년 약 4,728만 명으로 1.26배가, 총가구수는 1980년 약 797만 가구에서 2005년 1,589만 가구로 거의 2배가 증가하였다. 1980년대 이래 총가구의 증가율이 총인구의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보인다. 반면, 평균 가구원수는 1980년 4.5명에서 2005년 2.9명으로 감소했다. 1980년대 이래 총가구수와 총인구수는 증가했지만, 평균 가구원수는 계속 감소했다(〈표 II-4〉).

만일 평균 가구원수의 증감이 없다면, 인구증가율과 가구증가율은 거의 비슷할 것이다. 만일 평균 가구원수가 감소하거나 혹은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들의 비율이 감소하고 가구원수가 적은 가구들의 비율이 증가한다면, 가구증가율은 총인구 증가율을 상회할 것이다. 1980년 이래 총가구수는 총인구의 증가와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로 인해 꾸준히 증가해 왔다. 흥미로운 것은 1995년 이후 인구성장률이 급격히 감소했는데 가구의 성장률은 완만하게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1990년 이후 총가구수의 증가에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와 같이 가구원수가 적은 가구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로 인해 총가구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통계청, 2007)의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8년까지 매우 낮은 비율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가구수는 계속 증가하여 2030년에는 1,987만 1,000가구에 달하고 평균 가구원수는 계속 감소하여 2030년에는 2.35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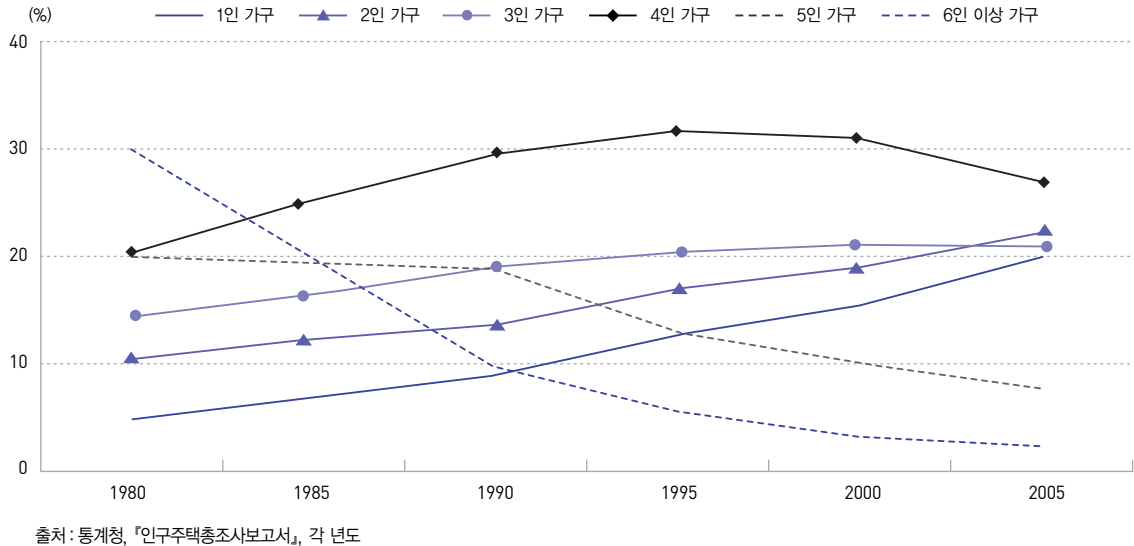
가구원수별 가구의 구성비 변동은 평균 가구원수가 어떻게 감소되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6인 이상의 가구의 구성비는 1980년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29.9%), 2005년에는 2.3%로 1/10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그림 II-11). 6인 이상 가구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배경에는 아마 1950년대 후반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의 분가가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5인 가구의 구성비도 1980년 20%에서 2005년 7.7%로 감소하여 거의 1/3 수준이 되었다. 반면 1인 가구의 비율은 1980년 4.8%에서 2005년 20%로 4배 이상 증가하였고, 2인 가구의 비율도 1980년 10.5%에서 2005년 22.2%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증가는 1990년 이전보다 이후에 특히 두드러진다. 요컨대 1995년 이후 총가구수의 증가에는 총인구수의 증가보다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들의 감소와 가구원수가 작은 가구들의

〈표 II-4〉 인구 및 가구 변동 추이: 1980-2005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총인구수(1,000명)	37,436	40,448	43,411	44,609	46,136	47,279
(증가율(%))	(1.53)	(1.56)	(1.42)	(0.55)	(0.68)	(0.49)
총가구수(1,000가구)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증가율(%))	(3.69)	(3.73)	(3.48)	(2.68)	(2.01)	(2.11)
평균 가구원수	4.54	4.09	3.71	3.34	3.12	2.88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그림 II-11] 가구원수별 가구분포의 변화: 1980-2005



증가가 더 큰 기여를 했다.

통계청(통계청, 2007)의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2030년에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는 23.7%, 2인 가구는 28.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에는 전체 가구 중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될 것이다.

3인 가구의 비율은 1990년까지 증가한 뒤 그 이후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인 가구의 비율은 1985년 이후부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2005년 감소했다. 2005년 감소는 아마 2000년대에 나타난 초저출산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들어 가구분포의 변동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1990년 이후 1인 가구 비율의 증가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인 가구를 예외적인 가구 형태가 아니라 독자적인 가구형태로 간주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2000년과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연령별

1인 가구 구성비를 비교해 보면, 60세 이상이 2000년과 2005년에서 각각 31.8%와 30.8%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그리고 그 다음은 20~29세로 2000년과 2005년에 각각 23.1%와 21.4%를 보여준다. 30대와 40대는 20대 다음으로 높은 1인 가구 구성비를 보여주지만,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특히 도시지역에서 가장 높은 1인 가구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20대와 30대의 1인 가구 증가에는 혼인연령의 상승, 40대와 50대는 이혼율의 증가 및 자녀의 조기 유학으로 인한 '기러기 아빠'의 증가, 그리고 60대 이상에는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 독신가구(특히 농촌지역의 여성들)의 증가가 기여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지역별 1인 가구의 변동을 살펴보면,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증가했고 또 증가율도 도시지역이 더 높다. 그러나 연령별 1인 가구 구성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에서는 젊은 세대(30세 미만과 30~39세)가 높은 비

율을 보이지만 농촌지역에서는 노인 세대(60~69세와 70세 이상)가 높은 비율을 보인다. 요컨대 도시지역의 1인 가구는 주로 혼인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미혼 혹은 독신가구들이 주축을 이루는 반면, 농촌지역의 1인 가구는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 독신가구가 주축을 이룬다.

1960년대 이후의 사회변동은 우리 사회의 혼인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45~49세 여성 중 미혼 여성의 비율이 1990년 0.6%, 2000년 1.7%, 2005년 2.4%로 증가하였다. 49세까지 독신으로 지내는 여성의 비율은 현재까지 비교적 낮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45~49세 연령대에 진입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인다. 이는 45~49세 여성의 낮은 독신비율이 아직까지는 결혼이 한국에서 보편적 현상이라는 것을 말하지만, 2000년 이후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즉 혼인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여성의 독신비율을 증가시키고 도시에서 여성 1인 가구의 비율을 증가시켰다. 노인 독신가구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볼 노인가구 형태에서 언급하겠다.

세대구성의 변동

1980년 이래 총가구수는 증가한 반면 평균 가구원수는 감소했다는 사실은 과거 여러 세대의 성원들이 함께 거주했던 가구들 중 상당수가 한 세대 혹은 두 세대의 가족 성원들로 구성된 가구 형태로 변동했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세대별 가구분포도 최근 25년간 상당히 변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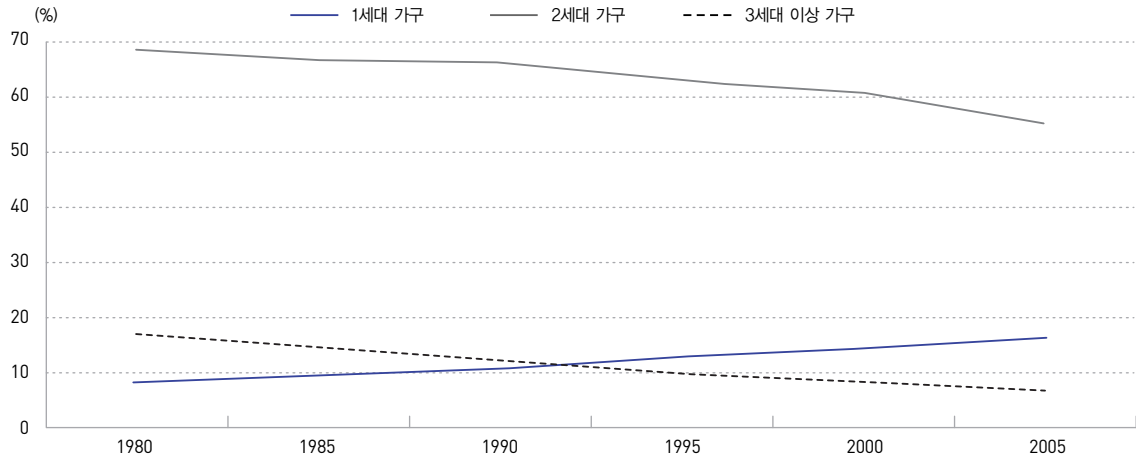
우선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확대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3세대 이상 가구의 비율이 1980년 17.0%에서 2005년 7.0%로 계속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에는 도시화로 인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분가가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도시인구는 1960년에는 700만으로 전체 인구의 28%에 불과했지만, 1990년에는 3,2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4.4%에 도달했다. 1960년에서 1990년 사이에 도시인구는 약 2,500만이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농촌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하였고, 그 곳에서 배우자를 만나 도시에 가정을 꾸렸다. 반면 이들 젊은이들의 부모들 중 상당수는 농촌에 계속 남았다. 도시에서 취직하고 가족을 형성한 젊은이들은 농촌의 부모들과 함께 거주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요컨대, 도시화 현상은 도시에서는 부모와 자녀들로 이루어진 2세대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농촌에서는 우리의 전통적 가족 형태인 3세대 이상으로 형성된 가구의 비율이 감소하는 동시에 노인부부만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발생시켰다.

게다가 1980년대 말 수도권 개발은 도시에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분가를 촉진시켰다. 아파트 분양권은 세대주에게 할당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세대를 형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핵가족과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도 자녀세대의 분가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는 자녀를 낳지 않는 젊은 부부들의 증가에 기여했고, 이러한 무자녀 젊은 부부들의 증가는 도시화로 인한 노인 부부 가구들의 증가와 함께 1세대 가구의 비율을 증가시켰다.

[그림 II-12] 세대별 가구분포의 변화: 1980-2005



출처: 2000년까지는 김정석, "가족과 가구", 2002; 2005년 자료는 통계청, 2005 센서스 인구주택총조사전수집계결과, 2006

2세대 가구 구성비는 1980년대에 완만히 감소하다가 1990년 이후에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2세대 가구를 유형별로 2000년과 2005년을 비교해 보면, 부부와 자녀가 사는 2세대 가구 구성비는 2000년 48.2%에서 2005년 42.2%로 감소했지만, 한부모와 자녀가 사는 2세대 가구 구성비는 7.9%에서 8.6%로 그리고 조부모와 손자녀가 사는 2세대 가구 구성비는 0.3%에서 0.4%로 증가하였다. 서구 혹은 근대사회에서의 전형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핵가족 형태의 가구가 감소하는 반면, 다양한 형태의 가족(혹은 불안정한 형태의 가족)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근본적인 변동이 발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변동은 독신여성의 비율, 이혼, 재혼 비율의 증가와 관련될 것이다.

노인의 가구 급증

도시화와 핵가족 그리고 개인주의의 확산은 노인들

로 구성된 노인가구의 비율을 증가시켰다. 전체 가구 중 노인가구의 비율은 1980년에 5.9%에 불과했으나 2005년 17.9%로 증가하였다(〈표 II-5〉). 특히 농촌 지역에서 노인가구 비율은 1980년에 이미 8.9%로 도시지역 노인가구 비율의 약 2.3배이었고, 그 후 계속 증가하여 2005년 무려 36.1%를 보인다. 농촌지역에서 3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노인가구이다. 도시지역은 농촌지역보다 노인가구의 비율이 낮지만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노인부부만이 동거하는 제 1세대 가족도 1990년 16.9%에서 2000년 28.7%, 2005년 33.0%로 계속 증가하였다(〈표 II-6〉). 노인 부부가구와 노인 홀로 사는 노인 단독가구를 합친 노인가구의 비율은 1990년 25.8%에서, 2000년 44.9%, 2005년 51.1%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오늘날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2가구당 하나는 노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연령별로 보면 65~69세 연령층은 1세대 가구에, 80세 이상은 3세대 이상 가구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표 II-5〉 전체 가구 중 노인가구 비율의 변화:1980-2005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전 체	5.9	5.8	8.5	9.7	12.2	17.9
도 시 지 역	3.8	4.0	5.6	6.4	8.4	11.7
농 촌 지 역	8.9	9.3	17.1	20.6	25.2	36.1

주: 노인 가구=노인 단독가구+노인 부부가구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있다(그림 II-13). 1세대 가구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반면, 3세대 이상 가구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배우자가 사망한 노인이 자녀 가족과 가구를 합치는 경향에 기인할 것이다. 2세대 가구는 70대에서 감소하다가 80세 이상에서는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 비율은 70~79세에는 증가하다가 80세 이상이 되면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3세대 이상 가구의 증가 현상과 유사하게, 노인들이 혼자서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연령에 도달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와 가구를 합치는 결과로 해석된다. 요컨대 아직도 부모가 경제적 혹은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면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990년 이후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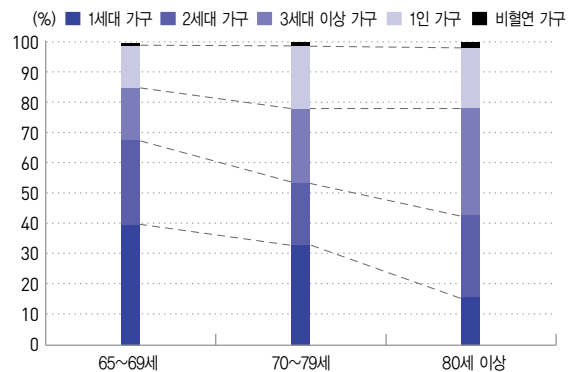
노인의 1인 가구 혹은 노인 독신가구 비율의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의 구성비가 1990년 8.9%에서 2000년 16.2%, 2005년 18.1%로 무려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가장 타인의 도움이 절실한 고령층인 80세 이상 노인에서 1인 가구의 구성비가 2000년 15.0%에서 2005년 20.4%로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성별로 보면, 2005년 센서스에서 80세 이상 노인 가운데 1인 가구에 사는 여성의 비율은 무려 24.6%(80세 이상 여성 노인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홀로 산다)로 남성 노인의 비율 10.7%보다 두 배가 훨씬 넘는다. 80세 이상 여성 노인이 홀로 사는 여성 노인 독신가구의 비율은 2000년 17.6%에서 5년 만에 무려 7%가 경증 뛰었다. 80세 이상 남성노인

〈표 II-6〉 65세 이상 인구의 세대구성:1990, 2000, 2005

	1990년	2000년	2005년
1세대 가구	16.9	28.7	33.0
2세대 가구	23.4	23.9	24.9
3세대 이상 가구	49.6	30.8	23.4
1인 가구	8.9	16.2	18.1
비혈연 가구	1.2	0.4	0.5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그림 II-13] 65세 이상 인구의 연령별 세대구성:2005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독신가구의 비율도 2000년 8.3%에서 2005년 10.7%로 증가하였다.

2005년 65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를 보면, 유배우 55.4%, 사별 42.9%, 이혼 1.1%, 미혼 0.5%의 순으로 나타난다. 2000년에 비해,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남녀 모두 유배우 비율은 증가하고 사별 비율은 감소했다. 65세 이상 남자의 경우 유배우가 85.0%이고 사별이 13.3%인데 반해 여자의 경우 유배우가 35.9%이고 사별은 62.5%였다. 이는 남녀간의 평균수명과 혼인연령 차이로 인해 여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별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노인 독신가구는 일반적으로 노인부부가족 혹은 노인과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들과 다른 특성을 지닌다. 노인 독신가구가 노인 부부가구보다 삶의 조건이 훨씬 더 열악하다. 노인 독신가구는 노인 부부가구에 비해 여성과 고령인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다. 노인 독신가구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이유가 노인의 자발적인 의사보다는 자녀와의 관계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 독신가구는 노인 부부가구보다 사회적 지원을 덜 받으며, 또 노인 독신가구의 노인들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도도 낮다. 또한 많은 경우 노인 부부가구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하다.

이성용(강남대학교)

참고문헌

- 김정석. 2002. “가족과 가구.” 김두섭·박상태·은기수(편). 『한국의 인구』. 통계청.
- 통계청. 2006. 2005 센서스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가구·주택부문].
- _____. 2007. 『2005-2030 장래가구추계』.

초혼연령과 미혼율의 상승

요 약

- 초혼연령은 2000년을 전후하여 급속도로 상승하였다.
- 결혼 지연을 넘어서서 영구적 독신이 증가하는 조짐이 남성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교육정도가 낮고 미취업인 것이 남성의 혼인이행에 크게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미혼자들이 독립적으로 가구를 형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패턴은 여전히 우세하다.

이 글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초혼연령과 미혼율의 상승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초혼연령 상승의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성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또한 도시·농촌 간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20~30대를 중심으로 미혼자들의 혼인이행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단순히 결혼을 지연하는 것인지, 영구적 미혼자가 증가하는 조짐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20~30대 미혼자들의 특성을 교육정도, 취업여부, 거주형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평균 초혼연령의 추이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연령은 근대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다. 평균 초혼연령이란 각 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한 초혼 당사자들 연령의 평균값을 말하는데, 2007년 현재 남성들의 평균 초혼연령은 31.1세이고 여성들의 경우는 28.1세이다. 1975년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이 26.8세였고 여성은 22.8세였다. 불과 30여년 사이에 남성은 4.3세가, 그리고 여성은 5.3세가 상승한 것이다(〈표 II-7〉).

〈표 II-7〉 시·면부 및 성별 평균 초혼연령: 1975-2007

(연령)

	전 국		시 부		면 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75년	26.8	22.8	-	-	-	-
1981년	26.4	23.2	-	-	-	-
1985년	27.0	24.1	-	-	-	-
1990년	27.8	24.8	-	-	-	-
1995년	28.4	25.4	28.5	25.6	27.9	24.4
2000년	29.3	26.5	29.4	26.7	28.9	25.5
2001년	29.6	26.8	29.6	27.0	29.1	25.8
2002년	29.8	27.0	29.8	27.2	29.5	26.0
2003년	30.1	27.3	30.2	27.4	29.9	26.3
2004년	30.6	27.5	30.6	27.7	30.4	26.5
2005년	30.9	27.7	30.9	27.9	31.0	26.5
2006년	30.9	27.8	30.9	28.0	31.3	26.4
2007년	31.1	28.1	31.1	28.2	31.4	27.0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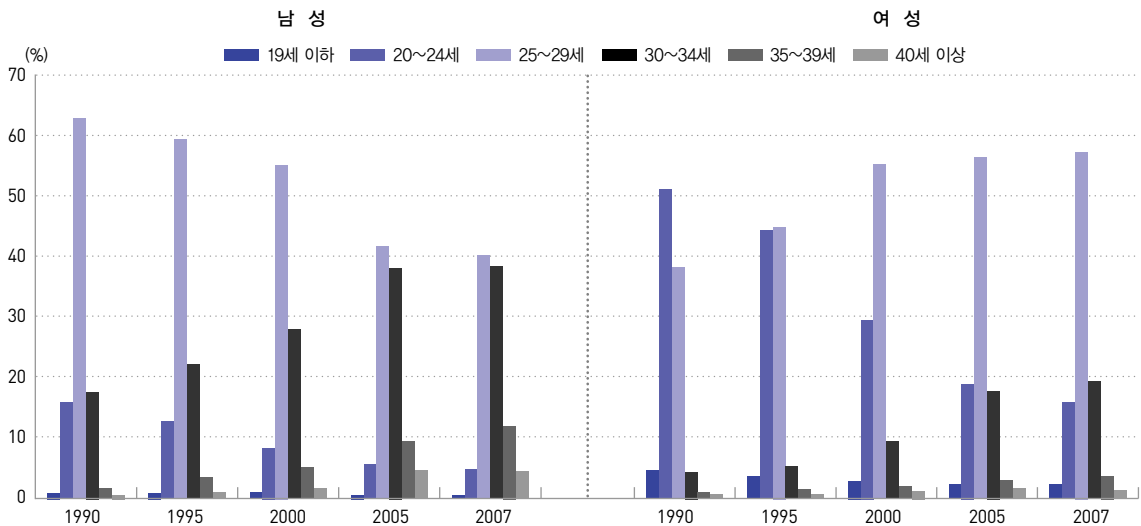
1975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5년 간격으로 평균 초혼연령의 증가폭을 살펴보면, 특히 1995년 이후에 증가폭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1995년과 2007년 사이에 2.7세가 상승하였다. 특히 2000년과 2005년 사이에 남성은 매년 0.3세 이상씩 평균 혼인연령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다.

1975년과 2007년 사이 초혼연령의 변화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이 4.3세, 여성이 5.3세로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 증가폭이 1.0세 더 크다. 따라서 평균 혼인연령의 성별 격차도 1975년의 4.0세에서 2007년에는 3.0세로 줄어들었다. 여성의 경우는 1975년과 1985년 10년 사이에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그 기간 동안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1.3세가 상승하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남성은 불과 0.2세가 상승했던 것과 크게 대조된다. 당시의 이러한 성별 격차는 베이비

붐에 수반되는 결혼압박(marriage squeeze)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베이비붐 세대에서 여성들이 혼인연령에 먼저 도달함으로써 당시에 결혼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여성 초과상태가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여성들의 평균 혼인연령은 높아지고 남성들의 평균 혼인연령은 오히려 낮아지거나 매우 소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빚어졌던 것이다.

1985년 이후에는 여성과 남성 간 평균 혼인연령의 차이는 크게 흔들림 없이 3.0세 내외를 유지하며 지속되고 있다. 최근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 상승이 남성의 초혼연령보다 1세 정도 더 높은 것은 근래에 만들어진 것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또한 흔히 이야기되듯이 여성의 지위 상승이나 교육 및 사회 진출의 확대에 따른 것도 아니다. 그 차이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결혼압박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그림 II-14] 초혼의 연령별 분포: 1990~2007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시부와 읍면부의 차이를 살펴보면, 원래는 읍면부에서 평균 혼인연령이 더 낮은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으나, 최근 들어서 남성에게서는 그런 패턴이 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시부와 읍면부의 평균 혼인연령에는 1세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여성의 경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1990년대에 이르러 평균 혼인연령의 차이가 0.5세 정도로 축소되었고, 2000년 이후 더욱 감소하다가 2005년부터는 면부의 평균 혼인연령이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과 남성 간 평균 혼인연령의 차이는 원래부터 시부보다 읍면부가 큰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의 면부와 읍부 남성들의 평균 혼인연령 급상승으로 인해 그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초혼연령의 전반적 상승 현상은 초혼의 연령별 분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남성들의 경우 2007년 초혼자들의 40.4%는 20대 후반인 것으로 나타나며,

1990년의 63.2%와 비교하면 그 비율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II-14]). 그 대신 30~34세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또한 30대말 또는 40대 이상의 비율도 크게 상승하였다. 2004년을 기해만 30세 이상에서의 초혼 비율이 전체 초혼건수의 50%를 넘게 되었다.

여성의 경우 결혼하는 사람들 중 20~24세의 비율은 1990년 51.5%에서 2007년 15.6%로 크게 감소하였다. 최근에는 여성 초혼자의 대다수가 20대 후반이며, 30세를 넘긴 여성들이 전체 초혼자의 25% 가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초혼 연령은 남성들에 비하면 상승의 한계가 훨씬 낮은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남성 초혼자 중 35세 이상의 비율은 15%가 넘지만, 여성은 5% 수준이다. 또 40세 이상 초혼의 건수는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남성은 약 4,000건에서 13,0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여성은 약 3,000건에서 4,000건으로 상승했을 뿐이다.

미혼율 추이

초혼연령 정보는 결혼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미혼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들이 언제 결혼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20~30대를 이루는 사람들의 인구규모와 이들의 혼인상태를 볼 필요가 있다.

우선 20~30대 인구규모를 살펴보면 1996년 이후 이 인구층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5년 현재 약 1,600만 명 정도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약 45만 명 정도가 더 많은 것이 지난 15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5년 단위 연령집단 간에 대체로 10만 명 이상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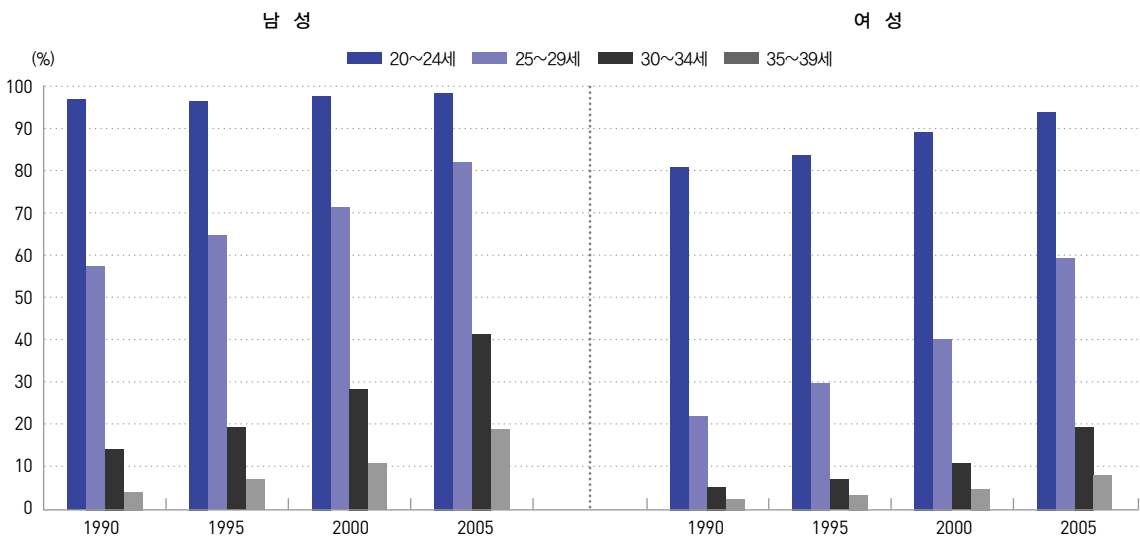
이 인구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상태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II-15). 2005년 현재 남성의 경우, 20대 후반의 미혼율

이 약 82%이므로 결혼을 한 사람의 비율은 20%를 넘지 않는다. 또 30대 초반의 미혼율이 40%가 넘으며, 30대 후반까지 미혼인 사람이 18%가 넘는다. 이는 1990년에 30대 초반의 미혼율이 14%, 30대 후반에는 4% 미만으로 40세 이전에 남성인구의 95% 이상이 기혼자였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여성의 경우 20대 초반의 미혼율이 94% 미만이며, 20대 후반의 미혼율이 59%이다. 이는 이 연령층 인구의 기혼자는 반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0대 초반도 거의 20%가 미혼상태이다. 1995년에는 20대 초반의 20%가 기혼이었고 20대 후반에 이미 78%가, 30대 초반에 95%가 기혼이었던 것과 크게 대조된다.

[그림 II-15]를 보면, 각 연령층의 미혼율이 5년 후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990년에 20대 초반이던 남성이 5년 후인 1995년에

[그림 II-15] 20~30대의 미혼율: 1990-2005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표 II-8〉 성별 코호트의 도달 연령대 미혼율

(%, ()안은 증감)

코호트 유형		도달 연령대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남 성	1960년대 초 출생 (1980년에 20대 초반)	93.1	(-42.3)	50.8	(-36.9)	13.9	(-7.2)	6.7	
	1960년대 말 출생 (1985년에 20대 초반)	94.4	(-37.1)	57.3	(-37.9)	19.4	(-8.8)	10.6	
	1970년대 초 출생 (1990년에 20대 초반)	96.4	(-32.0)	64.4	(-36.3)	28.1	(-9.7)	18.4	
	1970년대 말 출생 (1995년에 20대 초반)	96.3	(-25.3)	71.0	(-29.7)	41.3		-	
	1980년대 초 출생 (2000년에 20대 초반)	97.4	(-15.6)	81.8		-		-	
여 성	1960년대 초 출생 (1980년에 20대 초반)	66.1	(-47.7)	18.4	(-13.1)	5.3	(-2.0)	3.3	
	1960년대 말 출생 (1985년에 20대 초반)	72.1	(-50.0)	22.1	(-15.4)	6.7	(-2.4)	4.3	
	1970년대 초 출생 (1990년에 20대 초반)	80.5	(-50.9)	29.6	(-18.9)	10.7	(-3.1)	7.6	
	1970년대 말 출생 (1995년에 20대 초반)	83.3	(-42.2)	41.1	(-22.1)	19.0		-	
	1980년대 초 출생 (2000년에 20대 초반)	89.1	(-30.0)	59.1		-		-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는 20대 후반이 되고, 2000년에는 30대 초반, 2005년에는 30대 후반이 되는데, 이 집단의 미혼율은 96%에서 64%, 28%, 18%로 줄고 있다. 이러한 추이를 코호트(동일연령집단)별로 나타낸 것이 〈표 II-8〉인데, 이를 통해 혼인이행의 패턴이 근래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표 II-8〉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혼인이행 패턴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첫째, 남성의 경우 1970년대 초반에 출생한 코호트까지는 전반적으로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 사이의 혼인이행률이 점차 낮아졌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20대 초반~20대 후반 사이에 낮아진 혼인이행률이 다음 번 기간, 즉 20대 후

반~30대 초반 사이에서 만회되지 않고, 그렇다고 30대 초반~30대 후반 사이에서조차 크게 만회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1970년대 전반에 출생한 코호트가 30대 후반에 이르렀을 때, 미혼자의 비율이 18.4%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들의 미혼율 상승은 만혼경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영구적으로 미혼상태로 남는 사람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여성의 경우, 1970년대 전반에 출생한 코호트까지는 20세 이전의 혼인이행률이 가장 급격히 떨어졌다. 그리고 20대 초반~20대 후반 사이에는 혼인이행률의 만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신 20대

후반~30대 초반과 30대 초반~30대 후반의 기간에 조금씩 만회가 되었다. 따라서 이들 여성 코호트의 경우, 미혼율의 증가가 결혼 지연에 의해 일시적으로 빚어진 면이 남성들에 비해서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1970년대 후반에 출생한 코호트부터 20대 초반~20대 후반 사이의 혼인이행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남성의 경우, 이에 더해 20대 후반~30대 초반 사이의 혼인이행률도 크게 낮아졌다. 여성의 경우는 20대 후반~30대 초반 사이의 혼인이행률이 다소 증가한 것이 남성들과는 다른 점이다. 그래도 20대 초반~20대 후반에 하락한 정도에 비하면 만회의 폭이 크지 않다. 남녀 모두 25세 이전에 하락한 혼인이행률이 과연 어느 시기에 이르러 얼마만큼이나 만회될지, 또는 영구적인 미혼자 비율을 더욱 높게 될지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아무튼 1970년대 후반 출생 코호트부터 보이고 있는 혼인이행의 패턴은 그 이전 코호트와는 상당히 구별되는 면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20~30대 미혼자의 특성

교육정도

교육정도는 혼인에 두 가지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교육기간의 연장은 혼인을 늦추는 효과를 지니므로 혼인율을 낮출 수 있다. 반면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결혼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혼인가능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지닐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정도가 결혼 가능성에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교육정도에 따라 미혼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성별과 연령층별로 살펴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성별에 따라 교육

정도가 다른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5년 현재 여성의 경우 20대 후반에서 고졸자와 대졸자의 미혼율이 각각 44%와 68%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만, 30대 초반에는 14%와 23%로, 또 30대 후반에는 6%와 9%로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교육연한의 증가가 혼인을 지연시키는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30대 후반에 이르러서도 대졸여성의 미혼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여성에게 교육정도는 오히려 혼인가능성을 작게나마 낮추는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20대 후반에 고졸자와 대졸자의 미혼율은 각각 74%와 83%로 여성에 비해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30대 초반에는 42%와 39%, 또 30대 후반에는 22%와 9%로 오히려 고졸자가 대졸자보다 많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 교육연한의 증가가 혼인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20대까지는 나타나지만 그 효과가 크지는 않고, 오히려 혼인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대 미혼인구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고졸자가 대졸자보다 숫적으로 더 많다. 단, 여성의 경우는 고졸자가 대졸자보다 약간 더 많은 수준이지만, 남성의 경우는 고졸자가 대졸자보다 30대 초반에는 약 50%, 30대 후반에는 2배가 넘게 많다. 30대 후반 남성의 높은 미혼율은 고졸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취업여부

우리나라에서 취업여부와 혼인가능성은 여전히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취업이 남성들의 미혼율을 낮추는 효과는 매우 크다. 2005년 현재, 남성들의 경우 취업자는 미취업자에 비해서

미혼율이 낮고 기혼율이 높다. 20대 후반 연령층에서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미혼율은 각각 75%와 96%이고, 30대초에는 36%와 77%, 30대말에는 23%와 75%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 미혼율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미취업자의 경우 미혼율이 거의 떨어지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취업과 미혼율의 관계는 남성과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20대 초반 연령층에서부터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미혼율은 각각 96%와 92%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20대 후반은 74%와 40%, 30대 초반은 31%와 10%, 그리고 30대 후반은 20%와 13%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는 달리, 취업여부가 미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혼인여부가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거주형태

20~30대 미혼자들은 어떠한 거주형태를 보일까?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은 두 가지인데, 나이가 들수록 독립하지 않고 계속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미혼자들과 독립가구(여기서는 1인 가구)를 형성하는 미혼자 규모의 차이이다.

미혼자의 가구 구성은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미혼자의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미혼자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표 II-9〉). 20대에는 미혼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부모와 함께 살지만, 30대에 들어서서부터는 1인 가구를 형성하여 독립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미혼자들은 연령이 높아져도 1인 가구를 형성하기보다는 부모와 거주하는 패턴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0대를 중심으로

〈표 II-9〉 성·연령별 미혼자의 거주형태: 1995, 2000, 2005

(10,000명)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남 성					
1995년	부모와 거주	118.3	83.5	23.3	7.1
	1인 가구	9.3	19.3	10.1	4.1
2000년	부모와 거주	106.7	97.8	34.1	11.4
	1인 가구	8.6	19.4	13.7	7.2
2005년	부모와 거주	99.8	95.3	48.1	18.9
	1인 가구	11.8	23.8	21.8	12.6
여 성					
1995년	부모와 거주	126.6	41.0	6.6	2.3
	1인 가구	10.0	7.5	4.0	2.6
2000년	부모와 거주	121.5	56.4	11.7	3.3
	1인 가구	10.8	10.7	5.8	3.6
2005년	부모와 거주	116.3	70.5	21.4	6.6
	1인 가구	14.9	15.9	10.2	5.9

주: 부모와 거주하는 미혼자 수는 부모 또는 조부모와 2세대 이상 가구(일반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합한 추정치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다시 살펴보면, 여성들의 경우는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1인 가구의 증가폭이 부모와 거주하는 미혼자의 증가폭보다 작다. 남성들의 경우는 1인 가구의 증가폭이 약간 더 크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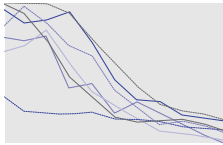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혼자들의 증가가 1인 가구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미혼자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혼자의 증가는 젊은 세대의 부모세대에 대한 의존성의 증가를 상당 부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혼연령의 상승과 미혼율의 증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을 결혼에 대한 기피와 가족제도 약화의 징후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와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실제 자료 분석결과는 그러한 관점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 분석결과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미혼율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남성들, 특히 낮은 학력을 지닌 남성들의 취업난과 관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선이(아주대학교)

한국의 사회동향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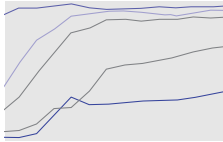
Korean Social Trends 2008



Population

Household &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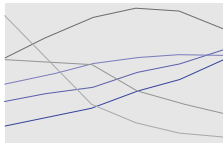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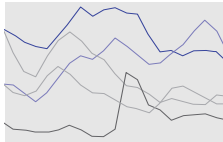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Health

Welfare



Environment

Social Security

Social Cohesion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 강상진 60

최근 학교교육 성취도의 변화 • 강상진 73

교육수준의 비약적 상승 • 김경근 79

Ⅲ. 교 육

Education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개인의 삶은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배우고 성장하지만, 학령기에 도달하면 학교교육을 받게 된다. 학교교육은 개인의 삶의 질을 지배하게 되며, 국가적 수준에서 한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역량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의 변화과정을 지표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세계 주요국들의 사회동향 지표에서 교육 부문 지표들은 대체로 1) 교육기회, 2) 교육자원, 3) 교육성과(또는 효과)를 공통적인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지표 체제도 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서술형 사회지표를 발간하는 호주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교육과 훈련(education and training)을 통합하여 다루고 있으며, 1) 교육기회와 성과, 2) 교육-고용, 3) 외국학생의 호주 유입인구로 세부영역을 분류하고 있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7). 그러나 외국학생의 유입현황을 제외하고, 각 영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기회, 인적자원, 그리고 교육성과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상당부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부문의 구성체계를 앞서 제시한 세 영역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외형적으로 외국과 차이가 있을지라도 실질적인 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의 분류는 교육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기능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로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의 기회를 가지며, 양질의 교육을 수혜할 만큼 인적·물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 최종적으로는 교육의 성과 또는 효과는 어느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데 효과적인 분류라고 판단된다.

교육부문에서 세부영역의 분류가 교육현황정보를 내실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이 포괄하는 양적·질적 지표들이 상호 연계를 갖고 교육의 조건, 교육문제와 현황, 그리고 교육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교육부문을 1) 교육기회, 2) 교육자원, 3) 교육효과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한 바, 각 세부영역이 포괄하는 교육정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기회

교육기회 영역은 학교교육이 국민의 생활과 어느 정도 접근성을 가지는가로 판단할 수 있다. 이같은 질문에 응답하는 방법은 첫째, 국민의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또한 계층간, 연령간 교육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인 지표들을 활용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들이 학교에 취학하거나 상급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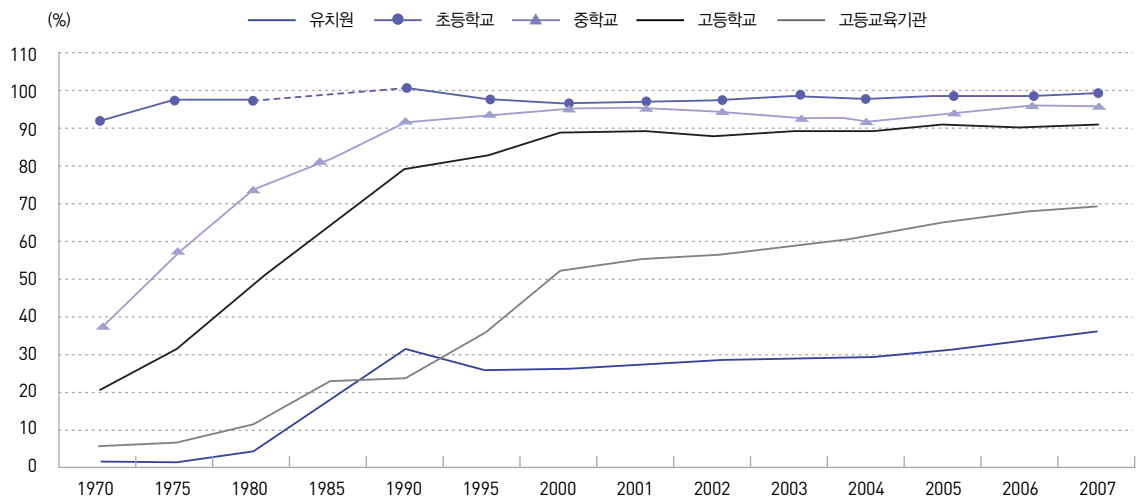
에 진학하는 기회와 최고수준의 고등교육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국민들이 학령기가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교육기회를 향유하고 있는지 평생교육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끝으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에 어떠한 교육을 받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즉, 교육기회의 주체는 학교 취학률에 제한되는 개념이 아니고,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에 받는 교육의 질, 학교교육을 마친 이후의 삶 속에서의 교육기회를 모두 망라한다. 그러나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기회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은 학령기 아동의 취학률 정보이다.

취학률

[그림 Ⅲ-1]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취학률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이 그림은 1970년부터 2007년까지의 취학률 추이를 각급 학교별로 보여준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그림 Ⅲ-1] 각급 학교별 취학률: 1970-2007



주: 점선은 자료부재로 인해 임의로 연결한 부분임.

출처: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년도

1970년대에 초등학교 취학률은 이미 90%를 넘는 상태이며 완전취학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중학교 취학률은 197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대에 이르러 90%를 초과하게 된다. 고등학교는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취학률의 증가가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취학률의 동향은 우리 사회의 변천 및 교육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교육은 해방 이후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해방 직후 초등학교의 취학률은 50%에 육박하고 있다. 즉, 배워야 산다는 국민의 교육열은 초등학교 취학률로 나타났으며, 한국전쟁을 겪은 이후에도 증가하여 1957년에 초등학교 취학률은 이미 90%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중학교 취학률은 1970년에도 여전히 36.6% 수준에 불과한 것을 [그림 Ⅲ-1]에서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취학률이 중학교 취학률로 이어지지 못하였던 것은 중학교 입시가 존재하여 제한된 인구만 중학교 진학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교육을 요구하는 국민의 교육열과 제한된 중학교 입학정원은 중학교 입시의 과열로 반영되어, 초등학교생이 재수를 하고 학원과 과외에 몰입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과 더불어 국민의 교육비 부담이 과열되는 사회문제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1969년에 역사적인 중학교 무시험 전형을 교육정책으로 채택하여 전국의 어린이들을 중학교 입시지옥에서 구제하였다. 중학교 취학률의 증가는 1969년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후 1990년까지 가파르게 성장하게 되었고, 현재는 완전취학에 가깝다.

[그림 Ⅲ-1]에서 고등학교의 취학률도 중학교의 취학률의 변천과정과 연관되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입시도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과열된 상태

였다. 무시험으로 중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입시기에 도달한 1972년부터 더욱 극심한 고교 입시 경쟁을 겪게 되자, 정부는 마침내 1974년 2월에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여, 모든 학생이 거주지에서 무시험 전형으로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 고등학교 입시경쟁에서 학생들을 구제하였다. 따라서 1974년 이후로 고등학교 취학률은 이전의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 80% 이상의 취학률에 도달하였다. 즉, 1990년대 이르러 대부분의 국민이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기회를 향유하게 된 것이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에 서울과 부산을 우선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 모든 광역시로 일반화되었고, 중소도시는 각 시도 교육청의 자율결정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국 중소도시의 약 절반과 읍면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으로서 고교 입시가 존재하여 중학생들의 사교육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중학생들을 고교입시와 사교육으로부터 보호하였으나, 우수학생들의 학습기회가 제한된다는 여론의 영향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제한,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의 감소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0년대 이후로 특수목적고 정책을 도입하여, 전국에 6개의 과학고를 설립하고, 제한된 수의 사립 외국어고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과학고와 외국어고는 고교 본고사 체제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므로, 우수 학생이 밀집된 학교로 성장하였다. 현재는 각 시도가 지역 내 명문고의 존재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의 설립을 주도하여 2000년 경부터 외국어고의 수는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중학교 학생들은 다시 우수고교의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오늘날 중학생들의 사교

육은 특목고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주류로서 과거 고교 평준화 정책이 기대하였던 효과는 삭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Ⅲ-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취학률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완전 취학률에 가까운 수준이므로 교육기회의 성격은 단순히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고등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가가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란은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중등학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정책의 유지, 보완 또는 수정에 따라 학생들의 청소년기의 삶은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 재학생수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교육차별에 매우 민감하다. 그 이유는 교육에 의해 사회계층 이동이 가능한 것을 국민들은 잘 이해하고 있으며, 동시에 역사적 체험을 통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높은 사회적 보상을 독점하는 우리나라의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과거제도가, 그리고 일제시대에는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거나 일본 유학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같은 역사적 체험은 해방 이후 과도한 대학입시와 대학입학재학생수의 변화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다음의 <표 Ⅲ-1>은 고등교육기관의 재적학생수의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표 Ⅲ-1>에 제시된 통계의 특징은 1975년까지는 고등교육 인구에 큰 변화가 없으나, 1980년과 1985년 사이에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해방 이후 1960년에 이르기까지 대학의 학생선발과

<표 Ⅲ-1> 고등교육기관 재적 학생수: 1970-2007

	계	남	여
1970년	201,436	152,573	48,863
1975년	318,683	237,455	81,228
1980년	647,505	499,429	148,076
1985년	1,455,762	1,023,377	432,385
1990년	1,691,681	1,157,622	534,059
1995년	2,343,894	1,495,749	848,145
2000년	3,363,549	2,076,787	1,286,762
2005년	3,548,728	2,148,797	1,399,931
2007년	3,558,711	2,121,981	1,436,730

출처: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07

운영은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 대학의 입학정원을 철저히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대학의 입학정원은 총인구의 약 5%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그 결과 대학을 졸업한 소수의 인구가 사회적 지위를 독점하는 사회체제를 갖게 되었다. 또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보상을 기대하는 국민의 교육열은 고등교육에의 진학열로 집결되어 나타났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의 교육열과 제한된 대학입학정원은 과도한 대학입시경쟁을 초래하였고, 사교육, 재수생 등의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전두환 정부는 1981년에 대학졸업정원제 정책을 시행하여, 모든 대학의 입학정원은 2배로 늘리고 졸업은 원래의 정원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1980년과 1985년 사이에 대학재학생 수는 약 2배로 늘어났다.

고등교육에 대한 진학열은 입학정원이 늘어나도 수그러들지 않았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대학설립의 인허가권을 포기하고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채택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일정기준에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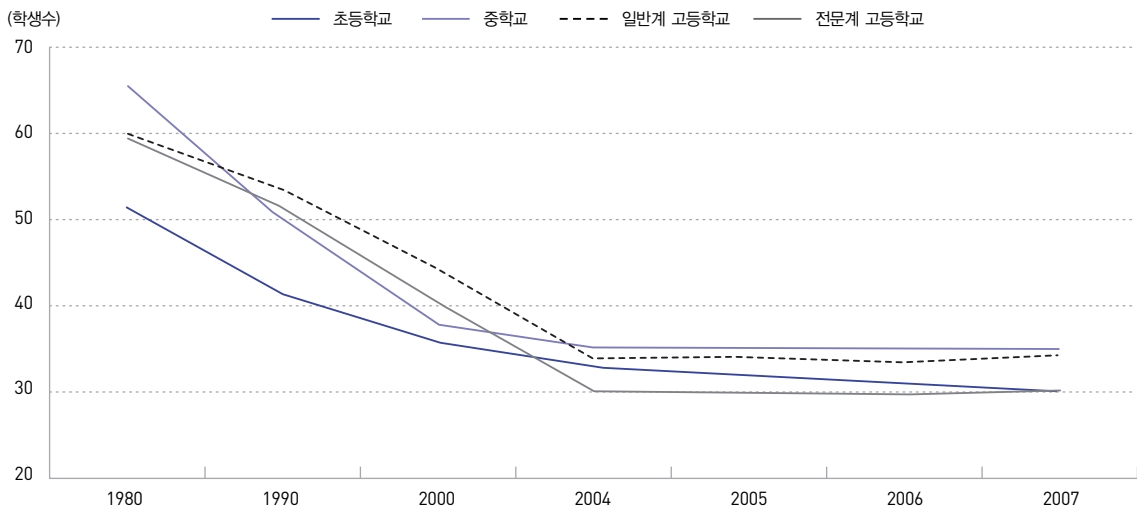
하면 대학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대학재학생 수는 다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대학설립은 계속되어 현재 4년제 대학수는 200개교를 넘었으며, 2003년에 이르러 대학입학정원은 전국의 고교 3학년 학생수를 초과하게 되었다. 지금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다.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지만 대학입시 경쟁은 여전히 과열된 상태이다. 즉, 국민이 원하는 교육은 단순히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며, 사회적 보상이 있는 교육을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 대학가기'의 경쟁이 치열하다. 대학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학 간의 양극화 현상은 뚜렷해지고 있다. 우수 대학들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반면에 다른 많은 대학들은 입학정원도 채우지 못해 폐교의 위기에 몰리게 되고, 대학 간 통폐합과 대학의 특성화 전략을 채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기회의 질적 지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수이다. 학급규모가 작으면 교사·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교사는 수업 중 지도나, 숙제와 과제의 점검지도 등을 통하여 학생 개인별로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학급 규모가 작으면 교사는 학습내용에 적절한 교수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대형학급에서는 일방적인 강의 형식 이외에 교사가 선택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은 제한되며 학생 개인별 지도는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학급규모는 학교교육의 질과 학생의 학습기회를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그림 Ⅲ-2]는 지난 1980년 이후로 학급당 학생수의 변화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 Ⅲ-2]에서 각급 학교의 학급규모는 1980년에서 2004년까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3년간의 학급

[그림 Ⅲ-2] 학급당 학생수: 1980-2007



출처: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7

〈표 Ⅲ-2〉 각급 학교의 학급규모별 학급수: 2007

	계	학급규모			
		30명 이하	31~40명	41~50명	51~60명
초등학교	126,681	43,722	79,369	3,590	0
중학교	58,950	7,418	43,948	7,543	41
일반계 고등학교	39,237	7,527	28,409	3,290	11
전문계 고등학교	16,423	7,131	9,104	188	0

출처: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7

규모는 큰 변동 없이 정체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급규모는 초등학교가 다른 학교급에 비하여 조기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바, 이는 취학률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즉, 초등학교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0년대 후반에 이미 90% 이상의 취학률을 기록한 상태이며,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취학할 당시에 교실은 말 그대로 ‘콩나물’ 교실이었다. 따라서 1960년부터 초등학교의 설립이 가속화되었다. 마찬가지로 전쟁 직후에 출생한 어린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시기인 1960년대 후반엔 중학교 입시가 과열되었으며, 마침내 정부는 1969년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학교 취학률은 196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중학교 설립을 가속화하는 자극이 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학급규모 변화는 학생인구 파고에 의한 학교설립 노력과 관련된다. 각급 학교의 취학률은 2004년에 이르러 고등학교까지 90%에 도달함에 따라 학생인구 파고에 의한 학교설립 효과는 그 이후 미미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학급당 학생수의 감소가 교육의 질적 개선을 의미하지만 우리나라 각급 학교에선 아직도 과밀학급이 존재하고 있다. OECD 회원국(2005년 기준)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각각 평균 21.5명과 21.4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OECD 회원국 중에서 학급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다. 〈표 Ⅲ-2〉는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각급 학교의 학급규모별 학급수를 보여준다.

초등학교의 경우 31명 이상인 학급수의 비율은 65.5%이며, 중학교의 경우는 31명 이상인 학급수의 비율이 87.4%, 일반계와 전문계 고교는 각각 80.8%, 56.6%로서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수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질적 조건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아직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현장에서 교사와의 상호작용이나 수업과제에 대한 개별지도 기회는 다른 OECD 국가보다 훨씬 적다고 할 수 있다.

교육자원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은 사회적 보상을 담보하는 교육인 만큼,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의 습득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양질

의 교육조건을 갖추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이다. 우리나라의 각종 학교교육이 어느 정도 양질의 교육 조건을 갖추었는가를 판단하는 정보는 1)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비롯한 인적자원의 규모와 우수성, 2) 교육시설 및 공간 등의 물리적 환경의 적절성, 그리고 3) 재정적 지원규모의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인적자원

여기서 인적자원은 교원의 인적구성과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원의 교육수준, 행정직원의 배치수준 등의 지표로 파악된다. 이같은 지표들은 우수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환경 상태를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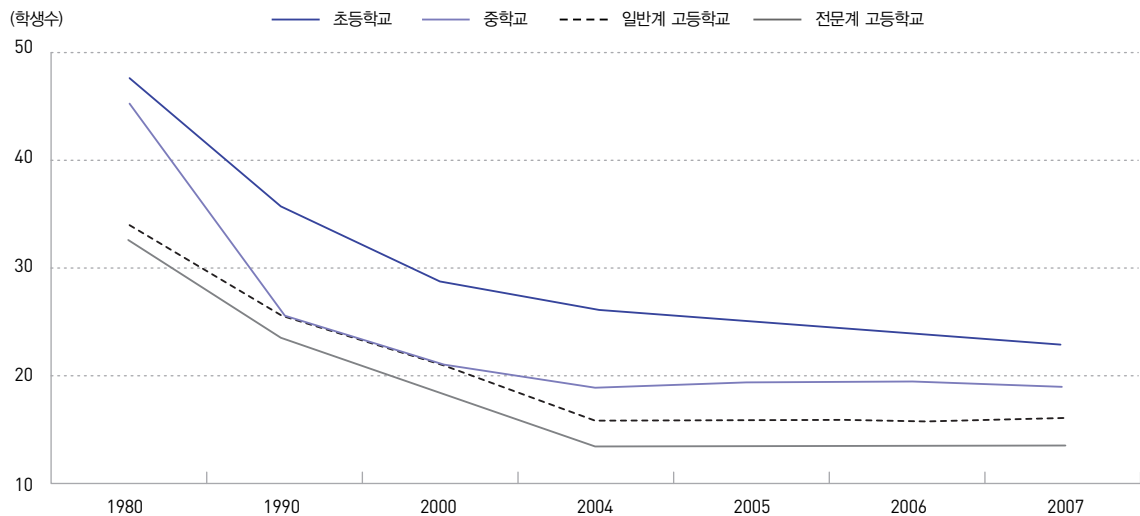
특히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자원을 양적으로 나타내며,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목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를 반영하는 학교 역량 지표이기도 하다.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으면, 비록 학급규모가 작다고 하여도 교육과정과 학사행

정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교원의 부족을 의미하므로, 학교의 교육역량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Ⅲ-3]은 모든 학교급에서 교원 1인당 학생수가 2004년까지 급격히 감소하고, 그 이후로는 정체되어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Ⅲ-3]이 제시하는 교원 1인당 학생수와 앞서 [그림 Ⅲ-2]에서 제시한 학급당 학생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유사하지만 학교급 간의 감소 경향은 다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 1980년에 학급당 학생수는 가장 작았으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가장 많다. 이는 초등학교 교사의 대부분이 학급담임을 맡고 있으며, 학사행정을 지원하는 부장교사, 교과전담 교사 등의 교원인력은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급에 비하여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경향은 2007년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으나, 그 간격은 좁아지고 있다. 2007년 현재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가 22.9명, 중학교가 19.1명, 일반계 고등학교가 16.1명, 전문

[그림 Ⅲ-3] 각급 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 1980-2007



출처: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7

〈표 Ⅲ-3〉 각급 학교의 학급당 교사수: 1980, 2007

	1980년	2007년
초등학교	1.08	1.32
중학교	1.45	1.83
일반계 고등학교	1.76	2.13
전문계 고등학교	1.82	2.23

주: 학급당 학생수÷교원 1인당 학생수
출처: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각 년도

계 고등학교는 13.5명이다. 전문계 고교는 교육과정의 특성상 교과전담 교사의 수요가 많으므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적은 경향이 있다.

초·중·고교의 교과전문지원 및 학사지원을 위한 교원인력 수준을 말해주는 학급당 교사수의 변화를 보면 〈표 Ⅲ-3〉과 같다.

〈표 Ⅲ-3〉에 의하면 학교급별 교원 인력은 지난 27년 동안 개선되었으나, 그 개선 폭은 크지 않다. 예를 들어 학교급별로 비교했을 때, 2007년 현재 일반계 고교는 학급수의 약 2.13배 교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초등학교는 학급수의 1.32배 지원을 받는 셈이다.

초·중·고교와 달리 고등교육의 경우는 정반대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악화되어 왔다. 〈표 Ⅲ-4〉에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75년까지 정체되고 있으나, 1985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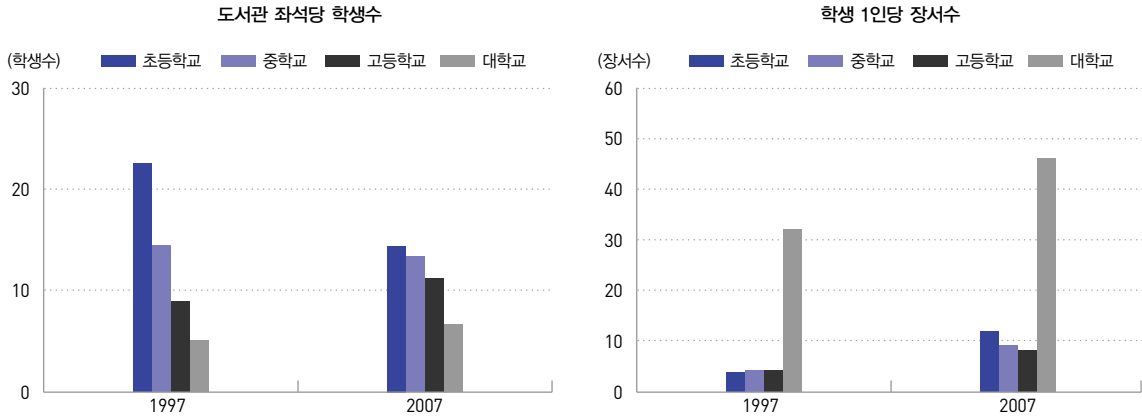
이는 1981년 대학졸업정원제 시행 이후로 대학의 학생수는 증가하였으나 교원의 수는 정체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대학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 지표는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사정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1년에 80명 수준까지 증가하였다가 완만하게 감소하여 2007년 현재 68명 수준이다.

〈표 Ⅲ-4〉 국·공립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 1970-2007

	전문대학				4년제 대학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1970년	24.2	22.1	20.6	27.2	22.4	15.1	10.9	26.8
1975년	27.4	20.3	24.4	31.1	24.7	18.8	8.2	28.1
1980년	33.8	22.9	21.3	36.9	34.2	28.6	33.1	37.0
1985년	45.2	27.2	18.0	48.5	47.0	37.2	46.2	51.8
1990년	52.7	32.3	-	56.0	41.1	30.5	43.3	46.1
1995년	67.6	36.0	54.7	69.3	35.0	28.5	44.5	37.5
2000년	78.0	40.5	60.9	79.9	39.7	32.4	41.0	42.3
2001년	80.1	43.9	65.3	81.6	39.9	32.9	43.1	42.3
2002년	79.2	40.3	67.6	80.8	40.1	32.9	41.8	42.5
2003년	77.3	38.7	67.6	78.9	39.9	32.6	40.3	42.4
2004년	75.6	39.4	67.3	77.1	39.1	31.4	39.6	41.7
2005년	70.9	45.9	63.4	71.8	37.8	30.4	39.9	40.3
2006년	69.0	47.0	61.9	69.7	36.4	29.9	40.3	38.6
2007년	68.1	53.9	61.0	68.5	36.4	29.8	40.9	38.5

출처: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07

[그림 III-4] 각급 학교의 도서관 좌석당 학생수와 학생 1인당 장서수: 1997, 2007



출처: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7

이같은 통계는 전문대학의 경우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교육여건이 초등 및 중등교육보다도 훨씬 열악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4년제 대학의 경우는 전문대학보다는 양호한 편이나 여전히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특히 1981년 졸업정원제 시행 이후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47명까지 급상승하였다가 이후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2007년 현재 36.4명으로 초·중등학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4년제 대학에서의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개선된 배경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행된 대학종합평가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이나 모두 사립대학이 국립대학보다 열악하여 국고의 지원을 받는 대학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음을 반영한다.

시설자원

교육조건 변수로서 더불어 중요한 지표들은 학생들의 물리적 학습조건 통계라고 할 수 있다. 즉, 학교의 학습공간으로서 건물, 교지, 체육시설, 도서관, 컴퓨터의 지원 수준 등의 통계는 학생들의 물리적 학습조

건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 특히 도서관은 교사 및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학생들의 자율학습 공간인 동시에 문화공간의 의미를 갖는다. [그림 III-4]는 1997년과 2007년을 비교하여 지난 10년간 도서관의 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학교급별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I-4]는 다른 교육지표들은 꾸준히 개선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도서관의 지원은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1997년에 좌석당 학생수가 22.4명이나, 2007년에는 14.4명으로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그와 반대로 좌석당 학생수가 정체되거나 증가한 경향을 보여준다. 이같은 경향은 학생수의 증가를 감안하여도 마찬가지이다. 1997년과 2007년 사이에 학생수의 증가는 대학교에만 45%에서 66%로 괄목하게 증가하였을 뿐이며, 초·중·고에서의 학생수의 증가는 미미하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교육대상인 학생수가 전반적으로 정체된 기간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학교 도서관에 대한 공간지원 노력의 증거는 초등학교

교를 제외하곤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기능은 정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 도서관이 소장하는 장서수는 학생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까지 각급 학교의 장서수는 큰 변화가 없으나, 초등학교는 2001년부터 장서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004년과 2003년, 대학은 2002년부터 장서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각급 학교에서 도서관 운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는 최근임을 반영하고 있다.

재정지원

마지막으로 정부가 교육을 위하여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작업이다. 교육비 지출통계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교육책무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정부의 전체 예산대비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규모, 학교급별 1인당 공교육비 등은 교육의 국제비교 지수로서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지표들이다. 아울러 국민의 삶의 조건으로서 가구당 교육비의 부담수준도 중요한 지표이다. 특히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부담은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사용하는 교육비로서 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공교육비는 정부의 교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국·공립학교의 기성회비, 사립대학의 교비예산을 모두 포함한다. 즉, 교육비의 출처와 관계없이 학교가 학생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단위비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의 질을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다. 1970년부터 2007년까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은 괄

목하게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1970년에 학생 1인당 학교가 교육에 들이는 비용은 12,000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4,101,000원으로 무려 342배 상승하였다. 마찬가지로 중학교는 178배, 고등학교는 185배, 대학교는 52배 상승하였다. 이 수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지출이 특히 초·중등교육에서 괄목하게 성장하였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였을 때, 대학에서의 공교육비 지출의 실제 증액은 판단하기 어렵다.

〈표 III-5〉 각급 학교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970-2007

(1,000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 학
1970년	12	25	32	157
1975년	27	40	73	313
1980년	119	157	150	1,036
1985년	319	300	398	1,210
1990년	566	699	787	1,906
1995년	1,412	1,380	1,785	4,227
2000년	2,023	2,690	2,840	5,591
2003년	3,243	4,062	5,061	7,004
2006년	3,796	4,208	5,863	7,632
2007년	4,101	4,454	5,923	8,225

주: 1) 초·중등학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공교육비(국공립학교 교육비+국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액+사립학교 회계 예산액)÷재적 학생수

2) 대학 학생 1인당 공교육비=공교육비(국공립학교 교육비+국공립학교 기성회계 예산액+사립교비 회계 예산액)÷재적 학생수

출처: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규모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표 III-6〉은 OECD 평균과 우리나라와의 각급 학교별 공교육비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표 III-6〉에서 공교육비는 총교육비에서 학교 외

교육비(예, 사교육)를 제외한 것으로 앞서의 <표 Ⅲ-5>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지표는 학생 1인당 학교가 들이는 교육비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대학교육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취약함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유아교육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이며, 구미 유럽의 선진국들은 거의 모든 국가가 5,000달러를 초과하므로 우리의 유아교육비는 선진국의 1/2에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영국(7,924달러)이나 미국(7,896달러)과 비교할 때는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등교육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일부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곤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Ⅲ-6〉 한국과 OECD 국가의 각급 학교별 학생 1인당
평균 공교육비: 2004

	한국 평균	OECD 평균 (ppp 환산 달러)
유아교육(3세 이상)	2,520	4,741
초등학교	4,490	5,832
중학교	6,057	6,909
고등학교	7,485	7,884
대학(전문대 포함)	7,068	11,100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7

교육효과

교육효과 영역은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매우 민감한 사회동향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하여 국민들은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성과 정보의 공개가 부정적 교육현상을 초래한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보다는 비공개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특히 학업성취도 영역은 상급학교 진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매우 일관되게 정보공개가 통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비교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2000년 대부터 공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다음의 결과는 대표적인 국제비교 연구로서 국제학업성취도 기구(IEA)가 수행하는 TIMSS(Third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와 OECD가 주관하는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 보고한 결과이다.

〈표 Ⅲ-7〉은 우리나라 중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임을 나타내고 있다. 학업성취도는 비단 평균 수준에서만 높은 것이 아니라, 절대기준 평가에 의하여 최상위권 학업성취도에 도달하는 학생수도 매우 양호한 편으로 PISA의 다른 통계는 보여준다.

〈표 Ⅲ-7〉 한국 중등학생의 국제 학업성취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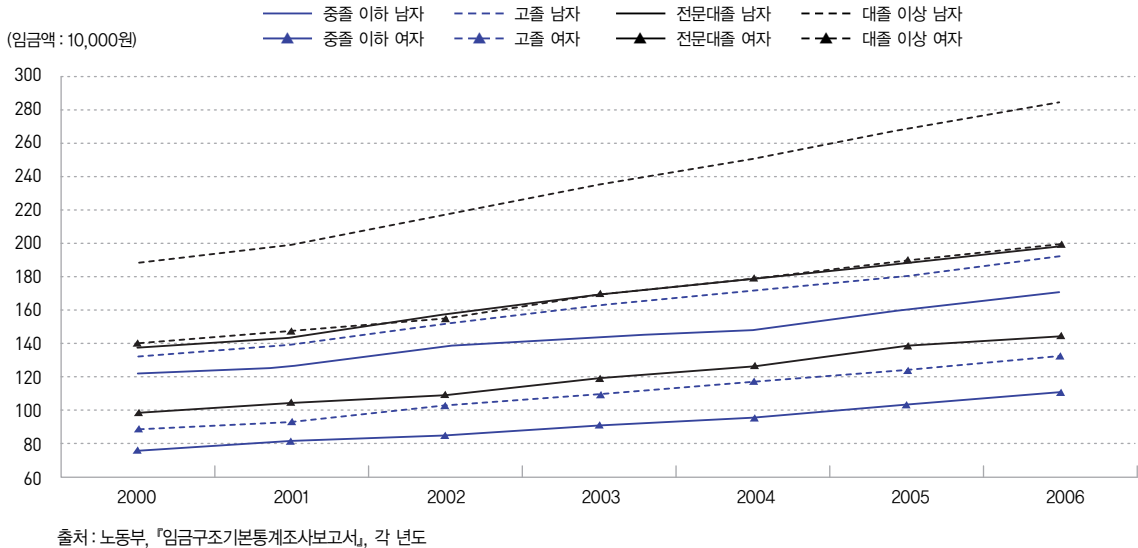
	TIMSS		PISA			
	수학	과학	문제 해결력	읽기	수학	과학
1999년 (1주기)	2위	4위				
2000년 (1주기)				6위 (주영역)	2위	1위
2003년 (2주기)	2위	3위	1위	2위	3위 (주영역)	4위

주: TIMSS는 중 2학년 대상, PISA는 만 15세, 고 1학년 대상임.

학교교육의 장기적 성과

우리 교육이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또는 어떠한 성과를 성취하였는지를 파악하는 또 다른 지표들은 졸업생의 취업률,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교육수준별 임

[그림 Ⅲ-5] 교육수준별 월평균 임금수준 : 2000-2006



금수준 등의 지표이다. 이들 지표들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적절히 습득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이다.

국민 개개인이 학교교육을 받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육 이후에 기대하는 사회적 보상이다. 특히 임금수준은 사회적 보상의 규모를 반영하는 핵심지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Ⅲ-5]는 교육수준별 임금수준을 월 급여액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학력수준에 따른 임금수준은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임금이 높다는 일반인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다. 특히 전문대 이하의 학력 소지자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간의 임금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다른 통계에서 남녀의 임금을 학력수준으로 비교한 결과를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임금수준이 높으며, 남녀 모두 학력이 높은 사람의 임금수준이 높다. 또한 남녀 모두에서 대졸자의 임금수준이 다른 학력소지자에 비하여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임금수준의 차이는 [그림 Ⅲ-5]에서처럼 지난 7년간의 추이에서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습자의 특성

우리 교육의 성과로서 국민들과 소통하기 어려운 영역은 학생들의 학습동기, 적성, 자존감, 자기 효능감 등의 심리적 특성이 바람직하게 발달하는지의 영역이다. 인간의 외현적인 행동들의 방향과 강도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인간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추구하므로 교육의 결과로 학생들이 바람직한 심리적 행동특성을 갖추고 있는가는 교육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도 교육의 질적 정보를 탐색하는 데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원만한 친구관계를 갖는지, 소외의 경험을 하는지는 성장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의 개발과 매우 중요한 관련을 갖는다.

학교교육의 성과로서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 정보를 국가수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매우 빈곤한 편이다. 그러나 공신력이 있는 PISA의 자료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학습자 특성 정보는 학생들의 학업과 관련한 정의적 특성과 학습전략 부문이다. <표 Ⅲ-8>은 우리나라 중등학생(만 15세)들의 심리적 특성과 학습전략을 국제비교로 제시한 것이다.

<표 Ⅲ-8>의 결과는 앞서 <표 Ⅲ-7>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결과와 비교할 때 매우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자로서의 특성 점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PISA의 2003년도 주 평가영역은 수학이었으며 2006년도에는 과학이었다. 2003년도 국제비교 참여국가는 40개국이며, 2006년도에는 57개국이었다. 학생들은 교과수업에 흥미가 적으며, 교과수업이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신뢰가 낮다. 또한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학업을 향유하기보다는 부담으로 여겨 불안을 경험하고 있으며, 수학·과학 교과와 자신의 삶의 연관성을 갖지 못해 다양한 학습전략을 사용하는 수준이 대부분의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낮은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학업성취도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면서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은 최하위권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중등교육이 병

〈표 Ⅲ-8〉 한국 중등학생의 수학 관련 심리적 특성과 학습전략 : PISA 결과

학습자 특성 및 전략	순 위	
	수 학	과 학
흥미도(내재적 동기)	31위	55위
도구적 동기	38위	53위
자기 효능감	38위	53위
불안감	6위	-
교과 자아개념	38위	56위
암기전략	39위	-
정교화 전략	39위	-
통제전략	39위	-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ISA 결과분석 연구』, 2004 : 2007

들어 있다는 일반인의 인식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즉,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구호로 내세우며 많은 교육 정책이나 조치가 시행되지만 그 효과는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에 중등교육이 놓여 있는 것이다.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이 저하된 배경에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배우고 성장하는데 가치를 갖기보다는 대학입시의 성패에 따라 교육의 가치를 판단하는 문화가 사회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대학입학 전형방법과 중등교육과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강상진(연세대학교)

참고문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7, *Australian Social Trends 2007*.

최근 학교교육 성취도의 변화

요 약

- 각급 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영어교과 성적은 모든 학교수준에서 그리고 모든 도시규모에서 가장 크게 향상되고 있다.
- 학업성취도는 중소도시와 대도시 간에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나, 읍면지역은 다른 도시지역에 비하여 모든 교과에서 현격하게 낮은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다.
- 학업성취도는 가정배경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다. 특히 영어교과에서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

초등학교에서의 학업성취도는 국민공통 교육과정의 학습성과를 알리는 것으로 한 개인으로서 습득해야 할 기초 지식과 상급학교에서의 학습능력을 예측하는 정보가치가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학습결손은 이후의 교육에서 학습결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초등학교 교육의 효과는 평생 동안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육의 중점인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5개 교과의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를 지역별로 요약한 결과는 <표 Ⅲ-9>와 같다.

이 표의 학업성취도 자료는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중에서 확률표집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1%의 학생들에 대한 성취도를 평균한 것이다. 표본 학생들이 속한 학교수는 각 연도별로 229, 232, 232개교였다.

먼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교과별 학업성취도 추이를 살펴보면, 과학과 영어 성적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많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어교과는 2003년에 159.97에서 2005년에는 165.61로 크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과학과 수학교과와 경우

〈표 III-9〉 지역별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추이: 2003-2005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국 어	2003년	-	-	-
	2004년	159.80	160.55	158.79
	2005년	159.58	159.28	158.19
사 회	2003년	160.43	160.20	158.79
	2004년	159.63	160.75	159.38
	2005년	160.07	160.37	160.00
수 학	2003년	161.60	160.54	158.12
	2004년	162.35	162.17	160.29
	2005년	162.51	161.56	160.32
과 학	2003년	160.28	160.24	159.11
	2004년	159.99	160.91	160.51
	2005년	163.17	163.63	162.96
영 어	2003년	161.34	160.56	156.49
	2004년	164.26	163.76	160.10
	2005년	166.86	165.27	162.63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변화추이: 초등학교 6학년』, 2006

도 상당히 상승한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사회교과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국어교과는 2004년에 비하여 2005년도의 성취도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6학년의 학업성취도를 도시규모별로 비교하면 모든 교과영역에서 읍면지역의 성취도는 중소도시나 대도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같은 경향은 해가 바뀌어도 고정된 현상으로 나타난다. 지역 간 학업성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교과는 영어이다. 읍면지역의 영어성적도 2003년에서 2005년에 이르기까지 괄목하게 상승하였으나, 다른 도시지역의 상승도가 훨씬 더 높았다. 이같은 현상은 공교육 또는 사교육 측면에서 영어교육의 기회가 읍면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을 반영한다. 영어교과에서 성취도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큰 차이가 있으나 영

어교과 이외의 다른 교과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수학교과와 국어교과에서는 대도시에서 다소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과학과 영어는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성취도가 향상되고 있으나 국어, 사회, 수학 교과에서는 뚜렷한 양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읍면지역의 경우는 국어를 제외하고 모든 교과영역에서 성취도가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간 교육격차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석했을 때 5개 교과 성취도에서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성과의 형평성과 학교교육의 효율성 관점에서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수의 하나인 부모의 학력에 따른 성취도를 비교하면 〈표 III-10〉과 같다.

이 표에서 부모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는 빈도가 적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중학교 졸업 이하와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이 표에서 발견되는 뚜렷한 경향은 교육과정의 중심을 차지하는 5개 주요 교과에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초등학교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같은 경향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3년간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집단들, 즉 대학교육을 받은 부모와 대학원 교육을 받은 부모 간에는 자녀들의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없으나, 그 다음부터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학업성취도는 실질적인 차이가 난다.

그러나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초등학교생들의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2003년도에 비하여 2005년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가 있다. 결손가정의 학생들은 부모의 학력이 낮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영역의 성취도가 낮다.

〈표 Ⅲ-10〉 부모의 학력수준별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추이: 2003-2005

		안계심	잘모름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국 어	2003년	-	-	-	-	-	-	-
	2004년	156.87		156.38		159.99	162.23	161.46
	2005년	156.80		155.13		158.52	161.99	160.52
사 회	2003년	156.63	156.92	153.72	156.58	160.02	162.16	161.62
	2004년	156.93		157.06		159.99	162.41	161.45
	2005년	157.68		156.25		159.81	162.87	160.80
수 학	2003년	156.84	157.89	154.00	156.45	159.93	162.92	162.64
	2004년	159.78		158.23		161.45	163.87	164.00
	2005년	160.17		157.43		160.77	164.21	162.98
과 학	2003년	158.11	157.43	155.54	156.95	159.99	161.97	161.09
	2004년	157.77		157.14		160.45	162.37	161.93
	2005년	161.64		159.41		162.77	165.36	164.27
영 어	2003년	155.63	156.74	152.81	154.91	158.93	163.04	163.60
	2004년	159.97		156.85		162.39	166.53	167.11
	2005년	162.66		158.39		163.88	169.24	168.37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변화추이: 초등학교 6학년』, 2006

중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

중학교 학생들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와 달리 추상적 개념의 학습을 포함한다. 또한 교육과정의 위계적 구조는 더욱 견고해지므로, 이 시기에 학습결손은 이후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학습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 중학교 교육의 중점인 3학년의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를 5개 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별로 요약한 결과는 〈표 Ⅲ-11〉과 같다.

이 표에서 중학생들의 성취도는 대체로 향상되는 추세가 있으며, 특히 수학과 과학에서 성취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의 경우는 2003년과 2005년 사이에 259.97점에서 262.57점으로 향상하였고, 과학은 259.99점에서 261.99점으로 상승하였다.

〈표 Ⅲ-11〉 지역별 중학교 학업성취도 추이: 2003-2005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국 어	2003년	-	-	-
	2004년	260.19	260.37	257.68
	2005년	260.59	260.94	258.88
사 회	2003년	260.05	260.94	258.41
	2004년	260.25	261.60	259.57
	2005년	260.13	260.94	259.13
수 학	2003년	260.74	260.44	257.63
	2004년	261.52	261.72	259.28
	2005년	262.99	262.61	260.60
과 학	2003년	259.87	261.42	258.37
	2004년	260.44	261.67	259.66
	2005년	261.88	262.39	260.94
영 어	2003년	261.06	260.36	257.19
	2004년	261.86	261.74	258.69
	2005년	261.73	261.35	259.04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변화추이: 중학교 3학년』, 2006

〈표 Ⅲ-12〉 부모의 학력수준별 중학교 학업성취도 추이: 2003-2005

		안계심	초졸	중졸	고졸	대졸(2년)	대졸(4년)	대학원졸
국 어	2003년	-	-	-	-	-	-	-
	2004년	253.00	255.21		258.96	259.45	262.50	262.53
	2005년	256.80	256.47		259.29	262.78		263.20
사 회	2003년	255.92	255.96	257.31	258.99	260.45	263.14	263.00
	2004년	254.90	256.81		259.81	260.16	262.82	263.21
	2005년	256.50	256.66		259.11	262.61		262.72
수 학	2003년	259.15	254.95	256.25	258.60	261.18	263.79	264.05
	2004년	253.30	256.28		259.96	260.44	264.18	265.29
	2005년	259.23	257.81		260.84	264.94		266.69
과 학	2003년	258.42	256.29	257.11	259.02	261.12	263.07	263.30
	2004년	256.20	257.22		259.77	259.96	262.99	263.85
	2005년	259.45	258.28		260.83	263.84		264.46
영 어	2003년	253.50	254.05	255.46	258.34	260.32	264.32	266.31
	2004년	253.90	255.94		259.51	260.89	264.59	266.70
	2005년	257.24	256.12		258.85	264.37		266.64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변화추이: 중학교 3학년』, 2006

중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지역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앞서의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학업성취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읍면 지역의 중학생들의 성취도가 다른 지역의 학생들보다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영어교과에서 읍면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교육 수준이 낮은 경향이 두드러진다. 연도별 변화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초등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읍면지역은 모든 교과에서 꾸준히 성취도가 향상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부모의 학력에 따른 성취도의 차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모든 교과에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성취도는 높은 경향을 나타내며, 이같은 경향은 종단적 관점에서 일관성을 갖는다(〈표 Ⅲ-12〉). 특히 영어교과에

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모의 자녀는 대졸 부모의 자녀보다 8.25점, 대학원 학력을 가진 부모의 자녀보다는 무려 10.52점 차이가 난다. 학력이 낮은 학부모의 자녀들은 꾸준히 성적이 향상하고 있으나 변화의 폭은 미미하다.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대학입학 전형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일반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국민보통교육과정의 최종점이므로, 이 시기의 성취수준은 국가의 대외 경쟁력에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3년간 요약한 자료는 〈표 Ⅲ-13〉과 같다.

〈표 Ⅲ-13〉 지역별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추이: 2003-2005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국 어	2003년	-	-	-
	2004년	360.14	360.77	356.92
	2005년	362.57	362.10	358.82
사 회	2003년	360.20	362.15	355.81
	2004년	358.80	359.95	356.15
	2005년	359.18	359.28	356.28
수 학	2003년	360.75	362.48	356.39
	2004년	359.82	360.01	355.64
	2005년	361.43	360.79	358.11
과 학	2003년	360.79	361.61	355.05
	2004년	358.37	358.88	354.64
	2005년	361.15	360.75	357.54
영 어	2003년	360.89	361.37	355.26
	2004년	361.48	361.09	356.71
	2005년	362.57	361.60	358.70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변화추이: 고등학교 1학년』, 2006

〈표 Ⅲ-13〉에서 영어는 지난 3년 동안에 꾸준히 성적이 향상되어 왔으나 다른 교과들은 그러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국어교과는 2004년도부터 동등화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추이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회교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과에서 2005년도가 다른 연도보다 성취도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들의 지역별 학업성취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성취도 분포와 공통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읍면지역 학생들의 성취도는 이전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하여 모든 교과에서 지속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가 읍면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성취도 차이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초·중학교의 경우보다 더 크다. 또한 중소도시와 대규모 지

〈표 Ⅲ-14〉 부모의 학력수준별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추이: 2003-2005

		안계심	초졸	중졸	고졸	대졸(2년)	대졸(4년)	대학원졸
국 어	2003년	-	-	-	-	-	-	-
	2004년	355.24	356.25		358.64	359.86	362.66	364.14
	2005년	357.87	358.53		360.56	363.97		365.42
사 회	2003년	353.29	355.36	356.52	358.94	360.76	362.96	364.18
	2004년	355.57	355.44		357.61	359.09	361.53	362.65
	2005년	356.66	355.93		357.61	360.60		362.60
수 학	2003년	350.00	355.49	356.61	359.22	361.60	363.46	365.18
	2004년	354.33	354.97		357.97	359.12	362.72	365.12
	2005년	357.78	365.68		358.94	362.76		365.54
과 학	2003년	351.29	355.72	365.33	358.81	360.90	363.23	364.58
	2004년	354.09	354.12		356.56	358.17	361.09	362.65
	2005년	357.09	357.52		359.18	362.39		364.30
영 어	2003년	353.17	354.98	355.58	358.14	360.82	363.75	366.35
	2004년	353.89	355.71		358.70	361.05	364.30	367.49
	2005년	357.31	356.82		359.45	364.34		368.15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변화추이: 고등학교 1학년』, 2006

역 간의 성취도 차이는 초·중학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5개 교과 성취도의 연도별 변화추이는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즉, 국어와 영어는 이전 연도에 비하여 성취도가 향상되고 있으나, 사회, 수학, 과학 교과의 성취도는 이전 연도에 비하여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까지도 나타난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부모의 학력과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부모의 학력별 학업성취도의 분포를 <표 Ⅲ-14>에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부모 학력에 따른 성취도의 차이는 이전의 초·중학교의 경우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학생들의 평균 성취도는 예외 없이 부모 학력의 순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는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의 학력이 대학졸업이나 대학원졸업이나 차이가 없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학원졸업의 학력을 가진 부모의 자녀가 가장 높은 평균성취도를 나타내고 있다. 반대로 결혼가정의 학생들은 가장 낮은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학생들의 학력이 대학입학전형에 가까움에 따라 학생들 간의 학업성취도 차이가 확대하는 현상을 반영한다.

강상진(연세대학교)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7, 『OECD 교육지표 2007』.
- 김경근, 2004, 『한국의 사회변동과 교육』, 서울: 문음사.
- 통계청, 2007, 『한국의 사회지표』.

교육수준의 비약적 상승

요 약

-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의 교육수준은 비약적으로 상승하였고, 이 과정에서 특히 여성 교육기회의 괄목할 만한 신장이 이루어졌다.
- 고등교육 이수율 기준으로, 우리나라 25~34세 인구는 세계 최상위권 교육수준을 보여주어,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평균 교육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교육의 대중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나타난 공통적 현상이다. 그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목도된 교육팽창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교육기회의 확대에서 세계가 경탄해 마지않는 성과를 거둔 데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교육열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러한 교육열 덕분에 이미 1960년대 초반에 우리 국민의 교육수준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3배 정도 많은 국가들의 국민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우리나라가 부족한 부존자원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국제사회에서 오늘날과 같은 위상을 누리게 된 데는 교육이 지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교육은 오늘날 우리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삶의 질을 성취하는 데 핵심 동인으로 기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의 교육기회 신장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전반적인 국민의 교육수준이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취학률, 진학률, 학업중단율, 25세 이상 인구 학력구성비, 성별 교육년수 차이, 아버지 학력별 고등교육 접근율, 주요 OECD 국가별 고등교육 이수율 등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의 절대적, 상대적 교육수준과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겠다.

취학률의 상승

특정 국가의 국민들이 교육기회를 얼마나 향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취학률은 가장 대표적이고 유용한 지표이다. 취학률은 각 학교급별로 취학 적령 인구 가운데 실제로 당해 학교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로 측정된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경우 취학 적령기(6~11세) 이전 또는 이후에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취학률이 100%를 약간 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표 Ⅲ-15〉에 제시된 것처럼, 학교급별 취학률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유치원의 경우 1980년 이전까지는 채 5% 대를 넘지 못하였지만, 1980년대에 괄목할 만한 성장세가 나타나 1990년에는 31.6%까지 높아졌다. 이후에 취원율은 30%대를 다소 하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2005년에 다시 30%대에 재진입하여 2007년 현재 36.2%까지 높아진 상태이다. 초등학

교 취학률은 이미 1970년대에 거의 완전 취학상태에 도달하였는데, 2007년 현재는 99.3%이고 남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취학률은 1970년에 36.6%이었는데, 남녀 간 차이도 상당히 큰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이후에 취학률이 괄목할 만하게 상승하여 1990년에 처음으로 90%대에 진입하였고, 이 시점부터 성별 취학률도 역전되어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높은 취학률을 보이게 되었다. 2007년 현재 중학교 취학률은 96.0%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취학률은 1970년에는 20.3%였고,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후에 취학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2005년에 처음으로 90%대에 진입하였는데, 2007년 현재는 91.3%로 나타났다. 남녀 간 취학률 격차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꾸준히 감소하여 2000년에 들어 완전히 소멸하였고, 2007년 현재는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더 높은 취학률을 보여주고 있다. 고등교육 취학률은 1970년에

〈표 Ⅲ-15〉 교육단계별 취학률: 1970-2007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70년	1.3	1.4	1.2	92.0	92.6	91.3	36.6	40.9	29.7	20.3	22.3	16.9	5.4	6.0	3.4
1975년	1.7	1.8	1.6	97.8	97.8	97.8	56.2	60.9	49.7	31.3	33.4	26.2	6.7	7.5	4.3
1980년	4.1	4.3	3.9	97.7	97.2	98.2	73.3	75.4	70.9	44.8	45.2	44.3	11.4	12.8	6.6
1985년	18.9	19.3	18.5	-	-	-	82.0	82.3	81.7	64.2	66.3	61.7	22.9	25.7	16.2
1990년	31.6	31.8	31.4	100.5	100.0	101.0	91.6	91.2	92.0	79.4	81.4	77.2	23.6	25.7	19.1
1995년	26.0	25.8	26.2	98.2	98.0	98.4	93.5	93.3	93.7	82.9	83.4	82.4	36.0	38.4	31.7
2000년	26.2	26.2	26.2	97.2	96.7	97.8	95.0	94.3	95.8	89.4	89.4	89.4	52.5	55.4	47.8
2005년	31.1	31.2	31.0	98.8	98.7	98.9	94.6	94.2	95.0	91.0	91.0	91.0	65.2	67.9	61.1
2007년	36.2	36.1	36.3	99.3	99.3	99.3	96.0	95.9	96.1	91.3	90.9	91.7	69.4	71.6	66.1

주: 1) 취학률 = (취학 적령의 재적 학생수 ÷ 취학 적령 인구) × 100

2) 고등교육기관에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전문대학, 대학 과정),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이 포함됨.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5.4%에 불과하였지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7년 현재는 69.4%까지 높아진 상태이다. 그렇지만 각급 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아직도 여성이 남성보다 취학률이 더 낮은 상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취학률을 중심으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교육팽창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여준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기회의 확대가 낮은 학교급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경제개발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960년대 초반에 이미 초등교육은 보편화 단계에 근접해 있었다. 초등교육이 보편화되자 1970년대에는 초등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대거 중등교육을 추구하면서 이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양적 성장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다시 중등교육 이수자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1980년대 이후에는 고등교육 부문이 괄목할 만한 팽창을 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팽창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교육수요를 수용하면서 수익자 부담원칙의 정책을 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계소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교육정책이 교육팽창에 큰 장애물이 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교육비 부담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교육팽창은 오히려 높은 학교급에서 상대적으로 더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양상을 띠게 된다. 이 과정에서 비록 정부는 교육에 충분하게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투자배분과 기존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급속한 교육팽창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경근, 2004).

교육팽창 과정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성별 교육기회 격차의 급격한 감소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교육팽창은 실질적으로 여성 교육기회의 확대에 의

해 주도되었던 것이다.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되기 이전인 1960년대 초반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1970년대 초반까지도 모든 학교급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취학률이 낮았고 그 격차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후에 여성의 교육기회가 비약적으로 신장되면서 2007년 현재는 고등교육을 제외하고는 미미하나마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취학률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비약적인 교육기회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취원율은 아직도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유아교육을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사실에 일정 부분 기인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큰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인생의 출발선에서 발생하는 교육기회의 격차는 그 부정적 영향이 일생에 걸쳐 파급되고 증폭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소외계층이 생애 초기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진학률의 변화

진학률은 전체 졸업생 가운데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의 비율이다. 따라서 진학률은 상급 학교 진학 과정에서 나타나는 입학경쟁에 의해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학생들의 상급 학교 진학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정원제한과 같은 조치에 의해 진입장벽이 높게 설정되면 진학률은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 Ⅲ-16〉에 나타나 있듯이, 초등학교 졸업생의 중학교 진학률이 1970년에는 66.1%이었지만, 1980년에는 95.8%까지 상승하였고, 1995년 이후에는 줄

〈표 III-16〉 교육단계별 진학률: 1970-2007

(%)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고등교육기관			일반계고→고등교육기관			전문계고→고등교육기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70년	66.1	74.3	56.5	70.1	70.8	68.8	26.9	26.0	28.6	40.2	42.1	37.7	9.6	10.3	7.3
1975년	77.2	84.1	69.7	74.7	76.3	72.3	25.8	26.4	24.9	41.5	44.7	37.5	8.8	9.5	7.3
1980년	95.8	97.4	94.1	84.5	87.5	80.8	27.2	30.3	22.9	39.2	41.9	35.4	11.4	15.7	5.0
1985년	99.2	99.4	99.1	90.7	93.1	88.2	36.4	38.3	34.1	53.8	54.0	53.5	13.3	16.3	9.9
1990년	99.8	99.8	99.8	95.7	96.3	95.0	33.2	33.9	32.4	47.2	45.1	49.8	8.3	10.4	6.3
1995년	99.9	99.9	99.9	98.5	98.6	98.4	51.4	52.8	49.8	72.8	70.3	75.8	19.2	21.4	17.2
2000년	99.9	99.9	99.9	99.6	99.5	99.6	68.0	70.4	65.4	83.9	83.4	84.6	42.0	48.2	35.7
2005년	99.9	99.9	99.9	99.7	99.7	99.8	82.1	83.3	80.8	88.3	87.8	88.8	67.6	72.7	62.0
2007년	99.9	99.9	99.9	99.6	99.6	99.7	82.8	83.3	82.2	87.1	86.3	88.0	71.5	75.7	66.6

주: 1) 진학률 = (진학자수 ÷ 졸업자수) × 100

2) 고등교육기관에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전문대학, 대학 과정),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이 포함됨.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곧 99.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녀 간 진학률 차이는 1970년에만 해도 상당한 수준이었지만, 이후에 점차 그 차이가 좁혀져 1990년부터는 완전히 사라졌다.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1970년에 70.1%이었는데, 이 역시 꾸준히 상승하여 1985년에 처음으로 90%대에 진입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99%를 상회하고 있다. 1970년에 진학률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2.0%p 높았고, 1980년까지는 그 차이가 일시적으로 더 확대되기도 하였지만, 이후에는 그 격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진학률에서의 남성 우위가 완전히 소멸된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970년에 26.9%에 불과했고, 1980년까지는 2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지만 졸업정원제의 영향에 의해 1985년에는 36.4%에 이르고, 1995년 51.4%, 2000년 68.0% 등으로 진학률 상승 추세에 탄력이 붙어

2007년 현재는 82.8%까지 높아진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아직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을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로 나누어 살펴보면, 앞에서 논의된 것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률은 1970년에 40.2%였는데, 이후에 다소의 부침을 보이면서 꾸준히 상승하여 1995년 72.8%, 2000년 83.9%, 2005년 88.3% 등으로 계속 높아진다. 2007년 현재는 87.1%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남녀 간 진학률은 1990년에 처음으로 역전이 이루어졌고, 이후로도 이러한 여성 우위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률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10%를 하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 점차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0년에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하게 되고, 그 이후로도 진학률이 지속

적으로 높아져 2007년 현재는 71.5%에 이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록 줄곧 남성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도 비약적으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에 7.3%에 불과하던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 여성의 진학률이 2007년 현재는 66.6%에 이르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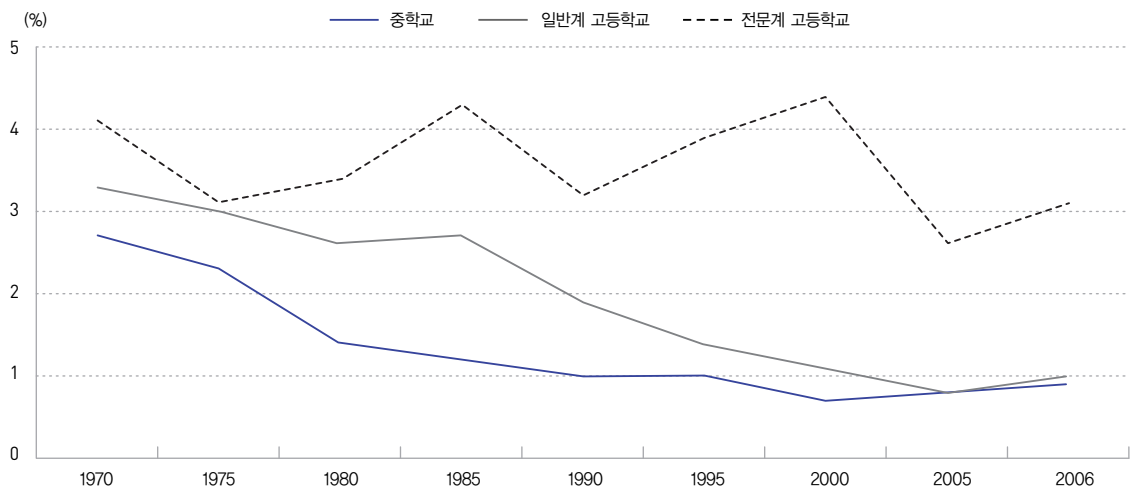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졸업생의 대다수가 산업 현장에 취업을 함으로써,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변질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단순히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전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선호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학업중단율의 추이

높은 수준의 진학률이 학력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도탈락률이 낮아야 한다. 아무리 진학률이 높다 하더라도 중도탈락률이 높으면 실질적으로 교육 기회의 신장 또는 학력상승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두드러진 강점 가운데 하나는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중단율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학업중단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풍토 등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Ⅲ-6]에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학업중단율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학업중단율이 높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그 비율이 2006년 현재 3.1%에 불과하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그림 Ⅲ-6] 학업중단율: 1970-2006



주: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수 ÷ 재적학생수) × 100

출처: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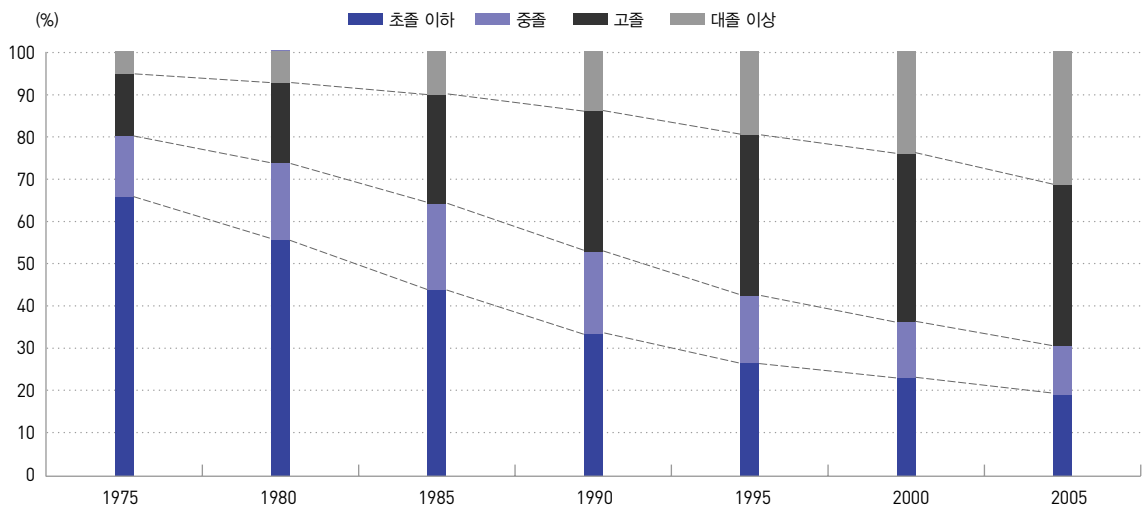
2000년에 4.4%이던 학업중단율이 2005년에는 2.6%로 크게 떨어진다. 이는 2003년에 대학입시에 서 정원 외 3% 실업계 특별전형이 생기면서 이전에 비해 학업에 열의를 가진 학생들이 전문계 고등학교에 더 많이 진학했던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업중단율이 전문계 고등학교보다 훨씬 낮아 1% 수준에 머물러 있고, 추세적으로도 하향 안정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 단계의 중도탈락률도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리하여 2004년 현재 4년제 대학 입학생 수 대비 졸업생 수로 산출한 고등교육 생존율이 미국 54%, 영국 78%, 독일 73%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83%를 보여주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7).

25세 이상 인구의 학력수준 상승

취학률 및 진학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5세 이상 인구의 학력구성비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게 된다. [그림 Ⅲ-7]에 나타나 있듯이, 1975년에 우리 국민의 65.5%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 14.8%는 중졸, 13.9%는 고졸, 그리고 5.8%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었다. 이후에 점차 저학력자는 줄어드는 반면, 고학력자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1980년에는 처음으로 고졸자 비율이 중졸자 비율을 상회하게 된다. 그리고 1990년에는 고졸자 비율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소유자 비율도 넘어서게 된다. 1995년에는 학력구성에서 중졸자의 비율이 가장 낮아졌고, 2005년에는 대졸 이상 비율이 중졸 이하 비율을 초과하게 되었다. 2005년 현재 각 학력별 구성비는 초졸 이하 19.1%, 중졸 11.2%, 고졸 38.3%, 대졸 이상 31.4%인데, 머지 않아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형태의 분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Ⅲ-7] 25세 이상 인구의 학력구성비: 1975-2005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성별 교육년수 차이의 감소

교육기회 확대에 따른 학력상승은 국민의 평균 교육년수 변화에도 뚜렷하게 반영되어, 1975년에 6.6년에 불과하던 우리 국민의 평균 교육년수는 2005년 현재는 11.2년까지 높아진 상태이다(통계청, 2007). 그렇지만 남녀 간 교육년수의 차이는 아직까지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그림 Ⅲ-8]이 보여주듯이, 1975년에 남성 및 여성의 평균 교육년수는 각각 7.6년, 5.7년으로 양자 간에 약 1.9년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남녀 간 격차는 1985년까지는 2.1년으로 오히려 좀 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이후에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든다. 그리하여 2005년 현재 성별 교육년수는 남성 12.0년, 여성 10.5년으로 양자 간에 1.5년의 차이만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29세 이하 인구의 경우에는 교육년수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2005년 현재 20~29세 연령대의 경우에 남성 및 여성의 평균 교육년수는 각각 13.6년 및 13.9년으로 여성이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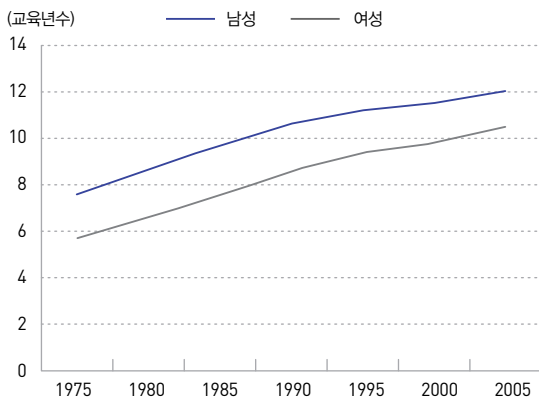
보다 0.3년이 더 높다(통계청, 2007).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남녀 간 평균 교육년수의 차이가 점차 감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년수에서 우위에 서게 될 것임을 예견하게 한다.

가정배경별 고등교육기회의 차이

우리 국민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고등교육을 이수한 인구도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가정배경이라 할 수 있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정배경이 좋으면 그만큼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이 유리하고, 사회적 평판이 높은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배경을 대변하는 대표적 지표인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자녀의 대학 진학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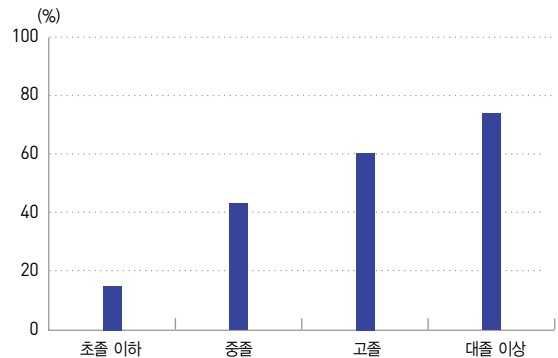
[그림 Ⅲ-9]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버지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림 Ⅲ-8] 성별 평균 교육년수: 1975-2005



출처: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각 년도

[그림 Ⅲ-9] 아버지 학력별 자녀의 고등교육 접근율



주: 고등교육 접근율 = (25세 이상의 성인 중 고등교육기관 입학 경험자 ÷ 25세 이상의 전체 성인) × 100

출처: 노동패널 1차년(1998) 및 9차년(2006) 데이터

15.8%만이 대학 진학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 중졸 아버지를 둔 사람들의 경우에는 43.7%가 대학 진학의 기회를 얻었고, 고졸 아버지를 둔 사람들은 60.8%가 대학 진학에 성공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74.8%가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졸 이상 학력의 아버지를 둔 사람들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를 둔 사람들에 비해 고등교육 접근율이 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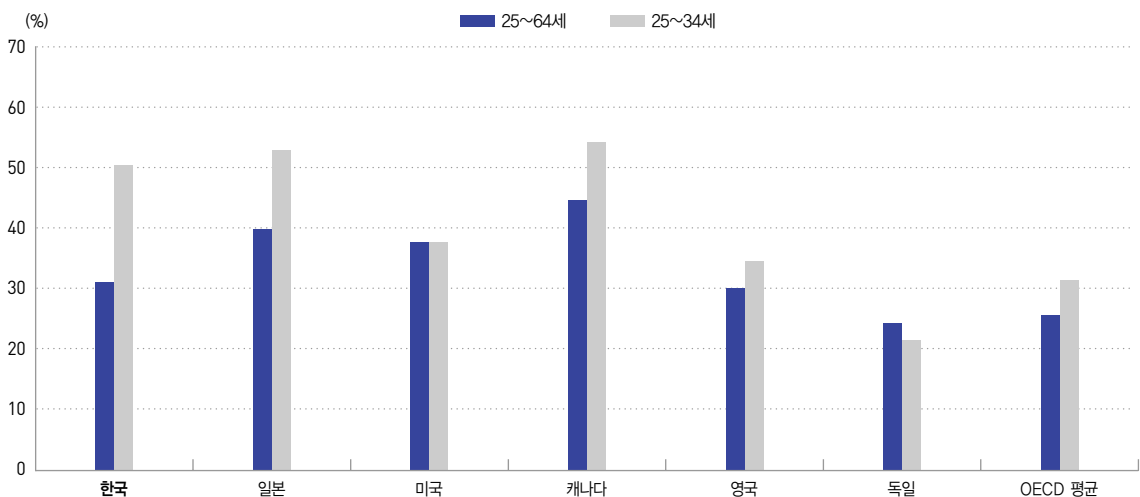
주요 OECD 국가들과의 비교

지금까지 보여준 자료를 통해 우리는 급속한 교육 기회의 확대와 낮은 중도 탈락 등이 어우러져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수준이 괄목할 만하게 높아진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주요 선진

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수준은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부분적인 답변이 [그림 III-10]에 나타나 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고등교육 이수율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 전체의 교육수준은 주요 OECD 국가들에 비해 특별히 높은 편이 아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고연령층의 이수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25~6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32%로 OECD 평균 26%보다는 높은 편이다. 그런데 분석대상을 25~34세 사이의 저연령층에 한정시켜 살펴보면, 앞에서 얻어진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드러난다. 즉 25~34세 집단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1%로, 캐나다(54%), 일본(53%)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5~34세 집단과 25~64세 집단의 이수율 차이를 국가별로 비교해

[그림 III-10] 주요 OECD 국가 고등교육 이수율 : 2007



주 : 이수율 = (해당 연령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 해당 연령별 인구) × 100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07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주요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교육기회의 확대가 그만큼 급속하

게 이루어졌고, 교육수준의 향상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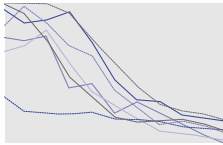
김경근(고려대학교)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2007. 『OECD 교육지표 2007』.
- 김경근. 2004. 『한국의 사회변동과 교육』. 서울: 문음사.
- 통계청. 2007.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의 사회동향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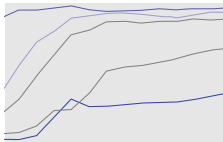
Korean Social Trends 2008



Population

Household &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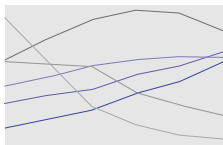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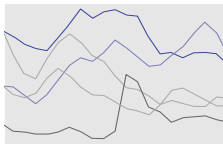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Health

Welfare



Environment

Social Security

Social Cohesion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 장지연 90

고용의 안정성과 비정규직 • 장지연 101

중·고령자 노동시장과 근로생애 • 장지연 106

IV. 노동 Labor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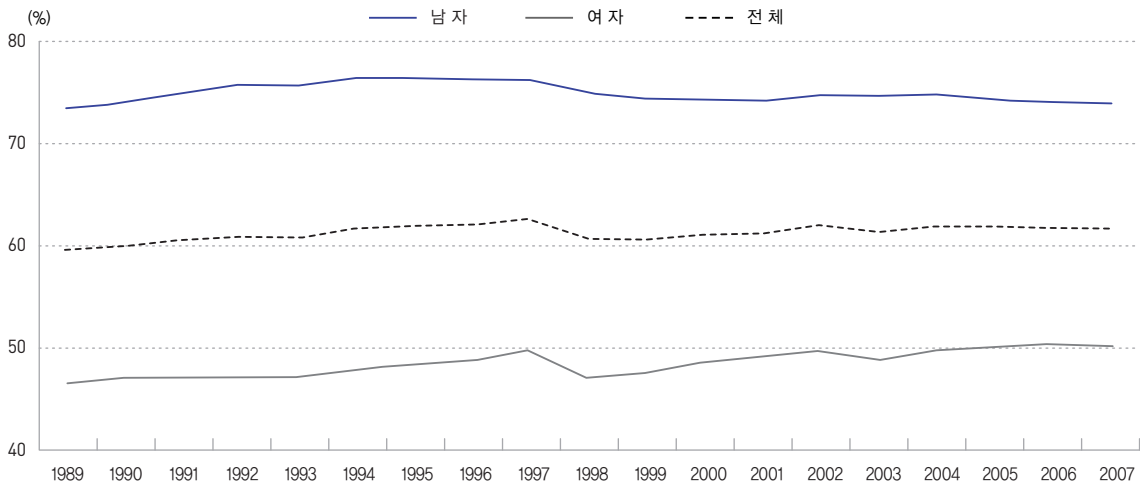
노동시장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로 가장 흔히 등장하는 것은 일자리 부족의 문제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황을 살펴본다. 첫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이 지난 20여년 간 어떻게 변해왔으며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찾아보기로 한다. 둘째,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을까? 취업자는 일차적으로 임금근로자와 자영자로 나뉜다. 이 구분에서 조금 더 나아가 취업자의 고용형태, 산업, 직업 등의 구성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업자 중에서도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화를 근로시간과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생산가능인구 규모와 경제활동참가율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규모는 1989년 약 2,800만 명에서 2007년 3,400만 명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구성이 경제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 왔음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이 기간의 전반부인 1997년까지 증가추세에 있었다(그림 IV-1). 1989년에는 15~64세 인구 중 62.3%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였는데 1997년에 이 비율은 65.5%까지 증가하였다.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이 기간 동안 일자리의 수가 빠르게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영향으로 1990년대 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04년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은 다시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

[그림 IV-1] 경제활동참가율: 1989-2007



출처: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였으나 2004년 이후 최근까지 정체 상태를 보여서 2007년 현재 6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를 노동력인구라고 한다. OECD 자료에 따르면, 1950년에서 2000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력 증가율은 2.0%인데,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1.2%나 미국의 1.7%보다도 높은 수준이다(OECD,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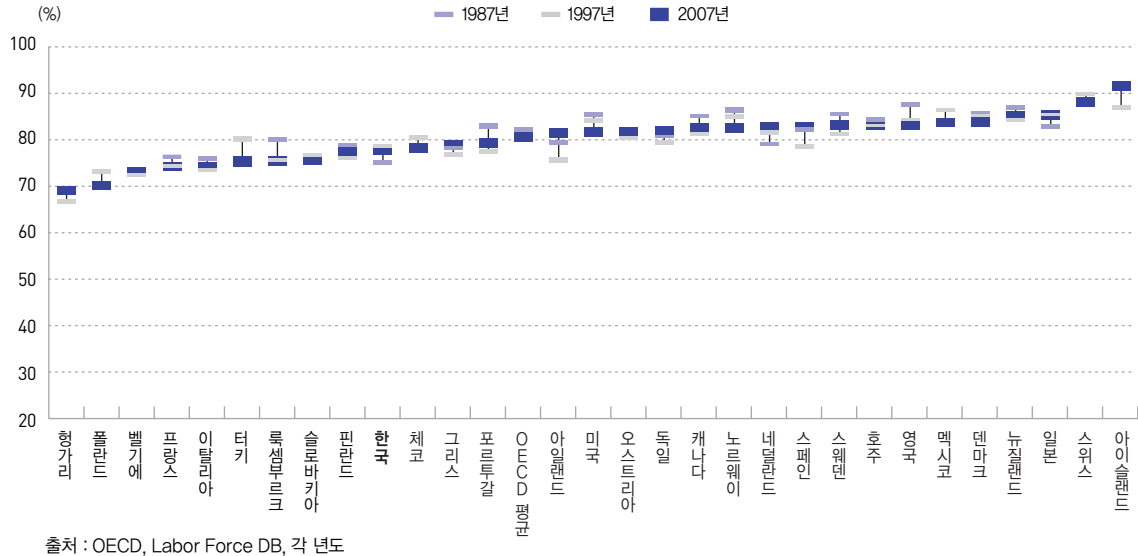
그러나 미래 전망은 이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2000년 시점의 성·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볼 때, 2000년에서 2020년에 이르는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력증가율은 매년 0.7%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어서, 이때까지는 OECD 평균인 0.4%를 넘어서는 노동력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0년에서 2050년까지의 전망치는 매년 0.9%의 노동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산출되는데, 이는 이 기간 동안 여전히 매년 0.5%씩 노동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미국은

물론이고, 해마다 0.1%의 감소를 보이는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매우 큰 폭으로 노동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이후 우리나라는 노동력 규모의 감소와 노동력 인구구성의 고령화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오랫동안 6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이는 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커다란 개선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10여 년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추세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자(그림 IV-2)와 (그림 IV-3). 1987년, 1997년, 2007년의 세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이 기간 동안 75.1%에서 77.6%로 증가하여, 커다란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최고 수준과 최저 수준에 있는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면 대체로 73%에서 85%의 범주 안에 있으며, 우

[그림 IV-2] OECD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 비교(남성, 15~64세): 1987, 1997,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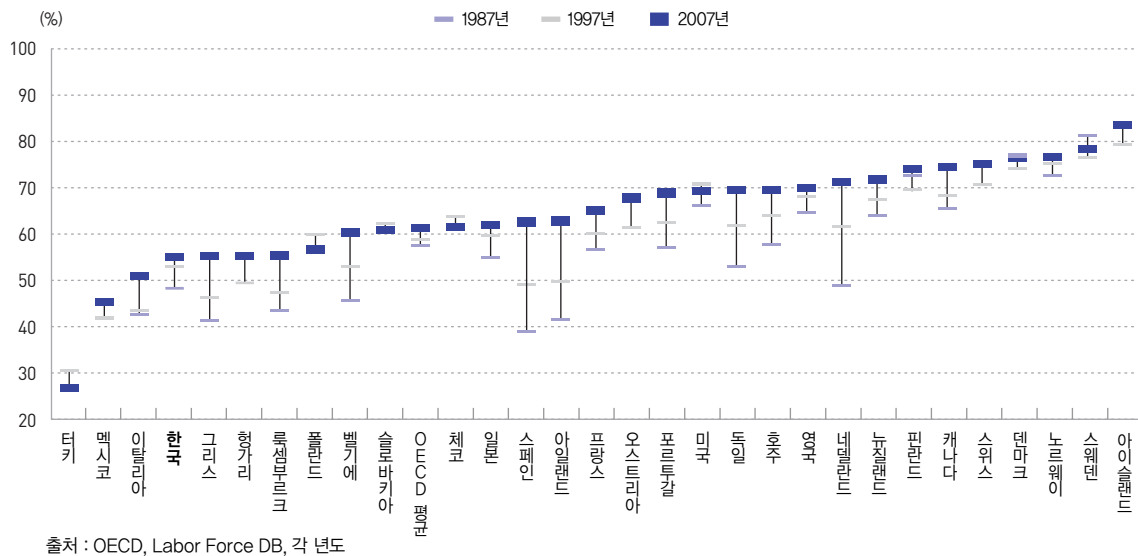


리나라는 2007년에 OECD 평균인 80.5%에 비해서
는 조금 낮은 수준에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국가별 편차가 남성의 경

우보다 크다. 예외적으로 낮은 터키의 경우를 제외하
고 보더라도, OECD 국가들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은 45%에서 83%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편차를 나타

[그림 IV-3] OECD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 비교(여성, 15~64세): 1987, 1997,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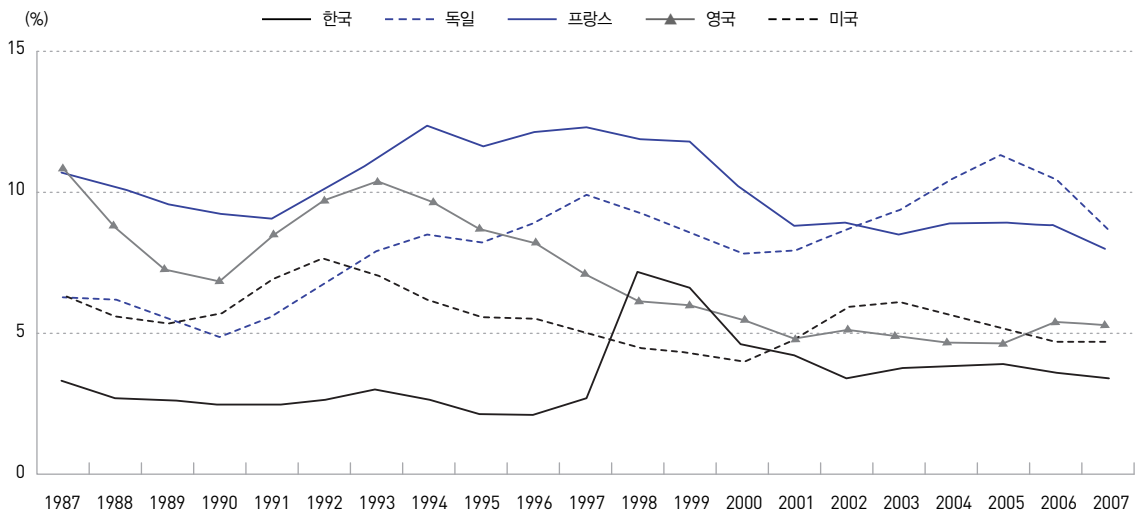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87년에 48.2%에서 2007년에 54.8%까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평균인 61.2%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에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추세 비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OECD 주요국 중에서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전통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국가들에서 최근 증가세가 뚜렷한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합류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이들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실업률 추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실업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실업률이 급속히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었던 1997년 외환위기 직후조차도 지표상의 실업률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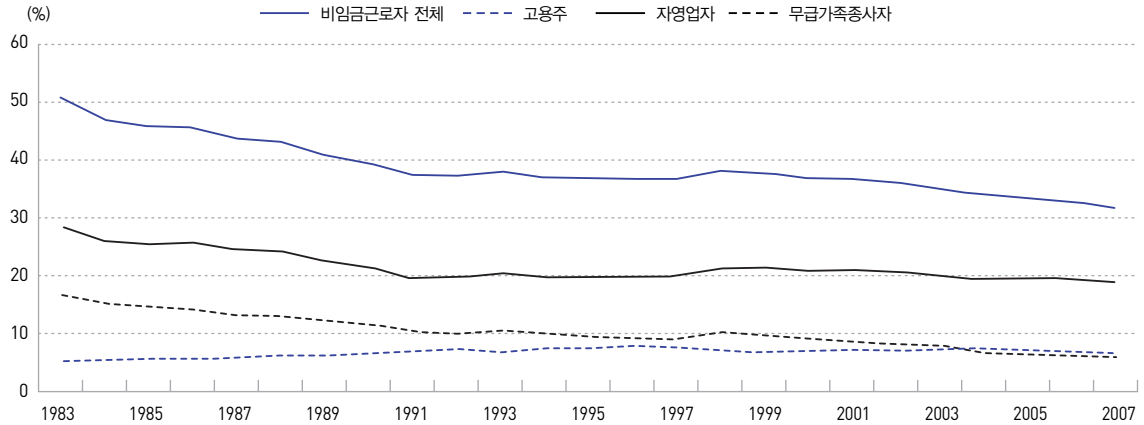
체는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높다고 할 수 없었다([그림 IV-4]). 최근에는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실업률이 문제가 아니라 취업하고 있지 않은 청년의 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이다. 즉 유휴율이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실업률이 취업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실업자로 정의하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가사노동을 전담하면서 일자리를 찾지 않는 여성의 비중이 높거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많은 경우 실업률은 낮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최근에는 각국의 노동시장 여건을 파악하는 데 실업률은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며, 보다 중요하게는 고용률의 변화에 주목하게 되었다. 고용률은 대상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율로 계산된다.

[그림 IV-4] 한국과 주요국의 실업률: 1987-2007



출처: OECD, Labor Force DB, 각 년도

[그림 IV-5] 비임금근로자의 유형별 비율: 1983-2007



출처: 통계청(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

우리나라 취업구조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특징은 자영업자의 비중이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9%이고, 나머지 31%는 주로 자영업자로 구성되는 비임금근로자이다([그림 IV-5]).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였으나,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그 대신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1983년에는 전체 취업자 중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80년대를 지나면서 이 비율은 빠르게 감소하였고, 1990년대에는 정체 수준에 있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비임금근로자의 감소는 주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가 뚜렷하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이전부터 여성의 비중이 높았었다. 지난 20여 년간 여성의 고용률의 증가가 다른 나

라에 비해서 뚜렷하지 않고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실의 뒤편에는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구성의 변화가 숨어 있다. 전체 여성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였으나, 이 기간 중에 무급가족종사자는 줄어들었고, 그만큼이 임금근로자로 대체되는 추세는 분명하였던 것이다.

2007년 현재 취업자 중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의 경우 31%, 여성의 경우 30%로 비슷한 수준이다(〈표 IV-1〉).

〈표 IV-1〉 성·연령별 비임금근로자 비율: 2007

	성 별		연령별			전 체
	남성	여성	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	
비임금근로자	31.1	30.2	7.8	28.9	49.7	30.7
- 고용주	27	11	10	27	13	20
- 자영업자	68	48	58	54	65	59
- 무급종사자	5	42	32	19	2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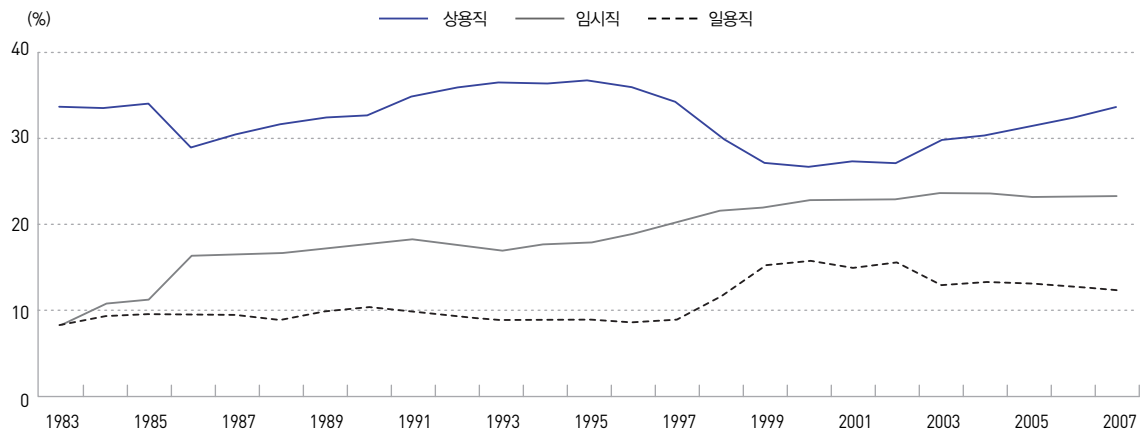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07

비임금근로자에서 남성은 주로 자영업자가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나머지도 고용주의 비중이 큰데 비해, 여성의 경우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각각 절반씩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세 이상의 고연령 취업자의 경우 약 절반가량이 비임금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취업자의 32.5%는 자영업자이며 10.6%는 무급가족종사자, 6.7%는 고용주이다. 고령 취업자로 갈수록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25년 동안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약 50%에서 70% 가량까지 증가해 왔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상용직과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하여 조사해왔는데, 이러한 분류방식은 일차적으로는 고용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면 상용직,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임시직,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분류한다. 고용계약 기간 이외에 부차

적으로 일자리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여부나 퇴직금 수령 가능성 등이 고려된다. 흔히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하여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때의 비정규직은 2001년부터 엄밀하게 정의하여 조사하기 시작한 다양한 비정규 고용형태와는 같지 않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30%를 상회하는 정도의 비중으로 포착되는데 비하여 임시직과 일용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50%를 넘어선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는 고용형태가 단기계약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정규직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단기적인 근로를 하는 것이 현실이고 부가급여도 거의 없으므로 근로자 자신들은 스스로를 상용직이라고 응답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는 장기시계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구분을 가지고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림 IV-6]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비율: 1983-2007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전체 취업자 중에서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3년에 33.7%였고 2007년에도 정확하게 같은 비중인 33.7%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IV-6).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은 등락이 있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조금씩 증가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감소하였고, 2003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여 2007년에는 1983년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한편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은 8.3%에서 23.3%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증가세가 두드러진 기간은 80년대 초·중반과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한 기간인 것으로 보인다. 일용직 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1997년까지는 10%선에서 유지되었다가 외환위기 직후에 급등하였고, 최근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구성을 성과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IV-2).

〈표 IV-2〉 성·연령별 임금근로자 비율: 2007

	성별		연령별			전체
	남성	여성	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	
임금근로자	68.9	69.8	92.2	71.1	50.3	69.3
- 상 용	58	37	47	55	35	49
- 임 시	26	44	36	31	36	34
- 일 용	16	19	16	14	30	18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07

남성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58%인데 비하여 여성은 37%에 불과하여 성별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30~40대에서 상용직의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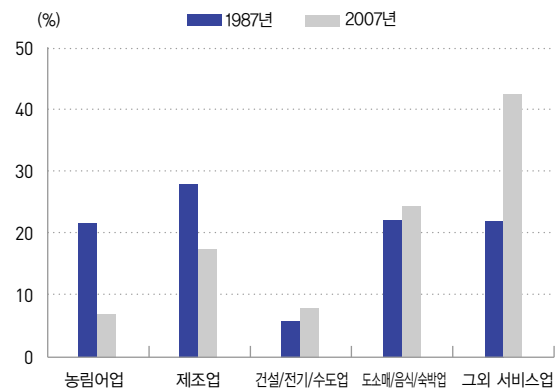
중이 55%로 가장 높고, 30세 미만에서는 47%, 고령층은 35%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수치들은 그동안 알려져 왔던 상식, 즉, 여성이 남성보다 임시일용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고, 연령대별로는 고령자들이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취업자의 산업과 직업 분포

지난 2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는 농림어업과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한편 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그림 IV-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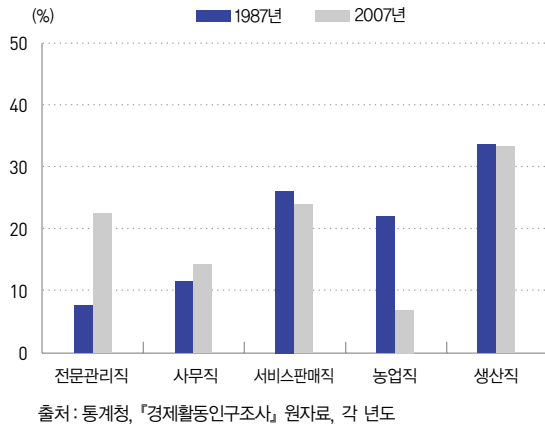
농림어업 종사자는 1987년 21.9%에서 2007년에는 7.4%로 감소하였으며 제조업 종사자는 28.1%에서 17.7%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이 부분에서 줄어든 만큼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는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그 외 서비스업을 모두 합친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은 1987년 44.1%에서 2007년

〔그림 IV-7〕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의 변화: 1987, 2007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그림 IV-8] 취업자의 직업 분포의 변화: 1987, 2007



66.7%까지 증가하였다. 현재 시점에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의 2/3 가량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개인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에서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

는 변화는 농업직의 감소와 전문직 및 관리직의 증가이다([그림 IV-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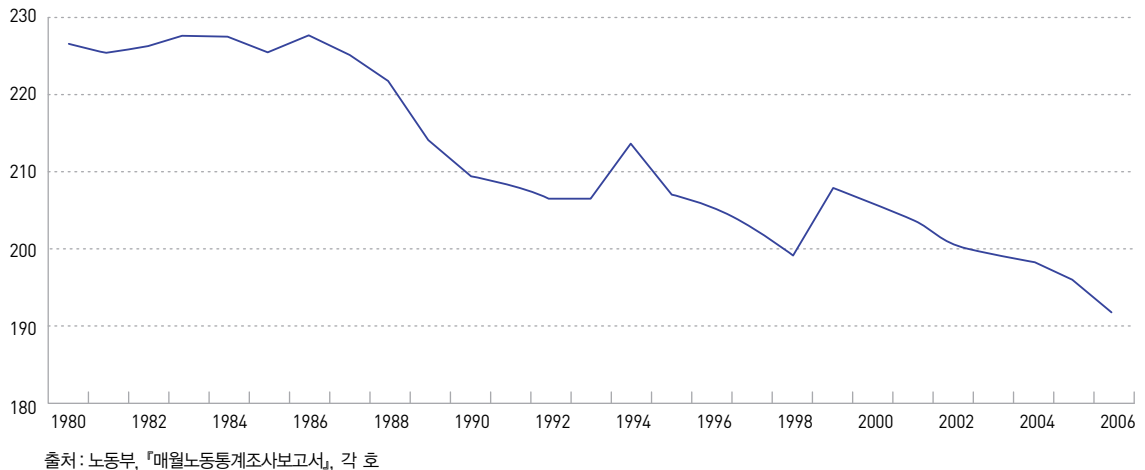
이 글에서 기준년도로 삼고 있는 1987년 이전뿐 아니라 1987년 이후에도 농업직의 감소가 뚜렷한 것이다. 한편 행정관리직과 전문직, 준전문직에 속한 근로자의 비중은 현저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시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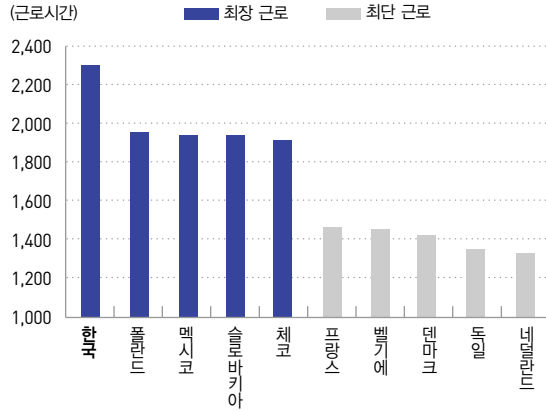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산업구조가 변화해 온 지난 25년 기간 동안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대체로 감소 추이를 보여왔다. 총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자면, 1988년까지는 월평균 22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가 지속되었으나, 1988년 이후 정상 근로시간과 초과 근로시간이 모두 줄어들면서 총근로시간은 월 평균 210시간 이하로 줄어들게 되었다([그림 IV-9]). 1989년에서 1991년 사이의 근로시간 감소는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어든 것에

[그림 IV-9] 월평균 총근로시간의 추이: 1980~2006

(근로시간)



[그림 IV-10] OECD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 비교
(최장 근로 및 최단 근로 각 5개국): 2006



주: 임금근로자 기준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07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시간이 다시 한 번 뚜렷하게 감소 추세를 타게 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2000년대 초반부에는 정상 근로시간의 감소현상은 나타나지 않으나 초과 근로시간의 감소로 인하여 총근로시간의 감소현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법정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된 2004년 이후에는 정상 근로시간이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초과 근로시간은 매월 20시간 정도에서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근로시간이 감소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의 추이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근로시간의 감소가 경기순환이나 생산성의 증감에 따라 영향받기보다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라는 인위적이고 제도적인 변화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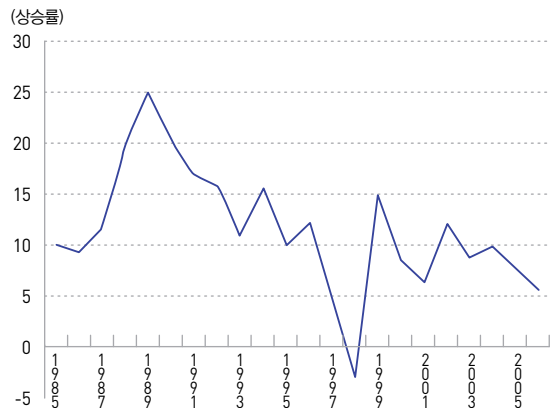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여전히 매우 길다. 1989년 이래로 연간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의 격차는 여전히 매우 크다. 2006년 시점에서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연간 2,200시간을 상회함으로써,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길다([그림 IV-10]). 근로시간이 두 번째로 긴 폴란드에 비해서도 344시간의 차이가 있고, 가장 짧은 근로시간을 가진 네덜란드와는 연간 1,000시간 정도의 차이가 난다. 네덜란드가 단시간근로의 비중이 높은 국가라는 사실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이는 매우 커다란 격차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장시간근로는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추구하고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참가를 권장하는 정책방향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금추이

1985년에서 2006년까지의 제조업 임금상승률을 단순 평균해 보면 11.5%이다. 매년 평균 10% 이상의 임금인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임금상승률은 시기별로 편차가 있다. 1987년 노동운동의 자유화 이후 3년간은 연간 20%를 상회하는 임금인상이

[그림 IV-11] 제조업 분야의 연평균 임금상승률: 1985-2006



주: 임금은 비농 민간부문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출처: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 이병희(편), 『통계로 본 노동20년』, 2007

〈표 IV-3〉 기업규모별 월평균 임금 및 근로조건
(5~9인 사업체 기준): 2006

	임금 총액	근로 시간	연 령	근속 년수	대졸이상 비중
5~9인	100.0	100.0	100.0	100.0	100.0
10~29인	118.6	101.5	100.3	109.8	104.6
30~99인	126.1	103.2	101.3	131.7	105.3
100~299인	139.4	102.8	101.3	165.9	102.6
300~499인	156.5	99.1	102.4	190.2	120.2
500인 이상	183.8	96.3	95.5	222.0	136.1
전 체	132.1	101.0	100.0	141.5	108.9

주: 5~9인 사업체의 경우를 100으로 함.

출처: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2007

있었고, 그 이후에도 몇 년간은 10% 이상의 임금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위기 시기로 알려진 1997년에는 5%대로 떨어졌으며, 1998년에는 임금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는 10%를 전후로 등락하다가 2003년 이후에는 10% 이하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10% 이상의 임금상승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임금상승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의에는 생산성증가율이 고려되어야 한다. 임금상승률과 생산성증가율은 1989년 시점과 1998년 시점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날 뿐 다른 시기에는 비교적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89년에는 임금상승률이 생산성증가율을 크게 앞질렀는데, 이는 1987년 노동운동의 영향인 것으로 이해된다. 반대로 1998년에는 임금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일 정도였으나 이 시기 생산성증가율은 90년대 중반에 이어 다시 한번 20%를 넘어섰다. 이 시기 우리나라의 임금상승률과 생산성증가율의 관련

성을 분석한 한 연구에는 생산성이 1% 증가하면 임금도 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병희 편, 2007). 그동안 우리나라의 임금상승률이 높기는 하였으나 생산성증가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수준과 관련하여 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부문간 격차가 매우 크며 게다가 이것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제일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현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이다. 2006년 시점에서 기업 규모간 임금격차와 근로조건의 격차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종사자 수가 5~9인인 소규모 사업체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보면,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184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IV-3〉). 이러한 차이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근속년수가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에 비하여 길고 대졸자의 비율이 조금 높으며, 유노조 사업장 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더 높다는 사실로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왔으며, 2006년 현재는 남성의 평균임금을 100이라고 볼 때 여성은 60 정도의 수준에 있다. 여성과 남성 간에 임금격차가 줄어든 것은 여성과 남성 근로자의 학력 수준이나 근속년수의 차이가 줄어든 것과 연관성이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이 남성과는 다른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 단지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에 비하여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정도는 얼마나 될 것인가? 1990년대까지는 단지 남성이라는 사실에 기인하여 임금이 높아지는 정도는 대체로 감소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서는 다른 주요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임금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정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이병희 편, 2007).

마찬가지로 학력수준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도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점차 감소해 가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그 이후에는 비교적 최근까지 오히려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이병희 편, 2007).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참고문헌

- 이병희(편), 2007, 『통계로 본 노동 20년』, 한국노동연구원.
- OECD, 2004,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 Korea*.

고용의 안정성과 비정규직

요 약

-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짧은 편이며, 특히 40대 이후 연령층에서 그 차이는 더 크다.
- 2001년 이후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한시적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고용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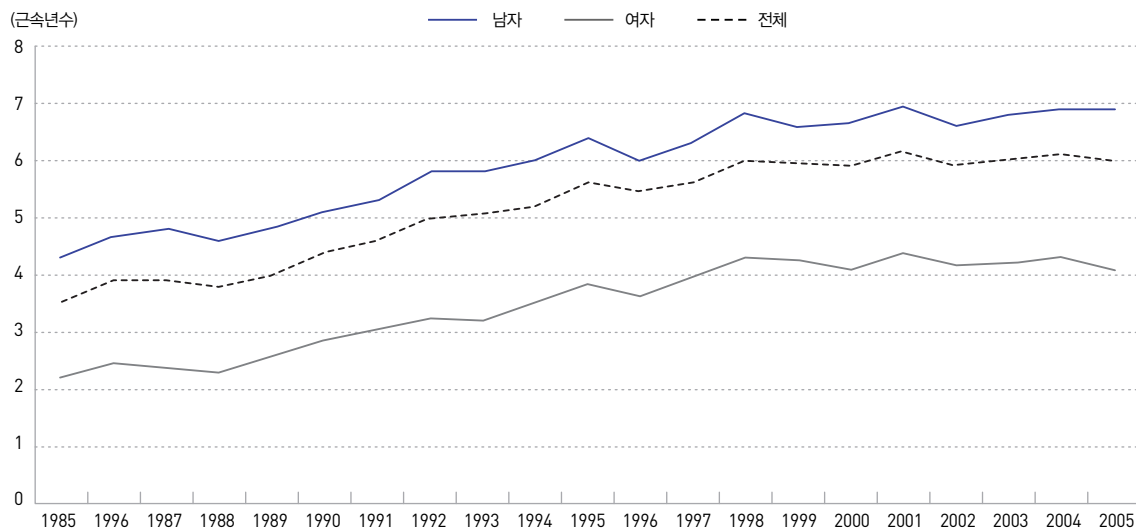
경제의 글로벌화와 이에 따른 경쟁의 격화는 고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기업의 탄생과 소멸이 잦아질 뿐만 아니라, 기업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상품시장의 변동에 따라 노동력의 수요는 증감의 폭이 커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의 절대량이 증가하는 부문에 서조차도 노동자들의 일자리 이동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법적인 규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고용보호 수준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중간 정도에 있다. 그러나 실제 노동시장의 이동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고용의 안정성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평균 근속년수와 직장유지율 그리고 고용형태상의 분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짧은 근속년수와 낮은 직장유지율

고용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평균 근속년수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로 20여 년간의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를 계산해낼 수 있는데, 이 자료는 상용직에 대해서만 통계작성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상용근로자만 가지고 볼 때, 1998년까지는 비교적 빠르게 평균 근속년수가 올라가다가 1999년부터는 더 이

[그림 IV-12]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의 추이: 1985-2005



출처: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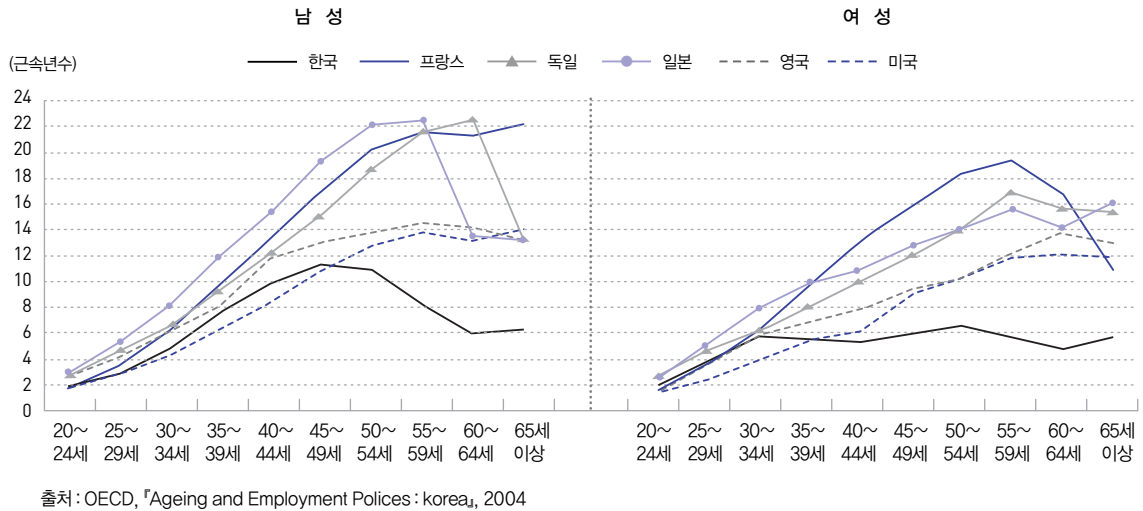
상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 들어선 것을 알 수 있다([그림 IV-12]). 2005년 현재 남성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7년, 여성은 4년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의 안정성이 줄어들고 근로자의 직장 간 이동이 잦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평균 근속년수는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 이외에 인구의 연령구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청년층 인구의 비율이 높은 경우 근속년수는 짧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균 근속년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연령구성 때문에 발생하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IV-13]은 국가 간 평균 근속년수의 차이를 연령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평균 근속년수가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직장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동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과 미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속년수는 길지 않다. 여성의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다. 40~50대에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여성의 경우도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는데 이는 출산기의 경력단절과 재취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는 직장유지율이다. 직장유지율은 근로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동일한 직장에 남아 있는 비율이다. 직장유지율도 연령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령별 직장유지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직장유지율은 비교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편인데, 특히 40대와 50대 근로자의 경우 그 격차는 매우 뚜렷하다. 한편 우리나라 근로자의 경우 여성은 직장유지율이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의 경우는

[그림 IV-13] OECD 국가의 성·연령별 평균 근속년수: 2004



그렇지 않다. 1985년에 취업하고 있던 남성 근로자가 1990년까지 직장에 남아 있는 비율은 55%였다. 이 비율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기간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이병희 편, 2007).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볼 때는 매우 안정된 대기업 정규직 영역이 존재한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안정적으로 한 직장에 머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되고 산업화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근속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은 근속년수나 직장유지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나이가 1990년대 후반부터는 평균 근속년수의 증가현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고용안정성은 비교적 낮은 편이며, 이러한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비정규직의 증가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해석으로 한시적 근로나 비전형 근로와 같이 본질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은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확산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임시직과 일용직의 증가는 이전부터 일어나고 있던 현상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에 그 비중이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통계청 통계가 있고부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때부터 비정규직의 정의에 대한 논의나 규모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2001년부터는 보다 정교하고 좁은 의미의 비정규직 하위유형을 정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에는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기간제와 시간제, 그리고 파견근로에 대한 법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각각의 비정규직 하위유형에 대하여는 개념적인 통일성의 문제나 통계자료의 공개가 활발하지 못한 점 때문에 국가 간 비교분석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여러 가지 비정규직 중에서 한시적 근로에 대한 비교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시직으로 구분되는 사람의 비중은 23.6%로 OECD 평균인 14.3%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OECD 국가들 중에서 스페인 다음으로 한시적 근로의 비율이 높다. 한편 시간제 근로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표 IV-4〉).

〈표 IV-4〉 한시적 근로와 시간제 근로 비율의 국제비교:
2006

	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		
스페인	34.4	11.2
한 국	23.6	8.8
스웨덴	16.8	13.4
네덜란드	16.2	36.0
독 일	14.2	22.4
일본	14.0	24.5
캐나다	13.0	17.6
이탈리아	13.0	16.0
프랑스	12.9	14.0
노르웨이	10.1	21.5
덴마크	9.6	18.5
영국	5.6	23.5
호주	5.2	26.7
미국	4.2	12.8
OECD 평균	14.3	16.8

출처: OECD, Labor Force DB

보다 상세한 비정규직 하위유형의 분포를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은 2001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조사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부가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한 이후부터이다. 이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비정규직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거나, 특히 급격한 증가세가 나타난 것은

2001~2004년의 기간이다(〈표 IV-5〉).

〈표 IV-5〉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분포: 2001~2007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정규직	73.2	72.6	67.4	63.0	63.4	64.5	64.1
비정규직	26.8	27.4	32.6	37.0	36.6	35.5	35.9
- 한시적 근로	13.8	14.7	21.3	24.7	24.1	23.6	22.3
- 시간제 근로	6.5	5.7	6.6	7.3	7.0	7.4	7.6
- 비전형 근로	12.6	12.4	11.9	13.4	12.7	12.6	13.9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 각 호

이 시기에 비정규직은 26.8%에서 37.0%까지 크게 증가하였고, 2005년부터 안정세로 들어가 최근에는 더 이상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비정규직의 하위유형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세부적으로 소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비정규직 하위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이다. 첫째는 계약기간 또는 근로가능기간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단기간만 근로하도록 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로 인하여 단기간만 근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한시적 근로자라고 부른다. 한시적 근로자는 2001년에 13.8%였으나 2004년에는 24.7%까지 늘어났다. 2007년 현재에는 다시 22.3%로 소폭 감소한 상태에 있다.

비정규직 하위유형을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은 근로시간이다. 통상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를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시간제 근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2001년에는 6.5%에 불과하였고, 최근에 증가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7.6%의 낮은 비율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형적인 근로 제공방식에서 벗어나는

여타 비정규직을 합하여 비전형 근로를 묶어낼 수 있다. 이것은 다시 첫째, 하루하루 호출될 때만 나가서 일하는 일일근로. 둘째, 독립적인 사업자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제 일하는 모양은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특수형태 근로자. 셋째, 소속된 회사와 실제로 일하는 회사가 다른 간접고용의 유형으로서 파견근로와 용역근로. 넷째, 자신의 집에 일감을 가지고 와서 일하는 가내근로 등의 세부유형으로 구분된다.

2007년에 소위 ‘비정규직법’이 도입된 이후에는 기간제 근로의 비중이 비교적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 그 대신 비전형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일일근로와 용역근로의 확대가 기간제의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고용형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가 증가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처우가 낮기 때문에 임금근로자 간에 근

로조건의 격차가 확대될 우려도 매우 높다.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60.4, 시간당 임금은 6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IV-6〉).

〈표 IV-6〉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산업별 월평균 임금 및 시간당 임금 수준(정규직 대비): 2008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정규직	100.0	100.0
비정규직	60.4	67.3
- 한시적 근로	68.5	71.9
- 시간제 근로	26.5	63.1
- 비전형 근로	56.6	60.4
• 파견	70.4	68.9
• 용역	54.3	50.4
• 특수형태	77.1	84.5
• 가내	34.7	46.7
• 일일	42.8	50.2

주: 정규직을 100으로 한 지수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참고문헌

- 이병희(편). 2007. 『통계로 본 노동 20년』. 한국노동연구원.
- OECD. 2004.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Korea』.

중·고령자 노동시장과 근로생애

요 약

-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 그러나 이들의 고용형태는 대체로 불안정하고 임금수준은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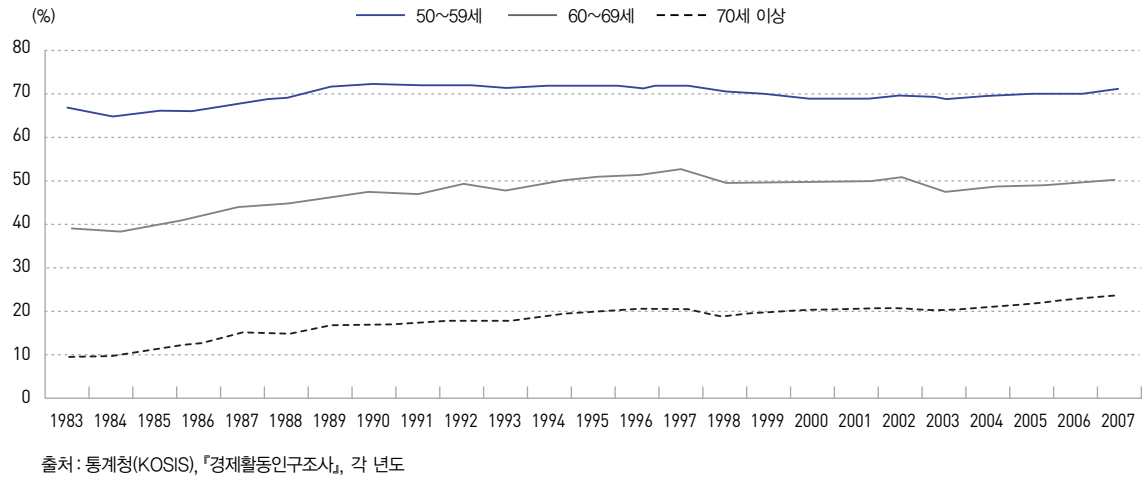
우리나라 고연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이 살아온 근로생애를 되짚어 보았다. 주요 관심 대상은 50세 이상 인구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 인구를 지칭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근로활동 문제는 사실상 중년층의 경제활동에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인 자를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고 50세에서 54세에 속한 사람은 ‘준고령자’로 정의한다. 여기서는 중년층과 고령층을 합쳐서 부르는 개념으로 ‘중·고령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우리나라 중·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 의욕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경제활동참가율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높고 은퇴연령도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하다는 사실과 농업과 자영업 부문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점차 제거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향후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50대 중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오랫동안 70% 선을 유지해 오고 있다. 60대 고령층의 경우 2007년 현재 50% 정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1983년에 40% 수준이던 것이 1980년대를 지나면서

[그림 IV-14]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1983-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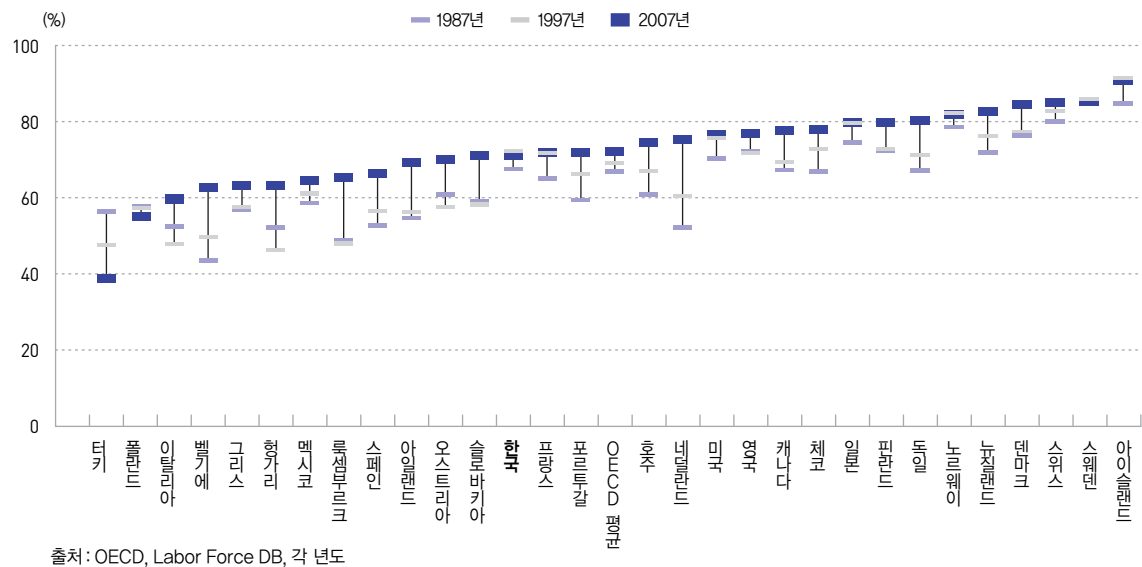


약 10%p 가량 늘어났고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70세 이상의 노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3년에 9%이던 것에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현재 24%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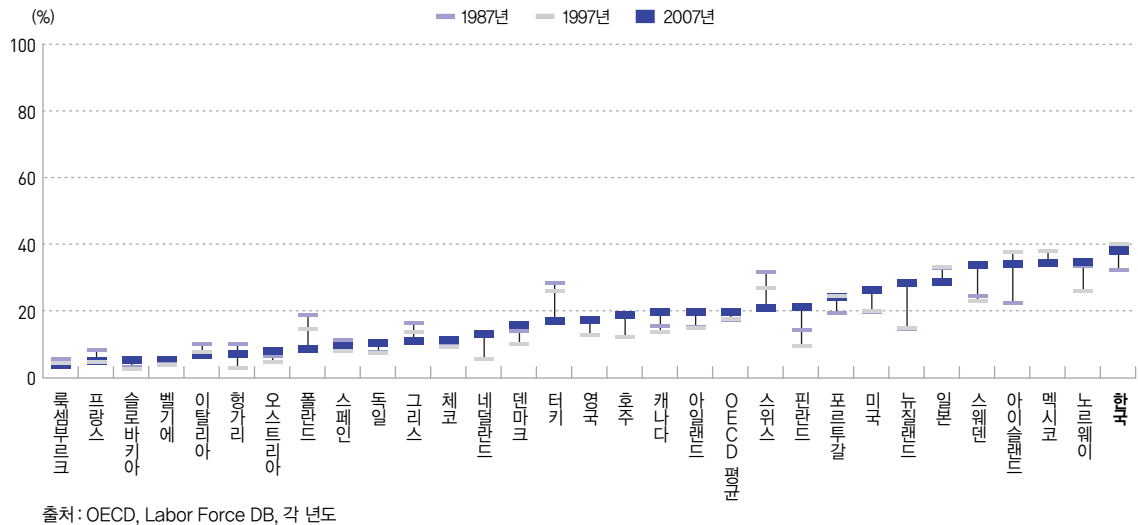
([그림 IV-14]).

지난 20년간 OECD 국가들에서 50대 인구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 조기는퇴가 늘어나면서 중·고

[그림 IV-15] OECD 국가 50~59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1987, 1997, 2007



[그림 IV-16] OECD 국가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1987, 1997, 2007



령자의 경제활동이 감소하였으나, 중·고령층의 근로의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의 연금개혁으로 최근 20년 동안 이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60세 이상 노년인구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국가가 더 많은데, 북유럽국가들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 증가세가 뚜렷하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50대 중년층의 경우에는 대략 중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그림 IV-15), 60세 이상 노년층은 최고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 IV-16). OECD 국가들의 50대 중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매우 큰 격차가 있는 터키를 제외하면 대략 55%에서 80%의 범주에 분포되어 있다. OECD 평균은 72%이고 우리나라는 71.2%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은 20%에 머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38.6%로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근로소득 이외에 노후의 생활을 영위할 다른 소득수단이 별로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06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50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전체 가구소득에서 고령자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다른 가구원의 기여분이 약 30%, 그리고 동거하지 않는 가족으로부터의 사적이전이 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고령자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50~64세 연령대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소수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보다도 오히려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장지연 외, 2008).

고령취업자의 특징

전체 취업자 중에서 28.6%를 차지하는 50세 이상 중·고령자는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

에 있다. 물론 50대 취업자 중에는 조직의 관리자급에 속하는 근로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력수준이 낮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 저임금 취약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표 IV-7〉 종사상 지위별 고령취업자의 비율: 2007

	고령취업자 비율(%)
취업자	28.6
고용주	32.8
자영자	52.8
무급가족종사자	32.2
임금근로자	21.9
• 상용	18.2
• 임시	23.3
• 일용	33.1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07

종사상 지위별로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표 IV-7〉), 전체 고용주에서는 32.8%, 자영업자 중에서는 52.8%, 무급가족종사자 중에서는 32.2%를 형성하고 있어서, 고령자 취업자는 이처럼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중이 높은 반면에 임금근로자 가운데서는 21.9%에 불과하다. 전체 중·고령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구성을 보면, 절반은 비임금근로자이며 나머지 절반은 임금근로자이다. 6.7%는 고용주이며, 32.5%는 자영업자이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의 비율이 비슷하며 일용근로자의 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다.

직업별 중·고령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표 IV-8〉), 농업·농림 근로자는 절대 다수가 50세 이상이다. 단순노무직 근로자는 절반이 50세 이상 중·고령자로 구성되며, 관리직의 경우도 42% 이상이 5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고령 취업

자의 직업별 구성을 살펴보면, 고령취업자의 22%가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며, 다른 20%는 농업노동자, 그리고 서비스와 판매노동자가 각각 13%, 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직업별 고령취업자의 비율: 2007

	고령취업자 비율(%)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42.4
전문가	11.6
기술공 및 준전문가	11.9
사무직원	8.7
서비스 근로자	29.7
판매 근로자	28.2
농업·어업·축산업 근로자	80.1
기능원 및 관리기능근로자	26.5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27.1
단순노무직 근로자	48.9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07

이러한 분포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바이지만, 중·고령자가 저임금근로자가 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5%가 조금 못되는 정도이나, 50세 이상

〈표 IV-9〉 성·연령별 저임금근로자의 비율: 2002

	(%)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연령	24.5	15.1	45.9
25세 미만	54.8	55.5	54.5
25~49세	17.4	9.9	39.4
50세 이상	37.6	29.1	64.6
50~54세	24.3	13.2	55.7
55~59세	40.9	31.3	71.3
60세 이상	59.8	55.4	78.6

주: 전체 상용근로자의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상용근로자의 비중
출처: 통계청, 「임금구조기본조사」 원자료, 2002

중·고령 근로자 중에서 저임금 비율은 37.6%이다(〈표 IV-9〉). 특히 저임금 발생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올라가서, 50대 후반에는 41%, 60세 이상 근로자의 약 60%가 저임금근로자라는 것이다.

중·고령자의 생애근로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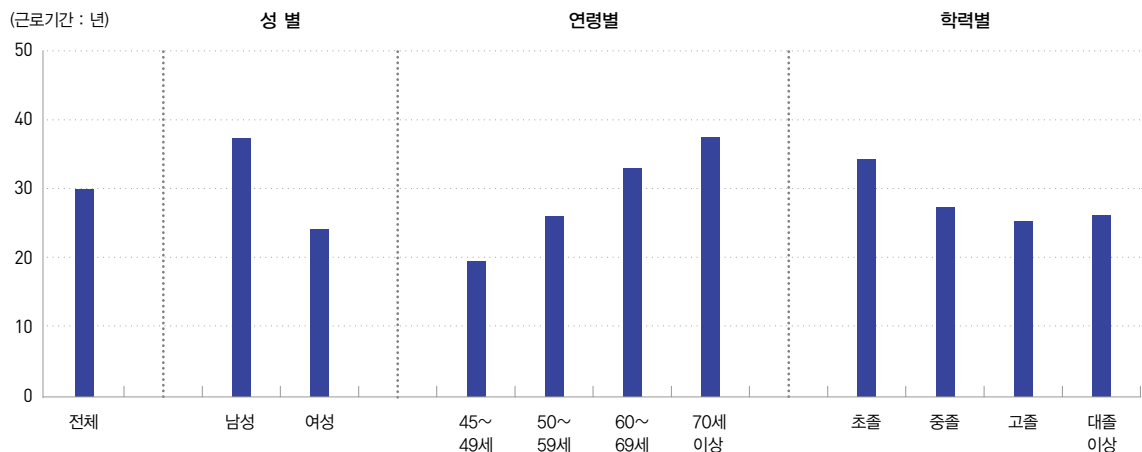
중·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현실은 과거 중·고령자 생애근로경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중·고령자의 지나간 근로생애사를 조사한 자료가 거의 없었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도 어려웠다. 2007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처음으로, 비록 회고적이기는 하지만 응답자의 근로생애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하였다.

이 조사자료에 의하면, 2006년 현재 우리나라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평균 생애근로기간은 약 30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17). 남성은 37.5

년, 여성은 24.3년으로, 남성이 약 13년 정도 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5~49세의 경우 19.7년, 50대가 26년, 60대가 33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자로 갈수록 학력수준이 낮은 것이 반영되어서, 초졸 고령자의 경우가 다른 학력수준을 가진 고령자에 비하여 생애근로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성과 연령 그리고 근로형태별 근로기간을 살펴보면 50대 남성과 60대 남성은 상시임금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각각 17년과 16년 정도로 가장 길며, 70대 이상 남성은 상시임금과 농축임여업에 종사한 기간이 각각 약 14년으로 가장 길다. 전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일하지 않은 기간이 2.5배 정도 길다. 50대 여성은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이 약 20년, 60대 여성은 약 22년이고 70대 이상 여성은 19년 정도이다.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50대 여성은 상시임금과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7년 정도 일하며 60대 여성과 70대 이상 여성은 각각 13년, 18년 정도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7] 평균 생애근로기간: 2007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KLoSA) 『직업력조사』, 2007

〈표 IV-10〉 생애 첫 일자리와 주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2007

(%)

첫 일자리 \ 주된 일자리	상시임금	일용임금	자영	농축임어업	무급가족	전체
상시임금	63.8	4.3	23.2	2.8	6.0	41.1
일용임금	26.2	45.0	16.1	7.2	5.4	5.2
자영	15.0	4.3	73.0	2.3	5.3	7.0
농축임어업	14.2	6.9	13.0	64.2	1.7	6.1
무급가족	18.0	7.6	14.6	19.5	40.2	40.6
전체	36.9	7.9	22.2	13.5	19.6	100.0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KLoSA) 『직업력조사』, 2007

생애 첫 번째 일자리의 고용형태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의 고용형태를 교차해서 살펴보면 〈표 IV-10〉과 같다. 고령자의 생애 첫 일자리는 약 40%가 상시임금근로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40%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출발하였다. 이 표에 따르면, 생애 첫 번째 일자리와 가장 긴 일자리의 종사상지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임금근로자로 출발한 중·

고령자의 63.8%는 생애 주된 일자리도 상시임금근로자였다. 자영업으로 출발한 사람은 73.0%가 주된 일 자리를 자영업이라고 응답하였다. 다만 무급가족종사자로 출발한 경우, 단지 40.2%만이 무급가족종사자로 생애 주된 일 자리를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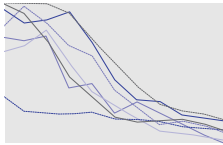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참고문헌

- 장지연 외, 2008. 『중고령자 노동시장 국제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2007.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분석결과.”

한국의 사회동향 2008

Korean Social Trends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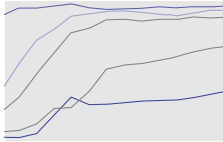


Population

Household & Family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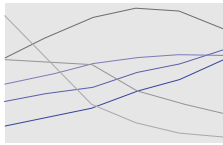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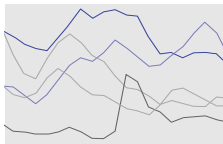
Housing & Transportation



Health

Welfare

Environment



Social Security

Social Cohesion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 박찬임 114

소득분배와 빈곤율의 추이 • 박찬임 123

교육비 지출수준과 구성의 실태와 변화 추이 • 박찬임 130

V. 소득과 소비

Income & Consumption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소득과 소비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급자족의 경제를 제외한다면 모든 사람은 삶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하여 소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이 필요하다. 소득은 경제적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잠재적인 지출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우리는 소득과 소비지표를 통하여 개인이나 가구의 물질적인 삶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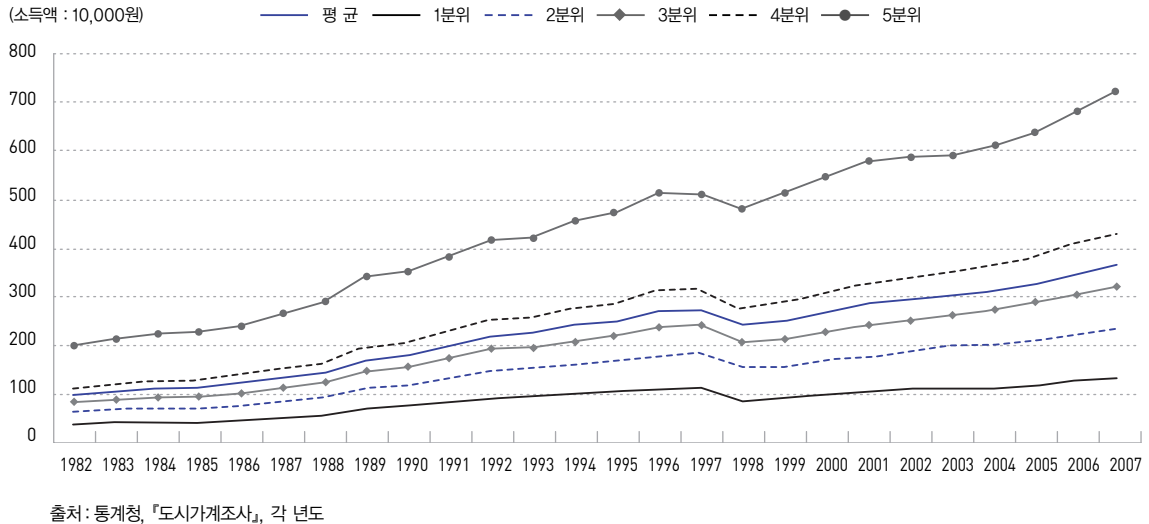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1963년부터 시작한 ‘도시가계조사’와 ‘가계조사’이다. ‘도시가계조사’는 도시의 2인 이상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고, ‘가계조사’는 근로자 가구뿐만 아니라 농업, 무직 등을 포함하는 전국의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 2006년 이후는 1인 가구까지 포함한 전 가구를 조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이 두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20년간의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및 소비 수준의 변화와 실태를 알아보았다.

장기간에 걸친 소득과 소비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 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모든 금액을 2007년을 기준으로 GDP 성장률을 이용하여 실질화시켰다.

가구 소득과 소득 규모의 변화

도시 근로자 가구의 총소득은 지난 20여 년 동안 꾸준히 그리고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1982년 100만 6,000원에 불과하던 가구의 월간 총소득은 2007년에는 367만 5,000원이 되어서, 지난 25년 동안 3.7배 가량 증가하였다. 1982년 4.4명이었던 가구원 수가 2007년에는 3.4명으로 줄어든 것을 감안한다면, 가구 1인당 실질소득의 증가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V-1]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분위별 실질소득 변화: 1982~2007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다. 1986년 약 122만 원이던 가구 소득이 8년 후인 1994년에는 약 241만 원으로 2배가량 증가하였다. 이 시기 연평균 소득 증가율은 5.4%로 나타났고,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1980년대이지만 2000년 이후에도 연평균 4.8%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논하는 소득은 평균소득으로서, 소득의 격차가 클 경우 평균소득은 전 국민의 소득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 계층별 소득 규모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전체 조사대상인 도시 근로자 가구를 소득 규모에 따라서 5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가장 소득이 낮은 집단을 1분위로, 가장 소득이 높은 집단을 5분위로 하여 평균소득을 구한 것이 분위별 소득이다. [그림 V-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평균소득은 대체로 3분

위와 4분위 사이에 들어있다. 이것은 조사대상자의 60% 이상이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소득 규모라는 의미이다.

소득의 증가속도 또한 각 계층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중간계층인 3분위와 4분위에서 소득 증가가 가장 많았고, 소득증가가 가장 적은 계층은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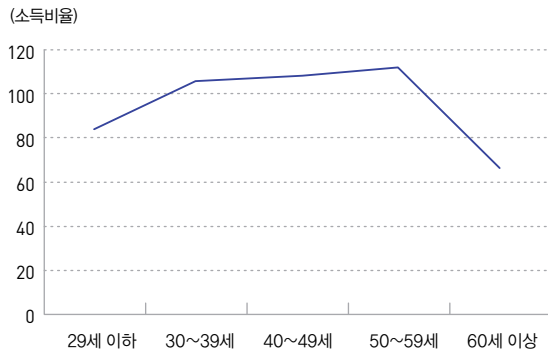
1982년부터 2007년까지 실질소득 증가율은 평균 5.4%였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1980년대가 평균 8.1%로 가장 높고, 1990년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가 6.7%, 2000년 이후가 4.8%로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소득 증가율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인 1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1980년대에 가장 높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소득감소가 가장 컸고 2000년 이후에는 가장 소득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외환위기 당시의 소득 변화를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감소의 정도가 심하게 나타났다.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인 1분위에서는 21.8%의 소득감소가 있었지만,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인 5분위에서의 소득감소는 5.8%에 불과하였다. 이후 2000년대의 소득증가 추이를 보면 3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5.3%로 이전 시기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반면, 1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의 소득 증가율보다도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소득계층별 소득증가 추세는 소득 분배에 불평등이 점증하여 왔음을 말해준다.

가구 특성에 따른 소득규모의 변화

다음은 '가계조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전체 가구의 소득평균은 2003년에 273만 1,000원이었고, 2006년에는 322만 5,000원으로 나타나서 앞에서 살펴본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의 90%에서 8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조사의 조사 대상이 도시 근로자 가구뿐만 아니라 이들보다 소득이 낮은 농어촌 거주자 및 무직 가구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이기 때문이다.

[그림 V-2] 가구의 연령별 소득수준: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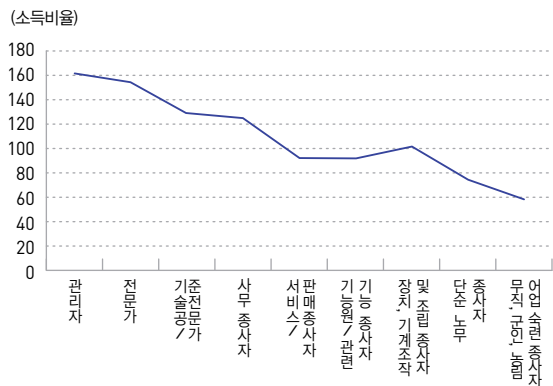
주: 전체 평균소득을 100으로 한 해당 연령대의 소득비율임.
출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2007

가구의 연령에 따른 가구소득을 보면, 가구가 3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는 가구소득이 평균소득 이상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40세부터 59세 사이인 경우의 소득이 높았다([그림 V-2]).

가구주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와 60세 이상인 경우 가구소득은 평균 소득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는 가구소득이 평균 소득의 6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가구주의 직업에 따른 가구소득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구주의 직업에 따른 가구소득 격차는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그림 V-3]). 가장 소득이 높은 직업군은 관리자와 전문가 직종으로서 소득이 평균 가구소득의 150% 이상이지만,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었다. 그 다음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직종과 사무직으로 소득이 평균소득의 120%를 넘었다. 반면 단순노무 종사직은 소득이 평균소득의 8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무직, 군인, 농림어업 종사자 등의 소득은 평균소득의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소득이 낮은 두 직종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대

[그림 V-3] 가구의 직업별 소득수준: 2007



주: 전체 평균소득을 100으로 한 해당 직업군의 소득비율임.
출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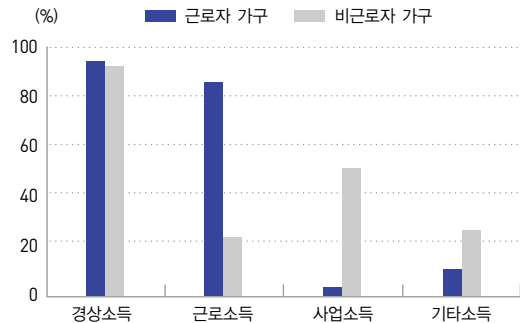
와 15% 전후로 나타나서, 전체 가구의 24% 정도는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구의 소득구조

소득은 크게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뉜다. 경상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일상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말하고, 비경상소득은 퇴직금, 상속재산 등과 같이 임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개별 가구의 소득구조는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서 상당히 상이하므로 우선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구조를 분리해서 살펴보았다(그림 V-4).

우선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의 비중을 보면,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의 경상소득은 각각 95%와 93%로 큰 차이가 없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소득원천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이전소득이다. 근로자 가구에서는 총소득의 86% 이상을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반면, 비근로자 가구에서는 총소득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1%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 이외의 가구는 총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4% 이상 되는 반면, 근로자 가구는 이전소득이 4%대에 머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자가 아닌 가구가 자영자 가구와 무직 가구로 이루어져 있음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 때 자영자 가구의 경우 사업소득이 높을 것이고, 무직 가구의 경우는 이전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V-4] 가구유형별 소득구조: 2007



주: 기타소득에는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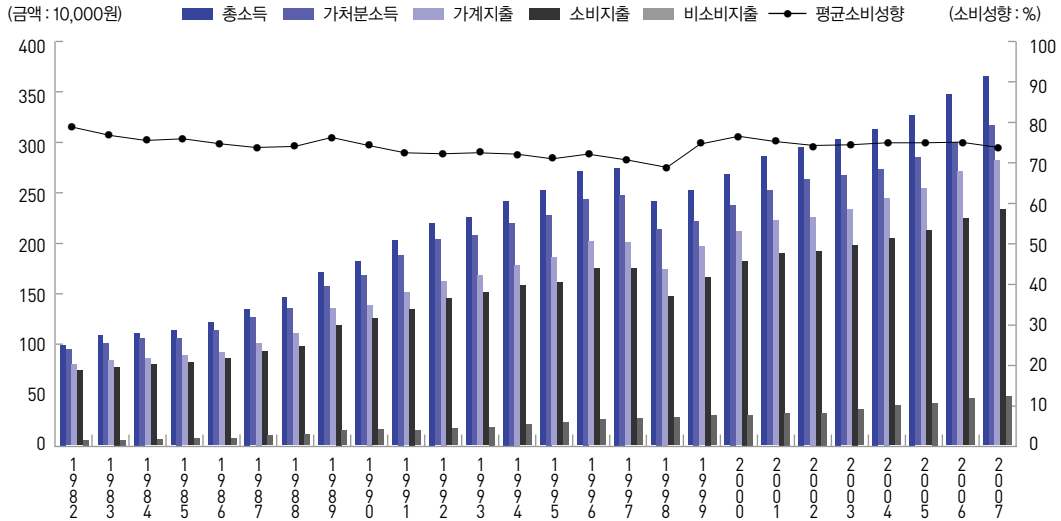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2007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지출, 평균 소비성향

가구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나눌 수 있다. 소비지출은 식비,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 등 내구재와 의류,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등의 소비지출 항목으로 구성되고, 비소비지출은 조세,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기타 비소비 지출(지급이자, 각종 부담금, 송금 및 보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소비성향은 가구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소득 중 소비에 사용한 비중이 얼마인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전체 소득 중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것이 가처분소득인데,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의 비중을 구한 것이 평균 소비성향이다.

가구의 소득과 지출규모는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그림 V-5). 총소득, 가처분소득, 가계지출, 소비지출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총소득과 가처분소득, 가계지출과 소비지출은 변화의 정도까지도 유사하였다. 이를 보면 1980년대 초반 이후 75%대 전후를 나타내던 평균 소비성향이 1980년대 후반부터 다소 낮아져서 70%대 전반으로 나타났다.

[그림 V-5] 가구소득과 지출 규모 및 평균 소비성향:1982-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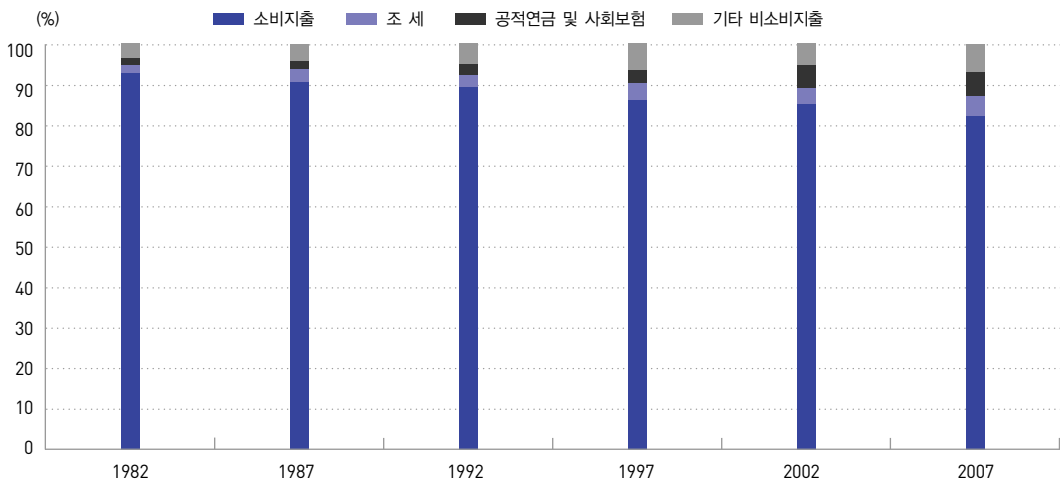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년도

이 때 평균 소비성향이 낮아진 것은 소득 증가가 소비의 증가보다 더 큰 폭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평균 소비성향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외환 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던 1998년으로 평균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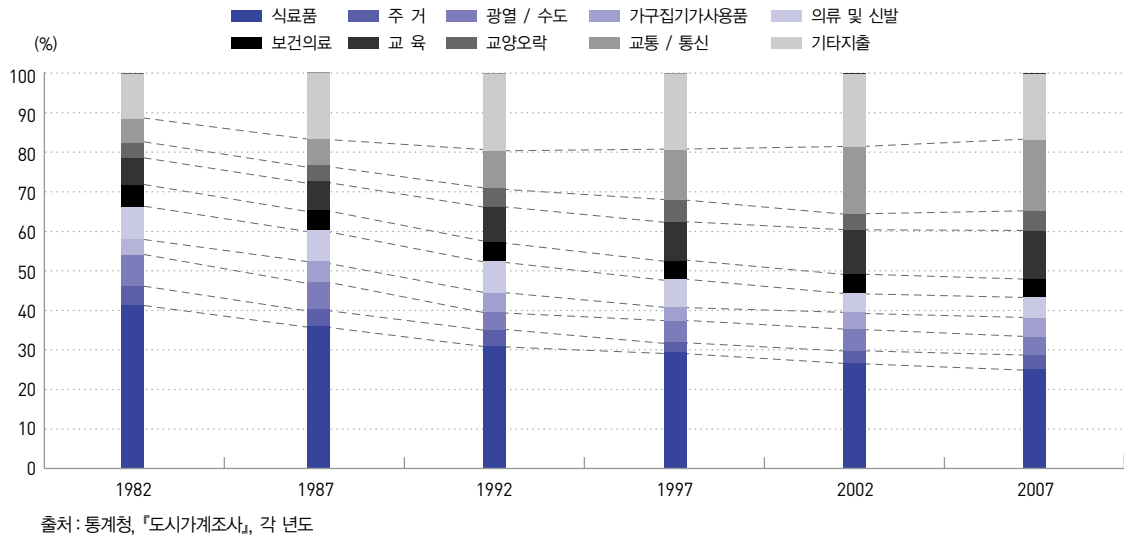
비성향은 68.5%였다. 이 때 소득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소비성향이 감소한 것은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감 등이 겹쳐지면서 소비 자체가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그림 V-6] 도시 근로자 가구의 지출 구성:1982-2007



출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년도

[그림 V-7]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구성: 1982-2007



평균 소비성향은 다시 증가하여 75% 전후가 되었다.

가구 지출 중 비소비지출의 규모는 외환위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1982년 52,000원이던 것이 2007년에는 492,000원으로 25년 동안 9.4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비소비지출의 성장은 이 시기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이 전 국민에게로 대상이 넓어지고 고용보험이 신설되는 등 사회보험제도가 확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가구 지출구조의 변화

가구 지출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V-6). 소비지출의 비중은 1982년 93.5%에서 완만하지만 꾸준히 감소하여 2007년에는 82.7%까지 감소하였다. 비소비지출은 조세,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기타 비소비 모두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지난 25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가계지출 중 조세의 비중은 1982

년 2.2%에서 2007년 4.8%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은 1.3%에서 6.2%로 거의 5배 가깝게 늘어났으며, 기타 비소비지출 또한 2배가량 증가하였다.

소비지출의 구성비를 보면 구체적인 생활의 변화를 가늠해볼 수 있다(그림 V-7).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2년부터 급속하게 감소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음식물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것은 광열·수도비, 피복비, 주거비, 의료비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항목은 교통·통신비와 교육비였다. 교통·통신비의 비중은 1982년 6.6%에서 2007년 17.9%로 약 2.7배 늘어났으며, 교육비 또한 6.2%에서 12.0%로 2배가량 증가하였다. 이러한 교육비의 증가를 자녀수가 감

소하고, 소득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여 생각해 보면 자녀 1인당 교육비는 크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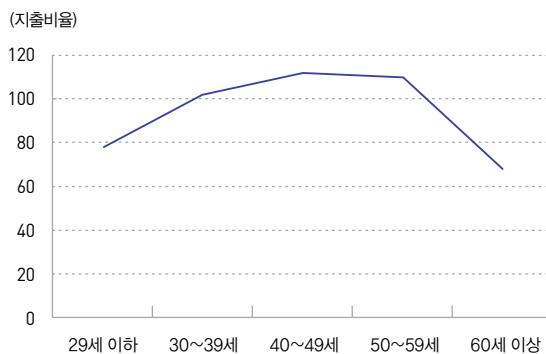
가구의 특성별 지출수준과 지출구조의 차이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를 구분하여 평균 소비성향을 살펴보면(〈표 V-1〉), 비근로자 가구의 소비성향은 87.9%이고 근로자 가구의 소비성향은 이보다 14.1%p 낮은 73.8%인 것으로 나타난다. 비근로자 가구의 소비성향이 높은 것은 이들 가구의 소득이 낮은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소득 자체가 낮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 필요한 지출을 한다 할지라도 가처분소득의 상당 부분을 지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구의 연령에 따른 지출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자(〈그림 V-8〉). 가계지출이 가장 많은 집단은 가구의 연령이 40대인 경우이고, 다음은 50대로 나타났다. 가계지출이 가장 적은 집단은 가구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로 이들의 지출수준은 평균 가계지출의 68%에 불과하였다.

가구의 연령별 소비지출의 구조를 살펴보면, 소

〔그림 V-8〕 가구의 연령별 지출수준 : 2007



주 : 전체 평균지출을 100으로 한 해당 연령대의 지출비율임.
출처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2007

득이 낮은 60대 이상 가구는 전체 지출 중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의 가구주보다 높게 나타났다(〈그림 V-9〉). 가구주 연령이 20대인 경우는 전체 소비지출 중 교통·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었고, 전체 소비지출 중 교양오락 및 피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모든 연령 중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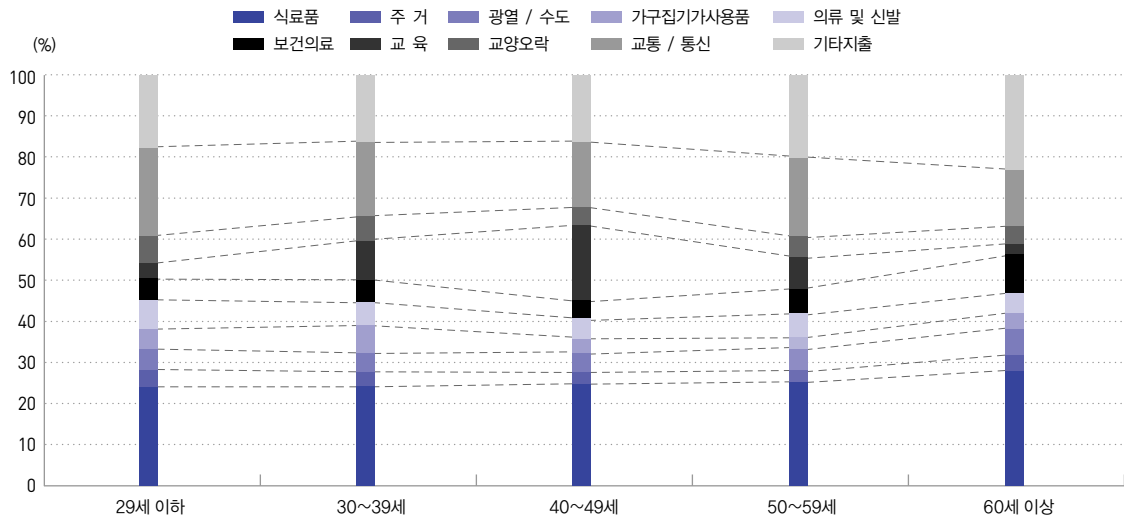
학령기 자녀를 둔 연령대인 30대에서 50대의 가구주들은 소비지출의 상당부분을 교육비에 지출하였다. 40대의 경우가 18%로 가장 높았지만, 30대 10%, 50대 8%로 교육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았다.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에서

〈표 V-1〉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의 지출항목별 지출액과 구성 비율 : 2007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지출금액(원)	구성비율(%)	지출금액(원)	구성비율(%)	지출금액(원)	구성비율(%)
가계지출	2,699,644	100.0	2,841,110	100.0	2,501,517	100.0
소비지출	2,269,577	84.1	2,348,801	82.7	2,158,547	86.3
비소비지출	430,067	15.9	492,309	17.3	342,971	13.7
평균 소비성향		78.8		73.8		87.9

주 : 평균 소비성향은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임.
출처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2007

[그림 V-9] 가구주의 연령별 지출구조: 2007



출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2007

는 의료비의 비중이 9.9%로 20대 가구주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소비구조를 보면 식비와 광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모든 연령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두 항목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서 취향에 따른 소비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이들 가구의 소득과 지출 수준 자체가 낮은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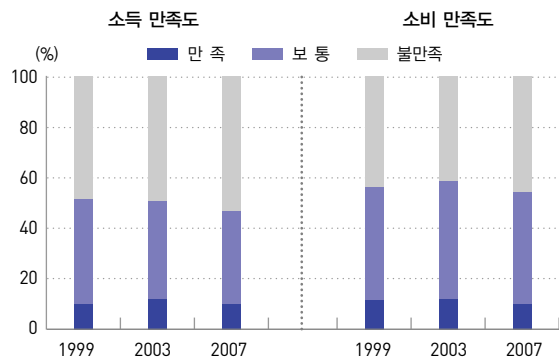
소득 및 소비에 대한 만족도

소득 및 소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과 소비에 대하여 만족하는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불만족하는 비율은 소득에 대한 것이 소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그림 V-10]). 소득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비율은 소폭이지만 매년 상승하고 있어서 2007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3.5%가 현재 소득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수준에 대한 불만족은 이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역시 불만족하는 비율은 증가하여 46.2%가 현재의 소비수준에 불만족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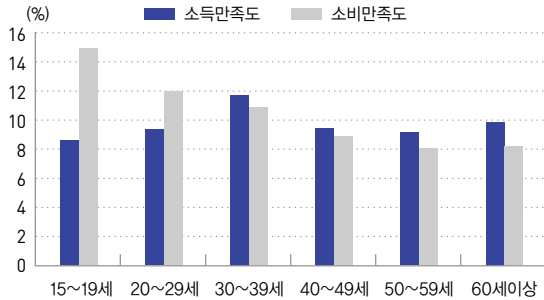
연령에 따른 소득과 소비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소득 및 소비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그림 V-10] 소득과 소비수준에 대한 만족도: 1999, 2003,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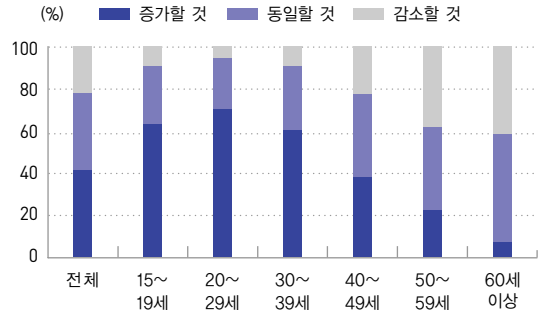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그림 V-11] 연령별 소득 및 소비수준 만족도: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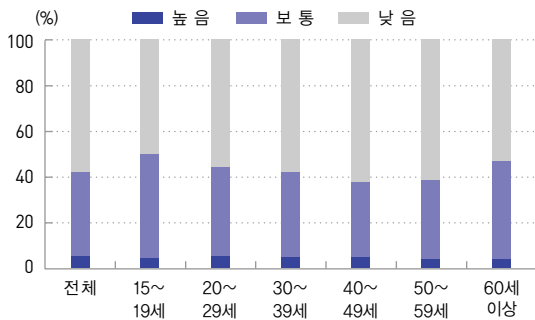
주: 소득 및 소비수준 각각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7

[그림 V-13] 연령별 장래소득에 대한 기대: 2007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7

[그림 V-12] 연령별 현 소득수준에 대한 평가: 2007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7

연령은 40대와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11). 이는 이들 연령이 가장 소득이 많으면서 동시에 지출도 많이 이루어지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연령에 따른 현 소득수준에 대한 평가와 장래 소득에 대한 기대 정도를 살펴보기로 하자. 현 소

득 수준에 대한 평가는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낮게 나타났고, 응답자의 50% 이상이 자신의 소득이 낮다고 응답하였다(그림 V-12). 이 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소득이 낮다고 말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실제 소득이 가장 높은 40대와 50대라는 점이다. 이는 이들이 자녀교육 및 결혼, 노후준비 등 요구되는 지출수준은 가장 높은 상황임에 반해서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어려운 연령이라는 점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답한 비율이 높은 연령층은 가구주의 연령이 20대, 10대, 30대 가구주의 순으로 각각 70.3%, 63.4%, 60.5%로 나타났다(그림 V-13). 반면, 40대 가구주 중 장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답한 비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찬임(한국노동연구원)

소득분배와 빈곤율의 추이

요 약

-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및 빈곤율은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특히 악화되었고, 그 이후에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시 급격히 악화되었다.
- 지니계수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황은 OECD 국가 중 중하위에 속하고, 빈곤 상황을 보면 OECD 국가 중 가장 빈곤율이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가구소득에 관심을 갖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빈곤의 퇴치에 있다. 빈곤문제는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욕구조차 제대로 충족할 수 없는 절대적 빈곤과 그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고 있는 수준의 삶을 영위하기 곤란한 상대적 빈곤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과거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에는 절대 빈곤이 문제가 되었지만,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현 시점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상대 빈곤이다.

상대적 빈곤은 소득분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사회 전체의 부는 같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소득격차가 크다면 그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의 수는 많을 것이고, 소득분배가 상당히 평등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그 반대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세, 사회보험, 공적 이전 등을 통하여 소득분배와 빈곤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빈곤을 최대한 예방하고 빈곤한 사람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리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누진적인 조세제도와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이전, 노령수당, 긴급구호 등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빈곤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공적 소득이전은 이미 빈곤선 이하인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역

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와 빈곤율의 추세 및 현황을 살펴보고, 시장소득과 정부 개입 이후의 가처분소득과의 차이를 통하여 정부 개입의 효과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소득분배 상황은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로 파악할 수 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의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의 소득의 몇 배에 해당하는가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 수치가 높아지면 소득분배는 악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니계수는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소득분배 지표로서, 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 평등한 상태이고 지니계수가 1이면 완전 불평등한 상태이다. 현실에서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어떤 사람이 빈곤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소득, 지출, 자산 등인데,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은 소득이다. 빈곤, 즉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할 정도의 소득 수준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이다. 평균소득보다 중위소득을 선호하는 이유는 소득과 같이 불평등한 분포를 가진 값에서는 평균이 전체 구성원의 대표적인 생활상보다 다소 높게 잡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중위소득의 50%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정하고, 가구 균등화 지수를 이용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필요 소득의 차이를 균등화한 빈곤율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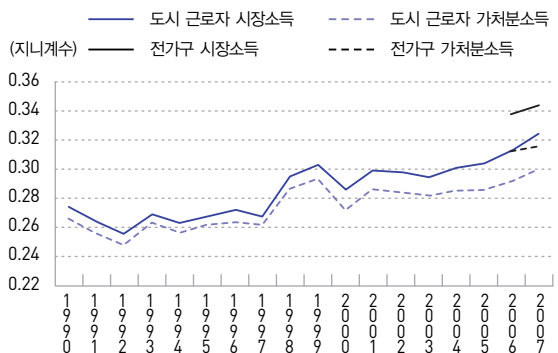
소득분배와 빈곤율 추세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 추세를 보면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소득분배의

상태가 가장 좋았던 시기는 1990년대 초반이다. 이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소득분배는 급격하게 나빠졌으며 2000년대 초반 약간의 개선은 있었지만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2003년부터 소득분배 수준은 급속히 악화되어 2004년 이후에는 외환위기 당시의 소득분배 수준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우선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한 시장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보자(그림 V-14). 1990년 0.274였던 지니계수는 1992년에는 0.256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증가하다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히 증가하여 1999년에는 0.303으로 최고치가 되었다. 외환위기를 지난 이후에도 지니계수는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높은 상태를 지속하였고, 2004년 이후부터는 매우 가파르게 높아져서 2005년 0.304, 2006년 0.313, 2007년 0.324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최근 2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이며, 증가 추세 또한 유래없이 가파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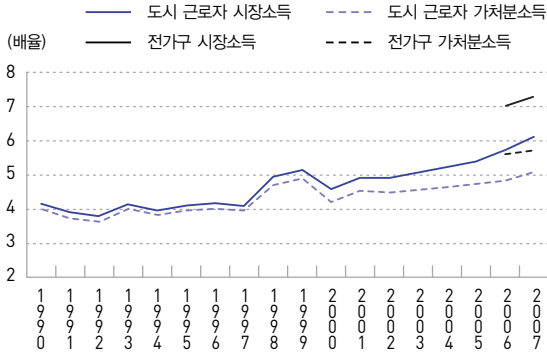
[그림 V-14] 지니계수의 변화 추이: 1990-2007



출처: 통계청, 『가계조사』, 각 년도

소득분배의 악화 상황은 소득 5분위 배율에서도 볼 수 있다(그림 V-15). 1990년 5분위 배율은 4.14이

[그림 V-15] 소득 5분위 배율의 변화 추이: 1990-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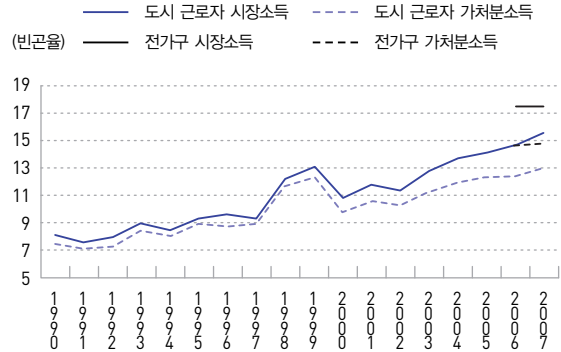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조사』, 각 년도

었고 이후 약간의 호전과 다소의 등락을 거듭하지만 1997년까지는 4.1대에서 머물고 있었다.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4.94, 5.13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후에도 별다른 감소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5분위 배율이 다시 급등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4년부터이다. 2004년 5.23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6.12까지 증가하는데, 2004년 이후의 수치는 외환위기 당시에도 없었던 유례 없이 높은 수치이다.

소득분배의 악화는 빈곤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1990년 8.1%이던 빈곤율은 1991년 7.6%를 최저점으로 이후 다소 높아지기는 하였지만 9%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그림 V-16).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9년에는 13.1%까지 높아졌지만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02년까지는 11%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3년부터 빈곤율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 13.7%로 외환위기 때의 최고 빈곤율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이후에도 급증세는 유지되어 2007년에는 15.6%에 이르게 되었다.

[그림 V-16] 빈곤율의 변화 추이: 1990-2007



출처: 통계청, 『가계조사』, 각 년도

흥미로운 사실은 시장소득 대신 가처분소득을 이용하여 구한 소득분배 지표에서는 소득분배 및 빈곤의 정도가 훨씬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나오는 해는 지니계수는 2005년부터이고 5분위 배율과 빈곤율은 2004년부터이다. 그러나 가처분 소득을 이용하여 소득분배 지표 및 빈곤율을 구하면 외환위기 때보다 소득분배가 나빠진 것으로 나오는 해는 2007년 한 해에 불과하고, 외환위기 때보다 빈곤율이 더 높게 나오는 해는 2006년 이후이다. 이는 조세제도, 공적 이전 등 국가의 개입이 소득분배 개선 및 빈곤제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가처분소득이 시장소득에 비하여 소득분배 개선 및 빈곤감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을 개선시킨 정도, 빈곤율을 감소시킨 정도로 살펴보았다(표 V-2).

소득분배 개선 및 빈곤감소에 대한 가처분 소득의 효과는 2000년에 급증하였고 그 이후는 소폭이지만

〈표 V-2〉 시장소득에 대한 가처분소득의 소득분배 개선 및 빈곤감소 효과: 1990-2007

	지니계수 개선비율(%)		5분위배율 개선비율(%)		빈곤감소 효과(%)	
	도시근로자 가구	2인 이상 전국가구	도시근로자 가구	2인 이상 전국가구	도시근로자 가구	2인 이상 전국가구
1990년	2.9		4.1		7.4	
1992년	3.1		4.2		8.8	
1994년	2.3		3.3		4.7	
1996년	2.9		4.3		8.3	
1998년	2.7		4.5		4.1	
2000년	4.9		8.5		9.3	
2001년	4.3		8.3		10.2	
2003년	4.4	5.3	9.9	11.9	11.7	14.2
2006년	6.7	7.2	15.2	17.3	15.0	16.7
2007년	7.4	8.2	17.0	19.2	16.7	15.7

출처: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각 년도

지속적으로 효과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2000년 기존 공적부조 제도의 골간을 변화시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고, 노동가능 빈민에게도 생계보호를 위한 지급을 시작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국가의 공적 소득이전의 범주가 이전에 비하여 훨씬 넓어졌기 때문에, 비록 시장소득의 분배가 급격히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에서의 분배 악화는 덜 심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각 집단의 특성에 따른 소득분배 개선 및 빈곤감소 효과의 차이를 보면, 소득분배의 상황은 도시 가구만 보았을 때보다 전국 가구를 보았을 때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근로자 가구보다는 전국 가구에서 소득이 낮고 어려운 사람이 더 많고, 국가의 공적 소득이전도 더 많을 것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국가의 공적 소득이전의 효과가 어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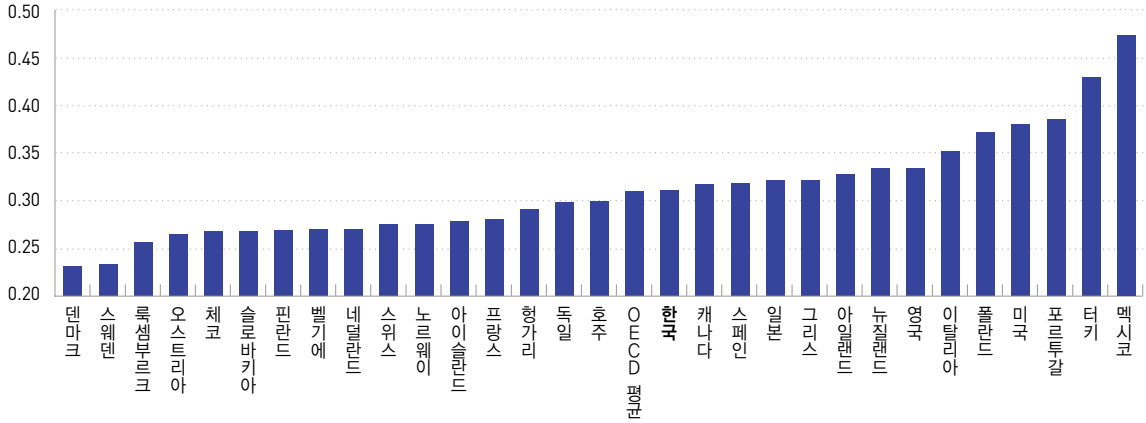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자료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소득분배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분배 및 빈곤율의 국제 비교

다음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및 빈곤율을 OECD 국가와 비교해보았다(그림 V-17). OECD에 보고된 2006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12이고,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은 14.6%였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평등성이 OECD의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평등성은 30개국 중 17번째였다. 다른 나라의 소득분배 현황을 보면, 덴마크와 스웨덴은 지니계수가 0.23대로 소득분배 상황이 가장 좋았고, 지니계수가 0.30 미만인 국가는 15개국이었다. 지니계수가 OECD 평균보다

[그림 V-17] OECD 국가의 지니계수 비교: 2006

(지니계수)



출처: OECD,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2008

낮은 국가를 보면 호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럽국가임을 알 수 있었다. 소득분배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국가는 멕시코, 터키, 포르투갈, 미국, 폴란드, 이탈리아로서, 이들 국가의 지니계수는 0.35 이상이였다.

다음은 빈곤율의 비교이다.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하였을 때, OECD 국가의 빈곤율은 평균 10.6%이고,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14.7%이다. 빈곤율이 낮은 국가부터 순위를 매길 경우 한국은 25번째이다. 더욱이 빈곤율 14.7%는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율이고, 전가구의 빈곤율은 17.5%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빈곤상황은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빈곤율 17.5%는 멕시코를 제외한다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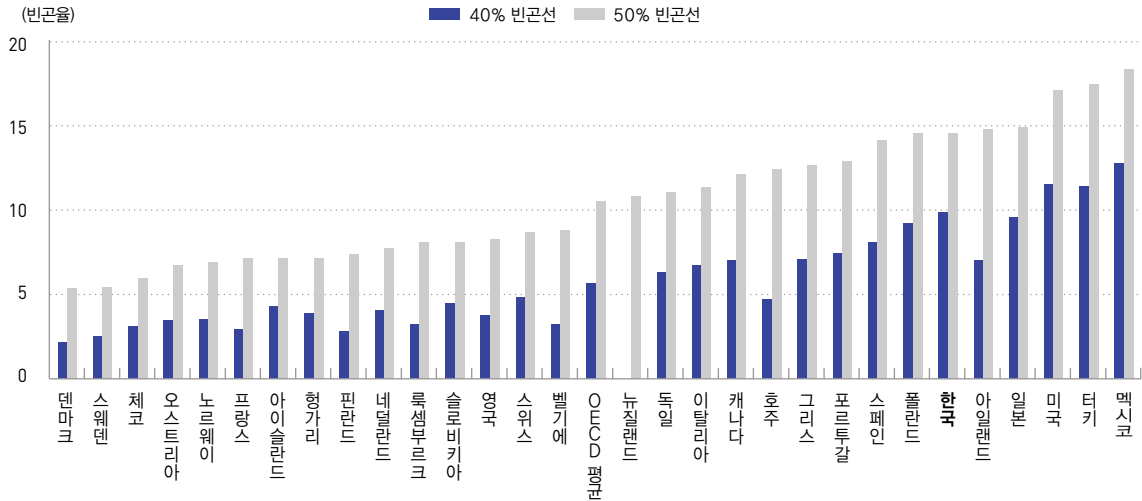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5.3%였고, 체코가 5.8%로 그 뒤를 이었다. OECD 평균보다 빈곤율이 낮은 국가는 모두 유럽 국가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국가의 소득분배는 상당히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남부유럽과 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OECD 자료로부터 빈곤가구 중 중위소득의 4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중을 볼 수 있는데([그림 V-18]), 이를 보면 국가 간 빈곤의 심도 차이를 알 수 있다. 빈곤가구 중 중위소득의 40%에 못 미치는 가구의 비중이 높을수록 빈곤의 골은 깊고 빈곤해소는 쉽지 않다. 역으로 빈곤가구가 중위소득의 40%에서 50% 사이에 몰려 있으면 적은 액수를 투자하여도 빈곤정책의 효과가 쉽게 나타날 수 있다. 즉, 빈곤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격차가 적은 경우는 빈곤정책의 효과성이 높은 반면, 빈곤격차가 큰 경우는 빈곤정책의 효과성이 낮다.

벨기에, 호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는 빈곤가구에서 빈곤선 40% 이상의 소득수준인 경우가 60% 이상이었다. 반면 폴란드, 한국, 일본, 미국, 터키, 멕시코는 빈곤 가구 중 빈곤선 4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경우가 60% 이상이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빈곤가구의 67% 이상이 빈곤선 40% 미만의 소득을 가져서, 멕시코를 제외하면 빈곤의 질 또한 가장

[그림 V-18] OECD 국가의 빈곤율 비교: 2006



출처: OECD,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2008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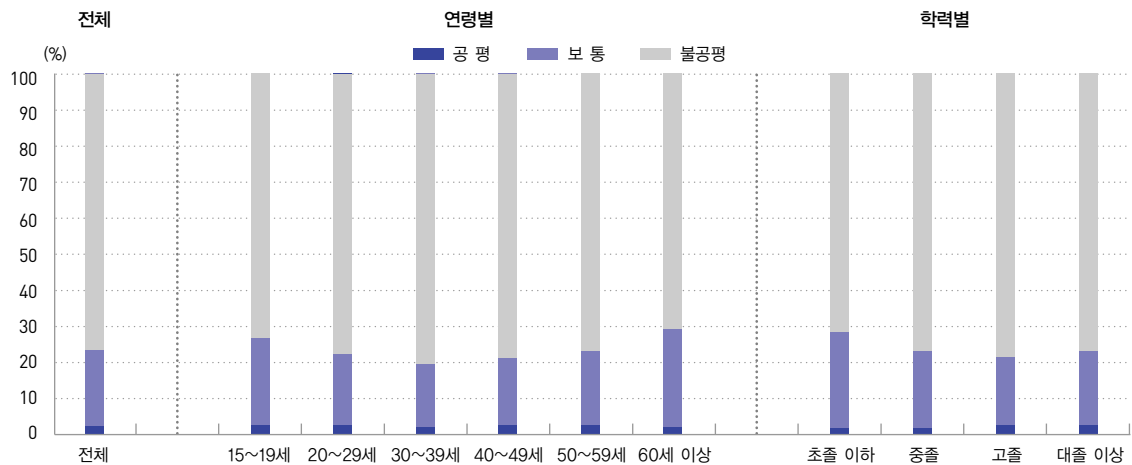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급속히 악화되었고, 빈곤율 또한 급증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소득분배 불평등 및 빈곤율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볼 때에도 매우 높게 나타나며, 빈곤

의 정도와 질은 거의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분배에 대한 의견 및 계층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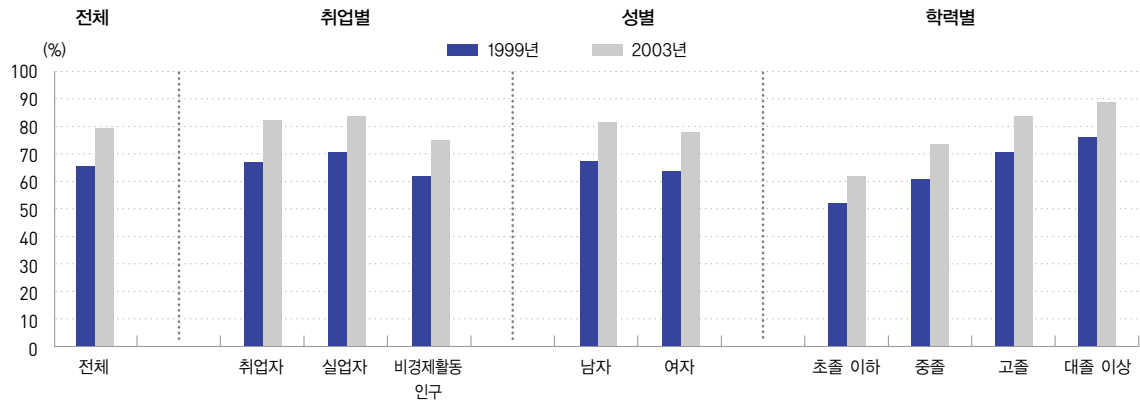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가구주들을 대상으로 소득분배에 대한

[그림 V-19] 계층별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견해: 2007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7

[그림 V-20] 계층별 빈부격차 감소에 대한 견해: 1999, 2003



주: '빈부격차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의견 및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소득 분배에 대한 의견은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2007년에는 소득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고 1999년과 2003년 조사에서는 '빈부격차가 감소한다'는 지문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이 두 문항은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대략적인 생각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기술하였다.

소득분배에 대한 의견을 보면 학력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70% 이상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고 답하였다(그림 V-19). 반면 소득분배가 공평하다고 답한 경우는 모든 경우에서 3% 미만이었다.

빈부격차 감소에 대한 의견 역시 빈부격차가 감소

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았다(그림 V-20). 빈부격차 감소에 대한 의견에서 관심을 가질 사항은 1999년과 2003년 조사에서 동일한 질문을 하였는데, 응답내용이 상당히 변화했다는 점이다. 응답자의 특성과 관계없이 빈부격차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10%p 이상 증가하였다. 이렇게 빈부격차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증가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만일 이후 소득분배가 급격하고도 극심하게 악화된 2004년 이후 동일한 질문의 조사를 하였다면 2003년보다 더 부정적인 응답을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

박찬임(한국노동연구원)

교육비 지출수준과 구성의 실태와 변화 추이

요 약

- 가구의 교육비 지출수준은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였으며, 교육비 지출수준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 소득의 증가율보다 훨씬 더 크다.
- 1980년대 초반에는 교육비 중 납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3 이상되고 보충교육비의 비중은 10%대였지만, 이후 이 추세는 역전되어 2007년 현재 납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감소하고 보충교육비의 비중은 60%대로 증가하였다.

가구의 교육비 지출수준과 그 항목별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개별 가구의 교육비 지출의 부담에 대하여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출내역을 살펴봐야 할 것이지만, 통계청의 공식 자료 중 가구의 지출내역과 미성년 자녀 유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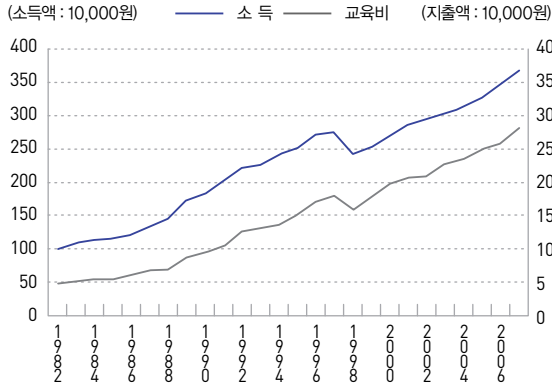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1982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교육비 지출 수준과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장기간에 걸친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모든 금액을 2007년을 기준으로 GDP 성장률을 이용하여 실질화시켰다.

교육비 지출수준의 변화 추이

1982년부터 2007년까지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교육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때를 제외한다면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그 대체적인 증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그림 V-21]).

이 기간 동안 가구소득은 100만 6,000원에서 367만 5,000원으로 3.7배 상승하였지만, 교육비 지출은 47,000원에서 282,000원으로 6배 상승하여서 교육

[그림 V-21] 가구소득과 교육비 지출:1982-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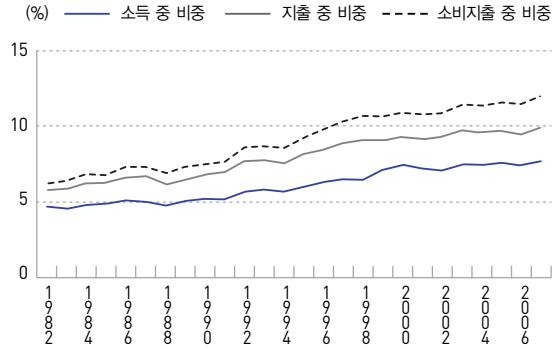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년도

비의 증가율이 가구소득 증가율보다 크게 나타났다([그림 V-22]). 이 기간 중 소득 증가율의 평균은 5.4%인데 비하여 교육비 지출 증가율의 평균은 7.6%로 교육비 지출의 증가율이 더 컸고, 8개 연도를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교육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었다.

교육비가 전체 소득, 지출,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완만하지만 꾸준히 상승하였다([그림 V-23]). 전체 소비지출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 6.2%에서 2007년에는 12.0%로 2배가량 상승

[그림 V-23] 소득, 총지출 및 소비지출 중 교육비 지출의 비율:1982-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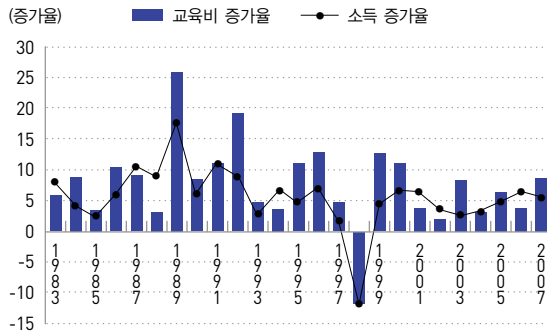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년도

하였다. 이 기간 동안 가구원수가 4.5명에서 3.3명으로, 합계 출산율이 2.4명에서 1.3명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 자녀에게 지출되는 교육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외환위기 시기에는 전체 소득이나 교육비 지출액은 감소하였지만, 소득이나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폭이지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비를 구성하는 지출내역 중 등록금과 같이 하방경직적인 성격을 갖는 지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V-22] 소득 증가율과 교육비 증가율:1983-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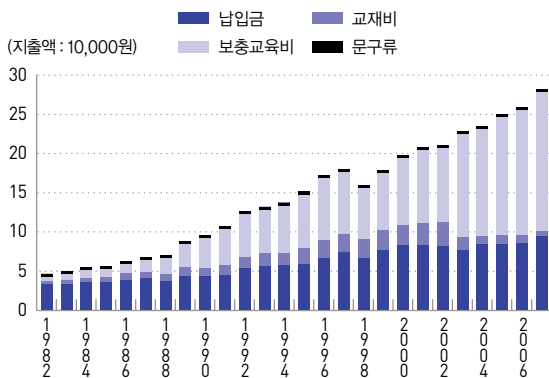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년도

교육비 구성의 변화 추이

교육비 지출의 구성항목은 납입금, 교재비, 보충교육비, 문구류의 네 가지이다. 납입금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대학교 및 평생교육원의 등록금에 드는 비용을 말하고, 교재비는 교과서와 참고서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보충교육비는 학업의 보충 및 예체능을 위한 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과외 및 학원비, 피아노 교습비 등이 포함된다.

1982년부터 2007년까지 교육비의 항목별 지출액의 변화추이는 [그림 V-24]와 같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보충교육비로서 가구당 6,000원에서 175,000원으로 27.4배 증가하였고, 다음은 납입금으로서 33,000원에서 94,000원으로 약 2.8배 증가하였다. 반면 교재비와 문구류 비용의 증가는 각각 2배, 1.1배에 그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림 V-24] 항목별 교육비 지출액: 1982-2007



주: 2003년 가계조사 항목분류 개편으로 2003년 전후의 시계열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

출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년도

다음은 교육비 지출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표 V-3>). 2007년 현재 교육비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역은 보충교육비로서 전체 교육비 지출의 62.1%를 차지하고, 두 번째는 납입금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해서 이 두 항목의 비중이 95% 이상이었다. 교재비와 문구류의 비중은 각각 3.3%와 1.3%로 전체 교육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았다.

이러한 각 항목의 비중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것이다. 1982년부터 2007년까지 각 항목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

는 보충교육비 비중의 지속적이라고도 급격한 증가와 여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로 요약된다. 1982년 13.5%였던 보충교육비의 비중은 2007년 62.1%가 됨으로써 수치상으로 48.6%p 증가하였고, 비중 면에서는 4.6배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납입금의

<표 V-3> 교육비 지출구성비: 1982-2007

(%)

	납입금	교재비	보충교육비	문구류
1982년	69.9	9.8	13.5	6.8
1983년	68.2	9.2	16.6	6.1
1984년	64.2	11.0	18.1	6.6
1985년	62.7	11.4	19.7	6.2
1986년	62.6	11.9	19.7	5.8
1987년	60.4	12.1	22.1	5.4
1988년	54.4	12.3	27.8	5.5
1989년	48.4	13.4	33.2	5.0
1990년	43.9	12.1	39.7	4.3
1991년	42.7	12.1	41.4	3.9
1992년	41.2	11.8	43.7	3.3
1993년	42.3	12.2	42.1	3.4
1994년	42.2	12.8	41.9	3.1
1995년	38.3	13.0	45.9	2.8
1996년	39.1	13.3	45.0	2.6
1997년	41.0	13.4	43.1	2.4
1998년	42.7	14.7	40.0	2.6
1999년	42.8	14.3	40.3	2.6
2000년	41.5	13.7	42.5	2.3
2001년	40.3	14.0	43.5	2.1
2002년	38.7	14.2	45.0	2.1
2003년	33.8	7.3	57.0	1.9
2004년	35.4	4.1	58.8	1.7
2005년	34.4	3.5	60.6	1.5
2006년	33.3	3.6	61.7	1.4
2007년	33.3	3.3	62.1	1.3

주: 2003년 가계조사 항목분류 개편으로 2003년 전후의 시계열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

출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년도

비중은 1982년 69.9%에서 2007년에는 33.3%로 수 치상으로 36.6%p 감소하였고, 비중 면에서는 0.5배 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록 전체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높지 않다 하더라도 문구류 및 교재비가 차 지하는 비중도 대폭 감소하여, 문구류는 6.8%에서 1.3%, 교재비는 9.3%에서 3.3%가 되었다.

여기서 지적할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외환위기 시기에는 교육비 지출 중 납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증가한 반면 보충교육비의 비중은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납입금의 소득탄력성이 보충교육비보다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구특성별 교육비 지출수준과 구성

소득분위별 교육비 지출

소득분위별 가구당 교육비 지출액의 추이를 보면 [그림 V-25]와 같다. 소득 1분위의 가구당 교육비는 1982년 18,000원에서 2007년 110,000원으로, 2분위는 26,000원에서 192,000원으로, 3분위는 34,000원에서 284,000원으로, 4분위는 56,000원에서 339,000원으로, 5분위는 101,000원에서 483,000원으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증가정도는 3분위와 2분위가 가장 커서 8.3배, 7.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1분위와 4분위로서 각각 6.1배, 6.0배 증가하였으며, 5분위의 증가율이 4.8배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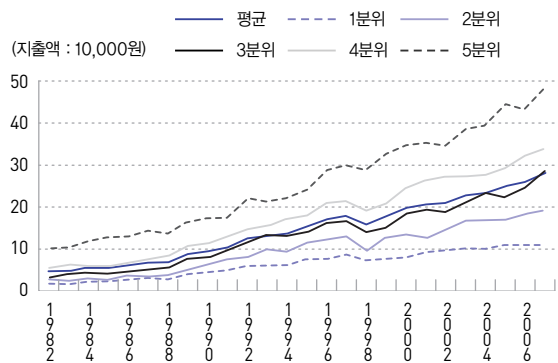
1982년부터 2007년까지의 교육비 추이를 보면 소득 2분위, 3분위, 4분위의 교육비 지출과 평균 교육비 지출의 추이는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평균 교육비 지출 수준의 추이는 소득추이와 유사하게 나

타나고 있음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는 소득 2분위부터 4분위 사이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교육비 지출수준이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인 소득 1분위에서는 교육비 지출수준에 대한 소득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경우, 경기에 따른 소비탄력성이 적은 납입금의 비중이 높고 소비탄력성이 큰 보충교육비의 비중은 적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비 지출수준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전 기간 동안 교육비 지출수준의 평균은 소득 3분위의 교육비 지출을 약간 상회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체 가구의 60%가 평균 이하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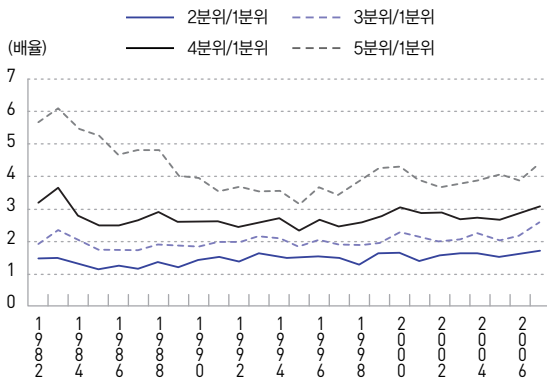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비 지출의 격차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각 소득분위의 교육비를 1분위 소득층의 교육비로 나누어서 배율을 살펴보았다([그림 V-26]). 원래 5분위 배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가구의 가구원수에 따라서 소득을 표준화하여야 하겠지

[그림 V-25] 소득분위별 교육비 지출액: 1982-2007



출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년도

[그림 V-26] 소득분위별 교육비 지출 배율: 1982-2007



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육 대상자의 수에 대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교육대상자의 수에 따른 표준화를 하지 못하고 사용하였다.

1분위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2분위, 3분위, 4분위 교육비 지출의 배율은 분위가 높아질수록 그 수치도 높아지지만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 1983년을 정점으로 1980년대 후반 다소 낮아졌고, 1990년대에는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였으며, 200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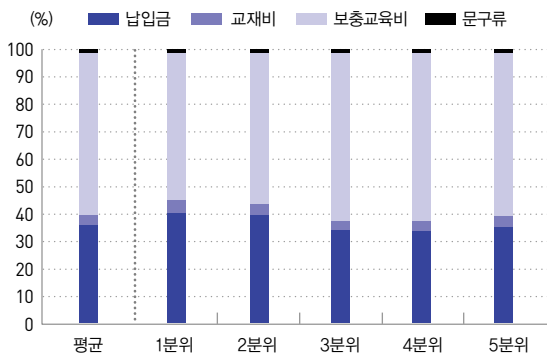
이후에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반면 1분위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5분위의 교육비 지출의 배율은 이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보면 1983년 6.1로 가장 높았고 그 이후 급격히 낮아져 1995년 3.2로 저점을 보인 후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0년 4.3을 기록한 후 다시 등락을 거듭하여 2007년 4.4를 기록하였다.

다음은 2007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분위에 따른 교육비 지출항목의 구성을 살펴보았다(그림 V-27). 소득 5분위를 제외한다면, 교육비 지출 중 납입금의 비중은 소득이 낮을수록 증가하고, 보충교육비의 비중은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이는 저소득층에서는 지출 여부를 선택하기 어려운 납입금에 대해서는 지출하지만, 지출 여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있는 보충교육비에 대해서는 지출을 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위기 당시 보충교육비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V-27] 소득분위별 교육비 지출구성비: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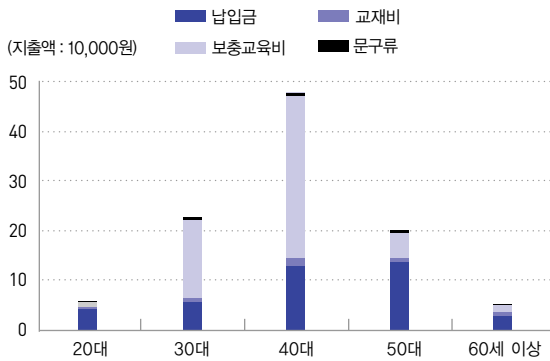
가구주 연령별 교육비 지출

교육비는 주로 미성년 자녀에게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교육비 지출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가구주의 연령은 미성년 자녀 여부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서 교육비 지출 수준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교육비 지출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집단으로서, 이들 집단은 중등교육 이상을 받고 있는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집단이다

([그림 V-28]), 교육비 지출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은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이거나 29세 이하인 가구로서, 학령기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적은 집단이었다.

[그림 V-28] 가구주 연령별 교육비 지출액: 2007



출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2007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집단의 교육비 지출수준은 다른 어떤 연령의 집단보다도 높았다. 이들 집단의 교육비 지출수준은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이거나 29세 이하인 집단의 8배 이상, 가구주 연령이 30대이거나 50대인 집단의 2배 이상이 되었다. 사실 가구주 연령이 50대 이상인 가구에서도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0대의 교육비 지출이 유달리 높은 것은 보충교육비가 높기 때문일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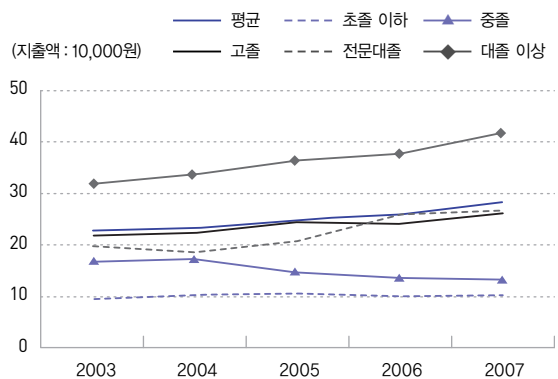
2007년 가구주 연령별 교육비 지출수준의 구성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보았다. 예상대로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가구에서 보충교육비 비중은 68.7%로 높게 나타났지만, 보충교육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30대인 가구로서 69.9%였다. 그렇지만 실제 지출금액은 30대 가구주가 40대 가구주의 1/2에도 못 미치고 있어서, 보충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절대적으로 많다고보다는 전체 교육비 지출 중 등

육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구주 학력별 교육비 지출

가구주 학력별 교육비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을 제외하면 가구주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교육비 지출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V-29]). 연도별 추이를 보면, 가구주의 학력이 고졸 이상인 가구는 교육비 지출은 꾸준히 상승하였지만, 가구주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가구는 교육비 지출수준이 정체하거나 감소하였다.

[그림 V-29] 가구주 학력별 교육비 지출액: 2003-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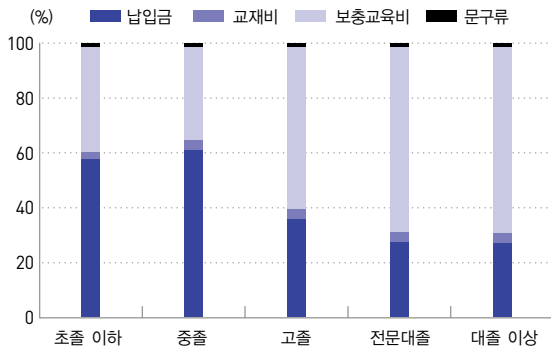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연도

교육비 지출이 특히 높은 가구는 가구주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로서, 평균의 1.6배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고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가구주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에만 교육비 지출수준이 평균 이상이었고, 나머지 모든 집단은 교육비 지출수준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았던 가구

[그림 V-30] 가구주 학력별 교육비 지출구성비: 2007



출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2007

주가 자녀의 교육에도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가구주의 학력에 따른 교육비 지출항목의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그림 V-30]). 가구주 학력이 중졸 이하인 가구와 전문대졸 이상인 가구의 항

목구성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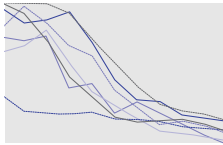
가구주가 중졸 이하인 가구에서는 납입금의 비중이 60% 전후로 나타나고, 보충교육비의 비중은 30%대에 불과하였다. 반면, 가구주가 전문대졸 이상인 가구에서는 납입금의 비중은 20%대이고, 전체 지출의 2/3 이상을 보충교육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 가구주 학력 자체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가구 소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구주의 학력이 낮을 경우 대개는 소득이 낮기 마련이다. 가구 소득이 낮을 경우 교육비 항목별 비중은 납입금의 비중이 높고 보충교육비의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가구주가 저학력인 경우 이러한 저소득층의 교육비 항목별 비중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찬임(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의 사회동향 2008

Korean Social Trends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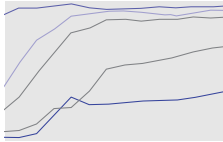


Population

Household &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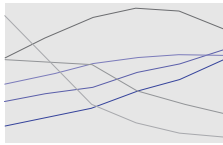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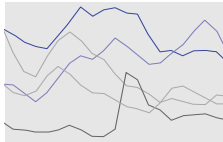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Health

Welfare



Environment

Social Security

Social Cohesion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 최선태 140

문화예술 향유실태 • 최선태 149

관광산업의 성장과 입출국 여행객수의 증가 • 최석호 156

VI. 문화와 여가

Culture & Leisure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문화는 우리가 21세기에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단어의 하나이다. 산업화와 근대성으로 규정되던 20세기와 대비되는 21세기의 특징으로서 문화의 대두는, 문화를 우리의 일상의 삶과 사회 운용의 주요 키워드로 만들었다. 문화는 더 이상 소수집단의 전유물인 아닌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하는 일상의 구성요소이자 시민의 권리로 변화된 것이다.

한국사회의 경우 문화와 여가에 대한 욕구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부가 축적된 1980년대 이후 생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문화가 중요시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주 5일제 근무시행으로 늘어난 여가시간이 맞물리면서 문화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문화와 여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짧은 역사는 축적된 통계자료의 부족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문화와 여가 부문에 대한 통계는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사회지표 내에 포함되었고, 그 외의 사회조사들 바탕으로 하는 통계들은 2000년 이후부터 조금씩 축적되고 있다. 축적된 자료의 부족은 아직까지도 문화와 여가 분야에 대한 연구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자료를 사용하여 문화와 여가의 변화양상을 그려본다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변화양상을 보여줄 만큼 연속적으로 조사된 자료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여가의 영역은 계속적으로 확장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보고에서는 문화와 여가 부문의 세부영역 중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어느 정도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문화산업, 문화예술활동, 그리고 여가와 스포츠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의 문화와 여가 영역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산업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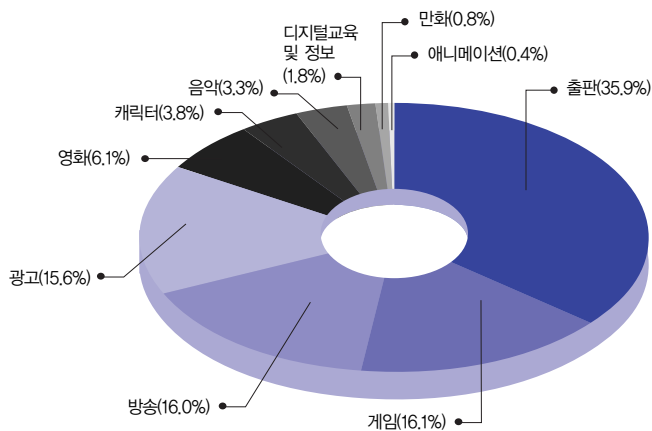
문화산업이란 용어는 1930년대 프랑크푸르트학파가 대중문화를 비판하기 위해 고안해 낸 말이다. 이 학파는 진정함을 담고 있어야 하는 문화가 자본주의 체계 하에서 상품화된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 바탕에는 문화는 상품화되어 천박하게 금전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이러한 비판의 영향으로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저급한 대중문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 시대 문화는 상품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산업화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앙을 받는다. 문화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통해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동시에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고급스러움을 갖춘 국가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와 관련된 직업을 선행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07년 발간한 『2006 문화산업백서』에 따르면, 2005년도의 우리나라 문화산업(출판, 만화, 음반,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디지털 교육 및 정보 10개 분야) 매출액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53조 9,481억 원으로, 같은 해 경제성장률 4.2%의 2배 가까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2005년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총 매출액의 GDP 기여도는 2.4%로 미국(2005년 기준, 6.6%), 영국(2004년 기준, 7.3%) 등 주요국의 문화산업 기여도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산업별 규모를 살펴보면, 출판산업이 19조 3,921억 원으로 10개 문화산업분야 매출규모의 35.9%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게임산업 8조 6,798억 원, 방송산업 8조 6,352억 원, 광고산업 8조 4,178억 원, 영화산업 3조 2,948억 원 등으로 산출되었다. 2004년도와 비교했을 때 매출규모가 증가한 문화산업은 게임(101.1%), 방송(11.1%), 영화(9.0%), 디지털 교육 및 정보(12.9%), 출판(2.5%) 분야였으며, 이 가운데 게임,

[그림 VI-1] 문화산업별 매출액: 2005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문화산업백서』, 2007

방송, 영화 산업이 문화산업 성장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여기서는 여러 가지 문화산업 중 가장 큰 매출규모를 가지고 있는 출판 산업과 현재 한국의 문화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게임, 방송, 영화산업 중 상대적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화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출판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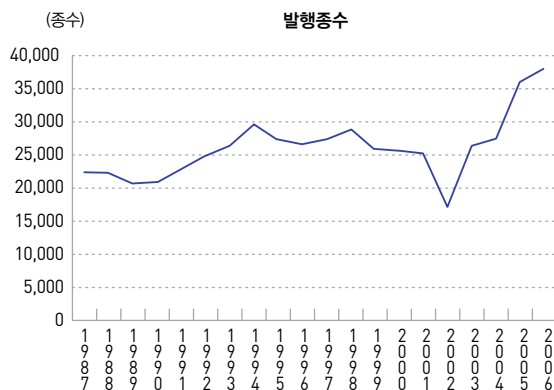
인터넷 등의 새로운 매체가 생겨나기 전, 서적은 지식을 기록하고 유통시키는 가장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수단이었다. 그러나 지식의 기록 확산 방식과 기술 등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화는 문화산업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책이 차지하던 역할과 비중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산업은 아직까지 문화산업 분야에서 매출규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신간도서는 총 38,035종, 약 9,200만 권이다.

1980년대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출판된 도서의 종류를 보면, 1990년대 말까지는 어느 정도의 등락은 있었지만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87년에 22,425종이었던 발행종수는 1998년에 28,838종으로 늘어났고, 그 후 정체 또는 약간 하락하다 2004년 이후 급증세로 돌아서 2006년 가장 많은 38,035종이 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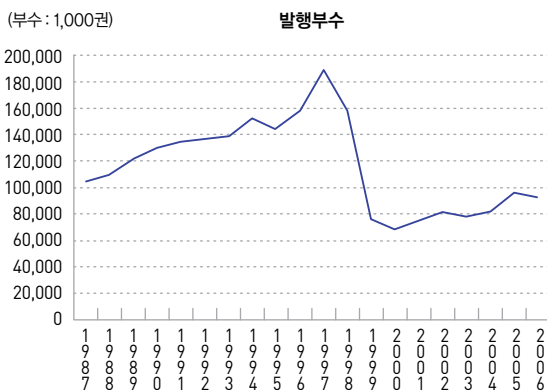
신간도서 발행부수를 보면, 1997년까지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했는데, 1997년에 1억 8,870만 7,000권으로 정점을 찍고, 1998년에는 소폭 하락, 그리고 1999년에는 극적인 하락을 하게 된다. 그 결과 2000년에는 신간발행부수가 6,840만 8,000권으로, 정점이었던 1997년 발행부수의 36%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후로 완만한 상승세를 회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상으로는 2006년 발행부수가 절정기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처럼 보인다.

1999년의 신간도서 발행부수의 급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외환위기로 인해 출판계도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설이

[그림 VI-2] 신간도서 발행종수와 발행부수: 1987-2006



출처: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감』, 각 년도



다. 하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외환위기라기보다도 1999년 1월에 이루어진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있었다. 이 법률의 개정에 따라 당시 문화관광부의 납본 의무가 만화, 사진집, 화보집, 소설 분야로 완화되었는데, 그 결과 문화관광부 납본을 근거로 집계해오던 신간도서 출판 통계에서 상당수의 도서가 제외되었다. 특히 1998년 대비 11배가 감소한 사회과학 분야 도서의 경우, 1998년에 사회과학 도서 부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교과서가 1999년에는 포함되지 않은 결과이다. 1998년의 교과서 발행량이 6,650만 부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시기의 출판부수 급감은 실제로 발행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법률개정에 따른 통계집계 기준의 변화에 기인한다.

2000년 이후로 신간도서 발행부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문화산업 내에서 출판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급감했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영화산업

영화는 1800년대 말에 한국 사회에 소개되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간 한국영화만큼 한국인의 문화예술 생활에서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가 컸던 분야는 많지 않은 것 같다. 텔레비전이나 다른 오락시설이 없었던 시절, 문화 활동으로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했던 영화의 인기는 그야말로 대단했다. 이렇게 독점적인 전성기를 구가하던 영화산업은 1970년대에 들어와 컬러 TV가 보급되고 1980년 말 외국 영화사가 우리나라에 영화를 직접 배급할 수 있게 되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영화는 외국영화에 비해 예술적인 측면을 비롯한 여러 질적인 측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영

화의 사회적 위상의 하락은 영화 제작 편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1970년 200편을 상회하던 제작편수는 1975년 94편으로 급감했으며,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에는 40편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몇 편의 한국영화의 성공을 기점으로 반전된다. 제작편수는 1999년 49편, 2000년 59편, 2001년 65편, 2002년 78편, 2003년 80편, 2004년 82편, 2005년 87편으로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었다.

한국영화의 위상 변화는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연도별 극장매출액, 영화 관객수 및 1인당 평균 관람횟수의 비교를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표 VI-1〉). 1996년까지만 해도 외국영화 매출액의 30%에 못 미치던 한국영화는 1999년에 전년도에 비해 거의 두 배가량 증가하여 외국영화 매출액과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2003년에는 외국영화 매출액을 능가하였다. 2005년 현재 한국영화는 5,277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8.7%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6년의 455억 원과 비교해보면 11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외국영화의 매출액이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1996년과 비교했을 때 매우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관객수나 1인당 평균 관람횟수의 변화로 잘 설명된다. 2000년 외국영화와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이던 관객수와 평균 관람횟수는 2003년경부터 역전되어 2005년 현재 관객수는 한국영화가 8,544만 명으로 전체의 58.7%를 차지하며, 1인당 평균 관람횟수 역시 한국영화가 1.8편으로 외국영화 1.2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화관수만을 살펴보면 1994년 748개, 1996년 511개, 2000년 373개, 그리고 2004년 302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그러나 영화관 숫자의 감소는

〈표 VI-1〉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극장매출액, 관객수 및 1인당 연평균 관람횟수: 1996~2005

	극장매출액(억원)			관객수(만명)					1인당 평균 관람횟수		
	한국 영화	외국 영화	합계	한국영화		외국영화		인원 합계	한국 영화	외국 영화	합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1996년	455	1,573	2,028								
1997년	600	1,784	2,384								
1998년	629	1,955	2,584								
1999년	1,128	1,734	2,862								
2000년	1,209	2,251	3,460	2,271	35.1	4,191	64.9	6,462	0.4	0.9	1.3
2001년	2,609	2,628	5,237	4,481	50.1	4,455	49.9	8,936	1.0	0.9	1.9
2002년	3,068	3,259	6,327	5,082	48.3	5,431	51.7	10,513	1.1	1.1	2.2
2003년	3,823	3,348	7,171	6,391	53.5	5,556	46.5	11,947	1.3	1.2	2.5
2004년	5,048	3,450	8,498	8,019	59.3	5,498	40.7	13,517	1.7	1.1	2.8
2005년	5,277	3,704	8,981	8,544	58.7	6,008	41.3	14,552	1.8	1.2	3.0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2006 한국영화연감』, 2006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다르게 설명되어야 한다. 그 이전에 영화관이 줄어든 데에는 무엇보다 TV와 비디오의 보급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두 기계들은 더 이상 영화관에 가지 않아도 영화를 즐길 수 있게 해주었고, 그 이외에도 영화를 대체 또는 능가할 만한 많은 오락거리가 생겨났다. 그러나 극장매출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1996년 이후의 영화관수의 감소는 멀티플렉스 등의 새로운 형태의 영화관의 등장에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스크린 수는 1996년 511개에서 2000년 720개, 그리고 2004년 1,451개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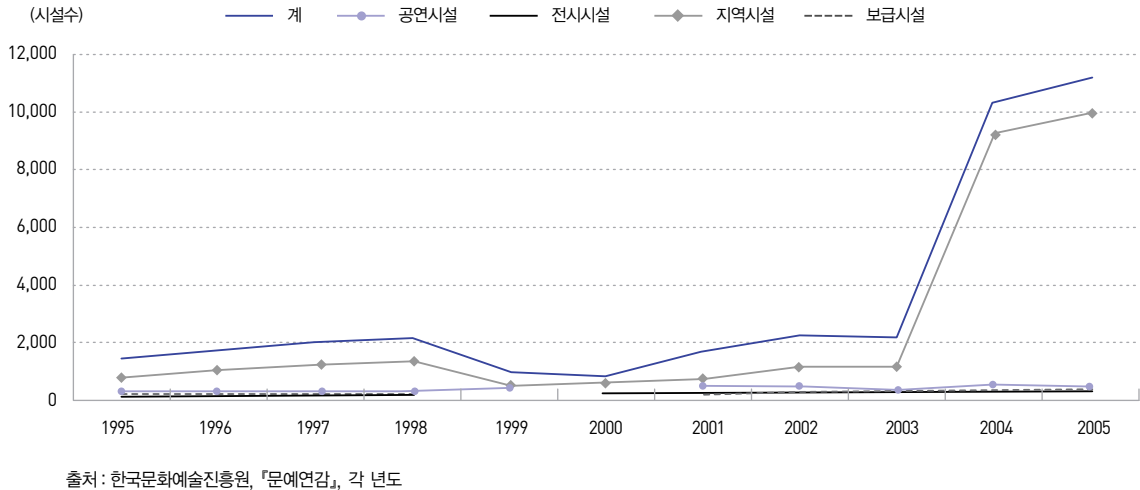
문화예술 활동: 시설과 행사의 확대

문화예술 시설은 공연, 전시, 지역문화복지, 문화보급전수 시설을 포함하는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 시설이다. 공연시설에는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

공연장, 영화관 등이, 전시시설에는 미술관, 박물관, 화랑 등이 포함된다. 지역문화 복지시설로는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을 들 수 있으며, 지역주민이 가까이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연시설은 수용 가능한 관람객의 규모에 따라 그리고 전시시설은 예술 장르 및 규모에 따라 구분된다. 종합공연장은 공연예술과 전시, 행사, 강연 등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행위를 수용하는 객석규모 1,200석 내외의 대규모 시설을, 일반공연장은 연극, 무용, 연주 등 순수공연예술만을 주로 공연하는 객석규모 300석 이상의 중규모 시설을, 그리고 소공연장은 소규모 공연을 하는 객석규모 300석 미만의 시설을 지칭한다(통계청, 2000).

문화예술 시설은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 이 시설의 확충은 국민의 문화체험 기회를 넓히고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1995년 총 1,434개소였던 문화예술시설은 1999년부터 2003년

[그림 VI-3] 문화예술시설 수: 1995-2005



까지 부침은 있었으나 크게 늘어나지 않다가 2004년 10,290개소로 거의 5배에 가깝게 늘어났다([그림 VI-3]). 이러한 1년 사이의 폭증은 일종의 통계적 착시현상이라 할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이 시기에 지역문화시설이 크게 확충되었는데, 2003년 1,159개소에서 2004년 9,083개소로 무려 8배가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지역 문화체육센터가 통계에 새로이 포함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무려 7,863개소나 되는 지역 문화체육센터가 2004년 통계에 갑자기 등장함으로써 전체 시설 수가 폭증한 것처럼 보인 것이다. 문화체육센터를 제외한다면 문화예술시설의 증가곡선은 훨씬 완만해진다. 예를 들면,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문화예술시설이 853개소 증가했는데, 그중 지역 문화체육센터의 증가가 804개소로 전체 증가분의 94%를 차지하고, 나머지 문화예술시설의 증가는 49개소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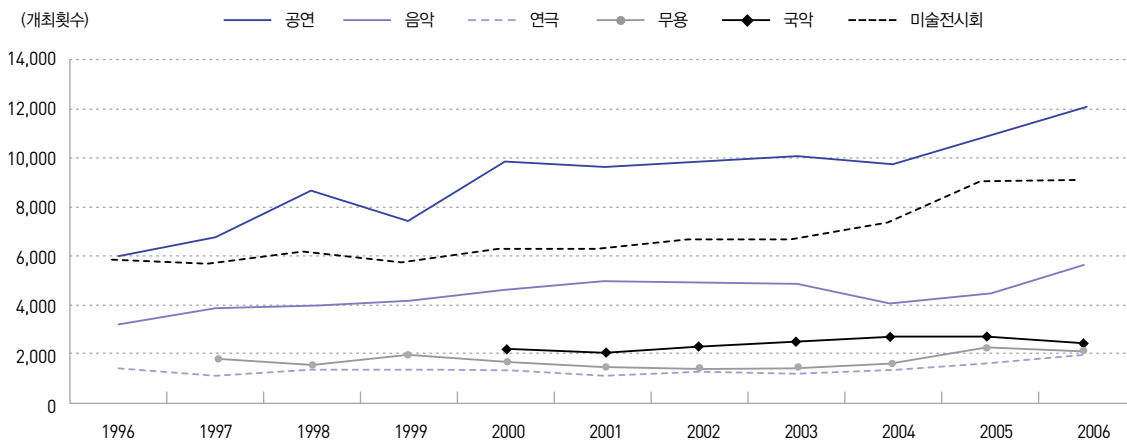
1999년과 2000년에 문화예술시설이 감소한 것처

럼 보이는 것도 역시 통계의 문제이다. 1999년 통계에는 전시시설 수가, 2000년 통계에는 공연시설 수가 누락된 까닭이다.

비슷한 시기에 예술행사 수 역시 증가하였다. 예술 행사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술전시회의 경우, 1996년 5,932건에서, 2006년 9,185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1996년 총 5,950건이었던 음악, 연극, 무용, 국악 등의 문화예술 공연은 2004년에는 9,756건으로, 2006년에는 12,126건으로 증가하였다([그림 VI-4]).

이외에도 도서관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문학작품을 접할 수 있고 문화강좌 등의 문화 활동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시설과 함께 살펴볼 만하다. 1970년 중반 이후 지난 30년 동안의 도서관 관련 시설의 변화 추이를 보면, 도서관과 열람석 수는 1994년에 한 차례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으나, 그 후로는 다시 꾸준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도서관 수는 2006년 현재 총 11,754개소이며 인구 만명당 열람석수는 263.2

[그림 VI-4] 예술행사 개최횟수:1996-2006



출처: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연감』, 각 년도

석, 인구 만명당 장서수는 약 53,917권이다. 이는 1975년 도서관수 총 4,296개소의 2.7배, 인구 만명당 열람석수 97.4석의 2.7배, 인구 만명당 장서수 6,026권의 8.9배에 달한다.

여가활동의 추이

고대부터 수많은 학자들이 여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하고자 하였고 따라서 여가에 대한 정의는 수없이 많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정의들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여가의 특성에는 '일과 같은 공적 영역에 대한 상대적 개념', '자유', '문화적 가치', '우열 없는 가치'라는 인식이다.

여가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확산은 산업사회의 출현과 맥을 같이 한다. 시민권의 확대에 따른 '개인'이라는 개념의 성장과 자유의 확대, 그리고 생산구조에 있어서 공장제 공업형태로의 전환은 개인과 공동체 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를 분리시켰고 여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 나아가 여가는 산업사회의 고통과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여량을 키우고 즐길 수 있는 이상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1984년부터 2007년까지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나타난 여가활동 방법을 보면, 1984년에서 1993년까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택하는 여가활동 방법으로 '수면과 가사'를 택하였고 두 번째가 'TV시청'이었는데, 1996년 조사에서는 'TV시청'이 41.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수면과 가사'(29.5%)로 나타났다. 그 이후로는 계속 'TV시청'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비율도 2000년에는 62.7%, 2004년 56.7%, 2007년 52.9%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6년에 추가된 'PC관련' 활동은 해당 연도에는 3.2%에 그쳤으나 2000년부터는 그 비율이 높아져 13~19%의 사람들이 여가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에는 수치가 없는 항목들이 많은데 이는

〈표 VI-2〉 여가활용 방법: 1984-2007

(%)

	감상 관람	TV 시청	PC 관련	종교 활동	창작적 취미	승부 놀이	스포츠	여행	사교 관련	가족과 함께	가사	휴식 수면	자기 계발	봉사 활동
1984년	29.1				5.1	6.1	11.1				44.4			
1990년	5.3	24.5			5.8	5.7	12.3				44.0			
1993년	4.9	24.4			3.7	4.0	14.0				45.4			
1996년	8.0	41.2	3.2		3.2	3.4	4.0	7.4			29.5			
2000년	10.1	62.7	12.5		3.2	3.4	8.0	15.1	32.3	22.8	33.5	50.7		
2004년	10.7	56.7	18.9		3.1		9.0	12.4	30.0	24.7	32.9	50.7	4.3	2.2
2007년	8.5	52.9	16.1	15.0	3.2		9.0	10.8	25.6		30.2	45.1	6.2	1.1

주: 1984~1996년 조사에서는 '가사와 수면'을 통합조사함.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해당연도에 응답범주에 없었던 것으로 이후의 질문에 추가되었거나 이전의 질문의 응답범주가 삭제된 것이다. 이로써 최근으로 오면서 여가활용방법이 훨씬 세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4년 '감상·관람', '창작적 취미 오락', '잡기·승부놀이', '스포츠·여행', '수면·가사잡일', '기타'의 여섯 범주이던 여가활용방법은 1990년에 'TV 시청'이, 1996년에는 'PC관련' 항목이 추가되고 '스포츠'와 '여행'이 분리됨으로써 9개 범주가 된다. 그 이후 2000년에는 '사교 관련', '가족과 함께'의 항목이 추가되고 '수면'과 '가사'가 분리됨으로써 12개 범주로, 2004년에는 '승부놀이'가 범주에서 제외되고 '자기계발'과 '봉사활동'의 범주가 추가되었으며, 2007년에는 '가족과 함께'의 항목이 제외되고 '종교 활동' 항목이 추가되었다.

각각의 항목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감상 관람'은 연극, 영화, 음악, 무용, 박물관, 미술, 스포츠 경기를 즐기는 것이며, '창작적 취미오락'에는 회화, 조각, 공예, 서예, 독서, 요리, 사진촬영, 악기연주, 수

예, 원예, 꽃꽂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스포츠'는 축구, 야구, 테니스 골프 등이 그리고 '여행'에는 등산, 낚시, 야유회, 답사 관광 등이 마지막으로 '승부놀이'는 장기, 바둑, 마작, 화투, 당구, 경마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승부놀이'가 여가활동의 주요한 범주로 간주되었다가 삭제되고 근래에 와서 자기계발과 봉사활동이 포함된 것은 한국사회의 여가에 대한 인식변화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PC관련' 활동의 포함과 그 증가는 사회의 기술적 변화가 여가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1999년과 2004년에 실시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가시간을 얼마나 누렸는지 살펴본다. 이 조사에 의하면, 10세 이상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여가시간은 하루에 평균 5시간 정도이다(〈표 VI-3〉). 1999년과 2004년 결과를 비교해보면 2004년에 전반적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4시간 49분에서 4시간 58분으로 9분 정도 늘었으며, 평

〈표 VI-3〉 여가활동별 평균 활용시간 비교 : 1999, 2004

(시간)

	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1999년	2004년	1999년	2004년	1999년	2004년	1999년	2004년
전체	4:49	4:58	4:25	4:32	5:13	5:33	6:28	6:35
교제활동	0:53	0:52	0:49	0:49	0:57	0:58	1:06	1:00
일반인의 학습	0:09	0:09	0:09	0:10	0:07	0:10	0:06	0:06
미디어 이용(대중매체)	2:23	2:19	2:10	2:05	2:36	2:38	3:16	3:10
종교활동	0:10	0:11	0:07	0:08	0:09	0:08	0:26	0:27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0:02	0:02	0:01	0:01	0:03	0:05	0:04	0:05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	0:19	0:24	0:17	0:23	0:21	0:25	0:25	0:30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0:52	0:59	0:49	0:54	0:56	1:09	1:02	1:13

출처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보고서』, 각 년도

일보다는 주말, 그리고 주말 중에서 토요일의 여가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 이는 2000년경부터 확산되기 시작된 주5일 근무제의 영향이다.

2004년 조사결과를 보면 교제활동에 52분, 대중매체 이용에 2시간 19분,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 활동에 24분, 취미 및 그 외의 여가생활에 59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했을 때, 미디어(대중매체) 이용에 사용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과 같은 여가활동방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여가시간 중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시간의 비중은 여전히 높다. 평일에는 2시간 5분, 토요일은 2시간 38분, 그리고 일요일에는 3시간 10분을 대중매체로 보내고 있다. 이는 전체 여가시간의 46~48%에 해당한다.

최셋별(이화여자대학교)

참고문헌

- 통계청. 2000. 『통계로 보는 한국의 모습』.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2006 문화산업백서』.

문화예술 향유실태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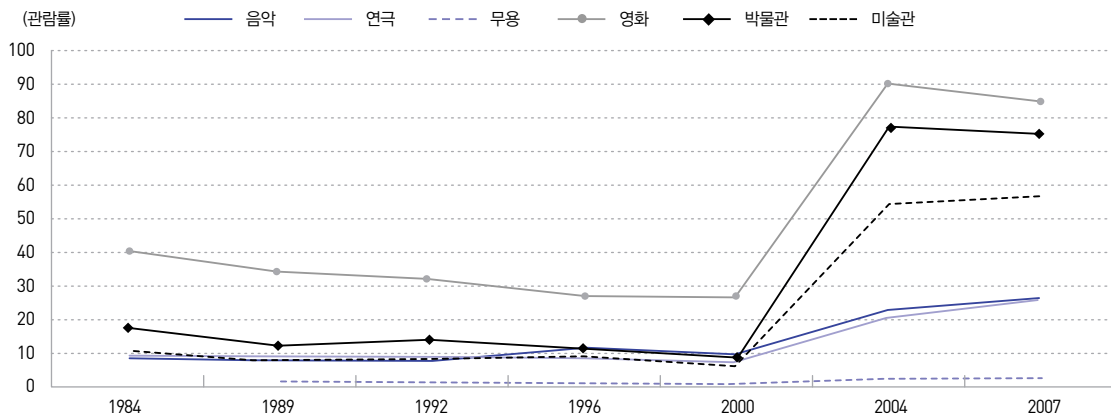
- 최근 20여 년간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감소하거나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문화예술의 관람은 직업군별로는 전문관리직 종사자와 학생, 성별로는 여성,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가 가장 두드러진 향유층이다.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최근 몇 년간 크게 달라졌다. ‘압축적 근대화’라는 용어가 잘 보여주고 있듯이,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은 경제제일주의를 바탕으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강도 높은 장시간의 노동이 당연시 되고, 근검절약이 미덕이었던 이 시기에 문화예술을 즐긴다는 것은 소수의 집단에게 부여되어 있는 특권이었으며, 일반인들에게는 단순한 사치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문화와 관련된 많은 영역들이 개발 확대되고 이에 따라 일반인들의 관심과 기대 역시 증가하리라고 기대되었다. 과연 그랬을까? 이 글에서는 문화예술 향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공연 및 전시 관람률을 문화체육관광부(구. 문화관광부)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시행한 ‘문화향수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예술 관람률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를 보면 ([그림 VI-5]), 지난 1년간 공연장이나 전시장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15세 이상 인구에 대한)이 1984년에서 2000년까지 정체 또는 다소 간의 하락 상태를 유지하다가 2004년에 모든 분야에서의 관람률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그림 VI-5]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관람률: 1984-2007



주: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라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실태가 실제로 급변한 것이 아니라 자료의 산출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년 또는 3년 간격으로 실시한 ‘문화향수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률 변화 및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조사는 표본조사로서 15세 이상 인구 중 2003년까지는 2,000명, 2006년에는 3,000명, 2008년에는 4,000명을 전국에서 표집하여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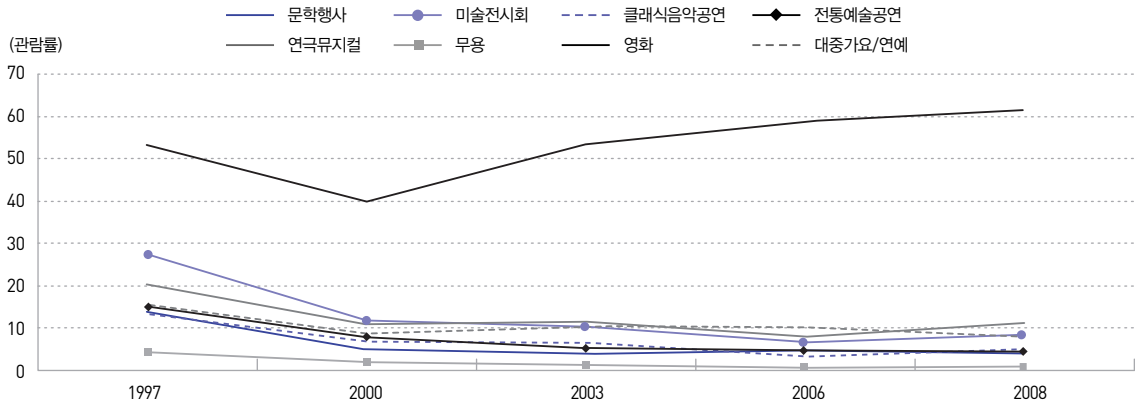
문화예술 관람 추이

1997년부터 2008년 사이 약 10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영화만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2000년에 큰 폭으로 하락한 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그림 VI-6]). 1997년과 2008년을 비교하면, 문화행사의 경우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참석해보았다는 15세 이상

응답자가 13.5%에서 4.0%로 감소하였다. 미술전시회는 27.3%에서 8.4%로, 클래식음악회 및 오페라 관람경험은 13.3%에서 4.9%로, 전통예술공연은 15.4%에서 4.4%로, 연극 및 뮤지컬 공연은 20.2%에서 11.0%로, 대중가요 및 연예 공연은 15.3%에서 8.2%로 각각 감소한 것이다. 영화관람률만 53.1%에서 61.5%로 증가하였다.

2000년 조사에 따르면 예술관람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40.7%가 시간부족을 들었고, 32%가 비용과다를 들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0). 흥미롭게도 이후에 걸림돌 요인의 순위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2006년 조사에서는 비용문제와 시간부족이 모두 30%로 동률을 이루더니 2008년 조사에서는 순위가 역전되어 비용문제가 35.1%로 1위, 시간부족이 29%로 2위를 차지하였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이로부터 추정하면, 주5일 근무의 확대로 여가 및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시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술관람을 위한 비용이 급증함으로

[그림 VI-6]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1997-2008



주: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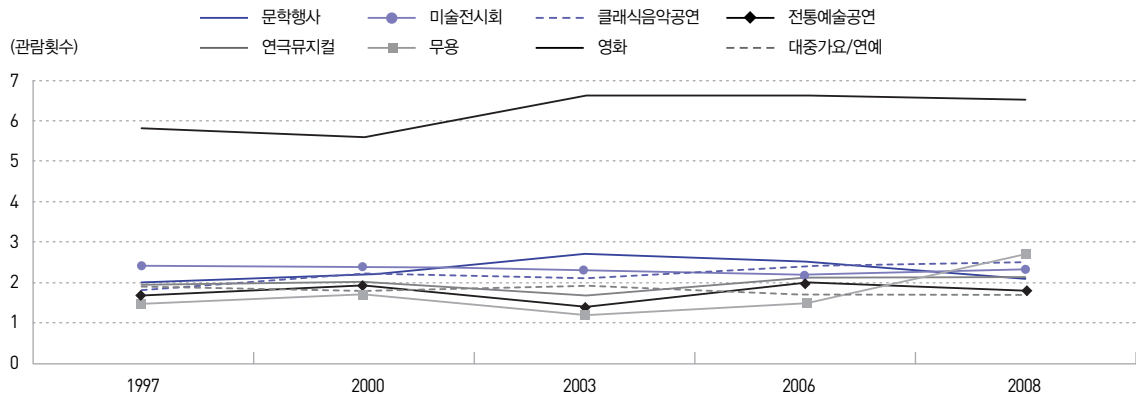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년도

써 외환위기 이후 하락한 문화예술 관람률이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클래식 음악 공연 관람료, 미술 전시회 입장료, 영화 관람료 등 모든 관람료가 지난 10여 년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예술행사를 관람한 사람들의 연평균 관람횟수를 보면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그림 VI-7).

1997년 이후 공연장이나 전시회에 가는 사람들의 수는 줄었지만, 계속 가는 사람들은 관람횟수를 줄이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클래식 음악의 경우 공연장에 가는 사람들은 줄고 있으나, 일단 가는 사람은 1997년에 비해 더 자주 가는 경향이 있으며, 영화관람은 관람률도 증가하고 1인당 평균 관람횟수도 증가하여 대중성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7] 문화예술행사 연평균 관람횟수: 1997-2008



주: 관람자만을 대상으로 한 평균 관람횟수임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년도

집단 간 문화예술 향유 차이

문화예술 향유가 일반화되지 않았을 시절에는 문화 예술은 대학생이나 대학교육을 받은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나, 경제자본을 갖춘 상류계층의 전유물로 생각되었다. 과연 이런 생각이 맞았을까?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변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성별집단 간 문화향유 차이

[그림 VI-8]은 2000년과 2008년의 성별, 문화예술종류별 관람률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2008년의 관람률이 2000년의 관람률보다 낮은 가운데, 2000년에는 남성의 관람률이 여성보다 높은 분야가 있는 반면, 2008년에는 모든 부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관람률을 보이고 있다. 2000년에 남성은 문학행사 참여율과 영화관람률에서 여성을 앞섰고, 미술전시회는 여성과 같은 관람률을 보였으나, 8년 후의 조사에서는 여성보다 앞선 예술관람 분야가 하

나도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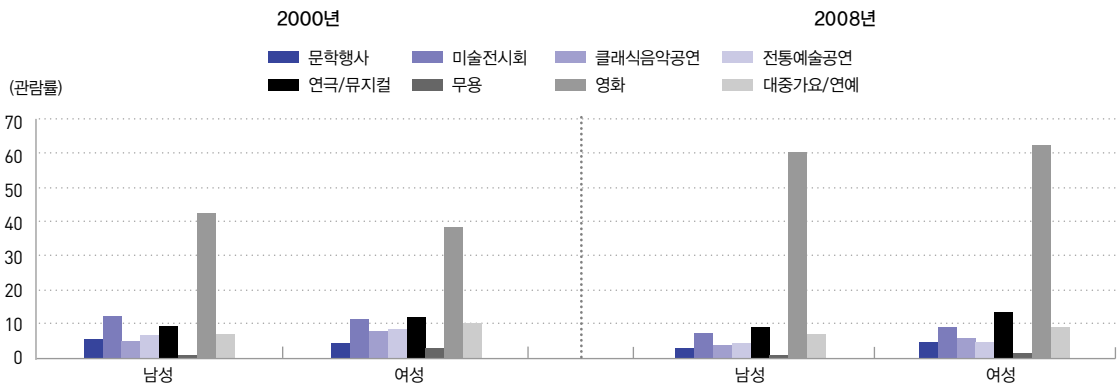
영화를 제외하고는 성별에 관계없이 2008년의 관람률이 2000년보다 낮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연극과 뮤지컬 관람이다. 이 기간 동안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는 여성관객은 11.9%에서 13.3%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 간 문화향유 차이

[그림 VI-9]에는 2000년과 2008년의 연령별, 문화예술종류별 관람률이 비교되어 있다. 성별 차이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2008년 수치는 2000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감소는 특히 10대와 20대에서 두드러진다. 영화만이 모든 연령대에서 큰 폭으로 관람률이 증가했다.

10대의 경우 이 기간 동안 관람률이 문학행사는 9.2%에서 4.4%, 미술전시회는 17.4%에서 10.9%, 클래식음악공연은 11.1%에서 4.7%, 전통예술공연은 9.2%에서 2.5%, 대중가요 및 연예 공연은 14.5%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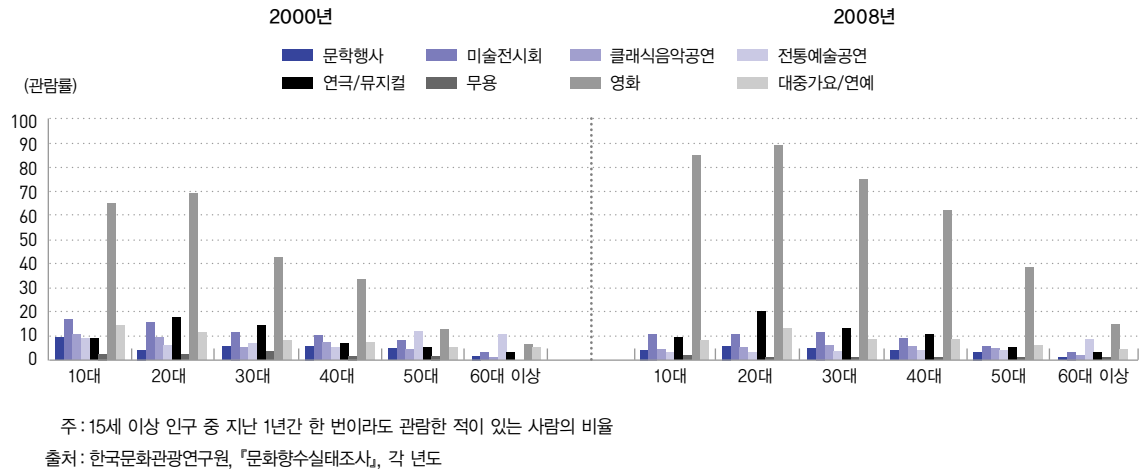
[그림 VI-8] 성별 문화예술종류별 관람률: 2000, 2008



주: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년도

[그림 VI-9] 연령별 문화예술종류별 관람률: 2000, 2008



서 8.1%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연극과 뮤지컬 공연 관람률은 미미하나마 소폭 증가했다.

20대는 문학행사(3.7%에서 5.8%)와 연극관람(17.7%에서 20.6%), 그리고 가요와 연예 공연(11.2%에서 13.3%)에서 관람률 증가를 기록했고, 영화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감소폭은 10대에 비해 작아서, 2008년에는 10대와의 관람률 격차를 줄이게 되었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2000년 대비 2008년의 감소폭은 좁아져서 결과적으로 2008년에는 2000년에 비해 연령에 따른 문화예술 향유 격차가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 클래식음악 공연 관람은 10대가 줄고 60세 이상이 0.6%에서 2.1%로 늘어난 결과 전 연령대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게 되었고, 연극과 뮤지컬 관객은 2008년에 10대 9.7%, 20대 20.6%, 30대 13.4%, 40대 10.2% 등 1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두터운 관객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전통예술은 젊은층의 관심이 현저히 줄어 노년 관객화되어가는 추세를 보였다.

영화관을 찾는 50대(12.8%에서 39%) 및 60세 이상 관객(6.5%에서 14.7%)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화관은 10대에서 30대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어서 연령 격차가 가장 커 보인다.

이러한 연령별 관람률 격차의 감소는 일차적으로 경제적 지지기반이 있는 중·장년층과 각종 관람에 우대를 받는 노년층의 증가와 이들의 문화예술 향유 성향의 증대로 설명될 수 있는 것 같다. 또한 젊은 세대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은 이들 세대의 여가 시간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정도 등을 고려해봤을 때, 문화예술 향유의 방식에 있어서 변화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분석을 해본다. 즉 젊은 세대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문화예술 관람을 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직접 공연장이나 전시장에서 관람하는 비율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10대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것은 공연 및 전시 관람이 교육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일 가능성도 크다.

직업집단 간 문화향유 차이

2000년 조사의 직업군별 관람률 차이를 보면(그림 VI-10), 전문 관리직군과 학생의 위상이 두드러진다. 전문 관리직은 문학행사(10.4%), 연극과 뮤지컬(22.9%)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관람률을 보였고, 미술전시회(19.4%)와 영화관람(57.6%)에서 두 번째로 높은 관람률을 나타냈다. 그 외의 분야에서도 평균 이상의 관람률을 보였다.

학생은 미술전시(20.2%), 클래식음악 공연(14.0%), 영화관람(72%), 대중가요와 연예 공연(13.4%)에서 다른 직업군을 압도했고, 연극과 뮤지컬 및 문학행사 등에서도 매우 높은 관람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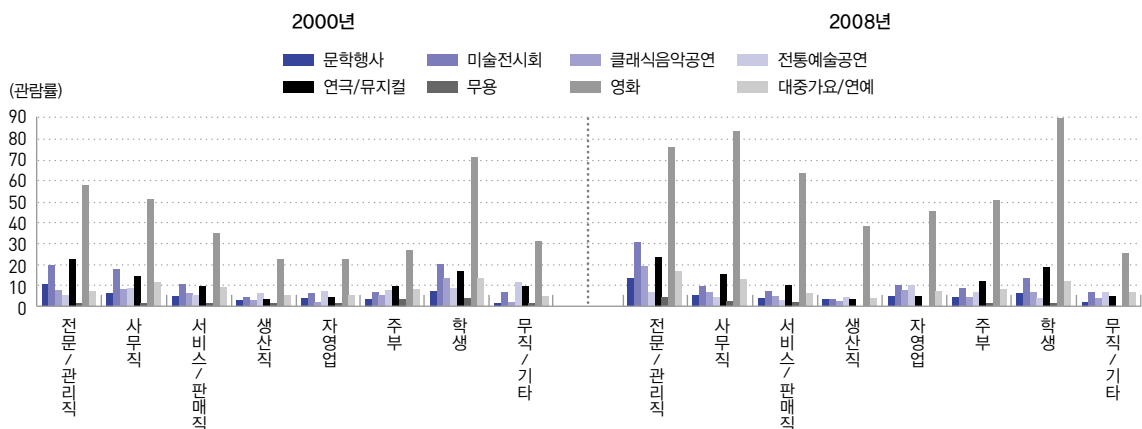
그 뒤를 사무직이 따랐는데, 이들은 문학행사에 6.5%, 미술전시회에 17.6%, 클래식음악 공연에 8.5%, 연극과 뮤지컬에 14.4%, 대중가요와 연예 공연에 11.1%가 가본 경험이 있는 등 전문 관리직군, 학생과 더불어 3대 문화향유그룹을 형성했다.

서비스 판매직군과 주부들이 관람률에 있어서 중간그룹을 형성했고, 생산직군과 자영업군이 하위그룹에 들어갔다.

2000년과 비교했을 때 2008년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전문 관리직의 약진이다(그림 VI-10). 이들은 전통예술공연 관람률에서 6.4%로 2위, 영화관람률에서 75.8%로 3위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대중가요와 연예 공연(16.1%)을 비롯한 모든 범주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관람률을 드러냈다(문학행사 12.9%, 미술전시회 29.8%, 클래식음악회 18.5%, 연극과 뮤지컬 22.6%, 무용 3.2%). 더구나 다른 직업군들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2000년에 비해 하락한 반면, 전문 관리직은 대부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각 직업군별 관람률 순위는 2008년에도 2000년의 양상을 유지했으나, 영화 이외의 각 문화예술 분야별 관람률은 전문 관리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단, 주부들의 관람률이 문학행사, 미술전시, 연극과 뮤지컬에서 소폭 상승한 것이

[그림 VI-10] 직업군별 문화예술종류별 관람률: 2000, 2008



주: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년도

의미 있는 변화였다. 학생들은 여전히 전문 관리직 다음으로 중요한 문화예술 향유집단으로 남아 있고, 그 뒤를 사무직이 따른다. 생산직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영화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하락했고, 하락폭도 큰 편이었다.

2000년과 2008년을 비교한 결과, 특히 전문 관리직을 생산직과 무직 및 기타와 비교해보면, 2008년에는 2000년에 비해 예술향유에 있어 직업군에 따른 양극화가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미술전시회, 클래식 음악회, 무용공연, 문학 행사 등 소위 고급예술 분야에서 전문 관리직의 관람률은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연극과 뮤지컬, 영화, 대중가요와 연예 공연 등 대중예술 분야의 관람률도 매우 높았으며, 다른 집단과의 차이는 2000년에 비해 훨씬 커졌다. 한국사회에서도 경제자본을 보유한 층이 문화자

본을 축적, 강화함으로써 본격적인 ‘구별짓기’를 하는 징조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된다.

문화영역에 있어서의 시민권을 의미하는 이른바 ‘문화권(文化權)’이라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을 즐긴다는 것이 얼마나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준다. 문화예술 관람에 있어서 최근 연령에 따른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직업집단에 따른 비교는 특정 집단의 문화예술 향유 정도가 훨씬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의 문화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문화향유로부터의 소외를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문화향유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최선헌(이화여자대학교)

관광산업의 성장과 입출국 여행객수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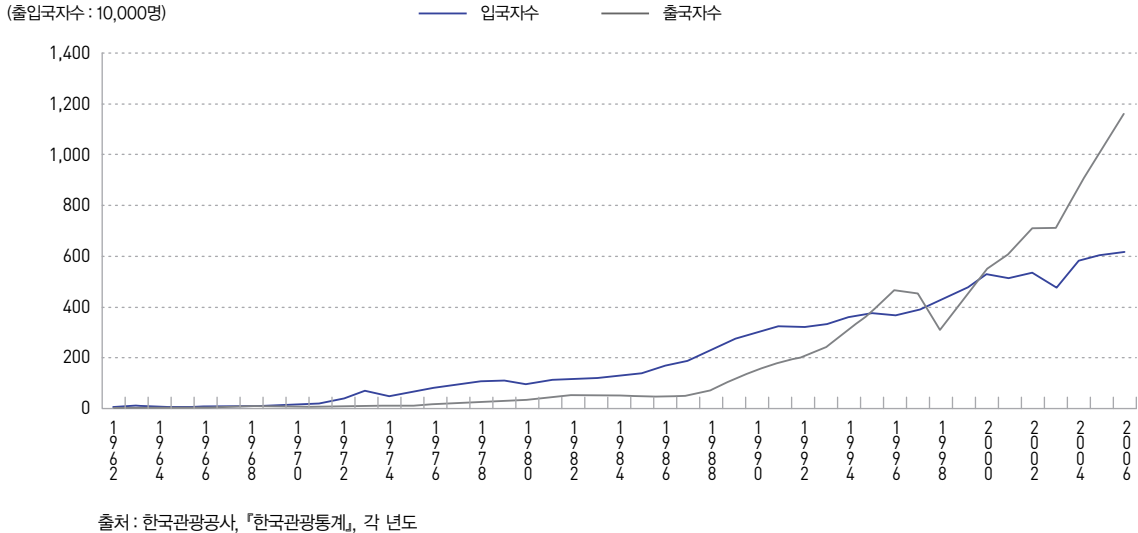
요 약

- 외국인의 한국 방문은 국가 주도의 관광산업 발전과 1986년 아시안게임 및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왔다.
- 내국인의 해외 및 국내 관광도 급격히 상승하여 외국인 방문자 수를 크게 앞지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관광수지는 1991년 부터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의 개통과 더불어 철도역사 인근에 숙박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1900년대 초부터 그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고, 정부차원의 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은 교통부 육운국에 관광과(1954년)가 설치되고 교통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중앙관광위원회(1958년)가 구성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무렵의 관광개발은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각종 시설을 복구·확장하기 위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관광이 근대적 대중여가로서 자리를 잡지는 못하였다(이광진, 1987). 관광이 대중여가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61년 '관광사업진흥법'이 제정되었고, 1967년에는 '공원법' 공포와 함께 지리산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68년에는 교통부에서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을 발표하는 등 여가 및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법적, 정책적 조치들이 마련되었다(교통부, 1968).

관광이 중요한 대중의 여가로 자리잡는데 있어서 일대 전기를 이룬 것은 1975년에 국가가 관광사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한 후부터이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단지개발촉진을 위한 다양한 투자와 정책지원이 이루어졌으며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업적 관광개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그림 VI-11] 출입국자수 : 1962~2006



다. 1984년 9월부터 충무경남관광단지 개발이, 1988년부터는 남원관광단지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1982년 12월 31일자로 콘도미니엄이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종으로 신설되면서 이에 대한 대규모 상업투자가 이루어졌다(배양호, 1991).

이 글에서는 최근 관광산업의 발전을 주도해온 한국관광공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추이와 내국인의 국내 및 해외관광 추세를 살펴보고 한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국가 주도로, 특히 아시안 게임(1986년)과 올림픽(1988년)을 치루면서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이 시기까지 외국인 관광객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외국인 관광객수는 1962년에 15,184명에 불과하였으나, 1972년 370,656명으로 10년간

24배가 증가하였으며 1978년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게 되었다. 이후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외래방문객의 증가세는 상당히 완화되어 1986년 이후로 매년 두 자리수의 성장을 지속해오던 것이 1990년에는 전년도 대비 8.5%의 성장에 그쳤으며, 2006년에는 2.2%의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600만을 넘어섰다([그림 VI-11]).

내국인의 국내관광과 해외관광 추세

주 5일제 근무가 일반화되고 교통 및 숙박, 레저 시설 등이 확충됨에 따라 내국인의 국내관광도 크게 성장하였다. 국내관광을 숙박관광과 당일관광으로 나누어 그 총량을 살펴보면 1995년에 숙박관광 총량이 124,519일, 당일관광 총량이 177,328일로 전체 관광 총량이 301,847일이었다. 그 후 경제위기 기간 동안

〈표 VI-4〉 숙박 및 당일 관광 총 일수: 1995-2006

	숙박관광	당일관광	합 계
1995년	124,519	177,328	301,847
1996년	135,405	191,904	327,309
1997년	139,900	204,276	344,176
1999년	138,102	134,505	272,607
2001년	156,639	171,289	327,928
2004년	234,127	124,816	358,943
2005년	240,187	148,650	388,837
2006년	249,794	160,864	410,658

출처: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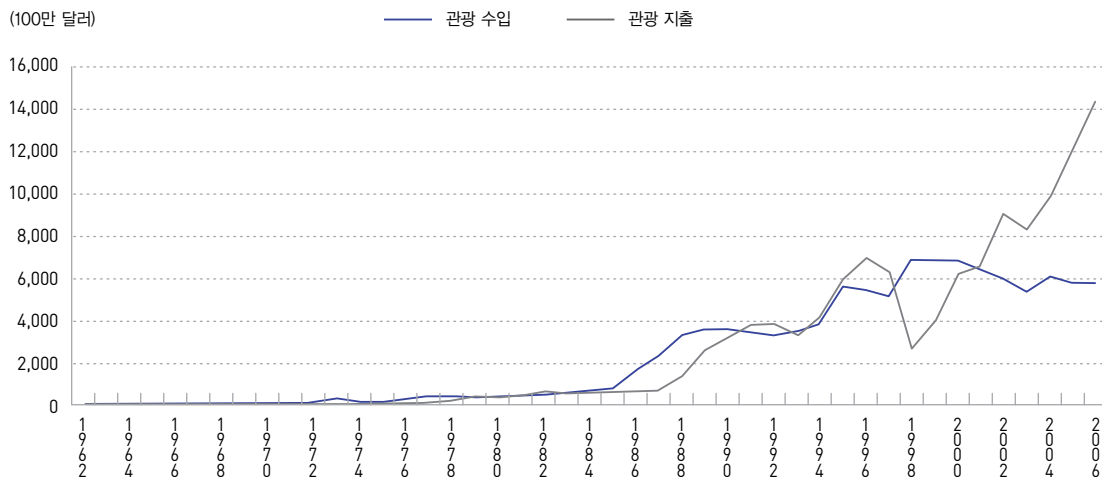
다소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전체 관광 총량이 410,658일로 증가하였다. 특히 1995년과 비교하여 숙박관광 총량이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당일관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표 VI-4〉).

1980년 1월 1일에 시작되어 1989년 1월 1일부로 전

면 자유화된 해외여행 단계적 자유화 조치로 내국인의 해외여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1962년 내국인의 해외출국은 10,242명에 불과하였으나 20년 후인 1982년에는 약 5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1989년에는 그 숫자가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1996년에는 400만 명을 넘어섰다. 해외여행객의 증가추세는 1997년 경제위기로 잠시 주춤했으나 1999년에 다시 경제위기 이전 수준인 434만 명으로 회복되었으며, 2000년에 500만, 2001년에 600만, 2002년에 700만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여행객 1,000만 시대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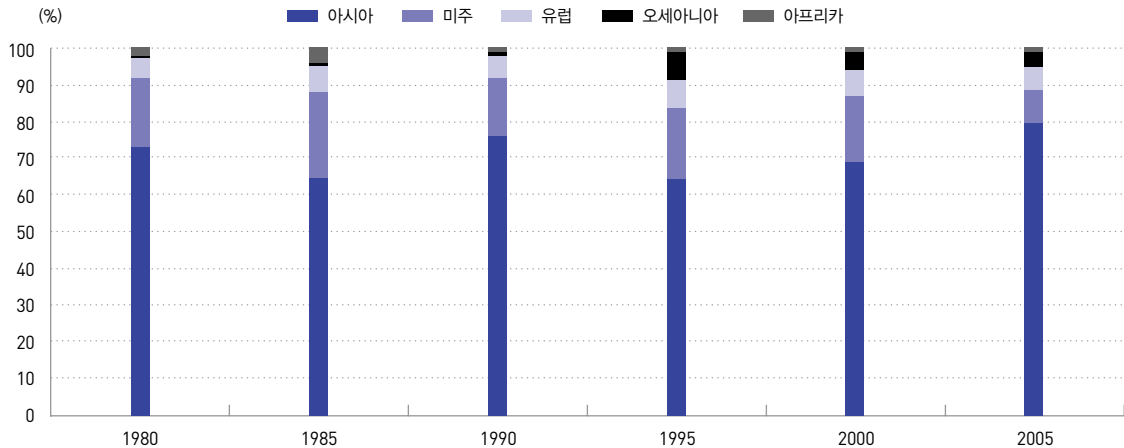
해외여행객의 급격한 증가는 외래입국자수의 증가를 능가하여 1995년에는 해외여행자수가 외래입국자수를 웃돌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 경제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그 격차가 점차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출국자가 1,160만 명으로 입국자 615만 명의 약 2배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광수지면에서 1990년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던 것이 1991년에는 3억

[그림 VI-12] 관광 수입과 지출: 1962-2006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각 년도

[그림 VI-13] 해외여행 목적지 분포: 1980-2005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각 년도

5,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였고, 2006년에는 무려 85억 7,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그림 VI-12).

1989년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는 해외여행객수의 증가와 함께 여행목적지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

이 점차로 줄어들고 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등 여행목적지에서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1992년 8월 중국과의 수교 이후 중국방문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해외여행객의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었다(그림 VI-13). 2002년 중국방문객은 172만 명으로 전년 대비 32.7% 증가하여 전체 출국자수의 24.2%를 차지했으며, 2001년 처음으로 중국이

〈표 VI-5〉 내국인 해외여행객의 여행지 순위: 1997-2005

	중국	일본	태국	미국	홍콩
1997년	3	1	4	2	5
1998년	2	1	4	3	5
1999년	2	1	4	3	5
2000년	2	1	4	3	5
2001년	1	2	4	3	5
2002년	1	2	4	3	-
2003년	1	2	4	3	-
2004년	1	2	3	4	-
2005년	1	2	4	3	-
2006년	1	2	3	4	5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2007

〈표 VI-6〉 국적별 외국인 입국자 수와 순위: 2006

국적	입국자수(명)	순위
일본	2,338,921	1
중국	896,969	2
미국	555,704	3
대만	338,162	4
필리핀	248,262	5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2007

일본을 제치고 한국인이 제일 선호하는 해외여행 목적지가 된 이후로 계속해서 1위를 고수하고 있다(〈표 VI-5〉).

한편 2006년 입국한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일

본인 방문자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국, 미국, 대만, 필리핀 순이다(〈표 VI-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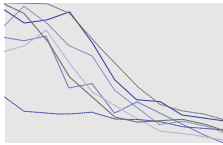
최석호(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참고문헌

- 교통부. 1968. 『한국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대책』.
- 배양호. 1991. “한국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진. 1987. “한국 관광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석호. 2006. 『한국사회와 한국여가』. 한국학술정보.
- 한국관광공사. 각 년도. 『한국관광통계』.

한국의 사회동향 2008

Korean Social Trends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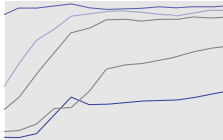


Population

Household & Family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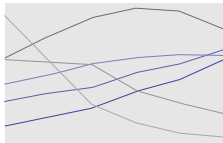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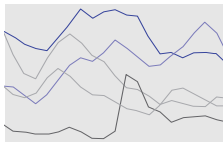
Housing & Transportation



Health

Welfare

Environment



Social Security

Social Cohesion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 최진호 164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 김재익 175

대도시권 통근·통학의 광역화 • 최진호 182

VII. 주거와 교통

Housing & Transportation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이 글은 한국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전반적인 주거와 교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주거 부문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한국에서 주택공급이 얼마나 이루어졌나를 살피고 주택보급률의 변화를 추적한다. 다음으로는 한국인의 주거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주택의 유형과 점유형태의 변화를 분석한다. 또 한국 사회의 현실인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 동안 주택가격이 얼마나 급등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실제로 내 집을 갖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추정한다.

교통부문에서는 한국에서 과거 25년간 자가용 승용차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보급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가구당 교통비 지출 패턴이 어떻게 변하고 또 통근·통학에서 차지하는 승용차의 비중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통계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한국인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교통문제는 무엇인지도 알아본다.

주택의 수급

주택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으로서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주택은 다른 일반 재화와는 달라서 고가성, 비이동성, 영구성 및 건설기간의 장기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지난 수십 년간 한국사회는 서울 등 대도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은 주택가격의 폭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내 집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재산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져가고 있으며, 또 내 집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지역에 따라서 혹은 같은 서울이라도 강남과 그 이외 지역 간의 주택 가격차가 너무 심해 전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그냥 좌시

하기에는 너무 위험할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 그동안 한국의 주택 수급상황은 어떻게 변해 왔는가? <표 VII-1>은 한국의 주택 사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1970년부터 최근까지의 주택보급률을 제시해 놓았다. 주택보급률은 주택의 수와 주택의 수요자인 가구를 비교하여 주택재고의 부족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로서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이 때 주택의 수는 거처의 단위가 아닌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도록 설계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 1채로 취급된다. 또 가구는 혈연가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일반가구에서 단독가구와 5인 이하의 비혈연가구는 제외된다.

<표 VII-1> 주택보급률 : 1970~2006

	가구수 (1,000가구)	주택수 (1,000호)	주택보급률 (%)
1970년	5,576	4,434	79.5
1975년	6,367	4,816	75.6
1980년	7,470	5,434	72.8
1985년	8,751	6,271	71.7
1990년	10,167	7,357	72.4
1995년	11,133	9,570	86.0
2000년	11,928	11,472	96.2
2005년	12,491	13,223	105.9
2006년	12,634	13,534	107.1

출처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각 년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던 이와 같은 주택보급률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최근에는 그동안의 주택과 가구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새롭게 정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유형이 출현하고 있어 현재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한 단독주택 중심의

주택 개념에서 탈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구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단독가구와 비혈연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다양한 가구의 주택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가구개념의 확대가 요청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전통적으로 쓰여 왔던 주택보급률의 정의에 따른 주택의 수급상황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1970년의 한국 전체의 주택보급률은 79.5%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해 1985년에는 71.7%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1990년부터는 다시 주택보급률이 상승해 2000년에는 96.2%에 이르렀고 최근 2006년에는 107.1%를 기록해 지수 상으로는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아졌다. 이처럼 특히 1990년 이후에 주택보급률이 상승한 것은 1988~1992년에 시행된 주택 200만 호 공급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주택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며, 그 이후 1997년까지도 주택 공급은 꾸준히 이루어져 매년 60~70만 호의 주택이 신규로 건설되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주택보급률 계산에는 요즈음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가 제외되어 있고 또 지역별로도 주택보급률은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의 주택사정은 많이 나아졌는데 이는 <표 V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 공급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표는 198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간격으로 해당년도의 주택 공급 실적을 정리한 것이다.

<표 VII-2>에서 보면 1980년에는 한 해 동안 약 21

〈표 VII-2〉 연간 주택 건설실적: 1980~2006

	공 공 (1,000호)	민 간 (1,000호)	합 계 (1,000호)	주택투자율 (%)
1980년	106	105	212	5.5
1985년	132	95	227	4.6
1990년	269	481	750	8.8
1995년	228	391	619	7.4
2000년	140	293	433	4.3
2005년	141	323	464	5.1
2006년	144	326	470	4.7

출처: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각 년도

만 호의 주택이 건설되었는데 공공과 민간 부문의 주택 건설 실적이 거의 비슷하였다. 실질 GDP에 대한 주택 투자액의 비율인 주택투자율은 1980년에 5.5%였다.

이와 같은 주택 건설 실적은 1987년까지는 연간 대체로 22만 호에서 28만 호 사이에 머물렀으나 1988년에 41만 호로 대폭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75만 호를 기록하게 된다. 한국에서 주택공급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1990년대 전반기로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5년 동안에 총 326만 호의 주택이 신규로 공급되었는데 이는 연 평균 65만 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주택투자율도 평균 8%대에 이르러 역대 가장 높은 투자율을 기록하였다.

1990년대 전반기에 이처럼 주택공급이 대폭 증가하게 된 것은 1988년의 올림픽 이후 특히 수도권 주택가격이 급상승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린 것에 기인한다. 서울 주변에 분당, 일산, 평촌 등 5개의 신도시를 동시에 건설한 것도 이 시기였다. 한편 주택공급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역할은 1989년 이전까지는 대체로 공공부

문에서 민간보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였으나, 1989년 이후부터는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훨씬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전반기의 이와 같은 활발한 주택 건설은 1990년대 후반기 이후 다소 주춤해 1990년대 후반기에는 연 평균 50만 호, 그리고 2000년대 전반기에는 54만 호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최근 2005년에는 46만 호를 건설하였다. 2005년 이후 최근의 주택 건설 동향은 1년에 약 47만 호 정도가 신규로 공급되고 있는데 이중 공공부문에서 14만 호가,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33만 호 정도가 건설되며, 주택투자율은 4.5%에서 5.0% 사이에 머물러 있다.

주거생활의 변화: 주택의 유형과 점유형태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주택 형태는 많은 변화를 보였다. 1970년의 경우 한국의 주택은 거의 대부분이 단독주택으로서 전체 가구의 95%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당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의 0.7%에 불과했다. 그 이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아파트 거주 가구는 거꾸로 그 비율이 증가해 2005년에는 전체 가구의 45.1%가 단독주택에, 42.3%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그 동안 도시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이 매우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아파트 거주 가구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파트 거주 가구비율이 급속하게 늘어난 시기는 1980년대 이후로써 특히 1990년대 전반기에는 아파트 거주 가구비율이 1990년의 14.8%에서 1995년의 26.9%로 12.1%p가 증가해 빠른 증가를 기록하였다.

아파트 거주 가구비율의 증가폭은 1990년대 후반기에는 9.9%p, 2000년대 전반기에는 5.5%p를 나타내 점차 그 증가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다.

주택 유형별 가구 분포를 동부와 읍, 면부로 나누어서 보면, 보통 우리가 도시라고 부르는 동부의 경우, 2000년까지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아파트 거주 가구보다 많았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아파트 거주 가구의 비율이 46.8%로 단독주택 거주 가구비율 39.3%를 상회해 이제 도시 지역에서는 아파트가 주된 주택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인 읍, 면부에서는 아직도 단독주택 거주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아 68.4%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아파트 거주 가구는 24.3%에 머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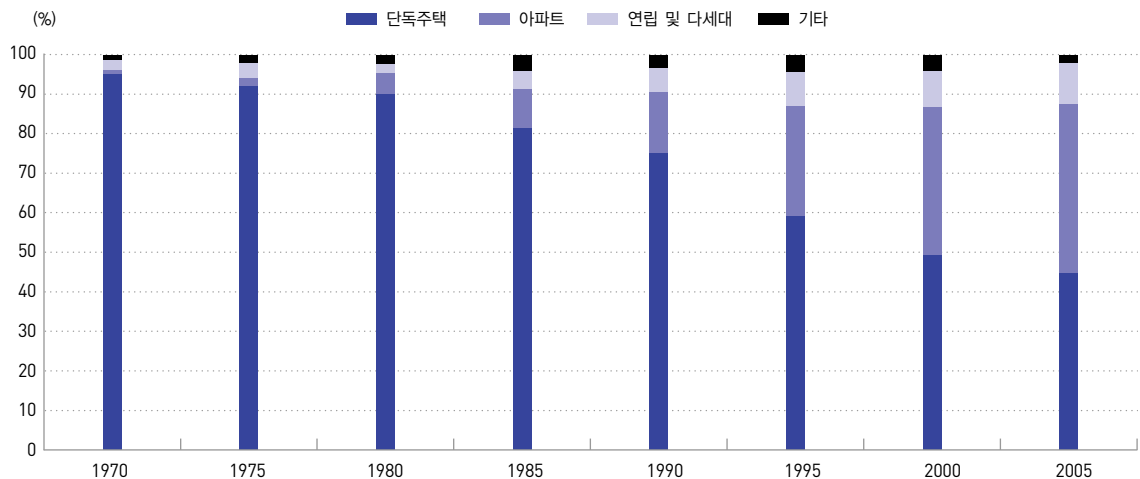
이처럼 우리 국민의 주거 형태가 과거의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에서 아파트 등의 복합주택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서 국민들의 일상생활도 많은 변모를 가져왔다. 즉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정적적이고 친밀한 관계였으나 이제는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이웃관계의 단절을 도시민들은 경험하고 있다. 또 가족형태도 주거 형태가 아파트 위주로 되면서 3세대 확대가족이 함께 거주하기가 불편해져 자연스럽게 직계가족 중심의 핵가족이 지배적인 가족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면 그동안 한국사회의 주택의 점유 형태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주택의 점유형태는 거주하는 가구가 내 집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 준다. 즉 이 지표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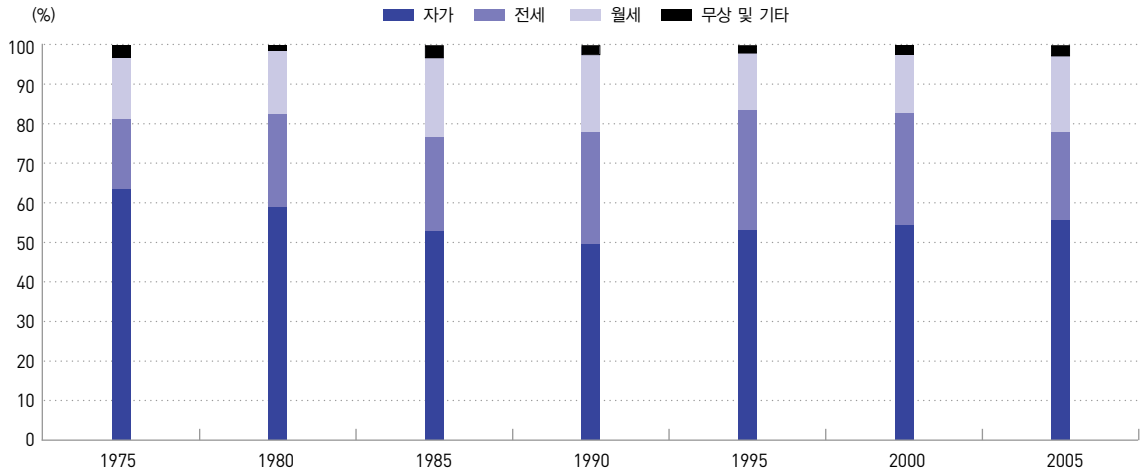
우선 [그림 VII-2]에서 보면 자기 집에서 사는 가구의 비율은 1975년에는 63.6%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비율이 감소해 1980년에는 58.6%, 그리고 1990년에는 49.9%까지 감소해 그 당시에는 우리 국민들의 절반만이 자기 집에서 거주하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사람의 주택에 세를 들어서 살고 있었다.

[그림 VII-1] 주택 유형별 가구 분포: 1970~2005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그림 VII-2] 주택의 점유형태: 1975~2005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27.8%는 전세의 형태로, 그리고 19.1%는 월세로 남의 집에서 거주하였다. 이처럼 자가 거주비율이 계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1990년까지는 전국적으로 가구가 증가하는 것만큼 주택건설이 뒤따라 주지 못했고, 또 이 시기에는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도시지역에서의 만성적인 주택 부족으로 자연히 임차주택에 사는 가구의 비율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자가주택 거주가구의 비율은 1990년부터는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주거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자가의 비율은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49.9%에서 53.3%로 3.4%p가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기간이 우리나라에서 주택건설이 가장 활발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최근 2005년에는 자가의 비율이 55.6%까지 증가하였으나 이를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도시에서는 자가의 비율이 51.6%로서 농촌의 71.7%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아직도 도시 지역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절반가량만이 자기 집에서 거주하고 나머지 반은 셋집에서 살고 있다. 이처럼 낮은 자가 거주비율은 해마다 상승하는 임차료와 이로 인한 잦은 주거 이동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시급한 개선책이 요청된다.

한편 주택 임차의 형태는 전국적으로는 전세가 월세보다 많았으나 최근에는 전세의 형태가 많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월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05년의 경우 농촌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의 어려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만성적인 주택 재고의 부족으로 몇 차례에 걸쳐 주택 가격이 급등했고, 이로 인해 주택 보유는 손쉬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인식

되어 누구를 막론하고 내 집을 소유하려는 강한 욕구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주택 가격은 일반인들의 소득 수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져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다.

그러면 그 동안 한국의 주택 가격은 얼마나 상승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 VII-3]에서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 매매지수를 주택의 형태별로 정리하였다. 이 때 그림에서 각각의 지수 값은 2003년 9월 시점을 100.0으로 하여 계산한 것이다. 우선 그림에서 2007년 현재의 가격 지수를 보면 아파트가 123.4로 가장 많이 가격이 상승하였고 그 다음은 연립주택으로 115.2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단독 주택은 지수 값이 103.8로 2003년에 비해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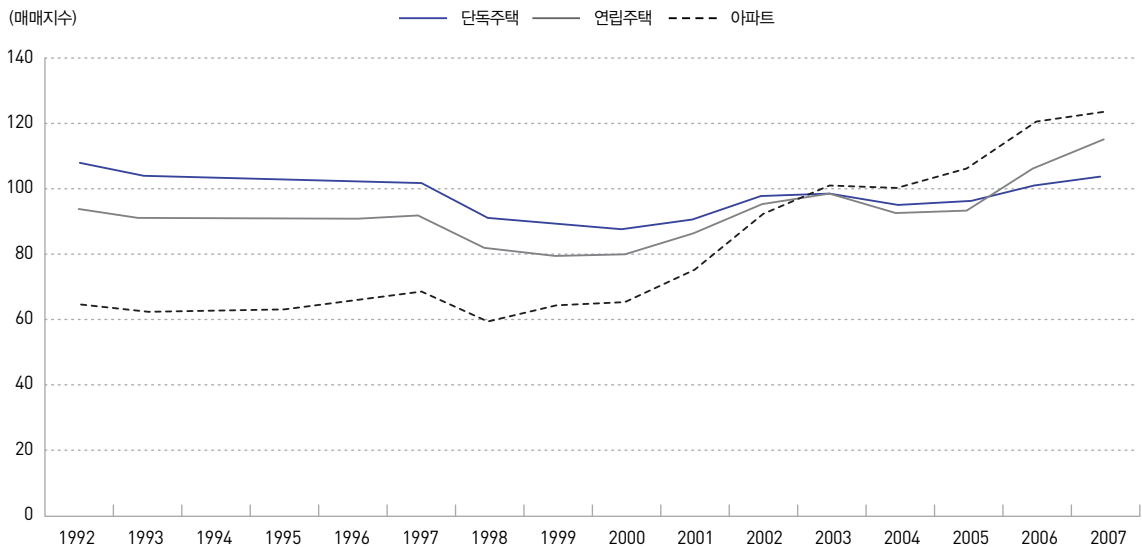
그런데 그림에서 보는 것은 전국 도시의 평균 지수

값으로서 개별 도시별로 보면, 예컨대 서울의 경우는 아파트가 140.1, 연립이 120.4, 그리고 단독주택이 123.6으로 전국의 도시 평균보다 더 가파르게 주택 가격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나타나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지수는 137.0으로 서울 다음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음을 보여준다.

다른 6개의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의 아파트 매매지수가 125.4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119.6으로 그 다음을 잇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부산에서는 97.1로 오히려 2003년보다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2년부터 2007년까지 16년간의 매매지수의 변화를 보면 1993년 이후 아파트 매매지수는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의 68.8을 정점

[그림 VII-3] 도시지역 주택유형별 매매가격 지수: 1992-2007



주: 1) 2003년 9월 시점을 100으로 하여 산출한 지수임.

2) 매년도 12월 기준

출처: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년도

〈표 VII-3〉 최초 주택마련 시기 및 평균 소요년수와 평균 이사횟수: 1987-2004

	최초 주택마련 시기(%)							주택마련 평균 소요년수	평균 이사횟수
	결혼 전	결혼 후	5년 이내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1987년	19.9	80.1	42.9	20.8	19.8	8.4	8.1	8.4	-
1992년	16.8	83.2	39.1	19.6	21.8	8.9	10.6	9.1	3.4
1997년	14.4	85.6	31.8	20.4	22.2	10.5	15.1	10.9	3.6
2001년	15.8	84.2	27.1	27.2	20.4	10.4	14.8	10.8	5.0
2004년	14.2	85.8	29.7	26.5	20.5	9.8	13.4	10.1	4.7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으로 1998년에는 59.5로 급락하였다. 그 이후 1999년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2001년에 가서야 1997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그 후 2002년과 2006년 두 번에 걸쳐 매매지수가 급등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와 같은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추세 속에서 〈표 VII-3〉은 한국 사람들이 최초로 자기 집을 마련하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결혼 전에 자기 집을 마련하는 사람의 비율은 1987년에는 19.9%였는데, 2004년에는 14.2%로 감소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내 집을 갖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결혼 후에 자기 집을 갖게 되는 사람들의 주택 마련 시기를 보면 1997년까지는 결혼 후 5년 이내에 내 집을 마련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예컨대 1987년에는 42.9%가, 그리고 1992년과 1997년에는 각각 39.1%, 31.8%가 이 기간 동안에 내 집을 장만하였다. 그러나 2001년 이후부터는 결혼 후 5년 이내와 5~10년 사이에 내 집을 마련하는 비율이 거의 같아져 그만큼 내 집 마련 시기가 점점 더 늦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004년의 경우를 보면 결혼 후 5년 이내가 29.7%, 결혼 후 5년에서 10년 사이가 26.5%, 그리고 20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자기 집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13.4%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1987년에는 평균적으로 8.4년이었으나 1997년에는 10.9년으로 늘어났고 2004년에는 그 전보다 다소 줄어드는 하였지만 여전히 결혼 후 10년이 지나야 비로소 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처럼 내 집을 마련하게 될 때까지는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평균적으로 5번 정도 이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 한국사회에서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과 일상생활의 변화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은 전국 곳곳을 이어주는 도로망의 확충 및 정비와 더불어 국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5년간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 〈표 VII-4〉에서 보면 1980년에는 등록된 자가용 총 대수는 약 180,000대에 불과하여 1가구당 평균 0.02대의

〈표 VII-4〉 자가용 등록대수 및 가구당 자가용 대수:
1980~2005

	자가용 승용차 대수 (1,000대)	1가구당 대수	1대당 인구수
1980년	179	0.02	213.6
1985년	449	0.05	90.9
1990년	1,902	0.17	22.5
1995년	5,778	0.45	7.8
2000년	7,798	0.54	6.0
2005년	10,759	0.68	4.5

출처: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각 년도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었고 자가용 1대당 인구도 214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5년에 이르면 우리나라의 총 자가용 승용차는 천만 대를 넘어서 약 1,080만 대에 달하였다. 이는 1980년의 약 180,000대와 비교하면 60배가 증가한 수치로서 25년 동안에 엄청난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를 경험하였다. 1가구당 자가용 승용차 대수는 0.68대로 늘어났고 자가용 1대당 인구는 4.5명으로 줄어들었다. 2005년 센서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일반가구 중 자가용을 소유한 가구는 61.5%로 나타나

고 있다.

한국에서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이 가장 빠르게 진행된 시기는 1985~1990년으로 나타난다. 단순히 증가율만을 놓고 본다면 이 기간에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은 연평균 64.7%나 증가해 그전 1980~1985년 기간의 30%나, 그 이후 1990~1995년 기간의 40.8%에 비해 엄청난 증가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 추세는 그러나 1995년 이후에는 크게 완화된 1995~2000년 5년간에는 연 평균 7.0%, 그리고 최근 2000~2005년에는 7.6%에 머물렀다.

이와 같은 자가용 승용차의 획기적인 증가는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지출 중 교통비 지출의 양상도 많이 변화시켰다. 즉 〈표 V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이 미미한 1985년의 경우 우리나라 가구당 교통비 지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서 전체 지출의 4.6%에 불과하였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교통비 지출은 공공교통에 치중되어 있고 자가용에 대한 지출은 전체 교통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부터는 가구의 교통비 지출 중 자가용에 대한 지출 규모가 공공교통비를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가구의 교통비 지출 중 자가용에 대한 지출의

〈표 VII-5〉 가구당 월평균 교통비 지출: 1985~2005

	전체 교통비 지출		공공교통 지출		자가용 지출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1985년	14,553	4.6	13,131	4.1	1,422	0.4
1990년	45,499	6.6	20,880	3.0	24,619	3.6
1995년	116,245	9.2	36,987	2.9	79,257	6.3
2000년	184,397	11.3	49,940	3.1	134,457	8.2
2005년	228,460	10.9	58,200	2.8	170,260	8.1

출처: 통계청, 『가계조사연보』, 각 년도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 1995년에는 공공 교통비의 2.1배, 2000년에는 2.7배로 늘어났고 2005년에는 2.9배로 그 격차가 더 확대되어 왔다.

1985년에 가구당 월평균 교통비 지출액은 14,553원이었는데 2005년에는 월평균 228,460원으로 늘어났고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5년의 4.6%에서 2005년에는 10.9%로 증가해 전체 가구 지출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년 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교통비의 비중은 2005년에는 2000년에 비해 다소 감소된 경향을 보인다.

자가용 승용차의 대중화는 통근과 통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통근·통학자의 비율은 1990년에는 전체 12세 이상 인구의 50.3%였으나 2000년에는 63.1%로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다소 감소된 61.3%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12세 이상 인구의 60% 정도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떤 수단으로든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상당한 시간을 통근·통학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표 VII-6〉은 매일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통근·통학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면 1990년에는 통근·통학자의 48.7%가 매일 버스를 타고 통근·통학하고 있어 당시에는

버스가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이었다. 반면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8.3%에 불과하였고 전철이나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4.6%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95년이 되면 버스 이용자 비율은 34.8%로 대폭 줄고 거꾸로 승용차 이용 비율이 20.4%로 급증한다.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기간 동안에 승용차의 보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또 다른 이유로는 서울 등 대도시 주변 지역에 신도시 건설이 활발해져 대도시권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한편 2000년에는 통근·통학자들의 교통수단으로 버스의 비중은 28.6%로 줄어들고 승용차 이용은 27.5%로 늘어나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버스보다도 승용차가 통근·통학자들의 주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시작해 승용차의 비율은 32.3%로 늘어나고 버스는 22.8%로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통근·통학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변화를 보면 도보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은 대체로 26%에서 29% 정도의 범위에서 그리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들은 대부분이 통학하는 학생들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편차가 미미하다.

그러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근·통학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과거의 버스를 이용한 통

〈표 VII-6〉 통근·통학 교통수단: 1990-2005

(%)

	도보	승용차	버스	전철/지하철/기차	택시	자전거	기타	복합수단
1990년	26.6	8.3	48.7	4.6	0.9	2.8	2.1	5.9
1995년	27.9	20.4	34.8	4.7	0.8	1.8	5.5	4.2
2000년	26.1	27.5	28.6	6.5	0.8	1.3	4.4	4.8
2005년	29.3	32.3	22.8	7.3	0.5	1.2	3.5	3.1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근·통학의 흐름을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대도시에서의 지하철과 전철의 확충으로 기차까지를 포함한 통근·통학도 그리 크지는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분담률은 2005년에 7.3%에 그쳐 승용차나 버스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통문제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유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교통문제는 무엇인가? 이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하여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는 3~4년을 주기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2004년에 실시된 사회통계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교통문제는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의 38.2%가 주차시설의 부족을 꼽았고

31.6%는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횟수의 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교통 체증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도 12.1%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교통문제에 대한 인식은 도시와 농촌지역 간에 큰 차이를 보여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환경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즉 도시에서는 주차시설의 부족을 지적한 응답자가 41.9%로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지적한 28.8%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비해서 농촌에서는 거꾸로 46.7%가 대중교통의 불편을, 그리고 18.5%만이 주차문제를 지적하였다. 한편 교통체증은 도시에서 13.3%로 농촌의 5.1%보다 많이 언급되었고 반대로 교통안전 시설의 미비는 농촌에서 13.5%로 도시의 6.8%보다 더 많이 지적되었다.

1997년, 2001년, 그리고 2004년의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우리 국민들의 교통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시간이 지날수록 주차문제가 심각

〈표 VII-7〉 지역별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교통문제: 1997, 2001, 2004

							(%)
		대중교통 노선	주차시설 부족	교통체증	교통안전 시설 미비	교통법규 준수/기타	합 계
1997년	전국	32.9	30.5	20.1	8.2	8.3	100.0
	동부	27.5	35.3	22.9	7.0	7.2	100.0
	읍면부	54.9	10.9	8.7	13.0	12.6	100.0
2001년	전국	33.5	34.5	13.7	9.7	8.6	100.0
	동부	28.7	39.1	15.9	8.4	7.9	100.0
	읍면부	52.5	16.2	5.2	15.0	11.2	100.0
2004년	전국	31.6	38.2	12.1	7.8	10.3	100.0
	동부	28.8	41.9	13.3	6.8	9.2	100.0
	읍면부	46.7	18.5	5.1	13.5	16.1	100.0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해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장 심각한 교통 문제로 주차시설의 부족을 지적한 비율이 1997년에는 30.5%였으나 2001년에는 34.5%로, 그리고 최근 2004년에는 38.2%로 증가해 갈수록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주차문제의 심각성은 도시와 농촌에서 똑같이 찾아 볼 수 있는 데 이와 같은 결과는 급증하는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에 맞추어 주차시설이 확충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여 특히 도시지역에서의 주차시설의 확충이 시급히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주차시설의 미비 다음으로 두 번째로 심각하

다고 지적된 대중교통노선 및 운행횟수 부족의 문제는 도시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1997년과 비교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농촌에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그 비율이 감소해 이 문제의 심각성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교통체증 문제도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교통시설의 확충과 개선으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교통체증의 문제는 많이 완화된 것으로 드러난다.

최진호(아주대학교)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요 약

- 우리나라의 주거생활 수준은 물리적 시설측면이나 심리적 만족도의 측면 모두 꾸준히 그리고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좁고 낡은 집, 불편한 교통에 대하여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 주거혼잡수준은 국제적 기준을 상회하여 혼잡상태는 벗어났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 자가소유율은 전국 평균 64.4%에 이르렀으나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은 50%대에 머물러 있다.

한 국가의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지표로써 주택이 얼마나 풍부한가를 나타내는 가용성 지표(availability indicators), 주택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또 어떤 시설이 갖춰졌는가를 나타내는 주거조건지표(condition indicators), 주거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주거비용지표(cost indicators) 등이 사용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거 측면에서의 삶의 질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또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반영하는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을 위와 같은 선진국들의 주거지표만으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관심을 두고, 주택은 소홀히 한 결과 소득수준에 걸맞는 주거수준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득과 주거수준의 괴리는 투기수요와 주택소유의 편중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특수성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주거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는 지표들이 채택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주거수준을 정량적 지표(quantitative indicators)와 정성적 지표(qualitative indicators)로 측정한다. 정량적 지표는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상수도 등과 같은 물리적 주거시설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가와 국제적 주거조건지표인 주거혼잡수준으로 측정된다. 정성적 지표는 국제적 가용성 지표인 자가소유율과 주거생활의 심리적 만족도를 반영하는 주택 및 주거지역 만족도로 측정된다.

이러한 지표들은 우리나라의 주거수준을 충분히 반영하므로 이 지표들을 종합하면 주거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시설의 비약적 개선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구비 여부와 수준은 삶

의 질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주거시설 수준을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상수도시설 등 네 가지 주요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각 시설의 수준은 부엌은 입식부엌 여부, 화장실은 수세식화장실 여부, 목욕시설은 온수목욕시설 여부, 그리고 상수도는 유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표 VII-8>에는 주거시설별로 전국, 동부, 읍부, 면부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그 비율을 계산한 결과이다.

먼저 부엌은 1980년도에는 전국의 가구 중 입식부엌을 갖춘 가구의 비율이 면부에서는 2.5%, 전국적으로는 18.2%에 불과했으나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면부 94.2%, 전국 97.9%에 이르렀다. 입식부엌은 면부와 읍부 등 농어촌지역

<표 VII-8> 지역별 가구의 주거시설 비율의 변화: 1980-2005

		(%)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입식부엌	전 국	18.2	34.6	52.4	84.1	94.3	97.9
	동 부	34.8	55.0	60.7	87.1	95.2	98.5
	읍 부	7.6	19.3	41.1	79.8	92.3	97.1
	면 부	2.5	5.8	22.1	70.9	87.5	94.2
수세식 화장실	전 국	18.4	33.1	51.3	75.1	87.0	94.0
	동 부	37.0	54.4	64.0	84.2	93.0	97.5
	읍 부	5.5	15.2	26.9	57.1	76.3	88.3
	면 부	1.3	3.9	8.0	36.8	58.2	74.0
온수목욕 시설	전 국	10.0	20.0	34.1	74.8	87.4	95.8
	동 부	20.0	32.8	40.9	79.0	90.2	97.2
	읍 부	3.2	9.5	23.0	66.2	82.6	93.5
	면 부	0.7	2.3	10.1	57.7	74.1	88.0
상수도 시설	전 국	51.2	-	76.6	-	87.0	89.3
	동 부	83.1	-	93.1	-	97.9	98.3
	읍 부	41.7	-	60.1	-	76.7	78.8
	면 부	17.9	-	13.3	-	33.2	33.9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연도

에서 지극히 낮았으나 1995년에 이르러 70%대를 넘어섰고, 2005년에는 전국의 거의 모든 가구가 입식 부엌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입식부엌은 주거수준의 판단기준이라기 보다는 주거시설로써 당연히 갖추어져야 할 시설로 간주되고 있다.

수세식 화장실도 입식부엌의 경우처럼 1980년도에 전국 평균 18.4%, 면부 1.3% 등 지극히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여 2005년에 전국적으로 94%에 이르는 등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인 면부에서는 수세식 화장실 비율이 2005년도에도 여전히 74.0%에 그쳐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온수목욕시설도 입식부엌과 수세식화장실의 개선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세 지표 모두 199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개선되었는데 이 기간 중 국가적 차원의 주택 2백만 호 건설 등에 의한 대규모 아파트 공급 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파트는 입식부엌, 수세식화장실, 온수목욕시설, 상수도 시설을 모두 갖추고 공급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수도 시설이 2005년도에 이르러서도 아파트의 비중이 낮은 반면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은 면부에서 보급률이 33.9%에 불과한 점과 연관해서 볼 수 있다. 면부의 낮은 상수

도시설 보급률은 도시지역과는 달리 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도농간의 격차, 환경오염의 심화 등의 문제를 감안하면 농어촌 지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상수도 보급을 추진해야 할 시기로 판단된다.

국제기준을 충족한 주거혼잡 수준

주거혼잡 수준은 통상적으로 하나의 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가를 나타내는 방당 인원수로 측정된다. 미국과 호주 등을 비롯한 국제적 혼잡의 기준은 방당 1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방이란 침실을 비롯하여 거실, 부엌이 포함되지만, 화장실, 임시간막이 방 등은 제외된다.

우리나라의 방당 인원수는 <표 VII-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도에는 전국 평균 2.32명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였으나 2000년을 기점으로 전국 평균이 국제적 기준인 1.0이하로 낮아져 혼잡수준을 벗어났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이보다 앞선 1995년에 이미 방당 인원수 1명 이하를 기록하였다. 그 이후 2005년도에는 전국 평균 0.76명으로 더욱 낮아졌다. 이는 프

〈표 VII-9〉 주택형태별 방당 인원수의 변화 : 1970-2005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단독주택	2.30	2.24	2.14	1.95	1.62	1.15	0.91	0.68
아파트	2.55	1.94	1.48	1.31	1.06	0.96	0.92	0.83
연립/다세대 주택	2.78	2.74	2.00	1.73	1.30	1.03	0.93	0.82
기타	2.60	2.52	2.31	2.21	1.77	1.30	1.01	0.73
주택 이외의 거쳐	-	-	2.56	2.27	1.92	1.44	1.14	-
전국 평균	2.32	2.25	2.10	1.87	1.48	1.08	0.92	0.76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랑스 0.7명(1990년), 일본 0.8명(1978년), 스위스 0.6명, 영국 0.5명(1996년), 미국 0.5명(1997년), 뉴질랜드 0.88명(2001년)에 비해서는 낮지만, 이라크 1.5명(1987년), 파키스탄 3.0명(1998년) 등의 개발도상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방당 인원수의 변화 추세는 전통적 농촌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진행된 핵가족화와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1인 가구의 증가 추세, 소득상승에 따른 주택규모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거공간의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혼잡 수준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한 가구가 몇 개의 방을 사용하는가를 나타내는 가구당 방수도 1970년에는 2.32개에 불과했으나 1995년 이후 3개를 초과하였고, 2005년에 이르러 4.8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1970년도에 도시지역에는 1.94개, 농촌지역인 면부에서는 2.66개로 크게 차이가 났으나, 점차 그 차이가 줄어들었으며 2005년에 이르러 도시지역(동부=4.9개, 읍부=4.3개)은 4.6개, 면부는 4.5개로 그 격차가 거의 없어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도 사라졌다.

꾸준히 상승한 자가소유율

자가소유율은 전국의 가구 중 내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한 가구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자가소유율은 경제적·재정적 웰빙 지표인 동시에 주거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자가소유율은 점유형태와는 다른 개념이다. 주택점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 가구가 한 개의 주택을 점유하지만, 소유는 한 가구가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자

〈표 VII-10〉 시도별 자가소유율: 1992-2004

	1992년	1997년	2001년	2004년
서울	49.9	44.6	46.0	51.6
부산	46.8	47.5	52.3	57.6
대구	45.2	43.2	58.0	59.4
인천	54.5	55.1	63.9	73.3
광주	45.8	47.9	53.3	61.5
대전	48.6	49.1	55.5	59.2
울산	-	-	63.2	67.1
경기	50.7	45.5	58.4	63.1
강원	68.8	67.7	67.4	67.3
충북	67.7	65.0	70.5	70.5
충남	71.8	70.3	74.2	69.4
전북	66.8	67.3	74.0	72.5
전남	73.0	71.6	70.1	68.7
경북	67.5	60.9	75.1	73.4
경남	61.1	57.2	62.6	68.3
제주	62.6	53.4	56.1	64.9
전국	57.2	54.5	61.0	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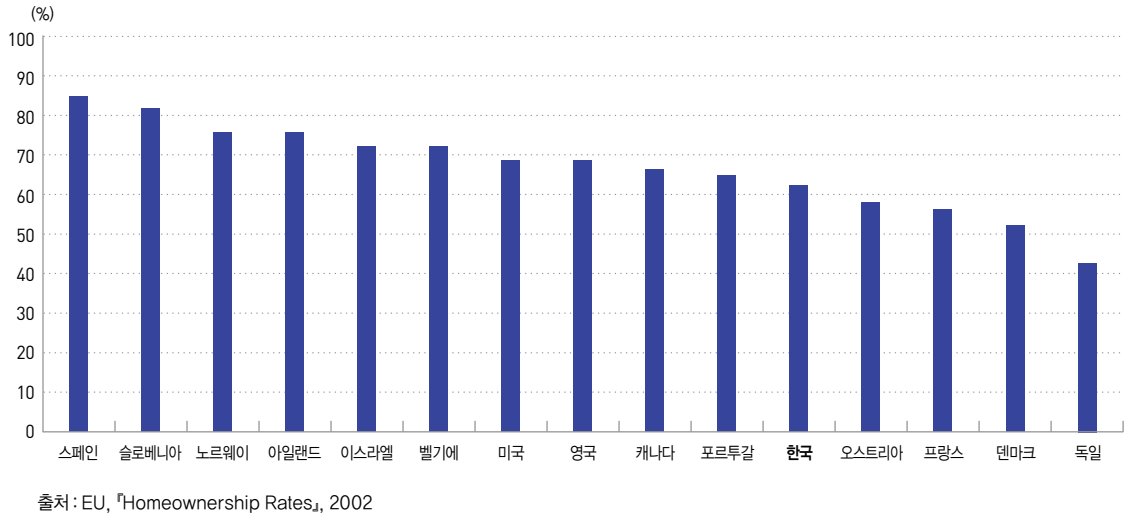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기 집이 있으면서도 직장 등의 이유로 남의 집에 세 들어 살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통계청의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일반가구 1,588만 7,128가구 중 타지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수는 179만 3,836가구(11.3%)이고, 자가에 사는 882만 8,100가구 중 타지에 주택을 가진 가구는 104만 6,857가구(11.9%)이다. 한편 자기 집이 있으면서도 전·월세, 무상 등의 형태로 남의 집에 사는 가구도 746,979가구에 이른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1992년에 자가소유율은 57.2%에 불과했으나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에는 64.4%로 증가하였다(〈표 VII-10〉).

미국의 경우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소득이 낮고 도시화 수준이 낮은 웨스트버지니아주(81.0%), 미

[그림 VII-4] 국가별 자가소유율 비교: 2001



시시피주(78.8%)의 자가소유율이 매우 높은 반면, 대도시가 포함된 지역인 워싱턴 D.C.(45.8%), 뉴욕주(54.8%), 캘리포니아주(59.7%)는 매우 낮다.

우리나라의 자가소유율도 인천과 울산을 제외한 서울, 부산, 대전 등의 대도시에서 낮고 경북, 전북, 충북 등 도시화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높다.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주택소유율은 보통 수준이다([그림 VII-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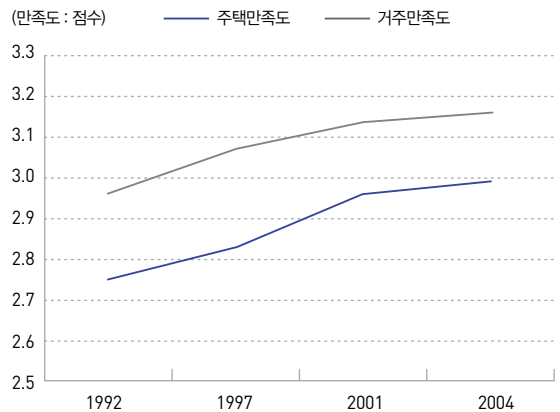
지속적으로 상승한 주택 및 주거지역 만족도

주거만족도는 사는 집에 대한 만족도와 주변환경을 포함하는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된다. [그림 VII-5]는 전국 주택 및 거주지역 만족도를 보여주는 그림이고, <표 VII-11>은 광역시도별 만족도이다.

여기서 만족도는 응답 점수를 아주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2점, 아주불만=1점으로 부여하여 평균한 값이다. 그러므로 값이 높을수록 높은 만

족도를 나타내며 평균 3.0은 보통수준의 만족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거만족도는 첫째, 주택만족도보다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둘째, 대도시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셋째, 주택 및 거주지역 만족도 모두 꾸준히 증가하여

[그림 VII-5] 주택만족도와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1992-2004



주: 만족도는 응답 점수를 아주 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2점, 아주 불만=1점으로 부여하여 평균한 값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왔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렇다고 주택만족도와 거주 지역 만족도를 개선시킬 여지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주로 집이 좁고 낡은 것이 가장 큰 불만요인이다. 그 뒤를 이어 일조통풍,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매매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차지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과거에는 주거시설에 대한 불만이 주된 불만요인이었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설문조사 항목에서 삭제될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거지역에 대한 불만은 교통혼잡과 주차장 부족을 꼽고 있다. 그 뒤를 이어 편의시설과 공해에 대해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주거비용

주거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는 주택소유율과 더불어 주거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주거비용이 높으면 생활필수품에 대한 구매력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주거안정성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주거비가 소득의 30% 이하이면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간주되지만, 50% 이상이면 최악(특히 중위소득의 50% 이하 계층)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한국에는 주거비용과 소득에 관한 신뢰할만한 시계열 자료가 없어 동향 및 추세분석은 생략한다. 그 대신 내 집을 마련하는데 동원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 왔는가를 간단히 소개한다.

주택구입자금은 [그림 VIII-6]에서 볼 수 있듯이 저축-증여/상속-융자/사채-부모/친척도움 등의 순으로 마련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저축, 융자/사채 등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증여/상속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부모와 친척으로부터의 도움은 큰 변동없이 12~13%대의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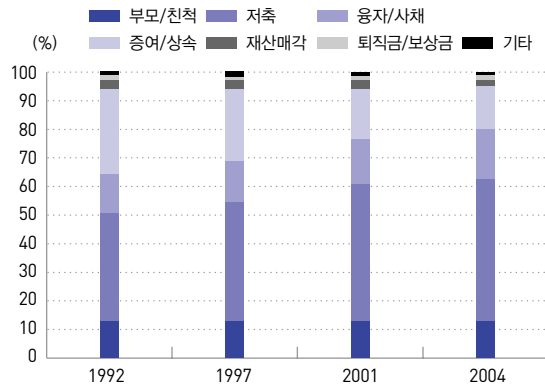
〈표 VII-11〉 시도별 주택만족도와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 1992-2004 (점수)

		1992년	1997년	2001년	2004년
주 택 만 족 도	서울	2.65	2.71	2.84	2.83
	부산	2.62	2.69	2.82	2.82
	대구	2.77	2.79	2.86	2.93
	인천	2.72	2.68	2.85	2.84
	광주	2.84	2.92	2.95	3.03
	대전	2.61	2.86	2.94	2.94
	울산	-	-	2.94	2.98
	경기	2.77	2.84	2.96	2.96
	강원	2.79	2.84	3.09	3.17
	충북	2.71	2.96	3.11	3.05
	충남	2.73	2.89	3.06	3.08
	전북	2.81	2.93	3.07	3.05
	전남	2.91	2.91	3.05	3.17
	경북	2.78	2.96	3.00	3.02
	경남	2.88	2.90	3.09	3.05
	제주	2.96	2.95	3.10	3.48
거 주 지 역 만 족 도	서울	2.94	2.98	2.99	3.03
	부산	2.76	2.95	2.99	3.03
	대구	2.84	2.97	3.01	3.08
	인천	2.83	2.83	3.00	2.96
	광주	3.07	3.04	3.15	3.27
	대전	2.80	3.09	3.14	3.12
	울산	-	-	3.09	3.08
	경기	2.92	3.00	3.08	3.10
	강원	3.20	3.31	3.28	3.37
	충북	2.98	3.19	3.27	3.26
	충남	3.00	3.09	3.25	3.22
	전북	3.07	3.23	3.36	3.19
	전남	3.13	3.22	3.33	3.31
	경북	2.96	3.30	3.22	3.18
	경남	3.05	3.07	3.28	3.27
	제주	3.11	3.29	3.34	3.55

주 : 만족도는 응답 점수를 아주 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2점, 아주 불만=1점으로 부여하여 평균한 값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그림 VII-6] 주택구입방법: 1992-2004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국민의 주거 생활도 매우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비약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주거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존재하고, 여전히 좁고 낡은 집에 살면서 불만스러워하는 국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정책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상집단을 파악하고 주도면밀한 공동 대응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재익(계명대학교)

참고문헌

- United Nations Secretariat and United Nations Centre for Human Settlements(Habitat),
Compendium of Human Settlement Statistics, various years.

대도시권 통근·통학의 광역화

요 약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12세 이상 한국인의 61.3%는 매일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통근·통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한국은 이제 대도시권화 현상이 거의 마무리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먼 거리를 통근·통학하게 되었다.

이 글은 2005년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한국인의 통근·통학을 개관하고 있다. 우선 전국적으로, 그리고 시, 도별로 통근과 통학에 이용되는 주요한 교통수단을 살펴보고, 통근과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을 지역별로 비교했다.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5대 대도시권에 초점을 맞추어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도시로 들어오는 통근·통학과 대도시에서 나가는 통근·통학을 구분하여 양 방향의 통근·통학자의 수를 비교하고, 대도시권별로 통근 수단과 통근 소요 시간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 특별히 수도권의 경우는 서울로 향하는 통근자와 서울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통근자들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근·통학 교통수단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2세 이상 인구 중에서 매일 집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전국적으로 약 2,418만 명으로서 12세 이상 인구 전체의 61.3%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일 이 많은 인구가 집과 직장, 혹은 집과 학교를 오고 가게 되면서 많은 시간을 길에서 소비하게 되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통근과 통학 양상은 이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면 먼저 이들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통학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는 지역 간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로 하겠다. <표 VII-12>는 각 시, 도별로 통근·통학자의 이용 교통수단의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이용 교통수단은 주요한 단일 수단으로 도보, 승용차, 버스, 전철/지하철/기차로 구분하였고, 상대적으로 그 빈도가 적은 택시, 자전거, 기타 교통수단, 그리고 두 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복합 수단 등은 다 합쳐서 기타로 처리하였다.

우선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통근·통학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로 31.2%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도보로 31.0%를 점하

고 있다. 한편 버스 이용자는 전체의 21.8%이며 전철, 지하철, 기차 이용자는 6.9%로 나타난다.

이제 이와 같은 이용 교통수단의 분포를 각 시, 도 지역으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면 우선 승용차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통근·통학자의 42.3%가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주도로 41.8%를 보이고 있다.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와 울산, 그리고 대구에서도 승용차 이용비율이 높아 대체로 38% 수준에 이르고 있다. 도 지역 중에서는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가장 높다.

승용차 이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서 20.8%를 보인다. 서울에서 승용차 이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전철이나

<표 VII-12> 시도별 통근·통학자의 이용 교통수단: 2005

(%)

	도 보	승용차	버 스	기차/전철/지하철	기 타
서울특별시	27.0	20.8	20.1	22.5	9.6
부산광역시	25.5	29.1	32.4	6.4	6.6
대구광역시	27.5	38.0	26.0	2.9	5.6
인천광역시	25.2	34.4	25.3	7.8	7.3
광주광역시	27.0	38.4	30.1	0.5	4.0
대전광역시	28.0	42.3	24.9	0.5	4.3
울산광역시	27.0	38.1	26.3	0.0	8.6
경기도	26.0	36.2	24.2	6.6	7.0
강원도	39.9	36.4	17.4	0.1	6.2
충청북도	37.1	34.6	17.6	0.1	10.6
충청남도	40.9	32.0	16.3	0.4	10.4
전라북도	40.2	29.7	16.6	0.1	13.5
전라남도	47.0	24.0	14.5	0.0	14.4
경상북도	37.4	30.6	15.7	0.2	16.1
경상남도	37.5	32.7	20.1	0.1	9.6
제주도	25.6	41.8	19.7	0.0	13.0
전국	31.0	31.2	21.8	6.9	9.0

주: '기타'는 택시, 자전거, 기타 교통수단 및 두 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수단 등을 포함한 것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2005

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잘 발달해 있다는 점과 교통체증이 다른 도시나 지역보다 더 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서울은 전철, 지하철, 기차 이용비율이 22.5%로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다.

전철 등의 이용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곳은 인천, 경기도, 부산으로 대체로 6~8%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승용차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보의 경우는 대체로 통근자보다는 통학하는 학생들이 주로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도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서 47.0%가 도보로 통근·통학하고 있었다. 도 지역에서는 대체로 도보 비율이 37%에서 41% 사이에 있으며 광역시에서는 25~28% 사이로서 도 지역보다는 도보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버스 이용은 광역시에서 도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데 특히 부산과 광주·경주의 버스 의존도가 매우 높아 각각 32.4%, 30.1%를 보이고 있다. 도 지역에서는 버스 이용률이 거의 모두 15~17% 정도인데 경남과 제주에서만 각각 20.1%와 19.7%로 그 비율이 다소 높다.

통근·통학 소요시간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통근·통학을 위하여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비하는가? 한국인 전체는 매일 통근·통학을 하는 데에 평균적으로 편도 31.5분을 소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시, 도별로 보면 통근·통학에 걸리는 시간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서 39.3분이 소요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천이

37.2분, 그리고 경기도가 36.6분의 순으로 되어있어 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통근·통학을 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수도권 주민들의 통근·통학 시간이 가장 긴 이유는 서울과 서울대도시권의 공간적 권역이 다른 대도시나 대도시권에 비해서 넓고 인구과밀의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이다.

서울,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거주 주민들은 대체로 통근·통학에 30분 정도를 쓰고 있는데 부산이 34.3분으로 많고 대구, 대전, 광주, 울산의 순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 도시의 인구 규모에 비례해서 통근·통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한편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에서는 통근·통학 시간이 22분에서 25분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경남이 25분으로 제일 많고 강원도는 22분으로 제일 적게 소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교통수단별로 통근·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면 단일 수단 이용자 중에서는 전철이나 지하철 또는 기차로 통근·통학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편도에 57분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버스 이용자가 39.3분, 승용차 이용자는 33분 등의 순이며 가장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수단은 역시 도보로 평균 17.5분이었다.

한편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승용차의 경우를 보면 수도권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서울에서는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평균 42.1분이 소요되며 인천이 37.1분, 경기도가 37.4분으로서 타 지역보다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경우는 도시가 클수록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

〈표 VII-13〉 시도별 주요 교통수단별 소요 통근시간: 2005

(분)

	도 보	승용차	버 스	기차/ 전철/ 지하철	기 타
서울 특별 시	18.1	42.1	42.1	54.1	39.3
부산 광역 시	17.8	36.8	41.3	44.3	34.3
대구 광역 시	17.6	32.5	41.2	38.6	30.8
인천 광역 시	17.9	37.1	42.5	69.3	37.2
광주 광역 시	17.4	30.7	37.6	31.6	29.0
대전 광역 시	17.3	31.9	39.7	90.2	30.0
울산 광역 시	17.7	28.9	36.3	52.5	27.3
경 기 도	16.9	37.4	42.6	68.2	36.6
강 원 도	15.9	24.4	31.6	78.6	22.1
충 청 북 도	17.6	27.3	34.8	79.1	24.3
충 청 남 도	16.3	25.2	33.0	83.0	22.5
전 라 북 도	18.2	27.1	34.2	63.3	23.7
전 라 남 도	18.7	24.5	33.0	61.0	22.2
경 상 북 도	17.8	24.8	31.6	68.3	22.4
경 상 남 도	17.5	27.8	35.0	73.6	24.8
제 주 도	16.5	24.2	33.1	-	23.6
전 국	17.5	33.0	39.3	57.0	31.5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2005

고 있었다.

버스의 경우도 승용차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 수도권 주민들이 타 지역 주민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전철, 지하철 또는 기차를 이용한 통근·통학의 경우는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해 지역별 시간의 편차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대전 주민의 90.2분에서 광주 시민의 31.6분에 이르기까지 그 차이가 매우 심하다.

대도시권의 통근·통학

우리나라도 이제는 서울,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도시권이 형성되고 그 외연이 점차 확대

되고 있어 중심도시인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 간에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5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대도시권의 주변지역에서 중심도시로, 그리고 중심도시에서 주변지역으로 통근·통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승용차 이용률은 얼마나 되며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를 살펴 보려한다. 이때 서울 대도시권의 주변 지역으로는 인천과 경기도가, 부산 대도시권의 경우는 울산과 경상남도가 포함되며 대구는 경상북도, 광주는 전라남도, 대전은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를 포함한다.

〈표 VII-14〉는 2005년의 우리나라의 5대 대도시권 내에서 중심도시인 대도시와 주변지역 간에 매일 일

〈표 VII-14〉 통근·통학 방향별 대도시권의 통근·통학 인구와 비율 : 2005

(1,000명, () 안은 비율)		
통근·통학권	대도시 → 주변	주변 → 대도시
서울과 인천·경기 간	557 (10.8)	1,157 (17.5)
부산과 울산·경남 간	118 (6.9)	67 (3.2)
대구와 경북 간	130 (10.9)	37 (2.7)
광주와 전남 간	58 (8.2)	21 (2.2)
대전과 충북·충남 간	51 (7.1)	22 (1.2)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2005

어나고 있는 통근·통학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서울 대도시권의 경우 서울에서 인천이나 경기도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557,000명이고 거꾸로 서울 주변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115만 7,000명으로 매일 약 171만 명이 넘는 인구가 서울의 행정구역을 넘나들면서 이동하고 있다. 이제 이 인구를 서울과 주변지역에서 매일 통근·통학하는 총인구에 대한 비율로 표시해보면 서울의 경우 총 통근·통학자의 10.8%가 서울 밖의 인천이나 경기도로 통근·통학하고 있으며,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는 총 통근·통학자의 17.5%가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 대도시권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네 개의 대도시권지역에서는 대도시에서 주변지역으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반대의 흐름인 주변에서 대도시로 향하는 인구보다 월등하게 많다. 예컨대 부산 대도시권의 경우 부산에서 울산이나 경남으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118,000명(6.9%)인데 비해서 울산이나 경남에서는 67,000명(3.2%)이 부산으로 통근·통학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도시와 주변지역 간 유동

인구의 수적 차이는 특히 대구 대도시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매일 대구에서 주변으로 나가는 인구는 130,000명(10.9%)인데 비해서 37,000명(2.7%)만이 주변에서 대구로 유입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과 다른 대도시 간에 나타나는 통근·통학의 흐름을 우선 통근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서울의 경우 거주지의 교외화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져 서울 주변에서 고용이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택이 증가해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직장을 두고 주거만 주변지역으로 바꾸어 서울로 통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5년간 서울 외곽에 많은 신도시가 건설되었지만 주거단지 위주로 개발되어 고용창출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다른 대도시의 경우는 거주지 교외화와 함께 많은 산업이 주변지역에 입지해 살기는 대도시에 살면서 직장은 주변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통학의 경우에도 대도시권의 방향별 통학생 비중은 지역별로 많은 편차를 보인다. 우선 대도시권 전체로 보면 대도시에서 주변으로 나가는 흐름에서는 통학생 비중이 평균 20%이나 반대로 주변에서 대도시로 향하는 흐름에서는 통학생이 15.9%로 상대적으로 적다. 통학생의 비중이 가장 큰 흐름은 대전광역시 주변에서 대전으로 향하는 흐름으로 통학생의 비중이 38.5%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 통학생 비중이 큰 곳은 대구지역인데 이번에는 거꾸로 대구에서 주변지역으로 나가는 흐름에서 그 비중이 34.2%를 나타내고 있다. 통학생 비중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곳은 부산에서 주변으로 나가는 흐름인데 그 비중이 8.6%에 불과하다. 이처럼 지역별로 통학생의 비중이 많은 편차를 보이는 것은 주로 대학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

른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는 이들 대도시권 내에서 거주하면서 대도시의 경계를 벗어나 통근·통학하는 사람들 중 학생들은 제외하고 통근자만을 대상으로 매일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승용차 이용률을 살펴보려 한다.

〈표 VII-15〉는 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 통근자의 평균 통근 시간을 통근의 방향별로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 대도시권에 살면서 중심도시인 대도시를 넘나들며 통근하는 사람들은 편도 통근에 평균적으로 적어도 50여분을 소비하고 있다.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체로 중심도시와 대도시권의 크기에 비례해서 더 많아지고 있는데 서울 대도시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대구 대도시권에서 비교적 적게 걸린다.

〈표 VII-15〉 대도시권 통근자의 통근방향별 평균 소요시간 : 2005 (분)

통근권	대도시→주변	주변→대도시
서울과 인천·경기 간	65.2	64.9
부산과 울산·경남 간	66.3	50.7
대구와 경북 간	53.1	48.8
광주와 전남 간	56.5	48.8
대전과 충북·충남 간	56.4	51.3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2005

서울의 경우는 양방향 모두 대체로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65분 정도로서 부산에서 주변지역으로 통근하는 경우의 66분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통근 소요 시간이 길다. 또 표에서 볼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경향은 모든 대도시권에서 대도시에서 주변으로 나가는 통근 소요시간이 주변에서 대도시로 들어오

는 통근 소요시간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아마도 대도시에서 주변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대도시로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더 원거리를 통근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VII-16〉 대도시권 통근자의 통근방향별 승용차 이용률 : 2005 (%)

통근권	대도시→주변	주변→대도시
서울과 인천·경기 간	52.2	43.4
부산과 울산·경남 간	59.4	71.4
대구와 경북 간	72.9	73.7
광주와 전남 간	78.1	66.7
대전과 충북·충남 간	75.7	85.3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2005

그러면 이들 대도시권 통근자들은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교통수단 중에서 승용차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을까? 〈표 VII-16〉은 각 대도시권별로 통근자들의 승용차 이용 비율을 정리해서 보여 준다. 표에서 보면 대도시권 중에서 수도권 통근자들이 승용차를 가장 적게 이용하고 있고 대전 대도시권 통근자가 승용차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서 주변지역으로의 통근자는 52.2%, 그리고 주변에서 서울로는 43.4%만이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다. 반면에 대전의 경우는, 대전밖으로는 75.7%가 그리고 대전으로는 85.3%가 승용차를 이용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승용차 이용률을 보인다. 이와 같은 차이는 대도시와 주변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과 시설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에 따른 문제로, 수도권의 경우는 전철이나 광역버스 등의 대중

교통 체계가 다른 대도시권에 비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도권 통근자의 특성

이 마지막 절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통근·통행량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떠한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들면서 통근을 하고 있는지 통근의 방향별로 그 특성을 비교하려 한다. 먼저 성별을 보면 여자의 경우에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비율이 서울에서 주변으로 통근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연령은 통근의 양 방향에서 모두 30대와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의 통근자 중에는 30대의 비율이 37.1%로 서울에서 외곽으로 통근하는 통근자의 29.9%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더 젊은 연령층이 서울로 통근하고 있다.

한편 교육수준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의 통근자가 반대 방향의 통근자보다 교육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서울로의 통근자 중에는 56.1%가 대졸 학력을 갖고 있으나 서울에서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는 통근자 중에는 47.8%가 대학을 졸업하였다. 이와 같은 학력의 차이는 서울로 통근하는 통근자가 상대적으로 더 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연령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I-17〉에서 통근자의 5년 전 거주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서울로의 통근자 중에는 5년 전에 서울에서 살았던 사람이 23%이다. 반면에 서울에서 수도권 외곽으로의 통근자 중에는 5년 전에 경기도나 인천에 거주했던 사람이 전체 통근자의 10%로 그 비율이 서울 통근자에 비해서 낮다. 이와 같은 경향

〈표 VII-17〉 통근방향별 수도권 통근자의 특성: 2005

		(%)	
		서울→인천/경기	인천/경기→서울
성별	남	75.0	70.9
	여	25.0	29.1
연령별	10대	0.2	0.1
	20대	19.1	17.9
	30대	29.9	37.1
	40대	28.9	28.7
	50대	17.4	12.4
	60대	4.1	3.4
	70대 이상	0.4	0.4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8.4	5.3
	고졸	33.8	30.3
	대졸	47.8	56.1
	대학원졸 이상	10.0	8.3
5년전 거주지별	서울	85.6	23.0
	인천/경기	10.0	71.2
	기타	4.4	5.8
주택소유 유형별	자가	55.3	62.3
	전세	30.1	26.0
	월세	13.1	9.9
	무상	1.5	1.8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2005

은 서울의 주택사정의 악화와 서울 주변의 신도시 개발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은 서울에 그대로 남겨 둔 채 거주지만 서울 주변으로 옮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서울의 주거지 교외화 현상은 통근자들의 주택 소유형태와 비교해 보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즉 서울로 통근하는 사람들 중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62.3%로서 서울에서 주변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내 집 소유비율인 55.3%보

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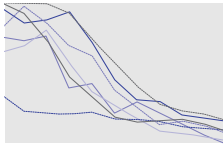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나가는 통근자와 서울로 들어오는 통근자의 특성을 요약하면 서울로 향하는 통근자가 더 젊고, 여성이 많으며, 학력수준이 높으

며, 내 집을 소유한 비율도 높아 전체적인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서울에서 주변으로 향하는 통근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최진호(아주대학교)

한국의 사회동향 2008

Korean Social Trends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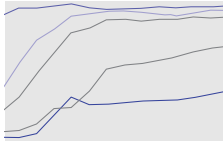


Population

Household & Family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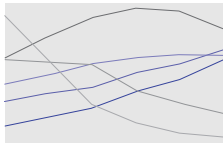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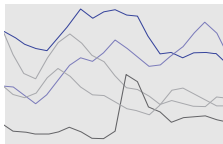
Housing & Transportation



Health

Welfare

Environment



Social Security

Social Cohesion

보건 분야의 주요 변화 • 조병희 192

과다한 의료비 부담 • 권순만 202

나아지지 않는 주관적 건강상태 • 정진주 207

VIII. 보 건

Health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보건 부문에서는 국민의 건강상태,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동과 습관, 그리고 병에 걸렸을 때 의료서비스를 얼마나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로 ‘건강과 질병’ 영역은 전통적으로 보건 분야의 주된 관심영역이었다. 이 영역을 통해 국민의 건강 수준과 질병분포를 분석하여 국민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파악하게 된다. 평균수명, 주요 질환의 유병률, 사망원인별 사망률 등은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된다.

둘째로 ‘건강의식과 건강행태’ 영역은 최근에 건강행태 또는 건강습관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새롭게 관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는 건강을 해치는 행동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며, 흡연을, 음주율, 운동 실천율 등이 주요 지표가 된다.

셋째로 ‘의료제도와 의료이용’ 영역은 질병치료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영역이다. 질병 치료를 하는데 필요한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건강보험급여 등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있어서 의사수, 병원수, 의료비 지출규모 등이 주요 지표가 된다. 또한 의료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

건강과 질병

건강(health)은 최근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는 개념이지만 여러 요소가 포함되는 포괄적인 현상이고 또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 개념 규정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웰빙(well-being) 상태”라고 규정한 바 있다. 즉 건강은 신체·정신·사회의 여러 영역을 포괄하

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이나 정신적 건강 자체도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사회적 건강'은 구체적인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개념규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점은 건강이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건강이 노동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란 측면과 정신적, 심리적 안식을 누리는 상태로 개념화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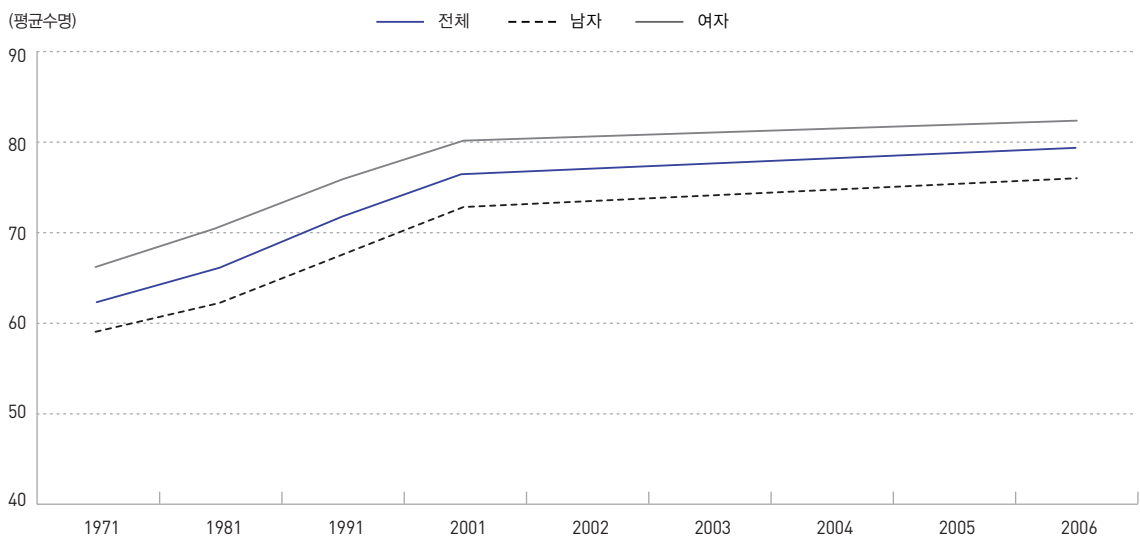
'역량'이란 측면에서 건강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기본적인 지표는 '평균수명' 또는 '0세에서의 기대여명'을 들 수 있다. 평균수명의 길고 짧음은 사회적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균수명은 1971년에 62.3세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89년에 70세를 넘어섰고, 2006년에는 79.2세가 되었다([그림 VIII-1]). 이것은 OECD의 평균치인 78.9세보다 높다. 즉 평균수명의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평균수명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를 수 있다. 1971년에 남자 58.9세, 여자 66.0세였는데 매년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6년에는 남자 75.7세, 여자 82.3세로 증가하였다. 지난 35년간 남자보다 여자의 평균수명이 항상 길었다. 그러나 그 격차는 축소되고 있다. 평균수명의 남녀격차는 1971년에 7.0세이던 것이 2006년에는 6.2세로 감소하였다.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긴 것은 산업화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기에는 임신출산에 따르는 위험을 의학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출생아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영아사망률'은 1970년에 45명이나 되었지만 급격하게 감소하여 1981년에 17명, 1991년에 10명 수준이 되었고 2002년에는 5.3명으로 낮아졌다. 출생

[그림 VIII-1] 평균수명 : 1971-2006



출처: 통계청, 『2006년 생명표』, 2007

아 10만명당 모성사망의 수를 나타내는 ‘모성사망비’도 1995년에 20이었고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3년에 15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OECD 평균인 9.0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 즉 출산과 관련하여 어머니 아기가 죽는 일은 이제 매우 희귀한 일이 되고 있다.

남녀의 사회적 역할에 따르는 위험이 다른 점도 남자와 여자의 건강구조 차이의 원인이 된다.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망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 산업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남녀 간 건강 격차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평균수명은 단순히 기대수명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의 질적 측면을 충분히 표현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와병상태에서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 중 유병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만큼 건강상태의 질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표가 ‘건강수명’으로 평균수명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005년에 0세의 기대여명은 78.6세였으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을 보정한 이후의 ‘건강보정 기대여명’은 68.6세였다. 즉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기대여명보다 10년이 짧다는 것이다. 건강상태의 남녀격차는 건강수명에서는 크게 축소된다. 2005년에 여자의 평균수명은 남자보다 6.7세 높았지만 건강수명에서는 2.1세 높았을 뿐이다. 이것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은 길지만 유병상태에 있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건강수명에서의 남녀격차는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질병 등으로 인

한 활동제한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평균수명의 질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로는 ‘주관적 건강상태’이다. 이것은 본인이 현재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를 말한다. 최근에는 객관적 건강상태보다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포스트모던(post modern) 사회’에서 주관적 인식이나 주관적 만족을 중시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현상이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는 만큼 건강구조 또한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고 이를 객관적 지표로 다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총체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건강상태에 대한 더 정확한 측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1986년부터 2006년까지의 자료를 비교해보면 큰 변이를 찾기는 어렵고 대체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45% 내외이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람이 약 17% 내외로 집계되고 있다. 즉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도 개인이 느끼는 건강상태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유병률과 유병일수는 신체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다. 유병률은 조사시점 이전 2주 동안 질병에 걸린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1995년에 19.0%, 1999년 22.4%, 2003년 20.8%, 2006년 19.5%의 분포를 나타냈다(〈표 VIII-1〉). 남자(16.5%)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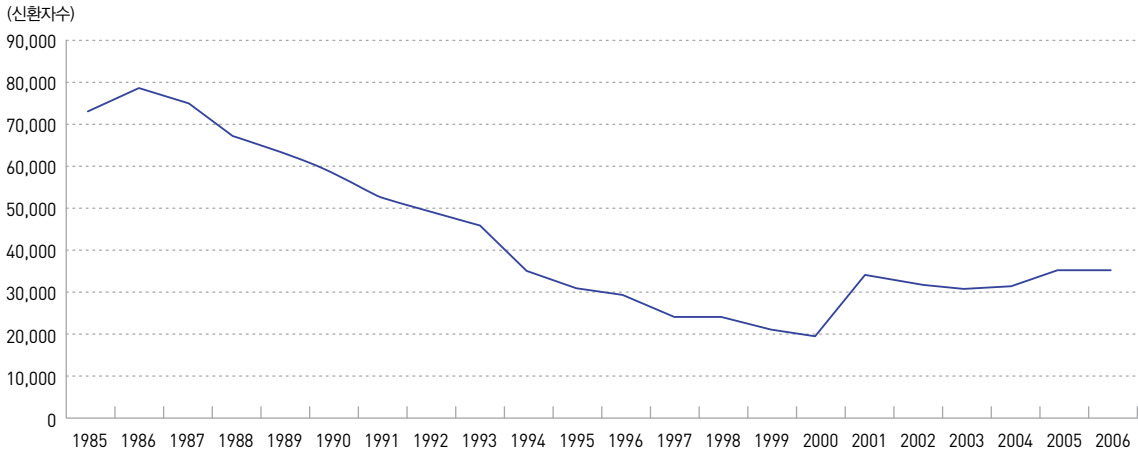
〈표 VIII-1〉 성별 2주간 유병률: 1995-2006

	1995년	1999년	2003년	2006년
전 체	19.0	22.4	20.8	19.5
남 자	16.6	19.1	17.1	16.5
여 자	21.4	25.6	24.5	22.4

주: 유병률은 조사시점 이전 2주 동안 질병에 걸린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그림 VIII-2] 결핵 신환자수: 1985-2006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감시연보』,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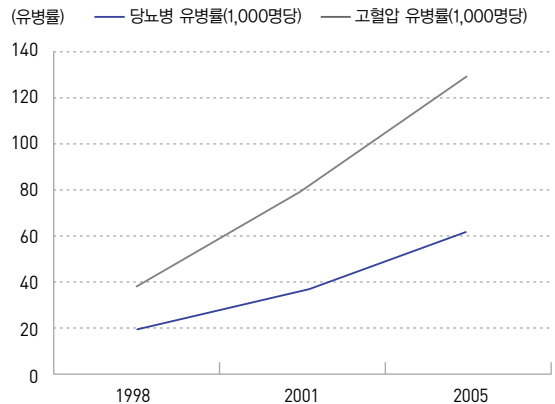
다는 여자(22.4%)의 유병률이 높게 나오는데 이것은 산업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같은 기간 질병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했던 ‘와병일수’는 0.8일 정도로 변화가 없었다.

또한 한 시점에서 연령별 유병률을 보면 0~4세의 유병률이 높다가 청소년기에 낮아지고 이후 40대 이후에 다시 높아지며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가장 높은 패턴을 보인다. 그런데 조사시점에 따라 유병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

다음은 주요 질환의 유병률을 살펴보자. 전염성 질환의 발생은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치명력도 많이 낮아진 상태이지만 결핵의 경우는 예외적이다. 결핵은 1991년에 52,735명이 새로 감염되었고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2006년에는 약 35,000명이 감염되었다([그림 VIII-2]). 이러한 결핵 감염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만성질환 중 대사성 질환인 당뇨병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환자수를 나타내는 유병률이 1998년 19.2, 2001년 36.4, 2005년 61.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고혈압의 경우도 인구 1,000명당 유병률이 1998년 38.2, 2001년 80.2, 2005년 129.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VII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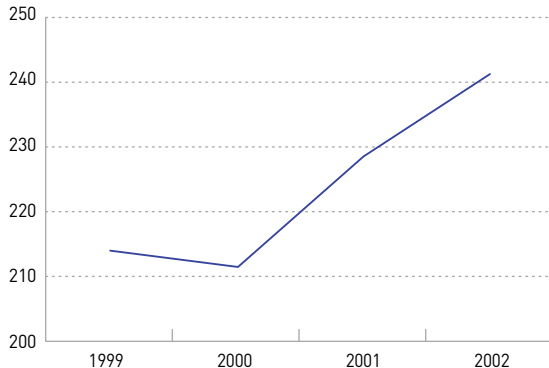
[그림 VIII-3] 당뇨병과 고혈압 유병률: 1998, 2001, 2005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2006

[그림 VIII-4] 암 발생률: 1999-2002

(발생률)



주: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새로 보고된 암환자수임.

출처: 보건복지가족부·중앙암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연례보고서』, 각 년도

암 발생률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통계가 작성되어 있는데(국가암등록사업) 전체 암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새로 보고된 환자 수 지표인 발생률이 1999년 213.9에서 211.4, 228.4, 241.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VIII-4])

자신의 건강상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은 질병의 유무와 더불어 정신적 안식을 누리느냐의 여부이다. 정신적 안식을 나타내는 ‘스트레스 인식정도’는 2001년과 2005년에 측정되었는데 ‘매우 많이 느낌’과 ‘많이 느낌’을 합산할 경우 2001년에 34.7%, 2005년에 35.1%의 분포를 보였다. 즉 국민의 1/3이 상당히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유병과 함께 사망은 건강상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주요 사인은 1995년 이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당뇨, 자살, 운수사고 등이 차지하였다(표 VIII-2)). 사망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특정 원인에 의한 사망은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새로운 건강문제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망

〈표 VIII-2〉 사망원인별 인구 10만명당 사망률: 1995-2007

	1995년	2000년	2005년	2007년
총사망률	532.1	517.9	501.0	498.4
암	110.8	122.1	134.5	139.1
뇌혈관질환	79.7	73.2	64.3	62.6
심장질환	36.9	38.5	39.6	43.2
간질환	29.4	22.9	17.3	5.9
당뇨병	17.2	22.6	24.2	22.8
소화기계질환	39.2	31.2	23.0	21.9
운수사고	38.7	25.3	16.3	15.5
자살	10.8	13.6	24.7	24.8

출처: 통계청,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 각 년도

원인별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을 살펴보면 암에 의한 사망이 1995년에 110.8에서 139.1로 증가하였고, 당뇨병에 의한 사망이 17.2에서 22.8로 증가하였다.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도 36.9에서 43.2로 증가하였다. 반면 소화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39.2에서 21.9로 크게 감소하였고 뇌혈관 질환 사망도 79.7에서 62.6으로 감소하였다. 질병이 아닌 외인으로 인한 사망에서 운수사고(교통사고) 사망은 38.7에서 15.5로 감소하였으나 자살은 10.8에서 24.8로 증가하였다. 특히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어 ‘사회적 건강’의 주요 문제가 되고 있다.

건강행태

만성질환이 건강의 주요 문제로 대두하면서 음주와 흡연 등 건강행태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보건학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성인의 흡연율은 1995년에 38.4%이던 것이 점차 감소하여 2003년에 29.2%, 2006년에 27.3%가 되었다(표 VIII-3)). 여성 흡연율

은 3.9%로 매우 낮으나 남성 흡연율은 52.2%로 매우 높다. 미국이나 서구유럽 국가들의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 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흡연자들의 흡연량도 감소하고 있는데 ‘반갑 이하’의 비중이 1995년에 30.1%이던 것이 2006년에는 40.4%로 증가하였다.

〈표 VIII-3〉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 1995-2006

	1995년	1999년	2003년	2006년
성인흡연율	38.4	35.1	29.2	27.3
남성흡연율	73.0	67.8	56.3	52.2
성인음주율	63.1	64.6	64.3	73.2
남성음주율	83.0	82.9	80.7	85.9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성인 음주율은 1995년 63.1%이던 것이 1999년과 2003년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6년에는 73.2%로 증가하였다(〈표 VIII-3〉). 성별로 볼 때 흡연과는 달리 여성들도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 2006년에 남성은 85.9% 여성은 61.2%의 분포를 보였다. ‘거의 매일 음주자’의 경우 8.4%에서 5.3%로 약간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일정 수준 이하의 음주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주를 자체를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건강에 위해가 될 정도의 과도한 음주가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지표는 아주 최근에야 측정되기 시작하였다. 세계보건기구가 개발한 Audit(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이 대표적인 ‘문제 음주’ 지표인데 음주 빈도와 음주량, 고위험음주 빈도, 음주 통제력 상실, 해장술, 음주 후 후회감, 기억상실, 음주관련 문제경험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0점 만점에 8점 이상이 ‘문제 음주자’, 13점 이상을

‘알코올 의존자’로 규정한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문제 음주자는 36.2%(남자 59.0%, 여자 13.8%)였고, 알코올 의존자는 21.3%(남자 36.8%, 여자 6.1%)였다. 즉 1/3 이상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수준의 과도한 음주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이와 영양 또한 건강상태를 구성하는 주요 부분이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영양상태가 개선되는 것은 자연스런 추세이다. 국민 1인당 1일 쌀 소비량은 1985년에 350.9g이던 것이 계속 감소하여 2006년에는 210.9g이 되었다. 반면 돼지고기 소비량은 23g에서 계속 증가하여 49.6g이 되었다. 영양공급량은 1985년에 2,687kcal이던 것이 계속 증가하여 2000년에 3,010kcal로 정점에 달했고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2,927kcal가 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단백질 공급량은 86.6g에서 98.3g으로 증가하였고 지방 공급량은 51.8g에서 87.1g으로 증가하였다.

영양상태가 좋아지면서 발생한 건강문제가 비만이다. 비만은 보통 키와 몸무게의 비인 ‘체질량지수’(BMI)로 측정하는데 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비만율은 2001년에 30.6%, 2005년에 31.8%(남자 35.2%, 여자 28.3%)였다. 비만율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20~24세 인구집단의 비만율이 17.3%인데 비하여 50~54세 집단은 44.3%나 된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활동이 줄어들고 생리적으로 신체의 대사활동이 완만해지면서 비만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60대 이후에는 비만율이 다시 낮아진다.

흡연, 음주, 영양섭취가 절제할수록 건강에 기여하는 행태라고 한다면 운동은 더 강화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태이다. 그런데 운동 실천율은 1회 20분, 주3일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1998년 8.6%에서 2001년 20.4%, 2005년 22.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40대(25.2%)와 50대(25.7%) 인구집단이 상대적으로 운동실천율이 높다.

〈표 VIII-4〉 운동실천율과 비만율: 1998, 2001, 2005 (%)

	1998년	2001년	2005년
운동실천율	8.6	20.4	22.0
비만율	26.8	30.6	31.8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주된 건강관리방법과 관련하여 ‘사회통계조사’의 조사항목과 설문방식이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연도별 비교는 어려우나 2003년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운동(26.9%), 휴식(15.4%), 식사조절(12.7%) 등이 대표적인 건강관리 방법이었다.

의료제도와 의료이용

의료제도 구성에서의 기본요소는 병원과 의사 같은 의료인력 및 시설의 공급 측면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 및 지출되는 의료비 등 수요 측면으로 구성된다. 의료공급에서 의사 인력은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된다. 지난 20여 년간 의사수와 병원수는 지

속적으로 증가하여 의료공급을 확대하여 왔다(〈표 VIII-5〉).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의료 인력은 1985년에서 2006년 사이에 그 절대수가 약 3~4배 증가하였다. 면허등록 의사 수는 1985년에 29,596명에서 2006년에는 88,21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의사 1인당 인구수도 1985년에 1,379명에서 2006년에는 548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치과의사나 한의사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동일 기간에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는 7,507명에서 2,169명으로 감소되었고, 한의사 1인당 인구수는 10,770명에서 3,034명으로 감소하였다. 간호사의 경우는 690명에서 216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다른 인력과 달리 간호사는 면허소지자 중에서 취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의사 인력의 증가는 그 자체로 의료복지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06년에 프랑스와 독일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practicing physicians)가 약 3.5명인데 한국은 1.7명이었다. 즉 의사수가 프랑스와 독일의 절반 수준인 것이다. 그런데 이 통계치의 의미는 국민의 의료접근도가 낮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의료이용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

〈표 VIII-5〉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의 추이: 1985~2006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6년	감소율 (1985년~2006년)
의사 1인당 인구수	1,379	1,007	789	648	548	251.6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	7,507	4,457	3,296	2,606	2,169	346.1
한의사 1인당 인구수	10,770	7,401	5,175	3,911	3,034	355.0
간호사 1인당 인구수	690	482	374	293	216	319.4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에 의사수가 적다는 것은 접근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질적 측면의 낙후성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의 사들은 서구의 의사들보다 노동 강도가 높고 짧은 시간에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의료인력 구성의 다른 측면은 의사 대 간호사의 비인데 독일 등 서구 유럽국가들은 대략 1:3 정도 된다. 반면 한국은 1:2 수준이다. 즉 서구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간호서비스가 그만큼 적게 제공되고 있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진료시간도 짧고 충분한 상담을 받기도 어려우며 간호서비스가 부족하여 간병인을 따로 두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뒤따르게 된다.

의료시설을 나타내는 지표는 의료기관수와 병상수가 있다.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병상규모로 구분하는데 100병상 이상일 경우 ‘종합병원’,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일 경우 ‘병원’이라 하고, 30병상 이하일 경우 ‘의원’이라 한다. 종합병원은 1985년 183개소에서 2006년에 295개소로 증가하였고, 병원은 317개소에서 1,213개소로 증가하였다. 의원은 의사 1인이 진료하는 곳으로 보통 ‘동네병원’으로 불리는데 8,069개소에서 26,078개소로 증가하였다. 증감추이를 보면 종합병원은 연도별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경영위기로 문을 닫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병상을 축소하

여 병원급으로 지위를 낮추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반면 병원은 1990년대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의료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의원의 경우는 1990년대 이후 매년 약 1,000여 개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의사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배출되는 의사의 일부는 병원으로 취업하고 일부는 의원을 개설하는 전통적인 직업시장 구조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병원수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병상수도 최근 10년간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병상수는 1985년에 99,950개에서 2006년에 410,000개로 약 4배 증가하였다. 이 중 종합병원 병상수는 49,394개에서 124,090개로, 병원 병상수는 24,321개에서 141,564개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병상수의 증가를 의료복지의 확대로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현대의 의료는 각종의 고급 의료기술이 집중되어 있고 특히 외래진료보다는 입원진료일 경우에 의료기술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병원의 필수 장비처럼 인식되고 있는 MRI 보유가 인구 100만명당 13.6대, CT Scanner가 33.7대로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대개의 유럽 국가들은 우리의 절

〈표 VIII-6〉 의료시설의 추이 : 1985-2005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종합병원수	183	228	266	285	290
병원수	317	328	398	581	971
의원수	8,069	10,935	14,343	19,472	25,412
총병상수	99,950	134,176	196,232	287,401	379,751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반 이하 수준을 보여준다. 따라서 병상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넘는 병상수는 오히려 국가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한국의 경우 유럽국가들과 비교할 때 병상수에서 오히려 추월하여 세계적으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프랑스 3.7개, 독일 6.2개 인데 한국은 6.8개이다.

의료공급의 증가는 의료이용의 증가와 맞물려 있다. 국민의 의료이용 상태는 '연평균 1인당 내원일수'로 계산할 수 있는데 1990년에 7.9일이던 것이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 15.3일이었다(그림 VIII-5). 즉 국민 1인당 연 1.2일 입원하고 14.1일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다.

의료공급과 의료이용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 국민의료비는 1985년에 3조 5천억 원이었는데 계속 증가하여 2004년에 43조 원에 달하였다(그림 VIII-6).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1985년에 4.2%였는데 2004년에 5.6%에 달하였다. OECD 통계에 의하면 2005년과 2006년에 의료비가 급증하여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각각 6.0%,

6.4%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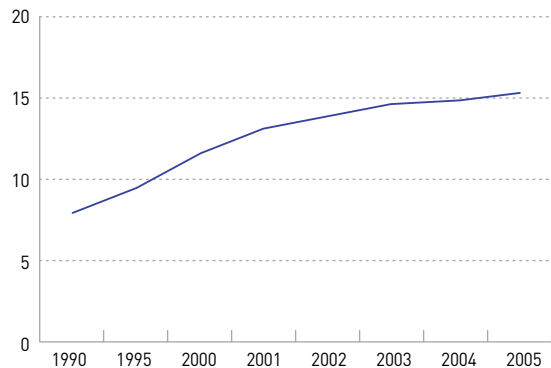
인구성장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료비의 증가는 의료신기술의 도입 및 의료이용의 증가가 주 원인이 되고 있는데 특히 노령화와 함께 노인 의료비의 증가가 두드러진 현상이다. 전체 의료비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의료비 지출의 비중은 1992년에 9.7%에 불과하던 것이 10년 뒤인 2002년에 19.3%가 되었고 2006년에는 25.9%가 되어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비 증가와 함께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현상은 의료비 재원 염출 방식이다. 복지국가는 의료비 재원의 공공부담을 크게 하고 개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제도의 실시와 함께 의료비의 공공부담 몫이 확대되어 왔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 1990년에 전체 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율은 38.8%였으나 계속 확대되어 2004년에는 51.4%에 달하였다(그림 VIII-7).

그러나 서구유럽 국가들의 공공의료비 비중이 대체로 약 85% 수준인 것과 비교하여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공공의료비 비중이 낮다는 것은 병원을 이용할

[그림 VIII-5] 1인당 연평균 내원일수: 1990-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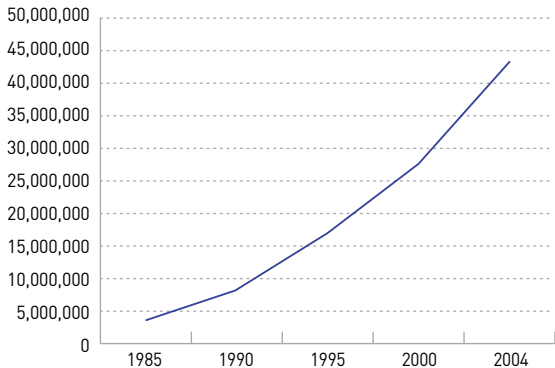
(내원일수)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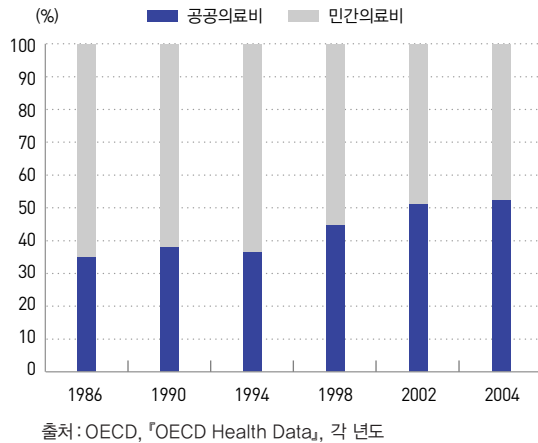
[그림 VIII-6] 국민의료비 지출: 1985-2004

(지출액: 100만원)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각 년도

[그림 VIII-7] 국민의료비 지출 재원별 비중: 1986-2004



때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몫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기관 이용시 국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종합병원과 병·의원에 대해서 모두 증가하였다. 종합병원

의 경우 1999년에 24.5%만이 만족하였으나 2006년에는 45.2%가 만족하였으며, 병·의원의 경우에도 만족도는 25.4%에서 43.5%로 증가하였다.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사유를 보면 1999년에는 비용과다(45.0%)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장시간의 진료대기(39.9%)와 치료미흡(36.4%)이 주된 이유였는데, 2006년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료이용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만족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비용이 과다하다는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앞서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큰 구조적 조건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오래 기다려야 하고 치료 결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의 '장벽'은 많이 낮아졌지만 국민들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이 크고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도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조병희(서울대학교)

참고문헌

- 질병관리본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 조사결과 심층분석 연구: 건강면접 및 보건의식 부문』.
- 통계청. 2003.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과다한 의료비 부담

요 약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질병이 발생하여 의료를 이용할 때 지출하는 의료비 부담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 과다한 의료비 부담은 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장벽이 되어 특히 소득계층이 낮은 사람들의 의료이용을 저해하고, 나아가 과다한 의료비로 인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건강보험과 의료비 부담

1977년에 처음 도입된 의료보험은 그 적용대상이 급속하게 확대되어 도입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사회)보험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때 경험하는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높다. 특히 중병에 걸렸을 때 의료비는 가계에 큰 경제적 악영향을 미쳐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파탄을 경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의료를 이용할 때 환자가 지출하는 의료비는 크게 보험에서 급여하는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보험에서 급여하지 않는 비급여서비스에 대해서 환자가 전액을 지불하는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비 부담이 높다는 것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된 의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높다는 것과 함께, 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가 많아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는데 기인한다.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부담이 높다는 것은 현행의 의료보장제도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그 본연의 목표

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분산한다는 목적은 민간보험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보험의 보험료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어 아픈 사람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형평성과 사회적 연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이 민간의료보험보다 더 효과적이다.

의료비 부담 현황

2003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암환자의 총 치료비용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46.0%에 불과하여 의료비용의 54.0%를 암환자가 부담함을 알 수 있다(표 VIII-7). 심장기형의 경우에도 발생한 의료비용의 57.9%를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5대 암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해 해당 질환에 대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에 있어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표 VIII-7〉 4대 질환 진료비와 환자부담률 : 2003-2004

	전체진료비(억원)	환자부담률(%)
암	19,900	54.0
선천성 응고인자 이상	516	32.4
심장기형	606	57.9
주요 심장질환	559	47.9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2005

2005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환자의 본인 부담진료비 실태를 조사한 김정희 등(2006)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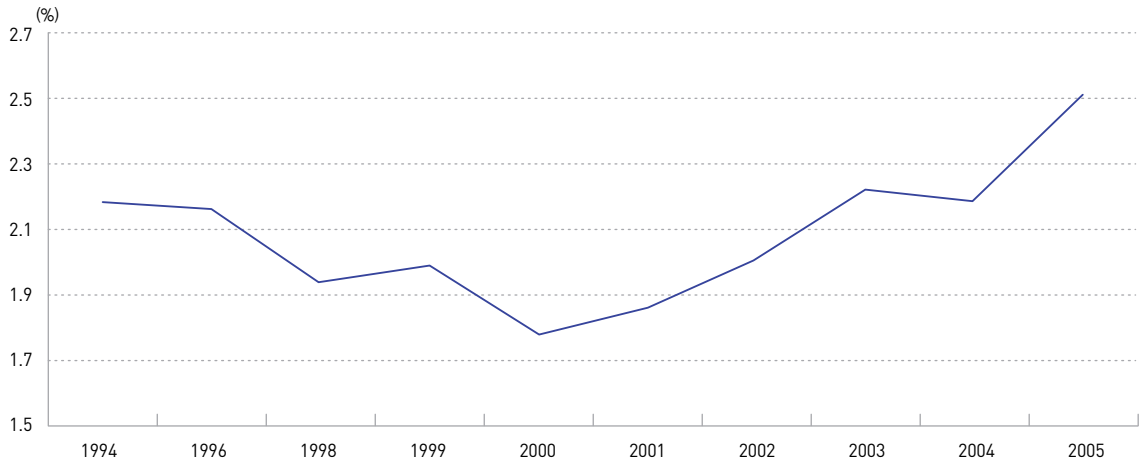
율은 약국을 포함하여 평균 61.8%이며(즉 의료비용 중 환자가 평균 39.2%를 부담), 약국을 제외했을 때 의료비용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은 입원이 57.5%, 외래는 58.4%로 추정되었다.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종합전문 52.9%, 종합병원 55.3%, 병원 55.4%, 의원 64.4%, 치과병원 35.7%, 치과의원 47.5%, 한방병원 28.6%, 한의원 63.2%, 약국 70.8%로 나타났다.

가구의 총 소비지출에서 기초생계지출로 볼 수 있는 특정 수준의 식료품비를 일괄적으로 제외한 금액에서 의료비 지출의 비중이 40%일 때를 ‘과부담 의료비 지출’로 정의하곤 한다. 2005년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과부담 의료비 지출을 분석한 결과, 전체 보건의료비를 기준으로 하면 조사 가구의 2.51%가 과부담 의료비 지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순만 외, 2007). 이런 과부담 의료비 지출의 변화 양상을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면, 과부담 의료비지출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이 1994년 2.18%에서 2000년 1.78%까지 감소하였다가 2000년 이후 계속 다시 증가하여 2004년 2.18%를 거쳐 2005년 이 값은 2.5%에까지 이르게 된다([그림 VIII-8]).

의료비 부담의 국제 비교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를 이용할 때 부담하는 비용의 국제 비교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지표는 국민의료비용 중 공공의료비의 비중이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의료 이외에도 국민들이 건강향상과 의료이용을 위해 지출하는 총 의료비용 중 공공재원(조세와 공공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

[그림 VIII-8]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 비율: 1994-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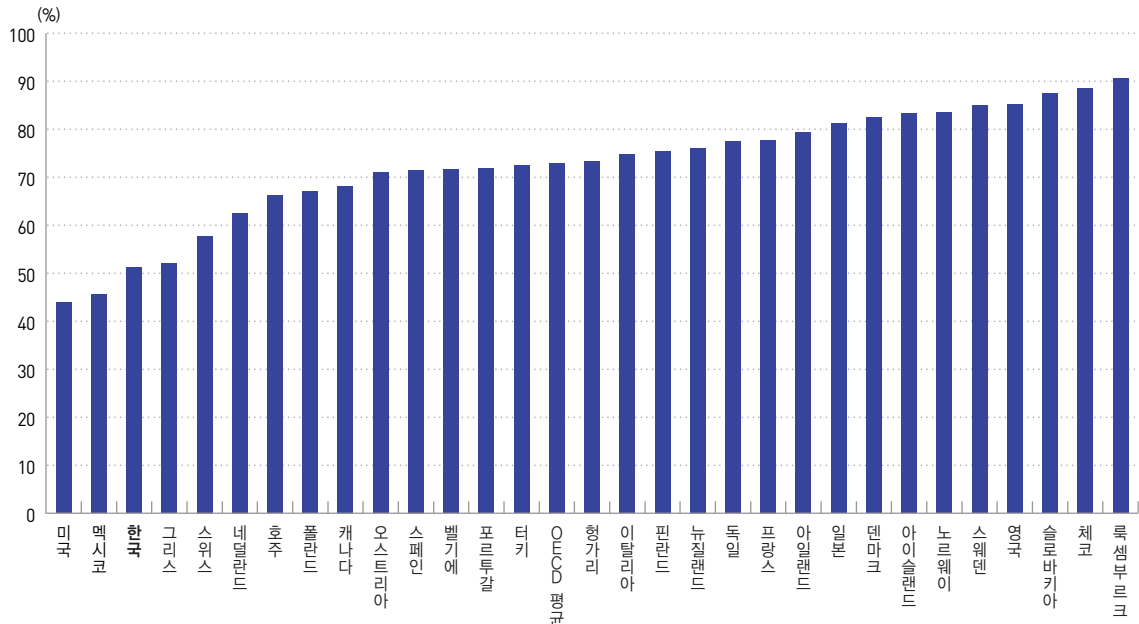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각 년도

낸다. 그에 반해 민간의료보험과 환자본인부담은 민간의료비 지출에 해당된다. 2004년에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은 51.4%로 OECD 국가들의 평

균치인 72.4%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그림 VIII-9]).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미국(44.7%)과 멕시코(46.4%) 다음으로 전체의료비용 중 공공재

[그림 VIII-9] 총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 2004



주: 1) OECD 평균-벨기에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평균

2) 호주, 벨기에, 독일, 일본, 체코는 2003년 자료이고, 덴마크는 2002년 자료임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06

〈표 VIII-8〉 가계지출 중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 1986-2004

(%)

	1986년	1988년	1990년	1992년	1994년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도시 전 가구	5.3	5.1	4.6	4.6	4.3	4.1	3.8	3.7	3.8	4.0
농가	5.4	5.9	6.2	6.5	6.6	6.4	6.9	7.3	7.9	6.0

출처) 통계청, 『가계조사』, 각 년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년도

원의 비율이 낮은 것이다.

미국과 멕시코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의료 보장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비용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심각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의료부문에 민간부문의 역할이 가장 큰 미국과 공공재원의 비중이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의료비 부담과 형평성

의료비에 대한 환자의 높은 경제적 부담은 의료보장제도가 추구하는 위험분산의 효율성과 비용부담의 형평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의료보장제도는 질병 발생으로 인한 과다한 비용 지출에 의해 야기되는 경제적 위험(의료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조금 납부하는 대신,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막상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경제적 지출이 과다하여,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지만 의료 이용 시 지불하는 본인부담은 소득과 무관하기 때문에, 의료 이용 시 지불하는 높은 본인부

담금은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건강 수준이 낮아서 많은 의료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나 경제적 취약 계층은 과도한 의료비용의 부담이 더욱 클 것이다.

이처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큰 결과 가계지출에 있어서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게 나타난다. 특이한 것은 〈표 VIII-8〉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가구의 경우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1986년 5.3%에서 2004년 4.0%로 지난 20여년간 점차 감소하였으나, 농촌 가구의 경우 그 비중이 1986년 5.4%에서 2004년 6.0%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보건의료비 지출의 상대적 크기와 그에 따른 영향은 가계의 경제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용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함을 알 수 있다.

의료비 부담의 영향이 가계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면, 저소득계층일수록 의료비 부담은 더 클 것이다. 2000년의 도시가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소비지출에서 보건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태진 외, 2004). 가구지출에서 식품비를 제외하였을 때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이 높은 가구는 더욱 증가하는데, 특히 저소득층에서 가계의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높은 의료비 지출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과다한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2000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보건의료비 지출 전에 빈곤층이 10.8%였으나, 보건의료비 지출 후에 빈곤층은 12.5%로 증가하여, 과중한 의료비의 지출로 인하여 빈곤층이 약 15.7%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에서 급여하지 않는 비급여 서비스가 상당한 규모로 존재하는 한, 의료보장제도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의료이용의 형평성에 대한 연구(권순만 외, 2003)에 의하면 환자의 높은 의료비 부담은 의료이용에 있어서도 소득계층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소득이 높은 계층은 낮은 계층에 비하여 의료이용량에 있어서는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의료비용의 총 지출이 훨씬 높아서, 이용하는 의료의 질(혹은 가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비급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는 유추가 가능한데, 만일 비급여 서비스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이러한 현상은 국민건강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최근 본인부담의 상한선 제도가 도입된 것은 큰 발전임에 틀림없으나 이것이 급여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되어 비급여에 대한 환자의 지출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의 급여가 제한적이고 그와 동시에 보험료도 높지 않은 저보험료-저급여 구조는 대상 인구의 확대에 초점을 두어 왔던 초기 의료보험 정책의 역사적 산물로 볼 수 있다. 단기간에 의료보험 대상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보험료체계가 필요하였고 따라서 급여 역시 제한적인 체계가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제도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향후 급여 확충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원래 의료보장제도는 재난적 성격의 비용 지출에 대한 보장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는 중증의 질환 또는 고액진료비에 대한 급여가 경증의 질환에 대한 급여에 비해 높지 않은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의 원리에 충실하려면 고비용이 요구되는 질병의 치료에 대한 보장을 높이고 대신 비용지출이 높지 않은 경미한 질환에 대한 보장성은 낮추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권순만(서울대학교)

참고문헌

- 권순만 · 손미아 · 이은주 · 조성일 · 조영태, 2007. 『건강형평성 관련 성과지표 개발연구 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
- 권순만 · 양봉민 · 이태진 · 오주환 · 이수형, 2003. “보건의료 이용의 형평성,” 보건경제연구 : 9(2).
- 김정희 · 정종찬, 2006.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건강보험포럼 : 4(1).
- 보건복지부, 200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공청회자료집, 2005. 6. 30.
- 이태진 · 양봉민 · 권순만 · 오주환 · 이수형, 2003. “보건의료 비용 지출의 형평성,” 한국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나아지지 않는 주관적 건강상태

요 약

- 한국인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지난 20년간 괄목할 경제성장과 평균수명 연장 등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 2005년도에 한국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OECD 28개국 중 24위를 차지하여 국제적으로도 그 수준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 특히 저소득층, 무직자, 비정규직 근로자, 여성, 사별/이혼/별거중인 사람, 농촌거주민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경제사회의 발전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에 대한 기대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안녕과 일상생활을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에 대한 자가평가 즉 주관적 건강상태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대변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의미를 갖는다. 사람들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말할 때는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조건 및 건강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주관적 건강상태는 개인의 건강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이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국민이 많은 국가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사회적 요인을 그만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특히 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사회적 위치, 교육, 직업, 소득, 성, 인종 등에 따라 한 사회 내의 물질적 조건, 사회적 응집력, 사회심리적 수준, 보건행태와 생리학적 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도 이러한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인간의 삶의 질을 대변하는 주관적 건강상태에 그동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다른 나라의 국민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며, 사회 집단별로 주관적 건강상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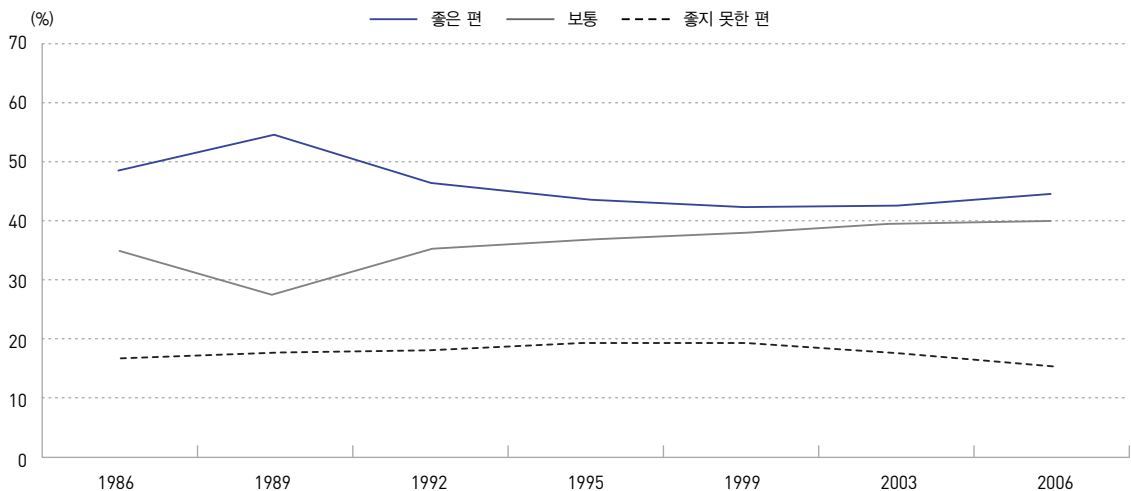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은 편’, ‘보통’, ‘좋지 못한 편’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1986년 ‘좋은 편’이라고 느낀 한국인은 48.7%, 1989년 54.8%, 1992년 46.5%, 1995년 43.7%, 1999년 42.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2003년 42.9%, 2006년 44.6%를 나타냈다. 즉, 지난 10년간 한국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경제성장과 평균수명연장 등 괄목할 만한 변화에

도 불구하고 크게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IMF 이후 1999년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는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이후 약간 호전되었으나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인의 주관적 상태가 경제위기 및 사회적 양극화라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 간 비교와 국내 지역 간 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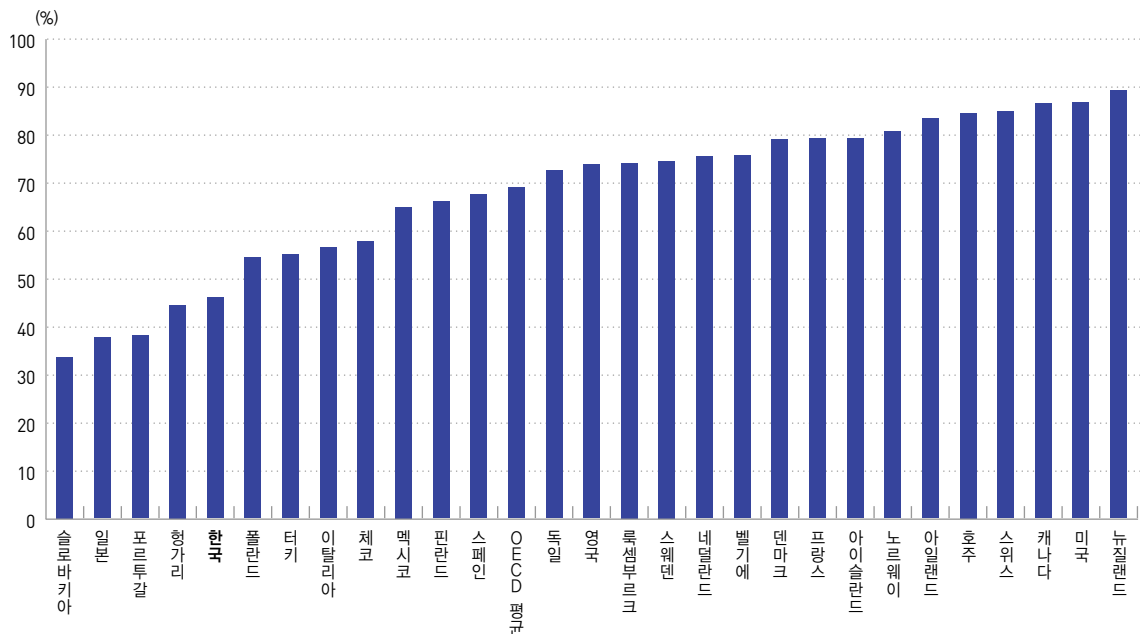
그렇다면 한국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면 어떤 수준일까? 2005년도에 한국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OECD 국가와 비교해 보았다. OECD 28개국에서 건강이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68.9%인데 비하여 한국은 47.4%로 OECD 28개국 중 2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주관

[그림 VIII-10] 한국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1986-2006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그림 VIII-11] OECD 국가의 주관적 건강상태 비교: 2005



주: '건강이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것임을 나타낸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국가로는 뉴질랜드(89.6%), 미국(88.7%), 캐나다(88.4%), 스위스(85.8%), 호주(84.1%), 노르웨이(81.0%) 등이고 우리나라보다 건강이 '좋은 편'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국가는 헝가리(45.0%), 포르투갈(39.0%), 일본(38.7%), 슬로바키아(34.4%) 등 4개 국가였다.

한편 여성은 남성보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나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41.3%)은 남성(53.7%)에 비해 건강이 '좋은 편'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2.4%p 적어 OECD 28개국 중 여성과 남성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 이라는 비율이 가장 차이가 많이 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성차가 많이 나타나는 국가는 헝가리(남성 50.3%, 여성 40.3%)

10.0%p, 포르투갈(남성 45.0%, 여성 34.0%) 11.0%p, 이탈리아(남성 64.0%, 여성 54.2%) 9.8%p, 스페인(남성 73.2%, 여성 63.5%) 9.7%p, 슬로바키아(남성 39.5%, 여성 30.6%) 8.9%p로 대부분 가부장적인 문화가 우세하다고 보이는 국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인식이 상대적으로 좋은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등 세계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은 국가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보자.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농촌거주민이 도시지역 주민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VIII-9). 1998년에 '건강한 편' 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농촌지역 주민의 43.3%, 도시주민의 46.0%였고 2001년에는 농촌지역 주민의 50.3%, 도시주민의 60.3%,

〈표 VIII-9〉 거주지별 주관적 건강상태: 1998, 2001, 2005

		(%)		
		건강한 편	보통	건강하지 못한 편
1998년	농촌	43.3	30.0	26.7
	도시	46.0	36.5	17.5
2001년	농촌	50.3	27.3	22.4
	도시	60.3	29.2	10.5
2005년	농촌	44.3	30.7	25.0
	도시	55.1	30.5	14.4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2005년에는 그 비율이 각각 44.3%(농촌지역 주민)와 55.1%(도시지역 주민)였다.

또한 도시지역 주민과 농촌지역 주민 중 ‘건강한 편’이라는 비율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편차가 확대되어 1998년 2.7%p, 2001년 10.0%p, 2005년 10.8%p로 농촌지역 주민과 도시지역 주민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시간이 흐를수록 편차가 커져 가는 것을 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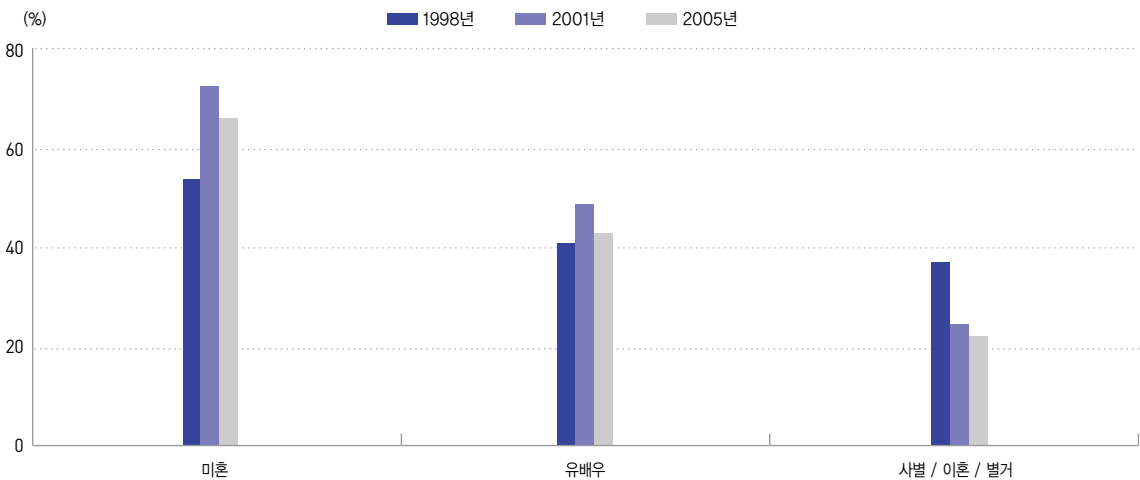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농촌거주민의 도시로의 이주가 가속화되고 농촌이 낙후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가 도시지역에 보다 집중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혼인상태별 차이

결혼상태 및 결혼유형은 사회적 지지 수준, 시간활동 정도, 경제적 수준 등에 차별화를 가져와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결혼연령이 늦어져 미혼 또는 비혼이 증가하고 있고, 이혼도 증가하고 있으며, 아이는 적게 낳고 돌보아야 하는 가족과 혼자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상태별로 주관적 건강상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시행되었던 세

[그림 VIII-12] 혼인상태별 주관적 건강상태: 1998, 2001, 2005



주: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시점에서 공통적으로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미혼이 유배우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의 경우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998년 53.3%, 2001년 72.3%, 2003년 66.5%였다. 유배우자의 경우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998년 40.9%, 2001년 49.0%, 2005년 43.0%였다. 유배우자와 현재 배우자 없이 사는 사람을 비교해 본 결과 유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사별/이혼/별거 중인 사람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이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유배우자의 비율은 사별/이혼/별거 중인 사람의 비율보다 각각 3.6%p(1998년), 24.8%p(2001년), 20.6%p(2005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세월동안 미혼자 중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001년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05년 다시 그 비율이 낮아졌어도 1998년보다 높아진 반면, 사별/이혼/별거 중인 자 중 건강한 사람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 다른 집단보다 사별/이혼/별거 집단의 건강상태가 정책적 관심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배우자는 그 비율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취업 및 종사상 지위별 차이

소득의 정도, 일자리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두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을 갖는다. 이러한 사회적 요인과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가구소득별 주관적 건강상태를 알아보았다(표 VIII-10)). 가구소득 수준은 가구원이 가용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자원의 정도를 결정짓고 이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1998년 99만 원 이하 소득자 중 30.0%, 100~299만 원 소득 중

16.2%, 300만 원 이상인 사람 중 14.0%가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는 99만 원 이하 가구소득의 가구원 중 33.0%, 100~299만 원대는 9.0%, 300만 원 이상은 6.0%가, 2005년에는 각각 41.6%, 13.9%, 8.5%가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조사가 실시된 시기별로 가구소득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지만 3번의 조사에서 모두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이 좋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가구소득이 99만 원 이하인 경우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 능력, 사회적 교류, 자아 정체성의 확립과 관련이 있고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 공식적인 일자리와는 다른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어 건강상태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공식적인 영역

〈표 VIII-10〉 가구소득별 주관적 건강상태: 1998, 2001, 2005

(%)

	건강한 편	보통	건강하지 못한 편
1998년 99만원 이하	40.0	30.0	30.0
100~299만원	46.7	37.1	16.2
300만원 이상	53.5	32.5	14.0
2001년 99만원 이하	36.9	30.1	33.0
100~299만원	60.9	30.1	9.0
300만원 이상	70.4	23.6	6.0
2005년 99만원 이하	28.8	29.6	41.6
100~299만원	54.4	31.7	13.9
300만원 이상	62.2	29.4	8.5

출처: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표 VIII-11〉 취업자, 전업주부, 무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1998, 2001, 2005

	건강한 편	보통	건강하지 못한 편
1998년 취업자	44.4	35.5	20.1
전업주부	35.8	36.8	27.4
무직자	38.8	26.8	34.4
2001년 취업자	54.3	33.1	12.6
전업주부	46.6	35.9	17.5
무직자	31.4	29.1	39.5
2005년 취업자	48.9	36.3	14.8
전업주부	37.7	38.0	24.3
무직자	29.1	28.4	42.5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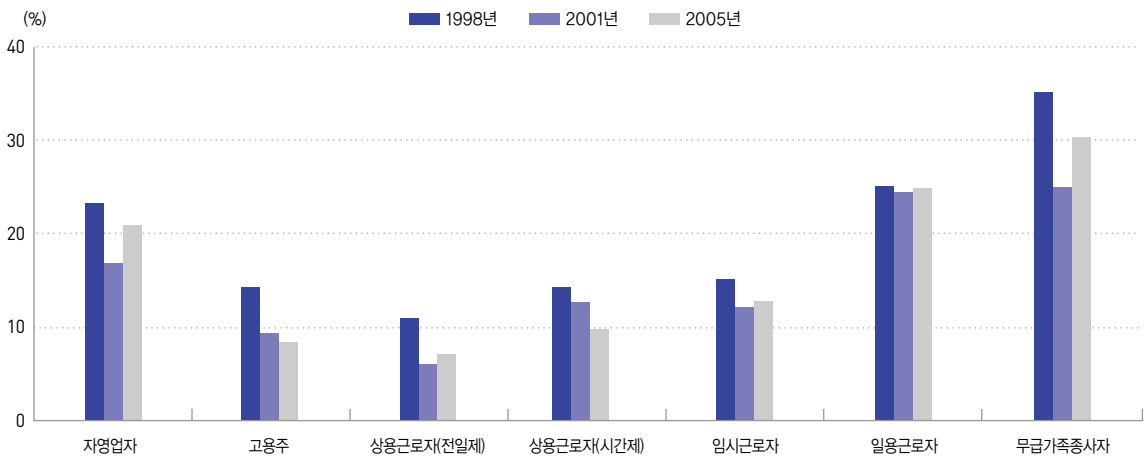
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사노동을 하는 전업주부, 직업이 없는 사람을 구분하여 주관적 건강상태를 알아보았다(〈표 VIII-11〉).

1998년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취업자의 20.1%, 전업주부 27.4%, 무직자 34.4%였다.

2001년에는 취업자의 12.6%, 전업주부 17.5%, 무직자 39.5%가 2005년에는 취업자의 14.8%, 전업주부 24.3%, 무직자 42.5%였다. 조사가 실시된 3기 모두에서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취업자에서 가장 적었고 그 다음이 전업주부였으며 무직자가 가장 많았다. 특히 취업자 중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3기 각각 20.1%, 12.6%, 14.8%로 감소 추세인 반면 무직자는 34.4%, 39.5%, 42.5%로 시간이 흐를수록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이 흐를수록 취업 여부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수준의 간격이 커져 취업자 대비 무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욱 나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직종별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2005년을 기준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사무직의 4.6%, 전문행정관리직의 6.3%, 판매서비스직의 13.0%, 기능단순노무직의 17.0%, 농업업종사자의 37.9%로 나타났다.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

〔그림 VIII-13〕 종사상 지위별 주관적 건강상태: 1998, 2001, 2005



주: '건강한 편' 이라고 응답한 비율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무직 종사자보다 대체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대답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 10년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직종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관련성은 지난 세월 동안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직종뿐 아니라 종사상 지위 또한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종사상 지위는 경제력, 권력 및 권위의 정도, 고용불안정성 등을 대표하는 지표이다. 1998~2005년 동안 전체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무급가족종사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임시근로자, 시간제 상용근로자, 고용주, 전일제 상용근로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VIII-13)). 이러한 순위는 지난 10여 년 동안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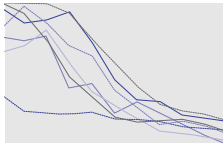
특히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고 여성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높은 현실에서 상용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시간제, 임시근로자, 일용직근로자)의 주

관적 건강상태를 성별로 알아보았다. 상용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든 연도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남성보다 낮게 나타났다. 남녀 상용근로자와 남녀 비정규직 중에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든 연도에서 가장 높아 비정규직 여성집단의 주관적 건강이 가장 취약함을 알 수 있다. 1998년 남성 전일제 상용근로자의 10.6%, 여성 전일제 상용근로자의 13.0%, 남성 비정규직의 15.7%, 여성 비정규직의 27.3%가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응답하였고, 2005년도에는 남성 전일제 상용근로자의 6.5%, 여성 전일제 상용근로자의 8.2%, 남성 비정규직의 15.4%, 여성 비정규직의 19.7%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주(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한국의 사회동향 2008

Korean Social Trends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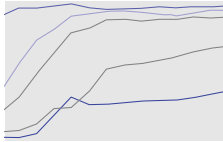


Population

Household & Family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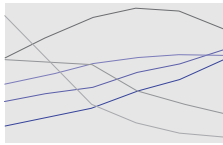
Labor



Income & Consum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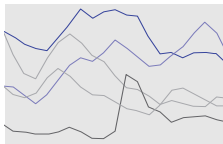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Health

Welfare



Environment

Social Security

Social Cohesion

복지 부문의 주요 변화 • 조병희	216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문제 • 정무권	22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빈곤문제 • 정무권	236

IX. 복 지

Welfare

복지 부문의 주요 변화

복지 분야는 보통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사회보험은 퇴직 이후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국민연금제도와 질병 치료에 대비하는 건강보험제도, 일시적인 직장 상실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실업보험(고용보험), 근로 중에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포함한다. 금년부터 실시되는 노인들의 신체장애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요양보험도 사회보험에 포함될 수 있다. 사회보험 분야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는 전체 대상인구 중에서 사회보험 수혜자의 비율인 '적용률'과 필요한 욕구에 대한 보상수준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가입률이나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의 부담률 같은 지표들이다.

공공부조는 사회 최하위 빈곤층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의 조세를 재원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상자들에게 생활비 또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전체 노인인구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 같은 지표를 들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특정 집단의 사회적 욕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예를 들어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과거에는 기아나 부랑아에 대한 시설보호가 주요 내용이었지만 현재는 일하는 어머니의 수가 증가하면서 보육서비스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복지시설수, 등록장애인수 같은 지표들로 그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사회보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사회적 위험이란 빈곤, 노령, 질병, 장애, 실업 등 개인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들을 말한다.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국민 또는 대상 집단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해결하는 사회보험방식과 국가가 조세를 거두어 해결하는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여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국민 전체 또는 노동자 집단 전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하지만 보험혜택(급여)은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제도에서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질병 치료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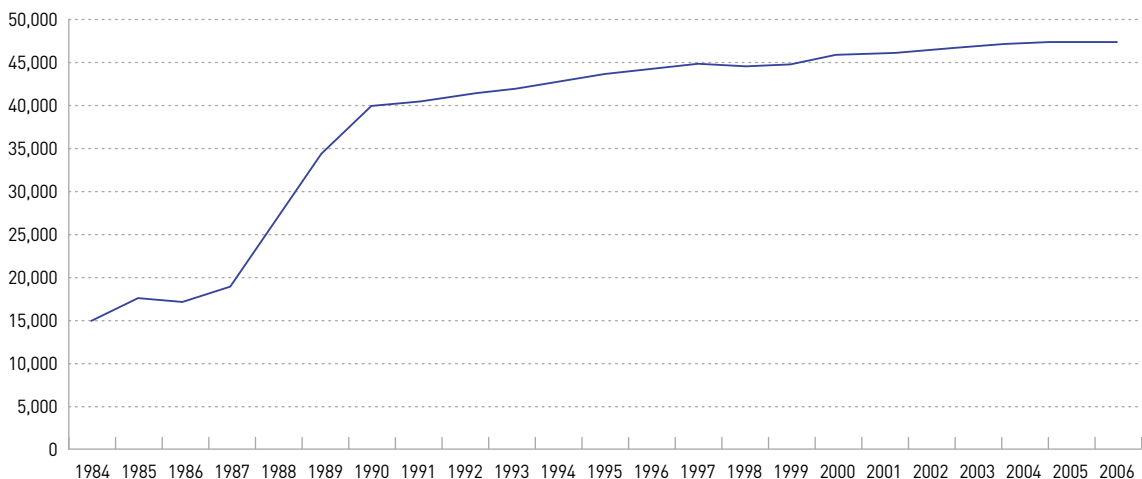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실시된 사회보험제도이다. 1964년에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1982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되었고,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2000년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적용하게 되었다.

사회보험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지표는 ‘적용률’과 ‘보장수준’이다. 산재보험의 적용률은 전체 취업자수 대비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의 비를 말한다. 산재보험은 주로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적용률은 1980년에 27.4%였던 것이 1990년에 41.8%로 높아졌고, 이후 약 45%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산재보험의 적용률이 45%에 불과한 이유는 농림어업 등 애당초 산재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가 많고, 또 개인택시 운전기사처럼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다름없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나 비정규직 근로자처럼 의무가입대상이지만

[그림 IX-1] 건강보험 적용인구: 1984~2006

(적용인구: 1,000명)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년도

사업자가 이를 회피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는 산재보험이 필요하지만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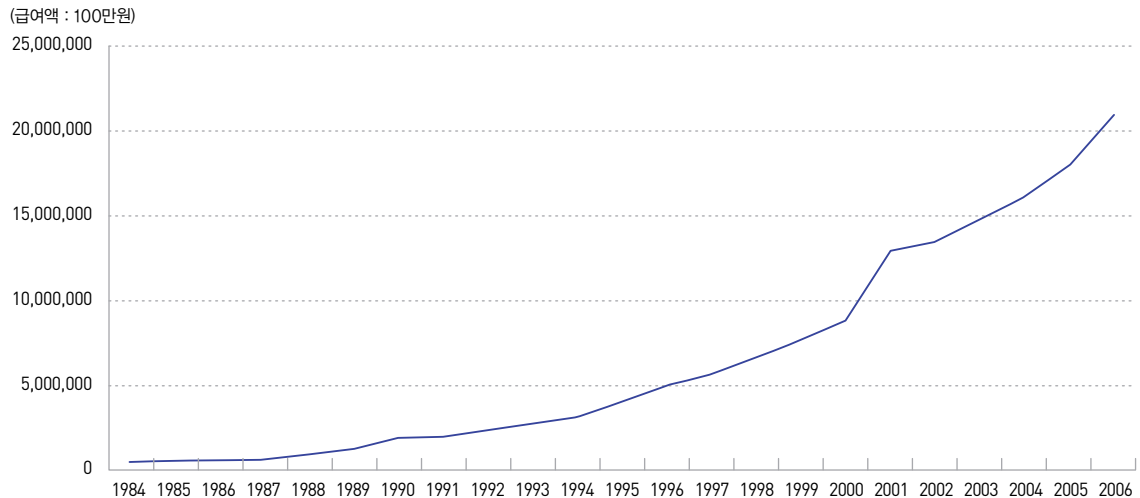
산재보험의 보장수준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수준인데 예를 들어 산재로 인한 소득손실에 대한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급여의 70.0%, ‘상병보상연금’은 1급 90.1% 등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산재보험의 보장수준은 사회보험 중 비교적 높은 편이다.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에 500인 이상 고용 사업장부터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적용대상 인구를 확대하였고 1990년까지 전 국민에게 적용하게 되었다. 적용률의 지표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보면 1987년에 1,900만 명에서 3년 뒤인 1990년에는 3,999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IX-1]). 이것은 국민의 과반수를 차지하던 도시자영업자와 농어민에게 일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결과이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질병치료를 위하여 지출된 총 급여비도 1987년에 6,278억 원에서 1990년에 1조 9,032억 원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그림 IX-2]). 2006년 건강보험총부담액은 20조 9,316억 원으로 증가하여 1990년 대비 10배 이상의 급격한 상승을 보여준다. 보험 급여액은 대략 5년 사이에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한편으로는 국민의 의료이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의료기술이 고가화되고 있는 점, 그리고 노령화와 함께 노인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로 볼 때 가까운 미래에 한국도 서구 국가들처럼 의료비 통제가 주요 정치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건강보험 급여비가 급격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은 아직 크게 미흡한 편이다. 전체 의료비 중 공공지출 의료비의 비중은 1985년에 32.9%에서 점차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48.5%가

[그림 IX-2] 건강보험 급여총액: 1984-2006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년도

〈표 IX-1〉 전체의료비 중 공공지출 의료비 비율: 1985-2006

	공공의료비 비율(%)
1985년	32.9
1990년	39.5
1995년	38.1
2000년	48.5
2002년	53.1
2004년	52.3
2006년	55.1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07

되었고 2006년에는 55.1%가 되었다(〈표 IX-1〉).

그런데 이러한 공적 지출 수준은 프랑스 79.7%, 독일 76.9%, 일본 82.7% 등에 비하면 많이 낮은 수준이다. 의료비에 대한 공적 지출 수준이 55%에 불과하다는 것은 병원을 이용할 때 개인이 직접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직접 부담이 크면 저소득층은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 모두의 위험 보장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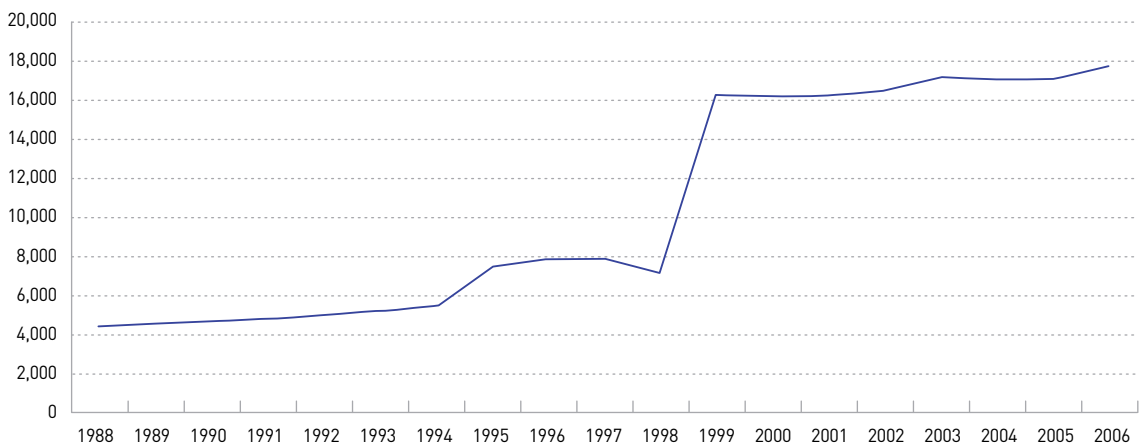
의료비의 공공지출의 몫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정책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금제도도 1988년이 전환기였다. 그 이전에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연금제도만이 존재하였고 그 적용인구는 1987년에 87만 명에 불과하였다. 1988년에 일반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면서 공적연금 가입자수는 급속하게 증가한다(〈그림 IX-3〉). 1988년에 534만 명이던 공적연금 가입자수는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98년에 828만 명이 되었고,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어 1999년에 가입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적연금 가입자수는 1,738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가입자수는 완만하게 증가하여 2006년에 1,899만 명이 되었다.

연금제도의 중요 문제점 중 하나는 우선 가입대상에 모든 국민이 포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18세 이상 취업자 중 공적연금 가입자는 2006년에 82.1%였다. 건강보험이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과 달리 공적

[그림 IX-3] 국민연금 가입자수: 1988-2006

(가입자수: 1,000명)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년도

연금은 전 국민의 약 60% 정도만 가입되어 있어 적용률이 낮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근 10년간 별 변화가 없다. 그 주된 이유는 법적으로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대부분 연금가입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역가입자(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약 절반이 소득 정보 부실 등으로 납부예외자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은 현재 연금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50%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가입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연금액도 적어지게 된다. 2006년 현재 국민연금의 1인당 연금액은 218만 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의 연금액이 낮은 것은 연금제도가 실시된 역사가 짧아 가입기간이 짧았던 점과 당초 보험료가 낮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은퇴자들의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하여 당사자들이 추가적으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보장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남아 있다.

사학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실시된 지 오래되었고 보험료의 수준도 높아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연금액의 수준이 높다. 사학연금은 1인당 연금액이 2,330만 원, 공무원 연금은 1,929만 원에 달하여 국민연금의 연금액을 크게 상회한다.

그런데 가입자 대비 연금수급자의 비율은 국민연금이 11.3%, 사학연금이 10.1%로 10명의 가입자가 돈을 내어 한 명의 수급자를 부담하는 형태이지만 공무원 연금의 경우에는 23.4%로 4명의 가입자가 한 명의 수급자를 부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구조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의 가입자 대비 수급자의 비중이 커진 것은 2000년대 들어와 발생한 현상이다. 퇴직자는 증가하였지만 신규 임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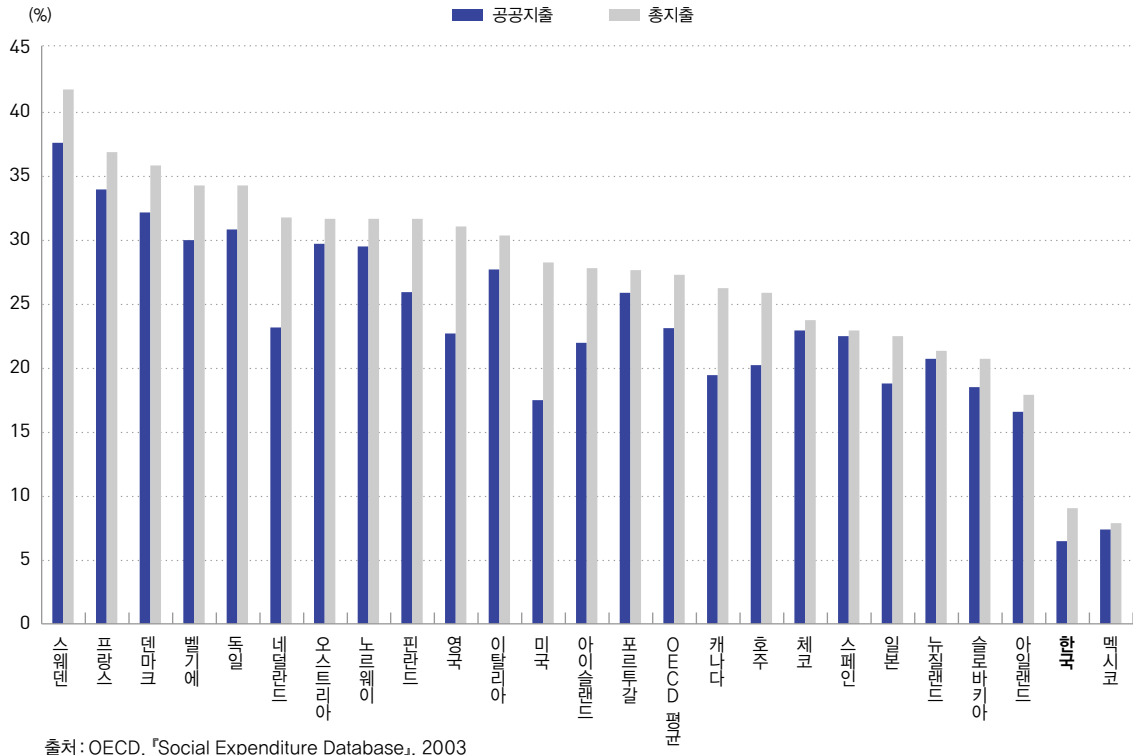
는 상대적으로 정체되면서 수급자의 비중이 커지게 된 것이다.

공무원 연금의 연금액은 연금수급자와 1인당 연금액이 증가하면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1991년에 2,000억 원이던 연금액은 이후 매년 1,000억 원씩 증가하여 1998년에 1조 1천억 원이 되었고 이후 증가속도가 더 빨라져서 2000년에 2조 원, 2003년에 3조 1천억 원, 2005년에 4조 1천억 원에 달했다. 국가적으로는 총 연금액의 규모가 커져 이에 대한 재정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연금제도는 미가입자가 많이 남아 있고 연금액의 수준이 낮은 점이,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으나 급여의 보장수준이 낮은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재정을 확충해야 하는데 국민들은 사회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사회보험료는 보통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2007년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7%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0%가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은 지역, 성별,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국민연금과 이외에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수준은 보통 GDP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의 백분율로 나타내는데, 2003년에 한국은 9.3%로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7.8%)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이다(그림 IX-4). 서구 국가들은 대체로 적으면 약 20%, 많으면 약 40% 수준이며 OECD 평균은 27.1%이다. 한국의 경우 사회보장 지출의 절대 규모가 작은 것은 물론 지출구조에서도 공적 지출의

[그림 IX-4] OECD 국가의 GDP 대비 사회보장비지출 및 공공지출의 비율: 2003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즉 사회보장비도 적고 그나마 민간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 정책이 강화되면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수도 증가하였다. 1998년에 2,887명이던 관련 공무원 수는 1999년에 4,095명으로 증가하였고, 2002년에 6,738명, 2006년에 9,805명으로 증가하였다.

공공부조

사회보험에 의하여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빈곤층을 위한 제도적 해결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2000년 이전에는 영세민 또

는 생활보호대상자 제도가 있었는데 주로 신체적 노동능력이 상실된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가 '시혜적' 차원에서 제공하던 공공부조였다. 새로 만들어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혜적 차원에서 벗어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가구 소득과의 차액을 국가가 보상하는 근대적 방식의 공공부조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는 연도별로 약간의 증감이 있지만 대략 15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고 총인구의 3%에 해당한다([그림 IX-5]).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독립 가구를 유지하고 있는 일반수급자와 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수급자가 있다. 2006년에 일반수급자는 144만 명이고 시설수급자는 8만여 명이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에 의료급여제도가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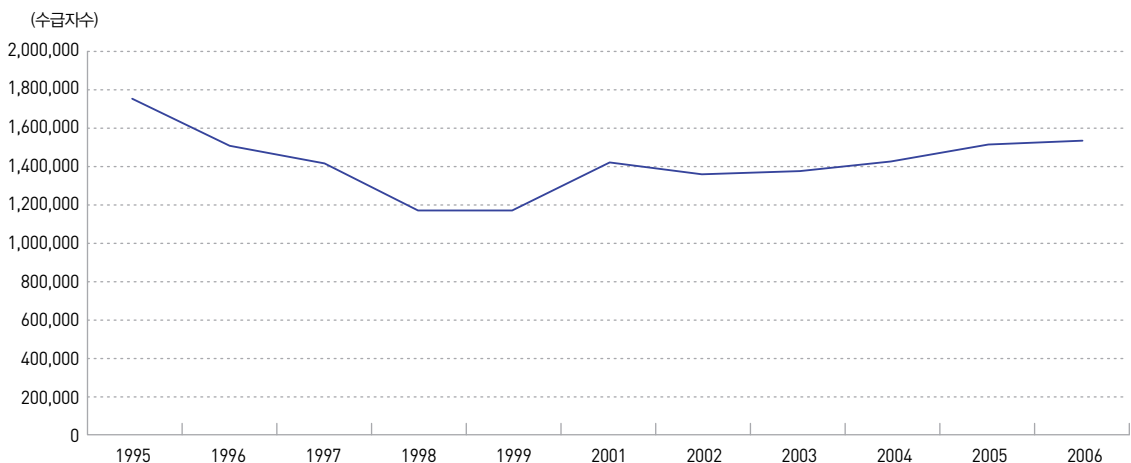
기초생활보장과 동시에 의료급여 수급권을 지정받기도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만을 지정받기도 한다. 따라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수보다 일정하게 많다. 2006년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82만 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153만 명보다 약 30만 명 많았다.

그런데 국가의 부조를 받는 빈곤층이 총인구의 3%라는 것은 지나치게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수급권 지정을 받으려면 최저생계비에 미달함과 동시에 부양의무자가 있는지를 조사받게 된다. 빈곤층의 경우 가족해체가 많고 자식들과 왕래가 없이 독거하는 노인가구들이 많은데 주민등록상으로 부양의무를 가진 자식들이 있을 경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지정을 받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렇듯 사실상 빈곤층과 다름없는 차상위 계층의 문제가 공공 부조의 과제가 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최저생계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OECD는 상대적 빈곤 개념에 입각하여 일반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최저생계비로 제안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는 절대적 빈곤에 가깝게 최저생계비를 산정하고 있다. 2008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27만 원이었는데 실제 생활비에 크게 미달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주거비나 교육비가 많이 부족하고 핸드폰처럼 일용직 노무자들에게 구직을 위하여 필수적인 품목들이 제외되어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 연령층에 분포되어 있다. 총 수급자 144만 명 중에서 19세 미만 수급자가 42만 명이고, 60세 이상 노인층이 44만 명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01년 33만 명에서 매년 약간씩 증가하여 2006년에는 37만 명이 되었다(〈표 IX-2〉). 반면 노인인구 대비 수급자의 비율은 2001년 9.3%에서 2006년 8.1%로 낮아졌다. 이는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수급권을 지정받는 노인의 수는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의 수와 비교할 때 보다 분명해진다. 1990년에 총 노인인구 대비 생활보호대상 노인은 13.7%였다. 이후 이 비율은 점차적으로 하락하여

[그림 IX-5]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1995-2006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표 IX-2〉 노인인구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 : 1999-2006

	총노인인구(A)	생활보호/ 기초생활 수급자(B)	B/A (%)
1999년	3,223,576	241,303	7.5
2001년	3,578,370	334,272	9.3
2002년	3,772,075	329,251	8.7
2003년	3,968,118	340,527	8.6
2004년	4,165,974	352,348	8.5
2005년	4,366,642	367,658	8.4
2006년	4,585,702	373,595	8.1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0~2050』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1995년에 10% 이하로 떨어졌고 1999년에 7.5%가 되었다. 2001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와 함께 일시적으로 9.3%로 증가하였지만 이후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2006년에 8.1%가 된 것이다. 이것은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점과 연금수급자의 증가 등 노인들의 생활여건이 약간씩이나 개선된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시설중심으로 제공되어 왔다. 시설수의 추이를 보면 아동복지나 정신질환요양 또는 부랑인 보호시설 등은 그 수가 거의 정체 내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노인복지시설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표 IX-3〉). 1996년에서 2006년 기간 동안 아동복지관은 271개소에서 282개소로 약간 증가하였고, 정신요양소는 78개소에서 57개소로, 그리고 부랑인보호시설은 42개소에서 38개소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은 165개

소에서 1,181개소로 급격한 증가를 하였다. 장애인복지시설도 177개소에서 288개소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노인복지시설의 증가는 아주 최근의 일이다. 2002년까지도 노인복지시설은 299개에 불과하였지만 2005년과 2006년에 수백 개가 새로 개설되었다. 이것은 노인들에 대한 장기요양제도가 실시되면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노인관련 시설이 확충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IX-3〉 사회복지시설수 : 1996-2006

	아동복지 시설	노인복지 시설	장애인복지 시설	정신질환 요양시설	부랑인 시설
1996년	271	165	177	78	42
1997년	274	173	180	73	43
1998년	272	200	192	67	43
1999년	271	229	193	64	44
2000년	269	250	196	55	45
2001년	274	288	206	55	43
2002년	274	299	213	55	37
2003년	279	351	225	55	37
2004년	275	341	237	55	37
2005년	282	825	265	56	38
2006년	282	1,181	288	57	38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노인시설은 건강한 노인들의 숙소 역할에 한정된 양로시설, 신체수발보조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심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로 나누어진다. 또한 각 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 정도에 따라 입소자 본인의 부담이 무료, 실비, 유료인 곳으로 나누어진다. 2000년대 초반에는 무료 시설이 대부분이었으나 2005년부터 실비 또는 유료시설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표 IX-4〉).

예를 들어 양로시설의 경우 2000년에는 무료시설이 93개소, 실비 4개소, 유료 22개소였으나 2006년에는 무료 145개소, 실비 132개소, 유료 74개소로 실비와 유료시설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노인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의 경우도 비슷하다. 노령화와 함께 ‘실버산업’이 발전하면서 ‘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유료양로원이 증가하고 있다.

〈표 IX-4〉 양로시설수 : 2000~2006

	무료시설	실비시설	유료시설
2000년	93	4	22
2001년	93	4	25
2002년	89	3	28
2003년	85	5	29
2004년	78	12	41
2005년	137	64	69
2006년	145	132	74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노인시설의 증가추세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사회통계조사’에서 노인들이 ‘자녀와 동거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52.5%로 ‘같이 살고 싶다’는 응답 47.5%보다 더 높았다. 2007년에는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60%로 더 증가하였다. 또한 자녀와의 동거를 원치 않는 노인의 대부분(85.3%)은 시설보다 자기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었다.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곤란과 건강 문제이다. 2005년 ‘사회통계조사’에서 45.6%, 2007년에는 40.1%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경제적 곤

란을 지적하였다(〈표 IX-5〉). 특히 학력이 낮은 노인들이 경제적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대학 졸업 노인이 27.4%, 고교 졸업 노인이 37.1%인데 반하여 중학 졸업 노인은 46.2%, 초등학교 졸업 노인은 40.9%에 달하였다. 2005년에는 건강문제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크게 부각되었으나 2007년에는 건강문제(40.7%)가 경제적 어려움(40.1%)보다 약간 더 높게 응답되었다. 건강문제는 남자(34.7%)보다는 여자(45.2%)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2005년에 조사된 노인 430만 명중 102만 명이 일상생활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140만 명이 신체적, 정신적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었다.

〈표 IX-5〉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 2005, 2007

(%)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기 타
2005년	45.6	27.1	27.3
2007년	40.1	40.7	19.2
남자	41.8	34.7	23.5
여자	38.9	45.2	15.9
60~64세	44.2	33.5	22.3
65~69세	42.3	38.4	19.3
70~79세	37.1	45.6	17.3
80세 이상	31.7	51.8	16.5
초졸 이하	40.9	44.1	15.0
중졸	46.2	32.4	21.4
고졸	37.1	35.6	27.3
대졸 이상	27.4	38.9	33.7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노인들의 소득과 관련해서는 61.3%가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었고, 이중 2/3는 근로소득으로 1/3은 예금 또는 적금이나 연금 또는 퇴직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전체 노인 중 연금생활자는

10%이고, 재산소득이나 저축이 있는 노인도 11%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다수 노인들은 자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근로활동을 통해 생활비를 조달해야 한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 436만 명 중 취업 노인은 105만 명이고 이들 대부분(740,000명)은 농업·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는 취업자가 10명 중 1명도 채 안 된다. 따라서 다수의 노인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주변부 일자리에서 일을 하거나 전혀 일을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종종 자살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문제가 심각해지기 이전에는 아동 및 장애인들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대상이었다. 아동복지 문제는 기아, 미아, 미혼모, 부랑아, 학대아동 등 여러 형태로 발생한다. 기아는 1996년에 1,276명이었던 것이 2000년대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6년에 230명으로 축소되었다(표 IX-6).

미아의 경우도 1997년에 342명이었던 것이 점차 감소하여 2006년에 55명으로 축소되었다. 반면 미혼모 아동은 1996년에 1,379명이던 것이 증감을 기록하다 2001년에 4,897명으로 정점을 기록하였고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6년에는 3,022명이 되었다. 아동복지의 다른 영역은 소년소녀가장인데 1996년에 소년소녀가장 가구수는 8,849가구, 가구원수는 16,001명이던 것이 1997년에 가구수 9,544가구, 가구원수 16,547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에 점차 감소하여 2006년에는 가구수 2,086가구, 가구원수 3,271명이 되었다. 아동입양도 1996년 3,309명에서 매년 약간씩 증가하여 2001년에 4,206명까지 되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06년에 3,231명이 되었다. 이렇듯 2000년 이후

아동복지의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IX-6〉 아동복지 수요자수: 1996-2006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소년소녀가장 (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원)
1996년	1,276	189	1,379	8,849	16,001
1997년	1,372	342	1,833	9,544	16,547
1998년	1,654	277	4,120	8,407	13,627
1999년	1,432	216	3,058	7,924	-
2000년	1,270	144	2,938	6,229	9,579
2001년	717	98	4,897	5,248	8,060
2002년	634	74	4,337	4,531	6,947
2003년	628	79	4,457	3,994	6,184
2004년	481	62	4,004	3,504	5,444
2005년	429	63	2,638	2,755	4,332
2006년	230	55	3,022	2,086	3,271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반면 가정 내 자녀양육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어머니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조부모나 다른 가족이 보육을 담당해줄 수 없는 가구에서는 보육시설이나 학원 등 기타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총수는 1996년 12,098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9,233개소가 되었다. 이중 비교적 시설이 양호한 국·공립 시설이나 직장보육시설은 1/10도 되지 않고 대부분은 민간보육시설이거나 가정보육시설이다.

2005년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자녀가 1세 미만일 경우에는 부모가 양육하는 경우가 83.1%이지만 3~4세가 되면 그 비율은 60.2%로 낮아진다. 반면 유치원(38.4%)과 보육시설(35.8%)에 보내는 경우가 크게 증가한다. 또한 5~6세가 되면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60.8%나 된다.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표 IX-7〉 보육시설수: 1996-2006

	국·공립 시설	민간 시설	직장 시설	가정 시설
1996년	1,079	6,037	117	4,865
1997년	1,158	8,172	158	5,887
1998년	1,258	9,622	184	6,541
1999년	1,300	10,558	207	6,703
2000년	1,295	11,304	204	6,473
2001년	1,306	11,794	196	6,801
2002년	1,330	12,679	199	7,939
2003년	1,329	13,644	236	8,933
2004년	1,349	14,728	243	10,583
2005년	1,473	15,243	163	11,388
2006년	1,643	15,405	298	11,8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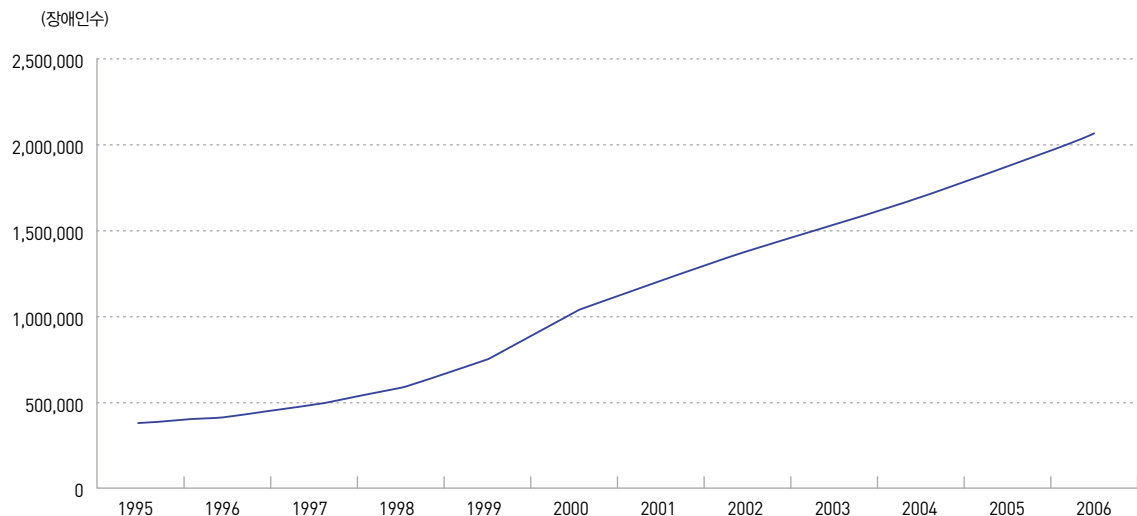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 보육자원과 자료

맡길 수 있게 되면 어머니가 취업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5~6세 아동 중에서 아동 혼자 또는 또래끼리 보내는 경우가 16.1%나 되어 안전사고의 위험 등

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장애인수를 나타내는 지표를 '장애인 출현율'이라 하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여 산출된 장애인 출현율은 1995년에 2.4%, 2000년 3.1%, 2005년 4.6%로 계속 증가하여 왔다. 장애유형별 장애인 출현율은 2005년의 경우 지체장애가 2%, 시각장애 0.4%, 청각장애 0.4% 등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장애출현율 10%나 미국 19.3%, 영국 19.7% 등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각 국가마다 법정 장애범주와 정의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이 낮은 것은 감추어지거나 보고되지 않은 장애인이 많음을 의미한다. 2005년 장애인 추정치는 214만 명인데 등록된 장애인은 186만 명이었다.

[그림 IX-6] 등록 장애인수: 1995-2006



출처: 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자료

등록 장애인수는 1995년 37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206만 명이 되었다. 법적으로 장애인의 기준은 1981년 장애인복지법 제정당시에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등 5개 범주만 해당되었으나 1999년과 2003년에 10개 범주가 추가되었다. 기존 범주 장애인의 등록 증가와 함께 신규 범주 장애인의 등록이 이루어지면서 등록 장애인 수는 매년 15~20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된 근로자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대상기

업 중 의무고용을 준수하는 업체의 비율은 2005년에 10.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 27.1%가 되었고 2006년에는 약간 하락하여 23.8%가 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인구대비 취업자수는 2000년에 34.3%, 2005년에 34.1%의 분포를 보였다. 장애인 취업은 취업률도 낮지만 단순기능직 등 취업분야의 제한이 큰 점 등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다.

조병희(서울대학교)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문제

요 약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노인빈곤문제와 노후생활보장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 우리의 연금제도가 노후생활보장제도로서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재정안정화문제와 사각지대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

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노후생활 보장 기능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이다. 임금 노동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소득의 원천이 되었던 직장이나 활동에서 은퇴를 하게 된다. 일을 할 때에 저축을 해두지 못하면 은퇴 후 대부분은 빈곤층이 된다. 이에 따라 선진복지국가들에서는 일찍이 연금제도를 시행했다. 이들 국가의 연금제도는 길게는 100년 이상 짧게는 적어도 5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갖고 일반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복지제도로 발전해 왔다.

그런 가운데,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이 선진복지국가의 복지개혁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가 모두 인지하고 있듯이, 사람들의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출산율이 저하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세대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노인세대를 위한 재정적 여력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선진복지국가들은 오랫동안 일반 국민들의 노후생활보장에 기여해왔던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 안정화에 노력하면서 제도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도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우리 경제

의 양극화에 따라 노후생활보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연금제도의 개혁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추이를 개관해보고 연금제도와 이 제도의 밑받침이 되는 재정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노인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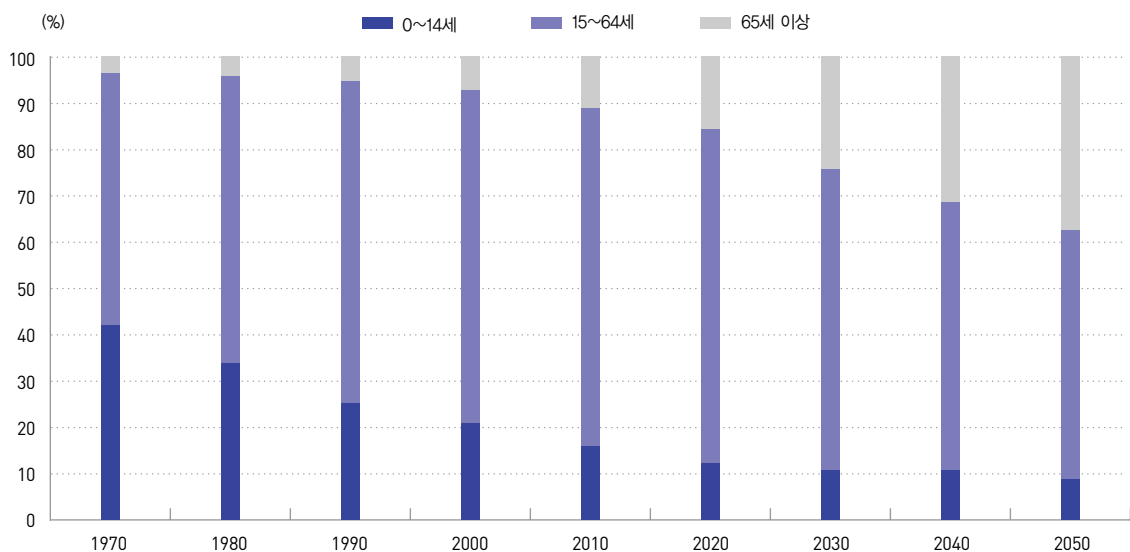
이 책의 첫 장에서 우리는 한국의 인구구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사회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여기에서는 먼저 고령화가 우리 경제와 노후생활보장 문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우리 인구의 장기추계 결과에 의하면 201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10.9%이던 것이 2050년에는 37.3%로 급격히 증가하며, 반면에 우리의 생산가능인구인 젊은 세대는 2010년 72.8%

에서 2050년 53.7%로 급격히 줄어든다([그림 IX-7]). 이는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급격히 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에 우리가 노인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의 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하면 그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20~64세)가 노인세대(65세 이상)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의 비율은 2000년까지는 11.4%로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그러나 2050년에 이르면 그 비율은 67.5%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때에는 고령화사회 수준이 제일 높은 일본의 79.5%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노인세대 부양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연금제도는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노인빈곤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상대적 빈곤개념으로 측정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65세부터 75세의 노인빈곤율은 34.2%로 OECD 국가 중에서 가

[그림 IX-7] 인구계층별 인구구성비 추계: 1970-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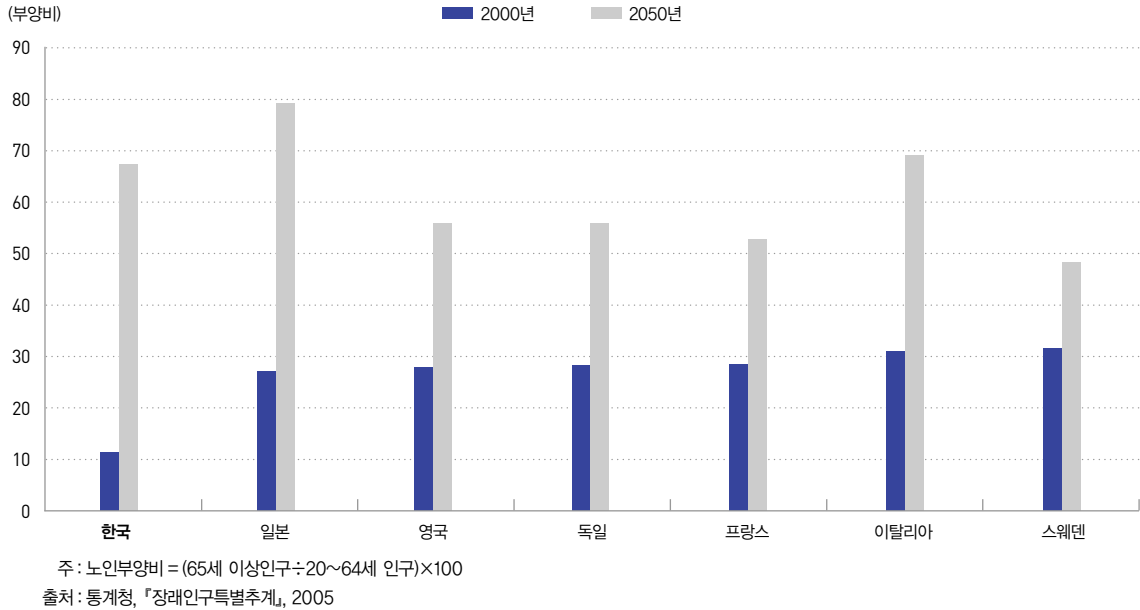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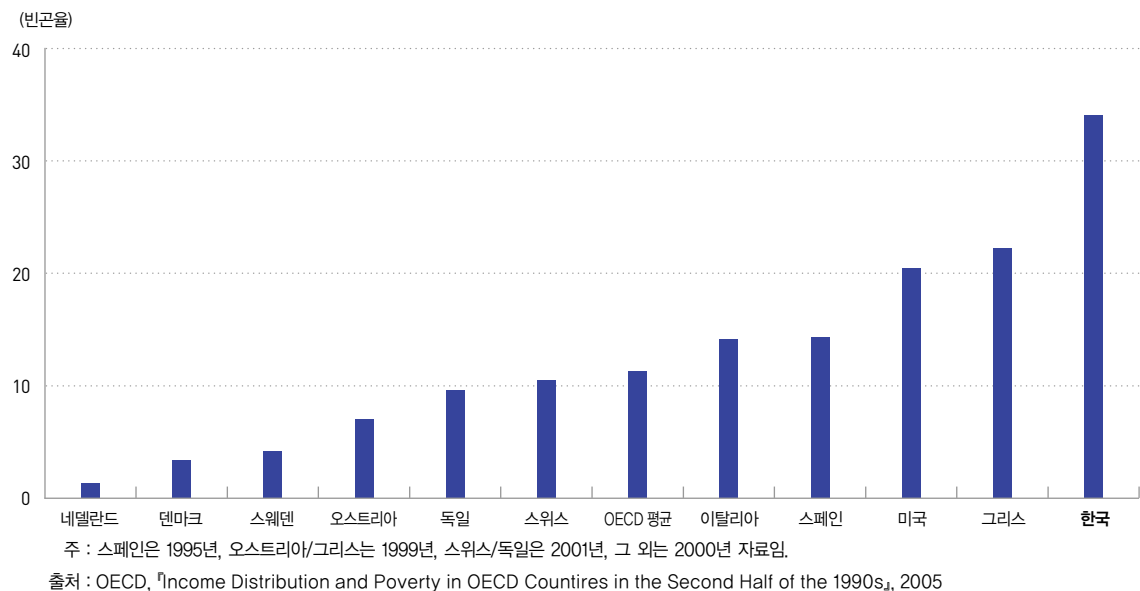
장 높다(그림 IX-9). 다른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연금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노인빈곤의 해소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우

리나라는 연금제도가 늦게 실시되어 현 노인세대들의 소득보장의 기능이 아직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고령화

[그림 IX-8] 주요 OECD 국가의 노인부양비: 2000, 2050



[그림 IX-9] 주요 OECD 국가의 노인 빈곤율: 2000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앞으로 30~50년 이후에는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다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는 우리의 사회복지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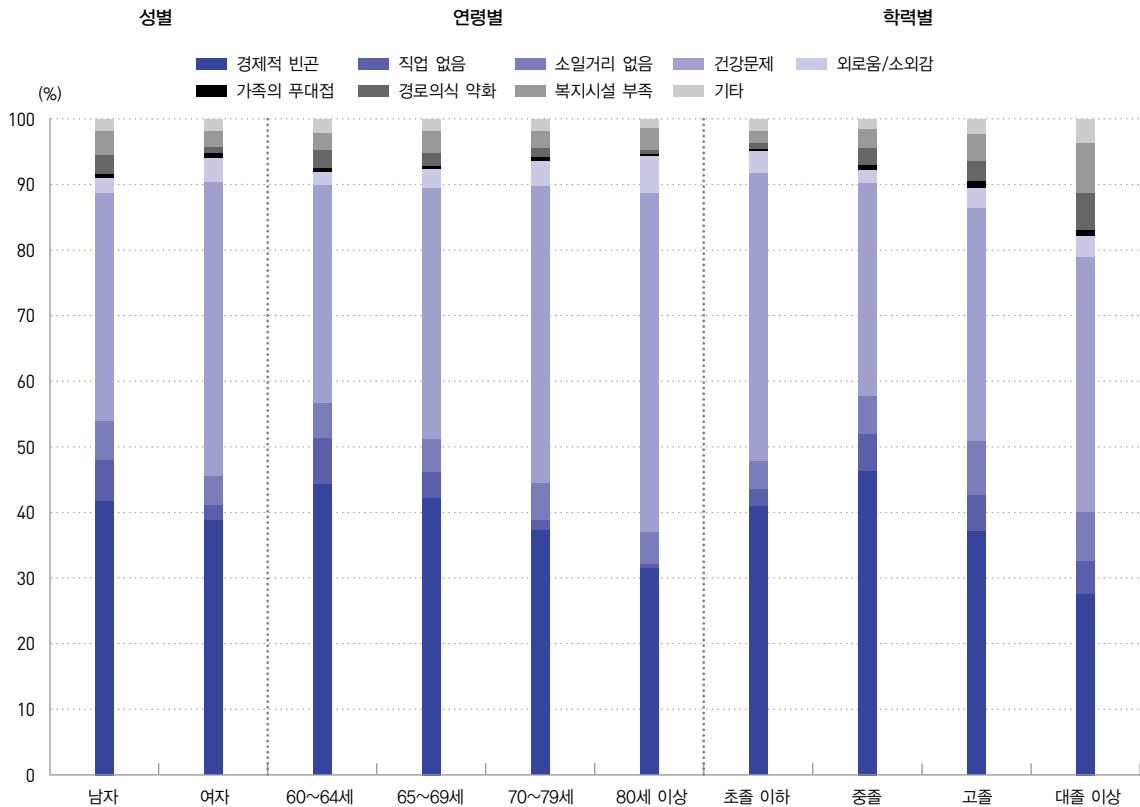
연금제도의 중요성은 우리의 노인들에게 자신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주관적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2005년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가장 많은 노인들이 건강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답하고 있지만, 경제적 빈곤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그림 IX-10). 남성의 경우에는 노인이 될수록

경제적 빈곤 문제가 건강문제보다 더 심각함을 토로하고 있다. 대신에 젊은 시절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경제적 문제보다는 건강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 이는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앞으로 연금제도가 보다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현황

우리의 연금제도는 우리의 경제발전 수준이나 선진 복지국가들이 처음 연금제도를 실시할 당시의 경제

[그림 IX-10] 성별·연령별 및 학력별 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2004



출처: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7

발전수준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감이 있다. 공무원과 군인, 그리고 교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연금제도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60년대 초부터 실시되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는 1973년에 ‘국민 복지연금제도’라는 이름으로 처음 입법화가 되었으나, 당시의 국제오일쇼크에 의한 국제경제와 국내경제의 침체 때문에 실시가 연기되었다가 1988년에 지금의 ‘국민연금제도’로 다시 입법화되어 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의 근로자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연금제도의 특징은 소득활동이 있는 기간 동안에 일정기간(20년) 이상의 기여금을 납부하면 은퇴 후 사망까지의 노후기간 동안 지속적인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단일화된 사회보험방식이다. 그리고 연금기금의 운영방식은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모아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과 기금수익으로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기금 방식이다. 미국의 연금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연금제도는 기초연금, 소득비례 연금, 사적연금 등을 포함하는 다층연금제도(multi-tiered system)이다. 제일 밑인 1층은 기초연금이라 하여 저소득층에 한하여 또는 일반 국민들 모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정부의 조세로 급여하는 연금이다. 2층은 임금 또는 봉급자 등 안정된 직장과 소득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소득에서 일정부분을 보험료로 기여하여 그것을 되돌려 받는 보험방식의 소득비례 연금제도이다. 3층은 개인별로 선택에 의하여 직장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민간연금제도를 가입하여 앞의 2층의 공적연금에 추가하여 전체적으로 보다 충분한 연금을 받아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금수당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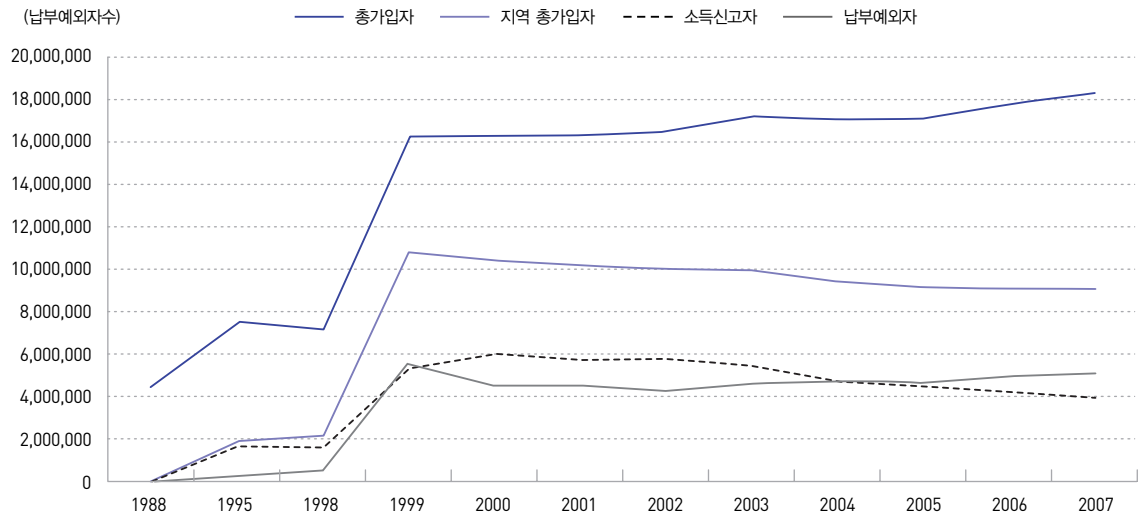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일정 기간 동안(최소 10년, 완전연금은 20년) 기여가 있어야만 퇴직 후 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단일한 사회보험 방식은 노동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고 양극화가 심한 경제적 현실에서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연금제도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전 국민 연금 보험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계층이 상당히 크게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직장이나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은 기여금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못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일정기간(최소한 10년) 이상 기여금을 내지 못할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하고 그동안 낸 기여금과 이자를 합한 반환일시금만 받게 되는데 이것으로는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최저생계비 저소득층으로 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되지만 이와 같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집단들을 일컬어 ‘국민연금 사각지대’라고 부르고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규모는 납부예외자의 규모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납부예외자는 자영업이 주 계층인 지역가입자 중에서 신청에 의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자들을 의미한다. 자영업자들을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한 전 국민 연금제도가 만들어진 1999년부터 납부예외자들의 규모는 지역가입자의 50% 정도에서 꾸준히 존재해왔다. 직장가입자들까지 포함하면 납부예외자는 전체 가입대상자 중에 약 30%에 이른다. 공식적 통계에 잡힌 납부예외자 이외에도 많은 국민연금 소외자가 있을 것이다. 납부예외자는 매년 통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상당수가 다른 해에 직장이나 소득이 안정되어 기여금을 지속적

[그림 IX-11]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규모: 1988-2007



출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 2008

으로 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본격적인 국민연금지급이 이제 막 시작된 지금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전 국민 국민연금제도라는 제도의 정당성이 무색하게 상당한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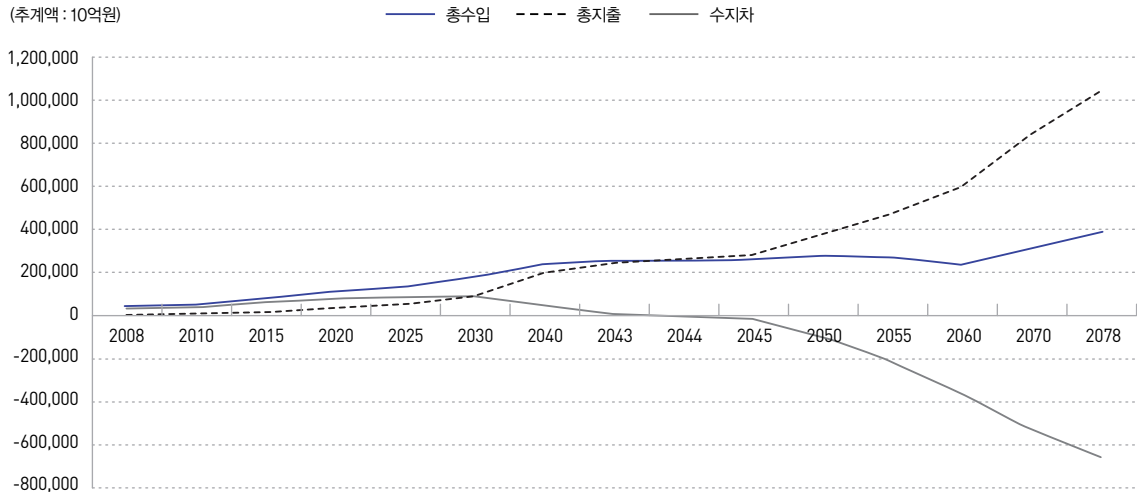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단일화된 사회보험방식의 연금제도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임시방편으로 2008년 7월부터 빈곤층 노인(전체 노인의 70%)에게 연금수당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기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가능한 기초연금제도가 어떤 방식이든 도입이 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틀을 바꾸는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문제

우리의 국민연금제도에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연금기금의 안정성 문제이다. 연금제도가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 성숙한 선진복지국가들의 경우도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에 연금제도의 개혁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개혁이슈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기존의 연금가입자와 신규가입자 간의 연금 부담과 혜택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는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첫째로, 우리의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야 본격적인 급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화의 문제가 제기되어 연금제도의 개혁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연금제도의 초기 설계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IX-12] 국민연금재정 추계: 2008-2078



출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 2008

기본적으로 우리의 연금제도의 설계는 저부담·고급여 방식으로 설계되어 시작되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앞에서 밝혔듯이, 우리의 인구구조가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제일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재정추계위원회를 만들어 매 5년마다 연금재정을 추계하여 미래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연금재정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재정추계는 복잡한 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된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성장률 등 미래 변화에 대한 다양한 가정들을 먼저 정해놓고 추계를 하게 된다. 따라서 기금의 수지균형이나 고갈 시점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큰 흐름의 결과는 알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5년마다 상황변화에 따라 새로운 조건들을 설정하여 연금재정의 미래를 좀더 정확하게 예측하여 이에 대비하려고 하는 것이다.

2008년 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예측에 의하면 2044년도에 수지균형에서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그 후 기금이 급속히 감소하여 2060년에 기금자체가 소진된다([그림 IX-12]). 사실 연금제도를 오래 전에 실시했던 선진복지국가들도 이미 오래 전에 재정추계를 통해 기금의 운영방식과 기여율 및 급여율을 국민들과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조정해 왔다. 따라서 연금 기금의 재정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의 경우도 이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연금개혁이 이슈가 되어 왔고, 부분적으로 재정안정화를 위해 기여율을 올리고 급여율을 낮추는 단기적인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다 보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춤으로서 국민 전체의 노후 생활보장이 위태롭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우리 연금제도의 미래

이와 같이 우리 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본질적 문제 때문에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정부, 전문가, 정치계, 시민단체에서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으며, 그 핵심적인 개혁내용의 이슈는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의 해소'이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가 미흡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적정부담, 노후생활의 적정수준 보호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지금보다 기여에서 부담이 커지고 정부의 조세부담도 늘어난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과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무권(연세대학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빈곤문제

요 약

-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소득양극화가 급격히 진행됨으로써, 취업 상태에 있으면서도 빈곤한 생활을 하게 되는 신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1999년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새롭게 마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으나 최저생계비가 낮게 책정되고 지급규정이 엄격하여 증가하고 있는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공적부조제도는 사회보험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이미 빈곤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기본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 기초생계비를 도와주는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빈곤구제를 위한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탄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적부조제도는 생활보호제도라는 이름으로 1960년대에 입법화되어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빈곤계층을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제도가 아니라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게만 최소한의 수준으로 생계에 필요한 현물(쌀, 밀가루, 연탄 등)이나 생계비를 지급해주는 제도였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보호수준이 매우 미약하여 국가의 생존권 보호라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9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이듬해인 2000년 10월부터 실시됨으로써 이전의 생활보호제도 보다 훨씬 개선된 제도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 실업자 등 저소득 계층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노동

시장의 불안정으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함으로써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빈곤상태가 되는 신빈곤계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빈곤현실에 비추어 우리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빈곤선을 결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알아보고 기초생활제도수급자들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빈곤층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신빈곤층의 특성과 규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방식은 전물량방식(market basket, Rowntree 방식), 반물량방식(Engel, Orshansky 방식) 등 절대적 빈곤에 초점을 둔 방식과, 중위 또는 평균소득의 50% 내지 60%를 기준으로 하는 통계방식, 라이덴 방식 등 상대적 빈곤에 초점을 두는 방식이 있다.

우리 정부는 최저생계비 계측에 있어서 전물량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품목들을 최저의 수준으로 선택하여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가격 × 최소소비량)해서 최저생계비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품목을 어떤 소비량으로 결정하느냐가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는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정부가 정한 우리의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008년은 126만 5,848원, 2009년은 132만 6,609원으로 정하였다(〈표 IX-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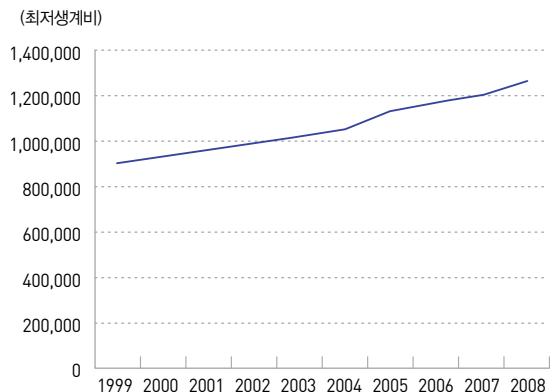
〈표 IX-8〉 월평균 최저생계비: 2008, 2009

	최저생계비		인상률 (%)
	2008년	2009년	
1인 가구	463,047	490,845	6.0
2인 가구	784,319	835,763	6.6
3인 가구	1,026,603	1,081,186	5.3
4인 가구	1,265,848	1,326,609	4.8
5인 가구	1,487,878	1,572,031	5.7
6인 가구	1,712,186	1,817,454	6.2

출처: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7

이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4.8%를 인상한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1999년 공식적으로 생계비 측정을 한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되어 왔다(〈그림 IX-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분은 여전히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림 IX-13〉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999-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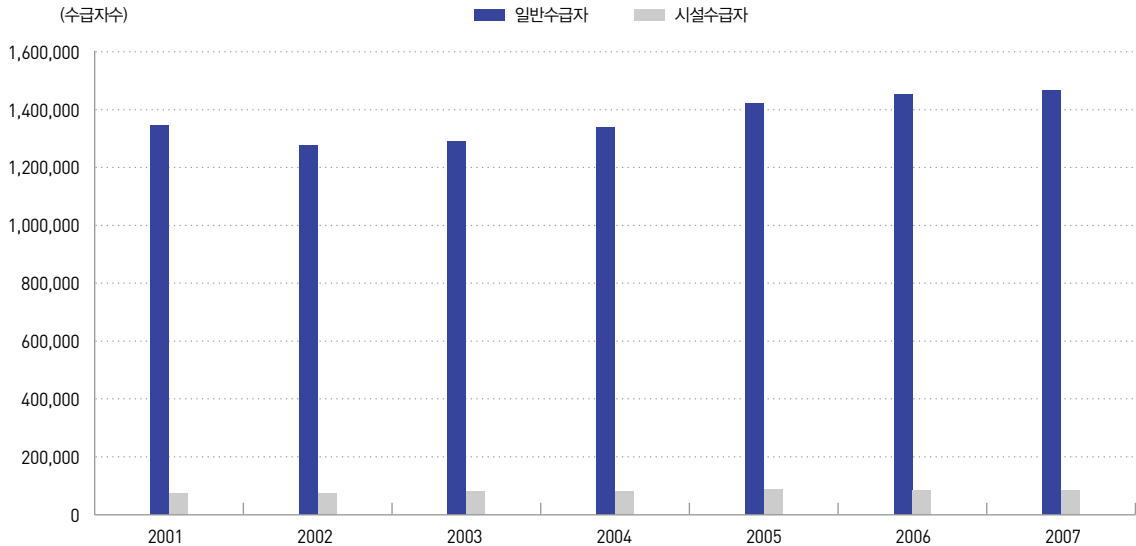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7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과 특성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분석을 통해

[그림 IX-14]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2001-2007



출처: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7

빈곤층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기본적으로 가구단위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가구가 소득과 생활의 단위이기 때문이다. 이에는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1인 가구, 단독가구가 포함된다.

수급자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생계비 지급을 받는 일반수급자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 생활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는 시설수급자가 있다. 대부분의 수급자는 일반수급자에 속한다(그림 IX-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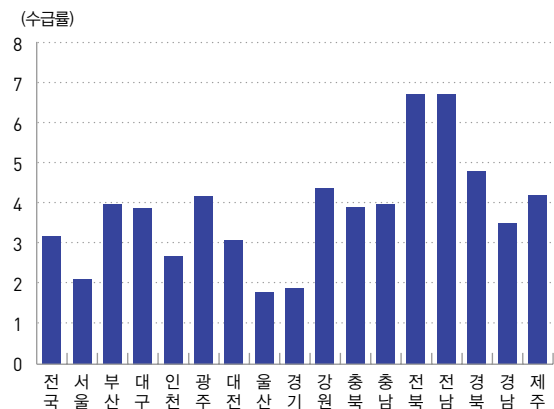
지역별 수급률

[그림 IX-15]는 총 수급자수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수급률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빈곤층의 지역별 편차를 알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광역시도별로 보면, 농촌지

역이며 산업화 기반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북, 전남지역이 각각 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IX-15]). 수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우리나라

[그림 IX-15] 지역별 기초생활보장수급률: 2007



주: 1) 수급률=지역의 수급자수/지역의 전체인구×100

2) 지역의 수급자수에는 시설수급자를 포함함.

3) 지역의 전체 인구는 통계청의 연령별(시도) 추계인구임.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08

의 대표적인 산업화 지역인 울산지역으로 수급률은 1.8%이다. 그 다음은 서울로서 2.1%이다. 전국 평균은 3.2%이고 평균을 웃도는 지역은 산업화나 지역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며, 평균을 밑도는 지역들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등 상업과 산업들이 집중되어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수급자의 가구유형과 가구원수

수급자 가구의 대부분은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모자가구, 부자가구, 소년

소년가장가구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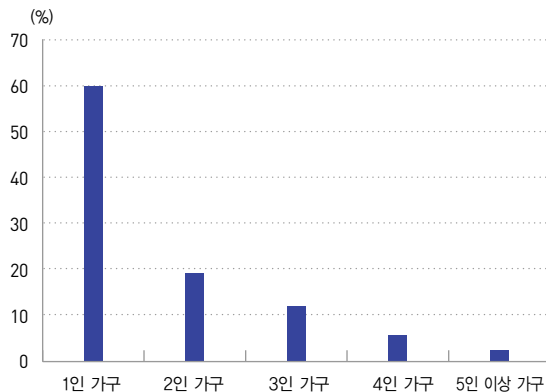
이들이 전체 수급자의 60.7% 차지함으로써 정상적인 가족구조를 갖지 못하는 가구들이 빈곤층의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구가 28.9%를 차지하는 노인가구이다. 노후에 소득능력이 없는 노인들이 빈곤층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장애인가구이다. 그리고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편모의 가정을 이루는 가구들도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대변한다. 그리고 최근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편부가족도 증가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표 IX-9〉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유형: 2007

가구유형	일반가구	취약계층가구						기타	계
		소계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모자가구	부자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수급자비율(%)	34.6	60.7	28.9	18.1	9.7	2.3	1.7	4.7	100.0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08

〔그림 IX-16〕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원수별 구성비율: 2007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08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원수의 통계도 빈곤층의 구조적 특징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전체 수급자가구 중 1인 가구가 60.0%, 2인 가구가 19.3%로서 가족구성원이 없는 단독세대들이 대부분 빈곤층을 이루고 있으며(〔그림 IX-16〕), 이들의 대부분이 노인 세대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일반수급자의 취업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로 77.9%를 차지하고 있다(〈표 IX-10〉).

〈표 IX-10〉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제활동 및 고용 상태: 2007 (%)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계
고용안정	고용불안정	소계		
3.7	18.4	22.1	77.9	100.0

주 : 1) 만 15세 이상 인구 대상

2) 고용안정: 상시고용, 자영업 및 농수축산업

3) 고용불안정: 임시·일일고용, 실직 및 미취업자

4)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세대원 중 가사종사자, 학생, 노령, 장애, 사고·질병 등으로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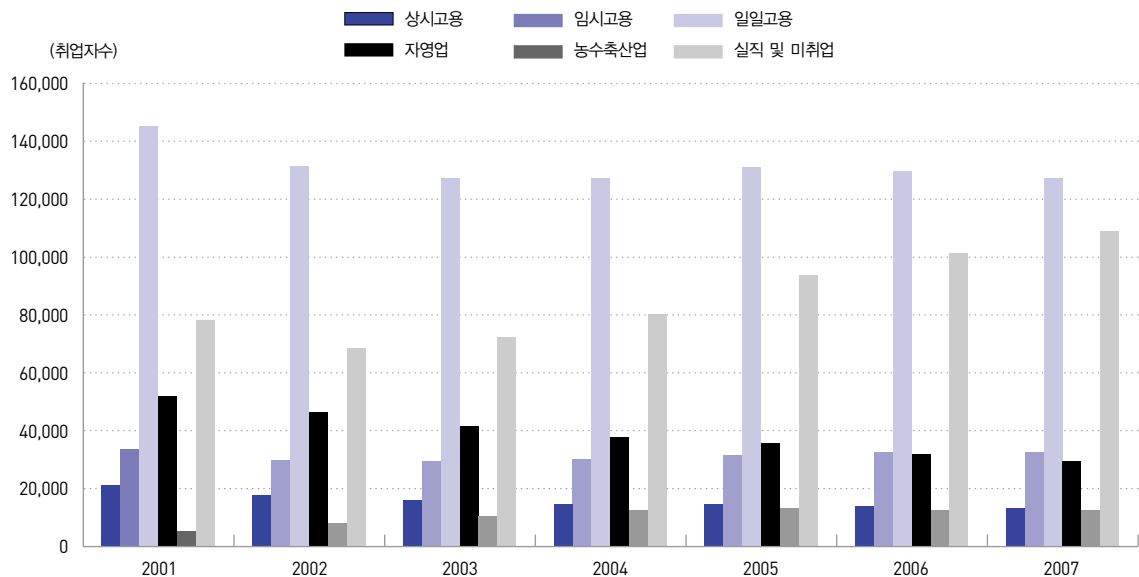
이들은 대부분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수급자 중에서 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은 3.7%에 불과하고,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이 18.4%를 구성하고 있다.

일반수급자 중 취업자의 고용상태를 보면(그림 IX-17), 최근의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적어짐에

따라 일일고용자들은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준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은 실직 및 미취업자로 이들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실직 및 미취업자 집단이 최근으로 올수록 그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점점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상시고용과 임시고용자 중에서 수급자의 비중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저임금 근로가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다음으로 농수축산업에서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농촌이 더욱 빈곤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농촌에 젊은 세대들이 대체로 도시로 떠나고, 농촌지역에는 노인 빈곤가구만 남아 있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그림 IX-17]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중 고용상태별 취업자수: 2001-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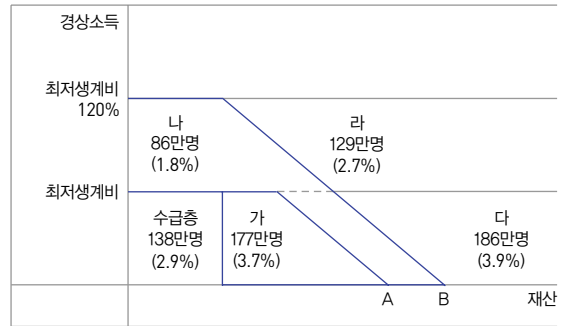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08

신빈곤의 심화 : 차상위 계층의 문제

과거의 고성장 시대에는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됨으로써,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최저생계비를 보조해 주어도 빈곤은 크게 심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대량실업 사태로 인해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가 증가하였으며 저임금 비정규직의 증가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자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IMF 위기 이후의 빈곤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하는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갓 넘는 수준의 차상위 계층들 또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차상위계층의 규모를 파악하면서([그림 IX-18]), 이들에 대한 부가적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IX-18] 소득과 재산기준을 고려한 차상위계층의 규모: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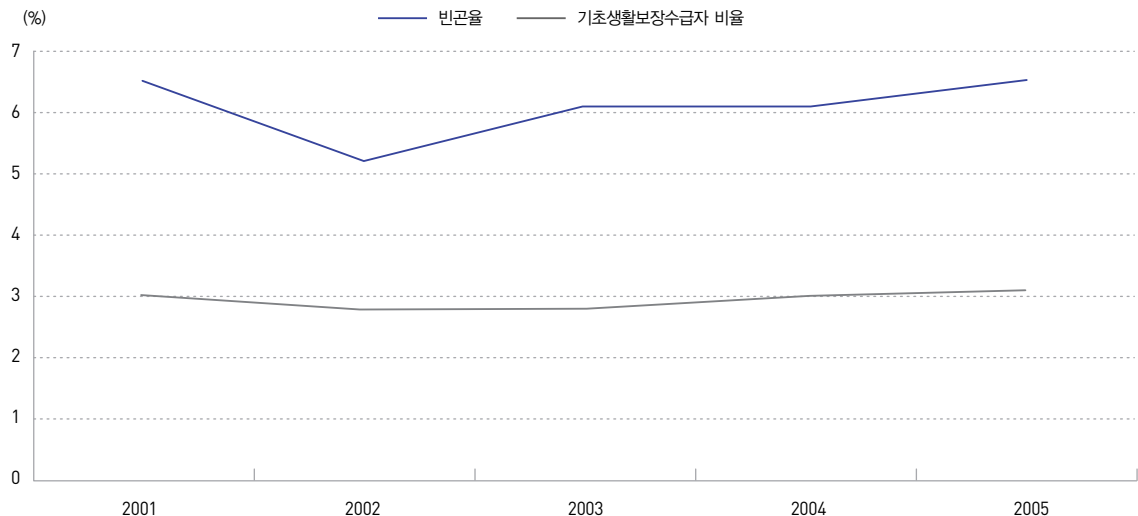
주: A=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인 선, B=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선

출처: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실태조사 중간보고서』, 2005

정부는 2003년에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아래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 177만 명(전체 인구의 3.7%; [그림 IX-18]의 '가'에 해당)과 최저생계비와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사이에 있는

[그림 IX-19] 최저생계비에 근거한 빈곤율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2001-2005



출처: 빈곤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포럼 II』, 200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은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7

차상위 빈곤층 86만 명(전체 인구의 1.8%; [그림 IX-18]의 '나'에 해당)을 포함한 263만 명(5.5%)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 차상위계층으로 지정하고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왔던 것이다. 정부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만으로는 우리의 빈곤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어려움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종적인 빈곤구제정책으로서 충분하지 못하다. 정부가 최저생계비로 추정한 빈곤율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급자의 비율 간에는 큰 격차가 있다([그림 IX-19]). 빈곤율 추정치는 도시가계조사를 통해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빈곤율은 6%대(2005년에는 6.5%)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이 3%대(2005년에는 3.1%)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공적부조 수급률이 대략 50%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실제 빈곤층 10명 중 5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로부터 빈곤해소를 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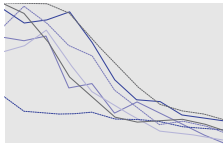
정무권(연세대학교)

참고문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빈곤포럼 II." 기초보장, 자활정책평가센터.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한국의 사회동향 2008

Korean Social Trends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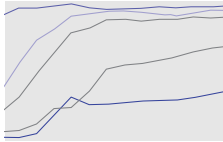


Population

Household & Family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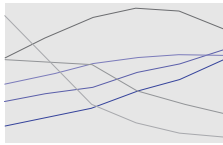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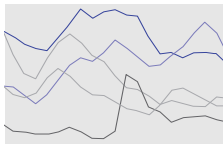
Housing & Transportation



Health

Welfare

Environment



Social Security

Social Cohesion

환경 부문의 주요 변화 • 김선희 246

대기오염 수준의 변화 • 공성용 254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 • 공성용 261

X . 환 경

Environment

환경 부문의 주요 변화

국가의 환경수준은 경제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1인당 국민소득이 5,000~10,000달러가 넘으면 경제와 환경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한다. 이는 경제성장에 의한 소득증가가 쾌적한 환경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환경오염관리를 위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시킨다는 이론에 근거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압축경제 성장과정을 거쳤다. 1950년 한국전쟁과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는 도시대로, 농산어촌은 농산어촌대로 환경오염에 따른 자연환경이 훼손되었다.

1960년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 수준으로 환경오염 문제는 이때부터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를 달성하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환경오염이 최고점에 달했고 이에 따라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환경보전정책이 세워졌고 환경예산도 증가되었다. 1990년대 이후 환경은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2007년,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0,000달러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로써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 삶의 질은 조사대상 국가 55개국 중 38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환경의 유지수준을 수치로 말해주는 환경지속성지수(ESI: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는 136위로 매우 열악하다. 이에 국민소득 20,000달러 시대에 걸맞는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난 60여 년간의 우리나라 환경의 변화와 현황을 환경압력-환경상태-환경관리체계에 대한 대표적인 개별지표를 선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압력

도시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

인구증가와 도시화, 특히 수도권 인구 집중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고밀도의 공간구조를 갖고 있고 도시화를 역시 급속히 진행되었다(〈표 X-1〉). 도시화율은 1960년 35.4%에서 1980년 86.2%, 2000년 88.3%, 2006년 90.5%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 집중도는 1960년 20.8%에서 1990년 42.8%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급속히 진행된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해 1963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규모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60~1970년 고도경제성장기에 환경과괴적인 산업발전이 대도시 및 공업지역의 환

경오염을 발생시키고, 결과적으로 값비싼 사후 환경 관리대책이 요구되었다.

농지 및 산림면적의 감소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임야 및 농경지 면적은 줄어들고, 도시용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표 X-2〉). 그만큼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왔다.

전 국토에서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4년에 22.1%였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 22.0%, 2006년 21.1%로 줄어들었다. 임야면적도 1984년 66.5%에서 1990년 66.1%, 2000년 65.5%, 2006년 65.0%로 줄었다. 반면에 도시용지 비율은 1984년 전 국토면적의 3.8%였으나, 1990년 4.8%, 2000년 5.4%, 2006년 6.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X-1〉 총인구, 국민소득, 도시화율 및 수도권 집중도: 1960-2006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6년
인구(10,000명)	2,499	3,143	3,744	4,352	4,614	4,899
1인당 국민소득(달러)	79	254	1,645	6,147	10,841	18,372
도시화율(%)	35.4	49.8	86.2	79.5	88.3	90.5
수도권집중도(%)	20.8	28.3	35.5	42.8	46.3	49.0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표 X-2〉 지목별 토지이용 구성비: 1984-2006

	1984년		1990년		2000년		2006년	
	면적(km ²)	구성비율(%)	면적(km ²)	구성비율(%)	면적(km ²)	구성비율(%)	면적(km ²)	구성비율(%)
전국	99,117	100.0	99,274	100.0	99,461	100.0	99,408	100.0
도시용지	3,784	3.8	4,763	4.8	5,372	5.4	6,351	6.4
농지	21,921	22.1	21,855	22.0	21,043	21.2	21,024	21.1
임야	65,910	66.5	65,571	66.1	65,139	65.5	64,638	65.0
기타 토지	7,502	7.6	7,085	7.1	7,907	7.9	7,395	7.4

출처: 국토해양부,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8

에너지소비량의 증대

우리나라는 최종 에너지소비량이 연평균 5.1%씩 증가해 온 세계 10위의 에너지 과소비국이다. 에너지 소비량은 석유 1톤의 열량값으로 보통 TOE라는 단위로 측정되는데, 우리나라의 1985년 1인당 TOE는 1.15였으나, 1990년 1.75, 2000년 3.19, 2006년 3.59로 급속히 증가하여 왔다(〈표 X-3〉). 특히 1990년 이후 최종 에너지소비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이산화탄소(CO₂)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오수 및 폐기물 발생량의 증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오수(하수) 발생량도 급속히 증가하였다(〈표 X-4〉). 1981년 하루에 722만 8,000 m³가 발생하여 국민 1인당 186ℓ를 배출하였다. 그 양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 283ℓ, 1995년 332ℓ, 2005년 350ℓ에 이르고 있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등 일반폐기물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인당 생활폐기물발생량은 국민들이 분리수거 및 재활용정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2000년 이후 1일 1kg 이하로 줄어들고 있다. 2005년 현재 국민 1인당 0.99kg 정도를 배출하고 있다.

〈표 X-3〉 최종 에너지소비량(TOE)과 1인당 최종 에너지소비량: 1985-2006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최종 에너지소비량 (1,000TOE)	46,998	75,107	121,962	150,108	16,045	166,009	173,584
1인당 최종 에너지 소비량(TOE)	1.15	1.75	2.70	3.19	3.37	3.46	3.59

주: TOE는 에너지 단위 톤으로 석유 1톤의 열량값임.

출처: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7

〈표 X-4〉 오수 및 폐기물 발생량: 1981-2005

	오수(하수) 발생량		폐기물 발생량		
	오수발생량 (1,000m ³ /일)	1인당 발생량 (ℓ /일)	일반폐기물 (톤/일)	생활폐기물 (톤/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kg/일)
1981년	7,228	186	-	-	-
1985년	8,178	202	-	-	-
1990년	12,323	283	-	-	-
1995년	14,976	332	143,597	47,774	1.07
2000년	15,441	328	226,668	46,438	0.98
2005년	16,833	350	290,389	48,398	0.99

주: 1994년 이전은 생활하수발생량이고, 1995년부터는 오수(하수) 발생량임.

출처: 환경부, 『환경백서』, 각 년도

환경상태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

우리나라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은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 대기오염의 주범이었던 아황산가스(SO₂) 오염농도는 환경기준 이내로 개선되고 있고, 질산성 질소(NO₂), 미세먼지(PM10) 등의 오염도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수질오염도 점차 개선되어 전국 하천 194개 구간의 수질환경기준 달성률(달성구간수/목표설정구간수)은 1991년에 12.8%이던 것이 2002년에는 37.6%, 2003년에는 49.0%로 매년 향상되어 왔다.

환경오염이 개선되면서 국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도 역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통계조사보고서(1997년, 2001년, 2005년)』에 의하면 수질오염과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쓰레기오염, 소음공해, 주위 자연환경훼손 모두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X-5〉). 대기오염의 경우, 1997년에는 국민의 70%가 나빠지고 있다고 체감하던 것이 2001년에는 그 비율이 52.6%, 그리고 2005년에는 34.2%로 줄어들고 있다. 수질오염이 나빠졌다고 응답하는 사람도 64.0%에서 45.4%, 27.3%로 줄어들고 좋아졌다는 응답은 2.9%

에서 7.5%로 증가하였다. 쓰레기, 폐기물 오염과 소음공해, 주위 환경훼손의 경우, 좋아졌다는 응답이 2001년도에 줄었다가 2005년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오염 체감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 특히, 타 지역보다 대기오염도가 낮은 광주 및 대구시민들은 오히려 서울시민보다 대기오염이 나빠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X-6〉).

대기오염

아황산가스는 연료 중 함유된 황 성분에 의해 발생하는데, 1990년 이후 저황유 공급 및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오염도가 가장 심했던 서울시의 대기질은 아황산가스(SO₂)기준으로 1980년 0.094ppm에서 1998년 0.008ppm으로 대폭 개선되기 시작했으며, 환경기준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1990년 이전까지는 광주를 제외한 주요 도시지역의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연간 환경기준치(0.02ppm)를 초과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X-7〉). 2000년 들어와서는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도

〈표 X-5〉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도: 1997, 2001, 2005

	대기오염			수질오염			쓰레기/폐기물 오염			소음공해			주위환경훼손		
	나빠 졌다	변화 없다	좋아 졌다	나빠 졌다	변화 없다	좋아 졌다	나빠 졌다	변화 없다	좋아 졌다	나빠 졌다	변화 없다	좋아 졌다	나빠 졌다	변화 없다	좋아 졌다
1997년	70.0	28.3	1.7	64.0	33.1	2.9	55.9	33.5	10.6	60.5	35.3	4.3	44.7	43.7	7.5
2001년	52.6	45.0	2.3	45.4	51.4	3.1	48.5	44.4	7.1	57.3	39.5	3.2	37.1	56.4	6.5
2005년	34.2	59.9	5.9	27.3	65.3	7.5	30.8	57.8	11.4	42.9	52.2	4.9	29.3	60.1	10.6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표 X-6〉 대도시 대기오염도와 대기오염에 대한 체감도: 1997, 2001, 2005

		1997년		2001년		2005년	
		미세먼지 농도(PM10) ($\mu\text{g}/\text{m}^3$)	대기오염 나빠짐 (%)	미세먼지 농도(PM10) ($\mu\text{g}/\text{m}^3$)	대기오염 나빠짐 (%)	미세먼지 농도(PM10) ($\mu\text{g}/\text{m}^3$)	대기오염 나빠짐 (%)
전 국	계	-	70.0	-	52.6	-	34.2
	시 부	-	74.5	-	55.5	-	34.8
	읍면부	-	55.5	-	41.3	-	31.1
대도시	서 울	68	79.1	71	54.9	58	31.7
	부 산	68	75.7	60	57.0	58	35.6
	대 구	72	72.6	67	56.3	55	36.3
	인 천	70	79.7	52	59.5	61	36.1
	광 주	49	79.7	57	55.9	49	37.2
	대 전	69	72.1	48	56.5	48	34.4
	울 산	43	-	55	52.5	50	25.9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표 X-7〉 대도시 대기오염도(아황산가스(SO_2)와 오존(O_3)): 1990-2006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2006년	
		SO_2	O_3	SO_2	O_3	SO_2	O_3	SO_2	O_3	SO_2	O_3
서 울	부 산	0.051	0.009	0.017	0.013	0.006	0.017	0.005	0.014	0.005	0.018
	대 구	0.039	0.017	0.023	0.016	0.010	0.022	0.006	0.023	0.006	0.024
	인 천	0.041	0.008	0.031	0.017	0.009	0.019	0.006	0.020	0.006	0.020
	광 주	0.044	0.008	0.023	0.013	0.008	0.019	0.007	0.019	0.007	0.020
	대 전	0.017	0.010	0.010	0.016	0.006	0.017	0.004	0.018	0.004	0.021
	울 산	0.029	0.009	0.017	0.015	0.007	0.020	0.004	0.018	0.004	0.018
	울 산	0.027	0.011	0.028	0.015	0.013	0.021	0.011	0.021	0.007	0.021

출처: 환경부, 『환경백서』, 각 년도

시들이 WHO 권고기준(0.019ppm)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산화질소와 자동차배기가스 등에 포함되어 있는 탄화수소가 강한 햇빛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오존농도는 증가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6개 대도시 모두 오존오염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부산, 광주, 울산 등은 서울보다 오존농도가 높다. 그러나 환경기준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수질오염

우리나라 4대강의 수질오염도는 1990년 이후 영산강을 제외하고 3급수 이내로 양호하다. 그동안 환경기초시설 확충, 4대강 특별대책 수립 및 특별법 제정 등 수질개선 노력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한강 팔당유역과 금강 대청댐유역은 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X-8〉 4대강의 수질오염도: 1985-2007

(BOD(mg/l))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한강	팔당댐	1.4	1.0	1.3	1.3	1.3	1.1	1.2
	노량진	4.7	3.4	3.8	3.4	2.8	3.1	3.5
낙동강	고령	8.5	5.4	7.3	4.2	2.1	2.9	2.8
	물금	3.7	3.0	5.1	3.0	2.1	2.6	2.6
금강	대청댐	1.1	1.7	1.2	1.0	1.1	1.1	1.0
	공주	2.6	3.2	4.8	3.4	2.1	2.8	2.6
영산강	나주	5.2	6.7	7.0	6.2	4.8	5.3	5.0
	담양	-	-	1.5	0.8	1.0	1.5	1.5

출처: 환경부, 『환경백서』, 각 년도

한강 팔당댐 지점의 수질오염도는 1985년 1.4mg/l 에 1990년 1mg/l, 2001년 1.3mg/l, 2007년 1.2mg/l 로 양호하다(〈표 X-8〉). 영산강 하류지역인 나주는 1990년 6.7mg/l, 1995년 7.0mg/l로 4급수로 악화되었으며, 2003년 4.8mg/l, 2007년 5.0mg/l로 3급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환경관리

1일 1인당 급수량 및 하수보급률

환경기초시설인 상수도 하수도 시설은 1980년 들어서면서 확충되기 시작했다. 상수도 보급률은 1980년 50% 수준이었으나, 1990년 78%, 2005년에는 90% 수준을 넘었다(〈표 X-9〉). 하수처리장도 1983년부터 설치되면서 하수도 보급률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하수도 보급률은 1985년 6%에서 1990년 33%, 2000년에는 71%로 2배 확충되었다. 2006년에는 86%로 선진국 수준을 보이고 있다.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현황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산림이 전국토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생물이 생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물종수는 약 10만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생물종수는 동물 18,117종, 식물 8,271종, 균류·원생생물류 3,528종 등 총 29,916종이다.

이 중에서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의 개체수는 국가의 자연환경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있다. 밀렵과 불법채취, 서식지 파괴 등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 동식물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로 지정된 종수는 1998년 194종에서 2004년 221종으로 늘어났다(〈표 X-10〉). 이는 영국, 일본 등 비슷한 생물지리학적 조건을 가진 국가와 비교할 때 적은 편이다. 그러나 현재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에 대한 조사연구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 연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복원방안이 마련되면 그 개체수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멸종위기 I 급 또는 II 급으로 지정된 종들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하여 전국

〈표 X-9〉 상수도의 급수량과 보급률 그리고 하수도의 처리시설과 보급률: 1980-2006

	상수도		하수도		
	1일 1인당 급수량 (ℓ)	보급률 (%)	하수처리장수 (개소)	시설용량 (1,000톤/일)	보급률 (%)
1980년	-	55	-	-	-
1985년	-	67	19	5,371	6
1990년	-	78	45	7,599	33
1995년	398	83	71	9,653	45
2000년	380	87	172	18,400	71
2005년	360	91	294	22,568	84
2006년	347	91	344	23,273	86

출처: 환경부, 『환경백서』, 각 년도

적인 서식·분포 실태, 개체군의 크기, 주요 서식위치, 서식권 형태, 분포넓이, 주요 위협요인 등 다양한 생태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환경오염 방지노력

우리나라는 1989년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를 달성하면서 국가적으로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환경정책과 제도, 그

리고 환경예산과 기술이 한 단계 발전한 바 있다.

정부의 총 예산 가운데 환경예산은 1992년 1.37%에서 1995년 2.05%, 2000년 2.32%로 증가하였다(〈표 X-11〉). 그러나 2000년도 이후 감소하여 2006년 현재 1.94%를 차지하고 있다. GDP 중 환경오염방지 지출은 1992년 0.26%에서 1998년 0.66%로 정점을 나타내다가 2000년 0.57%, 2006년 0.39%로 감소하고 있다.

〈표 X-10〉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현황: 1998-2005

(종)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I 급	포유류	조 류	양서류 파충류	어 류	곤충류	무척추 동물	식 물	합 계
1998년	43	10	13	1	5	5	3	6	194
1999년	43	10	13	1	5	5	3	6	194
2000년	43	10	13	1	5	5	3	6	194
2001년	43	10	13	1	5	5	3	6	194
2002년	43	10	13	1	5	5	3	6	194
2003년	43	10	13	1	5	5	3	6	194
2004년	50	12	13	1	6	5	5	8	221
2005년	50	12	13	1	6	5	5	8	221

주: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05. 2. 10)되면서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I 급, II 급으로 전환됨.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표 X-11〉 환경예산 및 지출 비율: 1992-2006

	정부 총예산 대비 환경예산 비율(%)	GDP 대비 환경오염방지 지출 비율(%)
1992년	1.37	0.26
1995년	2.05	0.51
1998년	2.24	0.66
2000년	2.32	0.57
2003년	2.12	0.47
2006년	1.94	0.39

출처: 환경부, 『환경백서』, 각 년도

국민들의 환경보호 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1년 1인당 환경보호 지출은 262,000원이었으나 2003년 308,000원, 2005년 364,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표 X-12〉). GDP 대비 지출

〈표 X-12〉 환경보호지출: 2001-2005

	1인당 환경보호 지출액 (1,000원)	GDP 대비 환경보존 지출비율(%)
2001년	262	1.99
2002년	285	1.98
2003년	308	2.03
2004년	335	2.06
2005년	364	2.17

출처: 환경부한국은행,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통계』, 각 년도

비율도 2001년 1.99%에서 2005년 2.17%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4년도에 2.06%에서 2005년도 2.17%로 그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김선희(국토연구원)

대기오염 수준의 변화

요 약

-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졌다. 이는 먼지와 악취 등 감각기관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오염문제의 개선이 크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그러나 오존이나 미세먼지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는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다. 하지만 별 다른 비용의 지불 없이도 언제나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기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는 때가 많다.

공기에는 질소와 산소를 포함하여 자동차 매연, 에너지 연소 성분, 공사장에서의 먼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질을 어느 한 물질의 오염상태로 평가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하지만 모든 오염물질의 농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또는 비용측면에서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정부는 대표적인 오염물질 몇 가지에 대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도를 정하고 대기질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물질을 ‘대기환경기준물질’이라고 한다. 대기환경기준은 WHO의 권고기준과 국내 오염현황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아황산가스(SO₂)와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₂), 미세먼지(PM10), 오존(O₃), 납(Pb), 벤젠(C₆H₆) 등 7 종류에 대하여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대기질에 대한 평가는 해마다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강화와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 등의 노력으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부유먼지, 악취 등의 오염 수준이 예전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주요 오염물질

대기환경기준물질은 가장 대표적인 오염물질이기도 하지만 인체의 유해성이 큰 물질이기도 하다.

이황산가스(SO_2)는 황을 함유하고 있는 연료(석탄이나 석유 등)를 연소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인체의 점막을 자극하며, 진한 기체를 흡입하면 콧물, 담, 기침 등이 나고 호흡곤란을 초래한다. 이 외에도 기관지염, 폐수종, 폐렴 등의 발병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산성비의 주요 원인물질로서 토양, 호수, 하천의 산성화에 영향을 미치며, 미세먼지(PM_{10})의 주요 원인물질이기도 하다.

이산화질소(NO_2)는 고온의 연소과정에서 공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생기거나 일부 연료나 원료물질의 반응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기 중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반응하여 오존을 생성하는 전구물질(precursor)의 역할을 한다. 고농도의 이산화질소에 노출되면 눈, 코 등의 점막에서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의 발병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식물에 대한 피해로는 식물세포를 파괴하여 꽃식물의 잎에 갈색이나 흑갈색의 반점이 생기게 한다.

오존(O_3)은 대기 중에 배출된 질소산화물(NO_x)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기 때문에 2차 오염물질로 분류한다. 오존에 반복 노출 시에는 폐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기관지염, 심장질환, 폐기종 및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기관지 천식환자나 호흡기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에게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PM_{10})는 공기 중의 고체 상태의 입자와 액체 상태의 입자의 혼합물을 말하고 그 크기가 $10\mu\text{m}$ 미만인 입자를 말한다. 이 크기는 호흡기관의 거름 기능에도 불구하고 기관지를 통해 폐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발전소나 공장 등 사업장과 자동차, 철도 등 운송수단에서도 배출된다. 또는 이황산가스나 질소산화물과 같은 가스상 물질의 반응에 의해 2차적으로 생성되기도 한다.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며 가시거리를 단축하여 불편감을 유발한다.

그러나 오존이나 미세먼지,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의 일부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통계조사’에 의한 대기의 질에 대한 평가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여 그간의 대기오염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관심을 두고 관리해야 할 오염물질에 대하여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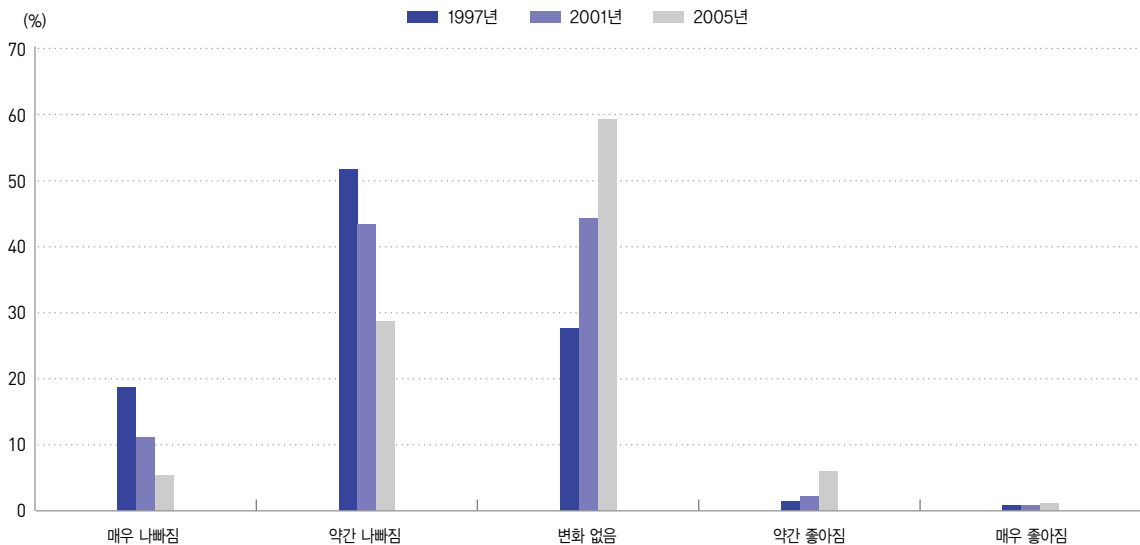
대기의 질에 대한 국민의식

국민이 느끼는 대기의 질에 대한 평가는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1997년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0.0%가 대기의 질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반면 2001년에는 52.6%, 2005년에는 34.1%로 그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왔다. 반면 대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응답은 1997년 1.7%에서 2001년 2.3%, 2005년 5.9%로 증가폭이 낮다. 따라서 국민은 대기의 질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X-11).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기질은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가? 또는 단지 악화되는 속도가 다소 완화된 것인가? 국민의 체감평가는 과학적 자료 없이 일상생활에서 느낀 점을 평가한 것이므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 측정망 자료를 가지고 대기질 평가를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질의 변화 추이

이황산가스는 대기환경 기준이 제일 먼저 설정될 만큼 초기부터 중요하게 관리해 온 오염물질인데, 1993년부터 실시된 저황유 사용 의무화 등의 조치로

[그림 X-1]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체감 정도: 1997, 2001, 2005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이제는 전국적으로 연간 환경기준치인 0.02ppm을 달성하고 있다. 이제는 아황산가스 자체의 농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미세먼지나 산성비 대책의 일환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산화질소는 9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현재의 농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역은 대기환경기준 30ppb를 초과하고 있고 대부분 지역에서 WHO 권고수준인 22ppb를 초과하고 있다. 이산화질소의 농도는 석탄이나 유류 사용량과 비례하므로 산업시설에서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사용의 억제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개선이 힘들다.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오존의 연평균 농도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다만 2000년 이후에는 그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대도시의 오존 농도 추세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추

세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광화학 스모그 전구물질(precursor)인 이산화질소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원인이다. 오존은 지역의 기후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해안도시인 부산, 인천, 울산 등에서 그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오존의 경우에는 연평균 농도보다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고농도의 발생빈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중시하여야 하는데, 오존주의보 발령일수가 증가추세에 있어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표 X-13).

인체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오염물질은 폐 깊숙이 침착되는 미세먼지로 1995년부터 측정되기 시작했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의 농도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00년까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 후 몇 년간 다시 증가한 후 2003년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그림 X-2]). 2000~2004년까지는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가

〈표 X-13〉 대도시별 오존주의보 발령일수와 발령횟수: 1996-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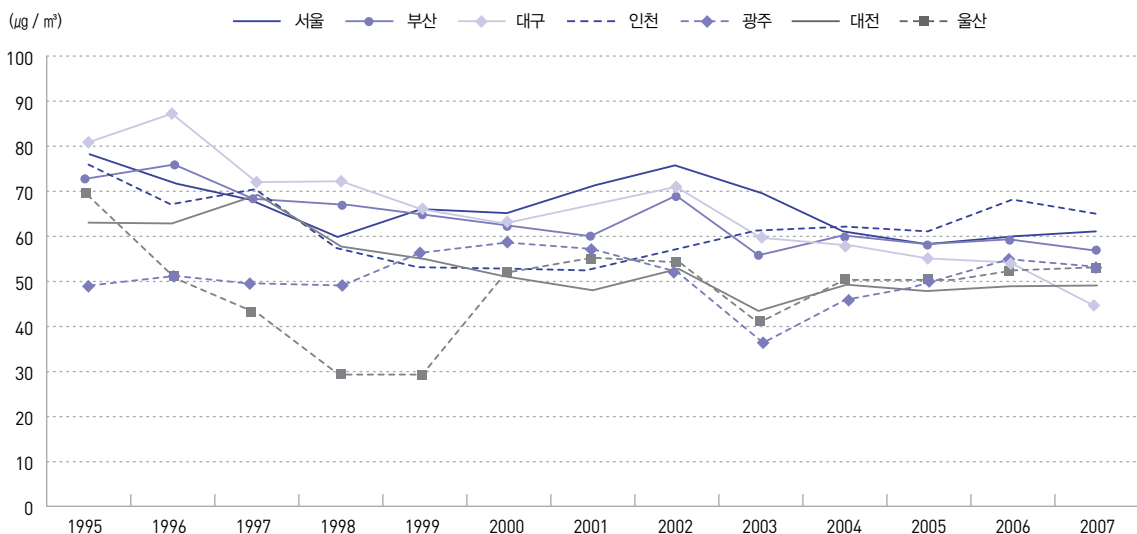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발령일수	발령횟수	발령일수	발령횟수	발령일수	발령횟수	발령일수	발령횟수	발령일수	발령횟수	발령일수	발령횟수
서울	5	10	11	17	8	16	1	1	5	9	1	3
부산			3	3	3	3	2	2	2	3	7	9
대구									5	9	1	2
인천	1	1	2	2	2	4	2	4	6	8	1	1
광주									1	2	1	1
대전									2	3		
울산									6	7	3	4
합계	6	11	14	22	17	23	9	7	27	41	22	20

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년도

장 높지만 그 이후에는 인천이 가장 높다. 전체적인 농도의 변화경향을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얻어진 자료만으로 판단하면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2000년 이후 다소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이전의 환경기

준치인 $70\mu\text{g}/\text{m}^3$ 은 만족하고 있지만 새로운 환경기준인 $50\mu\text{g}/\text{m}^3$ 이하를 만족하는 곳은 대전과 대구뿐이다. WHO 권고기준인 $40\mu\text{g}/\text{m}^3$ 은 모든 지역에서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오존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대기 환경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림 X-2] 대도시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1995-2007



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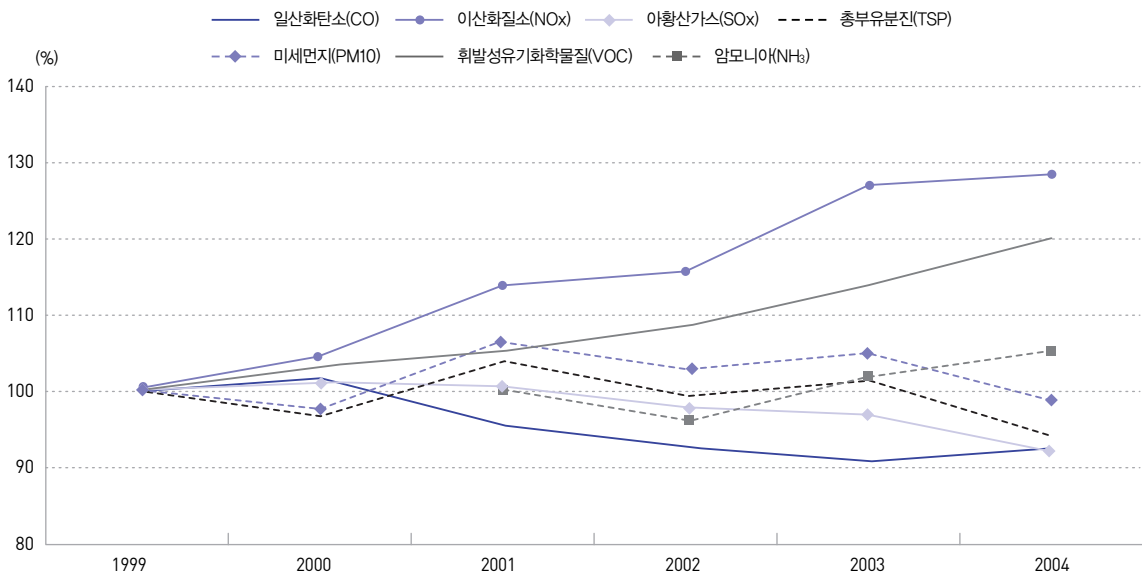
대기질의 악화는 오염물질이 대기로 배출되어 확산 되기 때문에 일어난다. 따라서 어떤 대기오염물질이 어떤 곳에서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보통 오염물질 배출원은 점오염원과 면오염원, 그리고 이동오염원으로 구분하는데 점오염원은 대규모 공장이나 발전소를 말하고 면오염원은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과 같이 개개 시설의 배출량은 작지만 전체를 합한 배출량은 큰 시설을 일컫는다. 그리고 이동오염원은 자동차와 선박, 철도, 항공기와 같은 이동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1999~2004년 기간 중 오존의 원인인 이산화질소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해마다 뚜렷한 증

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X-3). 이산화질소는 연평균 5.2%,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3.7%가 증가하였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아직 전국적인 농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 큰 규모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배출원 종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점오염원에서의 배출량을 살펴보면 암모니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물질이 1999년 배출량보다 2006년의 배출량이 크고, 특히 이산화질소의 배출량 증가가 가장 크다. 면오염원의 경우에는 점오염원과 달리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동오염원의 경우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일산화탄소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다른 오염물질은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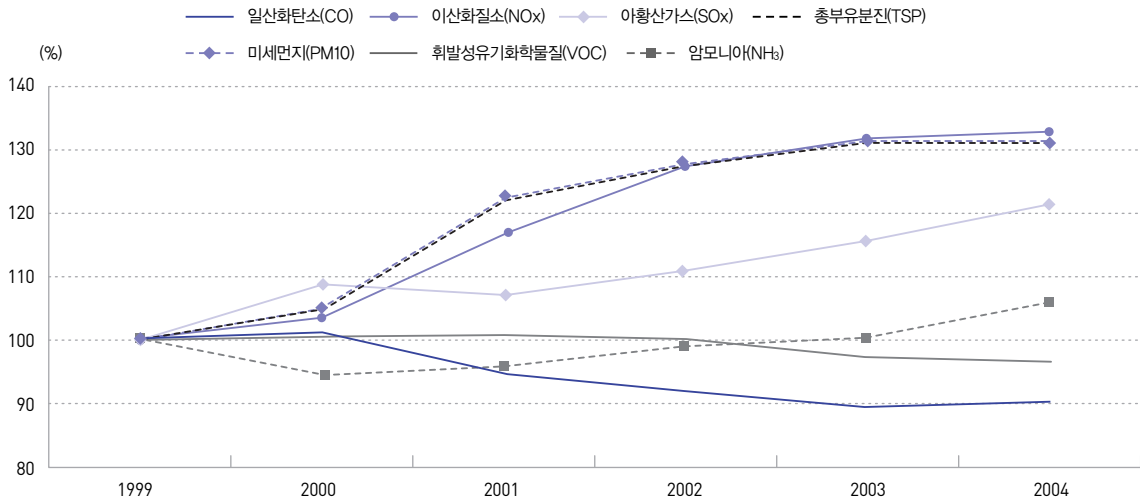
[그림 X-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1999~2004



주: 1999년을 100%로 한 지수임, 단 암모니아(NH₃)는 2001년을 100%로 함.

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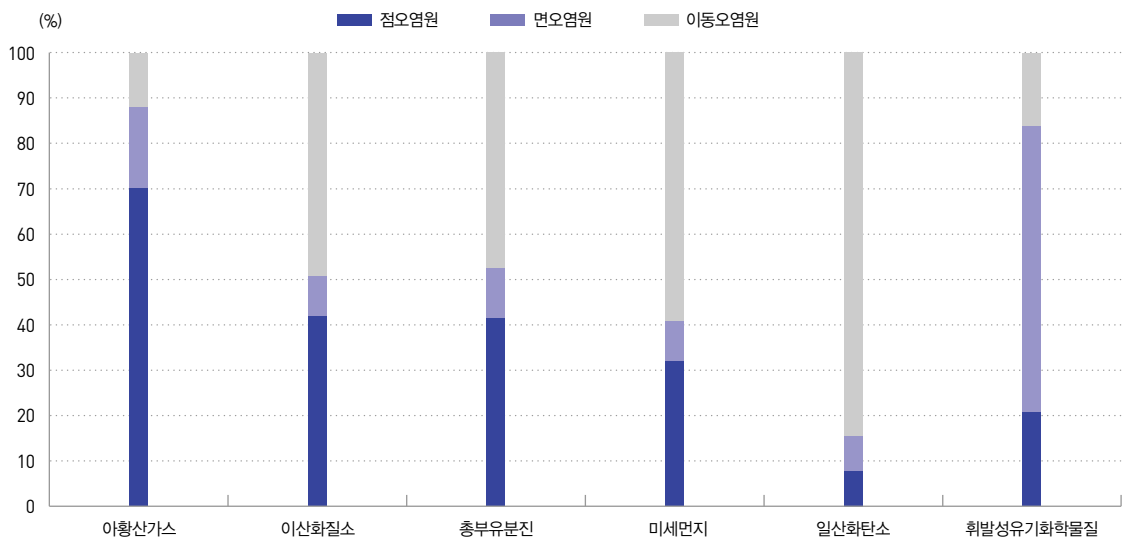
[그림 X-4] 이동오염원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1999-2004



주: 1999년을 100%로 한 지수임.

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년도

[그림 X-5]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오염원별 기여율: 2004



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2004

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동오염원의 배출량 증가는 주로 자동차 운행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도시 대기질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 등과 같은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대도시의 대기질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오염원별 비율로 나타내어 보면 오염원별 상대적 기여도를 평가할 수가 있다 ([그림 X-5]). 이산화질소는 이동오염원 49.5%, 점오염원 42.0%, 면오염원 8.6%의 배출비율을 나타내어 이동오염원과 점오염원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황산가스는 점오염원의 배출비율이 가장 높다(70.4%).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이동오염원의 비중이 59.0%로 가장 높고 다음이 점오염원 32.0%이다. 하지만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면오염원이 62.8%로 가장 높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는 오존과 미세먼지가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대기오염물질로 대두되고 있다. 오존의 원인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과 이산화질소, 그리고 미세먼지의 주된 배출원은 각각 면오염원 및 점오염원과 이동오염원이다. 특히 인구가 밀집하여 있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면오염원과 이동오염원이 대기질 악화의 주 원인인데, 이러한 오염원은 시민들의 경제활동과 여가활동, 또는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매우 중요하다. 명절 때의 서울시는 평소와는 달리 공기가 깨끗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자동차 운행 감소가 얼마나 대기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공성용(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

요 약

-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3,400만 톤으로 세계 9위이며 세계 전체 배출량의 1.8%를 차지한다.
- 지구 온난화는 환경과 인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징후가 관찰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비율도 OECD 선진국에 비해 높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원인은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위적 원인이다. 자연적 원인으로는 태양활동, 지구 자전축 경사의 변화, 지구 공전궤도의 변화 등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는 천문학적 변화와 화산활동과 같은 자연 활동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자연적 요인은 예측이 가능해도 아직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인간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위적 요인은 통제가 가능하다. 2002년 IEA(국제에너지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3,400만 톤으로 세계 9위이며, 세계 전체 배출량의 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IEA, 2002). 우리나라는 아직 의무 감축국은 아니지만 배출량 규모나 온난화로 인한 영향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와 의 관계, 온실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배출량 규모를 외국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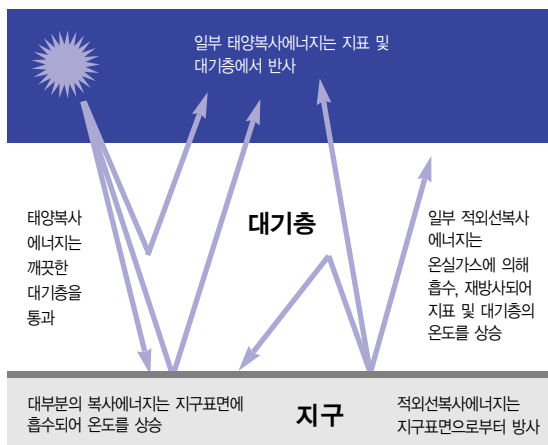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 문제

온실가스란 지구의 기온 상승을 유발하는, 즉 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기체를 말한다. 온실가스는 지구 밖으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를 파장별로 선택 흡수하여 일부는 우주로, 또 다른 일부는 다시 지구 표면으로 되돌려 보내어 지구의 기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게 된다([그림 X-6]). 만약 적정 수준의 온실가스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대기온도는 -18°C 정도가 되어 생물체가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적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가 존재하게 되는 데 있다. 즉, 지구를 하나의 계(system)로 생각할 때 계 바깥으로 방출되어야 하는 에너지의 일부를 가두게 됨으로써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문제이다.

지구 바깥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기체는 수증기로서 전체 대기 온실효과의 60~70%를 차지하고, 다음이 이산화탄소(CO_2)로 전체의 약 25% 정도를 차지한다. 수증기는 예전부터 대기 중에 풍부하게 존재하여 왔기 때문에 최근의 기후 변화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산업 활동 등에 의해서도 발생되고 실제로 최근 대기 중의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림 X-6] 지구 온난화 발생메커니즘



지구의 평균 기온은 $12\sim 16^{\circ}\text{C}$ 범위에서 자연적으로 변화하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의 기온 변화는 이전의 기온 상승 속도보다 빠르며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구 표면의 온도는 20세기 동안 $0.6\pm 0.2^{\circ}\text{C}$ 상승하였는데,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북반구에서 온도 상승이 더욱 크며 해양보다는 육지에서 온도 상승이 큰 것으로 관측되었다. 기온의 상승은 지구 차원의 여러 가지 물리적 현상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평균 해수면이 증가하고 북극 빙하의 크기와 두께가 감소하며 엘니뇨 현상이 보다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국지적으로 홍수와 가뭄이 빈번해지고 동물 및 식물의 분포선이 점차 극 지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목적으로 구성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f Climate Change)의 전망에 따르면, 2100년 지구의 평균온도는 1990년에 비하여 약 $1.4\sim 5.8^{\circ}\text{C}$ 상승하고 해수면은 9~88c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 100년에 걸쳐 지구의 평균 온도가 1°C 상승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 정도의 온도이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자연의 평형 상태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에는 충분하다. 더구나 IPCC 보고서가 예측한 $1.4\sim 5.8^{\circ}\text{C}$ 정도의 변화라면 예측이 어려울 정도의 환경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데 많은 과학자들이 동의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연평균 기온의 상승 폭이 지구 평균보다 크다는 점과 겨울철과 봄철의 기온 상승이 뚜렷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강수량의 증가 추세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강수의 강도가 강해지는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기상현상으로는 -10°C 이하

의 최저기온 발생 빈도가 1987년 이후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하루 100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빈도는 최근 10년간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구 온난화는 그동안 평형을 유지해 왔던 지구의 기후 시스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 변화가 환경 및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지배적일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생태계의 생산성과 다양성 및 서식지의 분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후 변화에 민감한 생물들은 멸종될 가능성이 크고 해충이나 새로운 생물종의 출현도 예상되며 새로운 질병의 발생

도 가능하다. 지구 온난화는 식량생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약간의 기온 상승은 일부 온난한 지역에서 식량생산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큰 폭의 상승은 오히려 식량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히 아열대와 열대지역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량생산의 감소는 식량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빈곤계층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물 부족 현상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물 부족 국가가 다수 존재하지만 지구 온난화는 일부 지역에서 물의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빙하의 녹음과 해수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부피의 증가 등으로 해수면의 상승이 예측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일부 도서 국가나 지역의 침식을 가져와 상당수의 인구가 새로운 주거지역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표 X-14〉 국내 온실가스 부문별 배출량: 1990-2005

(100만 CO₂)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증감률
에너지	연료연소	242.3 (88.5)	368.9 (85.7)	434.1 (88.5)	492.7 (88.3)	4.8
	탈루성	5.4 (2.0)	3.2 (0.7)	4.4 (0.9)	5.9 (1.1)	0.6
산업공정		19.9 (7.3)	47.1 (10.9)	58.3 (11.9)	64.8 (11.6)	8.2
농업·축산		13.2 (4.8)	16.6 (3.9)	15.3 (3.1)	14.7 (2.6)	0.7
폐기물		16.6 (6.1)	16.1 (3.7)	15.5 (3.2)	13.0 (2.3)	-1.6
토지이용변경 및 임업 (흡수원)		-23.7 (-8.7)	-21.2 (-4.9)	-37.2 (-7.6)	-32.9 (-5.9)	2.2
순배출량		273.7	430.7	490.4	558.2	4.9

주: 1) ()안은 구성비(%)임.

2) 탈루성은 에너지생산, 처리, 수송, 저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배출량임.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

환경 및 산업,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각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식생대가 이동하고 있고 농작물의 주산지가 북상하며 한대성 어종(명태, 대구 등)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난대성 어종(오징어 등)과 해파리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적조의 발생도 빈번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 지역 지하수자원 감소, 기상재해로 인한 도로와 건물의 파손 증가, 게릴라식 호우가 빈번히 출몰하는 등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의심되는 많은 자연 현상 등이 관찰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와 전망

온실가스의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이산화탄소(CO₂)이다. 이산화탄소는 화석을 연료로 사용하여 연소하는 과정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통제한다는 것은 산업활동과 주거활동, 소비활동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국내 온실가스 부문별 배출량을 살펴보면(〈표 X-14〉), 에너지 부문이 전체의 8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산업공정 부문이 11.6%, 농업 및 축산 부문이 2.6%, 그리고 폐기물 부문이 2.3%를 차지한다. 1990~2005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산업공정 부문이 8.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다음이 에

너지 부문 4.8%이며, 폐기물은 오히려 -1.6%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감안한 총배출량은 같은 기간 연평균 4.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흡수원을 감안하지 않은 총배출량은 연평균 4.7%의 증가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증가율과 유사하다(〈표 X-15〉).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높다는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 높게 지속되어 온 것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산업 및 소비구조가 에너지 다소비 형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산업구조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국민총생산(GDP) 100만원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 0.93톤에서 2005년에는 0.82톤을 배출하여 이 기간에 연평균 -0.8%의 증가율을 보였다(〈표 X-16〉).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에너지 다소비 중심의 산업에서 서비스업이나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거나 또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짐을 의미하므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 6.94톤에서 2005년 12.24톤으로 15년 동안 연평균 3.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국가 전체로는 에너지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발전부문과 수송부문에서의 배출량이 크게 증가한 바에 기인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국민 개

〈표 X-15〉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비교

	한국	OECD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연평균 증가율 (1990~2005년)	4.7	1.0	1.2	0.9	5.6	4.6

출처: 국무총리실·지식경제부·환경부·외통부 공동주체, "기후변화대응 국가전략 워크숍(한국표준협회 인제개발원, 2008. 4. 11~12)" 자료집, 2008

개인의 생활패턴이나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표 X-16〉 국민 1인당 및 GDP 100만원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1990-2005

	국민 1인당 배출량(tCO ₂)	GDP 100만원당 배출량(tCO ₂)
1990년	6.94	0.93
1995년	10.02	0.97
2000년	11.24	0.91
2005년	12.24	0.82
연평균 증감률	3.9	-0.8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자료

202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에 비하여 약 3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연평균으로는 2.2% 증가한 수치이다. 부문별로는 에너지 부문이 2.1%, 산업부문 2.2%, 폐기물 부문 4.8%의 증가가 예측되고 농업부문은 오히려 0.6% 감소할 것

으로 예측되었다. 1990~2005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치인 4.7%보다는 낮은 값이지만 여전히 OECD 국가의 0.9%(IEA, 2007)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 에너지 부문만 따로 살펴보면 발전부문이 2.9%로 증가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수송 2.7%, 가정·산업·공공부문 1.5%, 그리고 산업부문 1.1%이다(〈표 X-17〉). 2005년까지의 증가율에 비해서는 낮은 값을 보이지만 여전히 OECD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증가치를 보인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경제규모면이나 무역량 규모를 볼 때 의무 감축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 탄소세의 도입이나 유류세의 인상 등 산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도 부담이 되는 정책의 도입이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 후손의 장래를 생각하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고통을 분담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X-17〉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2005-2020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100만 CO ₂) 연평균증가율
산 업	157	163.9	170.5	184.8	1.1
수 송	98	118.8	132.7	146.7	2.7
가정/산업/공공	67	73.0	77.7	82.9	1.5
발 전	171	211.9	222.9	261.8	2.9
합 계	493	567.6	603.9	676.1	2.1

주: 2005~2015년 동안 국내 증가율은 1.5%이고 OECD 국가 평균은 0.9%임. 같은 기간 발전부문의 국내 증가율은 2.7%인 반면 OECD 국가 평균은 1.1%임.
출처: 기후변화 국가전략 워크샵,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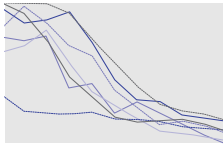
공성용(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참고문헌

-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02, *World Energy Outlook 2002*.
-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07, *World Energy Outlook 2007*.

한국의 사회동향 2008

Korean Social Trends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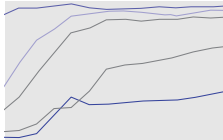


Population

Household & Family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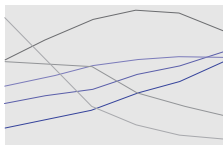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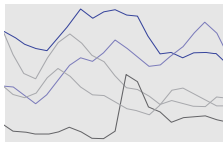
Housing & Transportation



Health

Welfare

Environment



Social Security

Social Cohesion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 이재열 268

자연재난, 어떻게 변했나 • 이재열 280

증가하는 '흉악범죄' • 윤옥경 284

XI. 사회안전

Social Security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안전은 위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삶의 질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오래 전 매슬로우(Maslow)는 “인간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최근 안전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광우병 논쟁이나 중국산 유제품에서 검출된 멜라민 파동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위험은 대체로 생태적 위험, 기술적 위험, 사회적 위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생태적 위험이란 자연의 개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만들어지는 재난을 뜻한다. 지진, 황사, 그리고 태풍과 호우에 따른 피해 등은 대표적인 생태적 위험이다.

기술적 위험은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과 기술체계의 오작동이나 인간적인 오류 혹은 두 가지의 결합에 의해 생겨나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의미하는데, 화재가 가장 대표적이며,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도 큰 위험요인들이다.

사회적 위험은 집단 내 규범이나 사회체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빈곤과 범죄이다. 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가 크게 늘어났으며, 장기간에 걸친 경기불황과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빈부격차가 크게 증가하면서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

객관적인 지표의 수준에서 위험은 안전과 쌍을 이루며, 주관적인 인식의 수준에서는 불안과 안심이 쌍을 이룬다. 따라서 안전하면서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삶의 질이 높은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생태적, 기술적, 사회적 수준에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런데 위험은 공평하게 분포하기보다는 계층적으로 불평등하게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그

래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한 집단일수록 열악한 삶의 질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런 이유에서 위험요소를 줄여나가는 것은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

생태적 위험

지진, 가능한 재난

우리나라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필리핀판과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 유라시아판의 경계에 위치한 일본과는 달리 유라시아판의 동쪽 가장자리 내륙에 속하고 있어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004년 12월에 수마트라 섬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9의 강진으로 280,00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의 규모 8의 지진으로 80,000명 이상의 인명과 16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난 것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민감성이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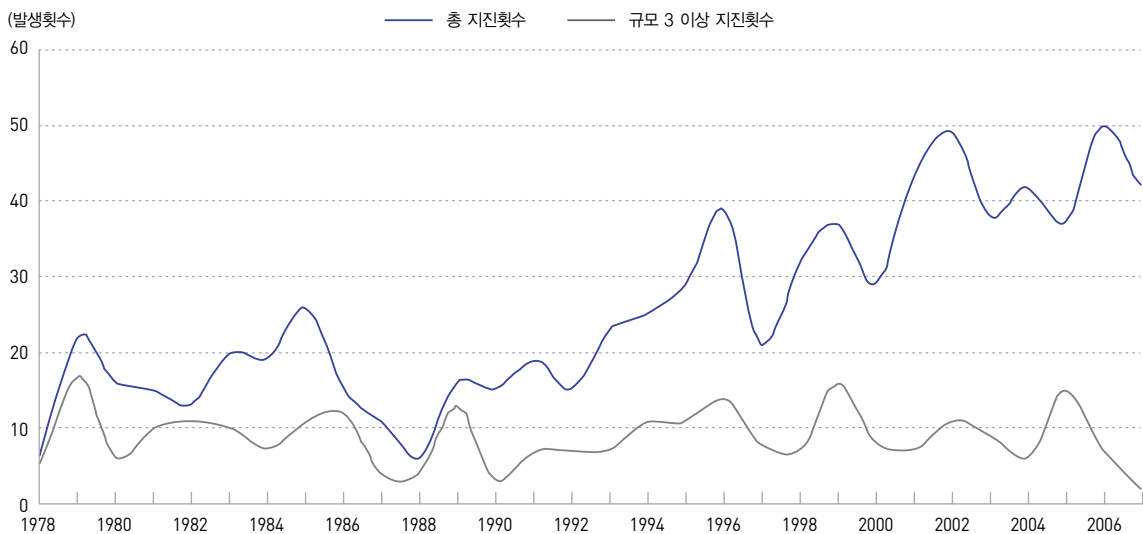
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00여 년간 약 1,900회의 지진발생 기록이 있으며, 이 중에 피해를 발생시킨 지진이 40회여서 50년에 1번 정도는 피해를 입은 셈이 된다.

지진규모는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지진 발생시 그 진동에너지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나타낸다. 진도는 어떤 장소에 나타난 진동의 세기를 사람의 느낌이나 구조물의 흔들림 정도로 수치화한 것으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진도크기(3.0)의 경우 유감지진이라 한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1978년부터 2007년까지 지진발생 빈도는 총 770회로서 연평균 26회에 해당한다([그림 XI-1]). 그런데 시기별로 발생의 경향이 달라지고 있는데, 1978~1996년까지는 연평균 18회 발생했으나, 1997년 이후에는 연평균 36회에 달해서 그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중 유감지진은 연평

[그림 XI-1] 지진발생 빈도: 1978~2007



출처: 기상청, 국가지진정보시스템

균 9회(남한지역 6회)가 발생하였다. 비교적 강도가 큰 규모 4.0 이상 지진은 총 37회로 연평균 1.3회(남한지역 1회)가 발생하였고, 1978년 이후 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총 5회(남한지역 4회)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부분의 규모가 큰 지진은 남한과 인근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직접 우리나라 영해에서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근에서 일어난 지진은 지진해일을 일으켜 우리 해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지진해일들로는 1643년 울산외해 지진해일, 1681년 양양외해 지진해일, 1741년 간포우 지진해일처럼 역사기록에 남은 것들도 있으며, 1940년 가무이미사키 지진해일, 1964년 니이가타 지진해일, 1983년 동해중부 지진해일, 1993년 북해도 남서외해 지진해일은 지진계기 이후의 기록으로 동해안에 영향을 끼친 지진해일이다. 1983년 5월 26일 일본 아키타현(秋田縣) 서측 외해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지진은 큰 지진해일

을 일으켜 동해안에 큰 피해를 주었다. 파고가 가장 높았던 곳은 울릉도 서북해안의 현포동으로 3~5m였고, 울진 이북, 동해시 이남의 약 70km 해안에 2m 이상의 해일이 도달하여 이 구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는 강원도 삼척군 원덕읍 임원리에는 약 4m에 이르는 해일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입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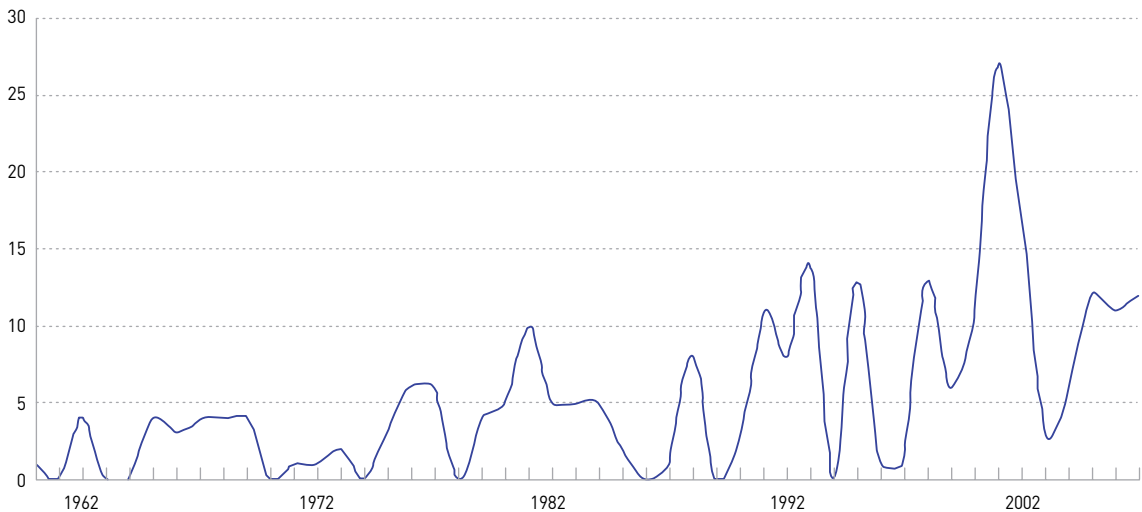
황사

황사는 바람에 의하여 하늘 높이 불어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예로부터 ‘흙이 비처럼 떨어진다’고 하여 우토, 혹은 토우(흙비)라고 불렀다.

황사의 발원지는 중국과 몽골의 경계에 걸친 드넓은 건조지역과 그 주변에 있는 반건조지역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황하 상류와 중류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주로 영향을 주었으나, 최근 3년 전부터는 이 지역보다 훨씬 동쪽에 위치한 내몽골고

[그림 XI-2] 황사발생 일수: 1960-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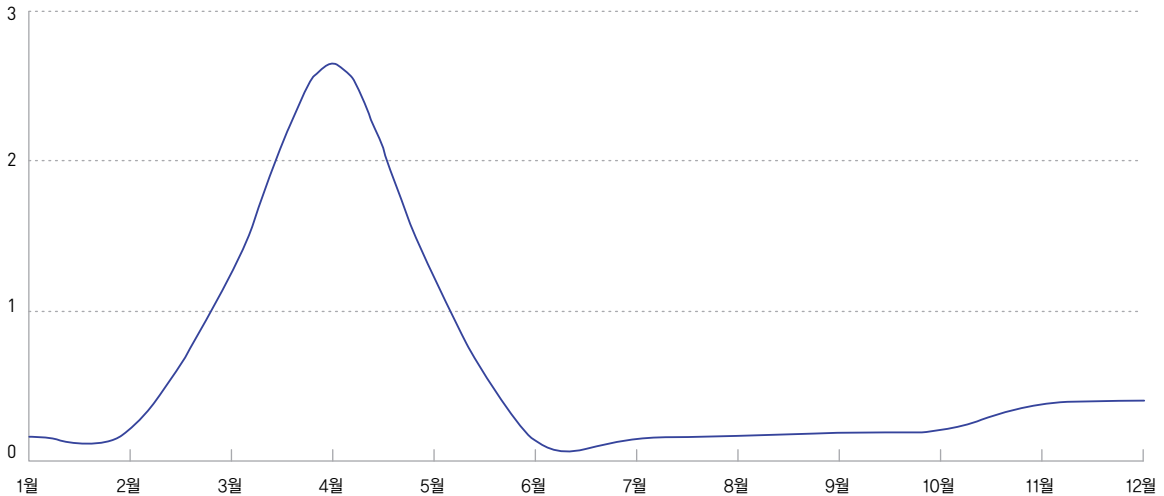
(발생일수)



출처: 기상청 자료, 각 년도

[그림 XI-3] 서울지방 월별 평균 화재발생 일수 : 1960-2007

(발생일수)



출처: 기상청 자료

원에서도 화재가 발원하여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화재는 1960년대 이후 소폭의 증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연간 발생일수가 10일을 넘는 해가 많아지고 있다([그림 XI-2]). 계절별로는 지난 1960년 이래 4월이 123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월 57일, 5월 54일의 순이었다.

화재의 증가는 빠른 속도로 공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의 오염물질과 뒤섞여 날아와 한반도에 광범하게 피해를 남기므로, 전통적인 국가 간 경계를 넘는 새로운 형태의 환경위험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기술적 위험

화재

화재는 가장 중요한 인적재난이며 큰 피해를 주는 재난이다. 우리나라의 화재발생 추이를 보면 19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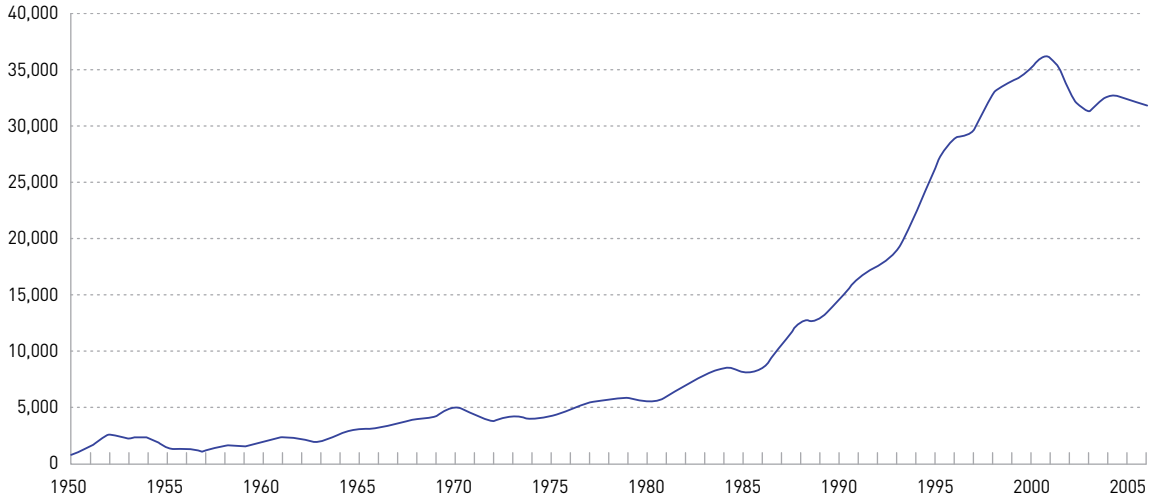
대 중반까지 10,000건 이내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980년대 후반에 10,000건을 넘기면서 급속히 증가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등락은 있지만 연간 30,000건 시대에 접어들었다([그림 XI-4]). 이처럼 1980년대 이후 화재가 급증한 이유는 사회구조의 복잡다변화와 에너지 사용의 증가 등으로 화재를 일으킬 요인은 빠르게 늘어난 반면, 화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재의 원인은 전기, 방화, 가스, 담배, 유류, 불장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1981년 이후 줄곧 전기 화재가 1위, 담뱃불화재가 2위, 방화가 3위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방화가 담뱃불화재를 추월하였고,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화재통계연감, 2006).

종류별로 보면 건축물화재가 가장 빈번하고, 그 다음이 차량화재이며 그 외 선박이나 항공기화재가 있다. 지난 10년간 화재는 대부분 건축물에서 발생하였

[그림 XI-4] 연도별 화재발생 건수: 1950-2006

(발생건수)



출처: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감』,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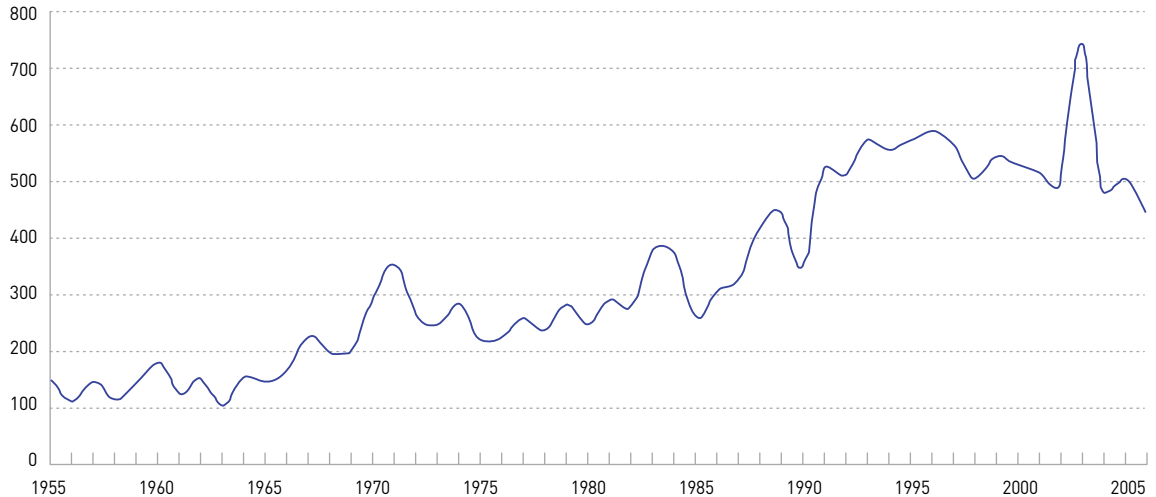
으며, 건축물 중에서도 일반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이 공동주택, 음식점 순이었다. 건축물화재로 인한 피해는 1997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2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반면, 차량화

재는 일정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다(화재통계연감, 2006).

화재로 인한 사상자 발생현황([그림 XI-5])을 보면, 1970년대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그림 XI-5]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 1955-2006

(사망자수)



출처: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감』, 2006

수준을 유지하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후반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는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밀집 시설과 복합구조시설의 증가로 인해 화재가 빈번해지고, 또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커지는 반면, 화재와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와 관련기술은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한 결과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된다.

화재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인명피해는 연평균 2,180명(사망 446명, 부상 1,734명)으로 하루 평균 사망 1.2명, 부상 4.7명꼴인 것으로 나타났고, 재산피해는 연평균 1,533억 4,100만 원으로 하루 평균 4억 2,000만 원의 재산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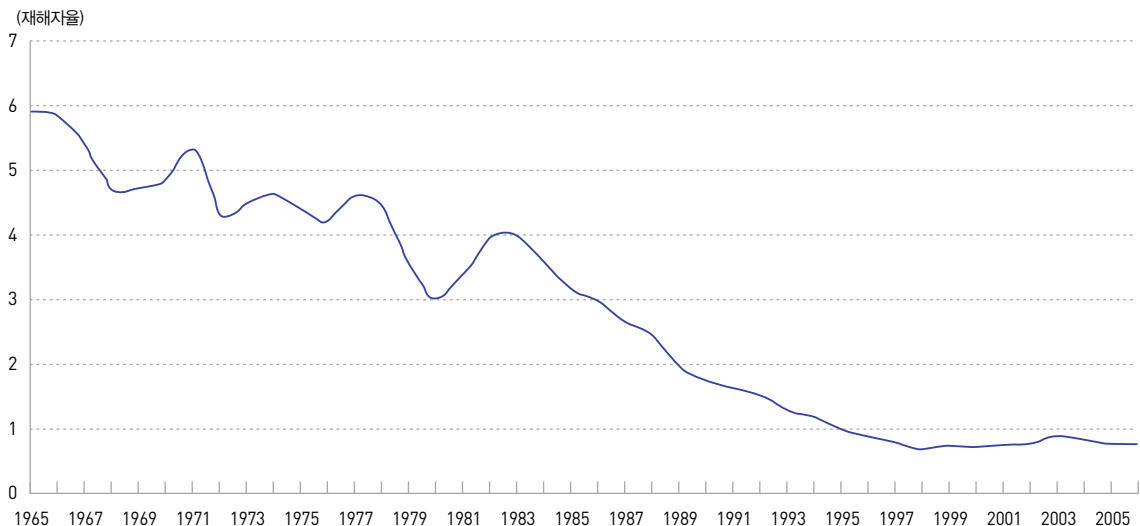
한국사회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면에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의 산업전반에 걸쳐 발생한 산

업재해의 아픔도 적지 않았다. 초고속 성장을 지탱해 온 힘 자체가 바로 대규모의 위험요인들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성장과 위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특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활발하게 시행된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는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이에 비례하여 부상 또는 직업병을 얻은 재해자수도 늘어났다. 이러한 산업재해 건수 및 재해자수는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초기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작은 시행착오로 인한 사고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산업 현장에서의 갖가지 실수들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어진 반면에,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증가하였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재해자수는 1964년 1,489명에서 시작하여 1984년을

[그림 XI-6] 산업재해자율 : 1965-2006



주 : 재해자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

출처 : 노동부, 『산업재해총람』, 각 년도

정점으로 157,800명까지 증가했다가, 조금씩 줄어들어 1998년에 51,514명까지 줄어들었으나, 그 이후 다시 소폭 증가하여 2006년에는 89,010명에 이르고 있다.

근로자 대비 재해자의 비율을 보면 60년대 중반에는 6%에 가까웠으나 점차 줄어들어서 2006년에는 0.77%로 낮아졌다(그림 XI-6). 재해로 인한 부상자의 숫자는 1984년의 154,930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6년에는 39,746명으로 줄었으나, 사망자 숫자는 크게 줄지 않았고 2,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중대사고의 비중이 줄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재해위험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본다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서 엄밀한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의 재해율은 미국이나 독일보다 낮고, 일본이나 영국에 비해서는 높은 반면, 근로자 10,000명당 사고사망자 수인 사고성 사망 만인율은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하게 높아서 매우 위험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표 XI-1〉).

높은 산업재해율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실근로시간이 월등하게 많아서 노동력의 마모가 심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증가와 외국인, 고령자 등 산재취약집단 근로자의 증가도 산업재해를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산업별 사망자는 2006년 기준 총 사망자수 2,453명에 달한다. 이 중 건설업이 25.72%로 가장 많고, 제조업이 24.95%, 기타산업이 22.91%, 광업이 19.65%, 운수·창고·통신업이 6.32%, 전기·가스·수도업이 0.45%로 나타났다. 산업별 10,000명당 사망률은 광업이 307.87로 압도적으로 높고, 그 외 건설업 2.48, 운수·창고·통신업이 2.29, 전기·가스·수도업 2.04, 제조업 2.02, 기타산업 1.05로 나타났다(노동부, 2006). 산업재해는 사망자 외에도 질병요양자나 신체장애자를 발생시키는데 이들의 수가 증가하여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산재보상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교통사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교통사고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한때는 세계 1위의 교통사고국이라는 오명을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망자를 기준으로 할 때 1991년을 정점으로 교통사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그림 XI-7). 그리고 그 감소 속도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국과 비교해볼 때, 한국의 자동차 10,000대당 사망자수는 비교대상이 된 영국, 독일, 호주, 스웨덴, 일본 등의 평균보다는 3배나 높은 수치를 보인다(〈표 XI-2〉).

〈표 XI-1〉 국가 간 산업재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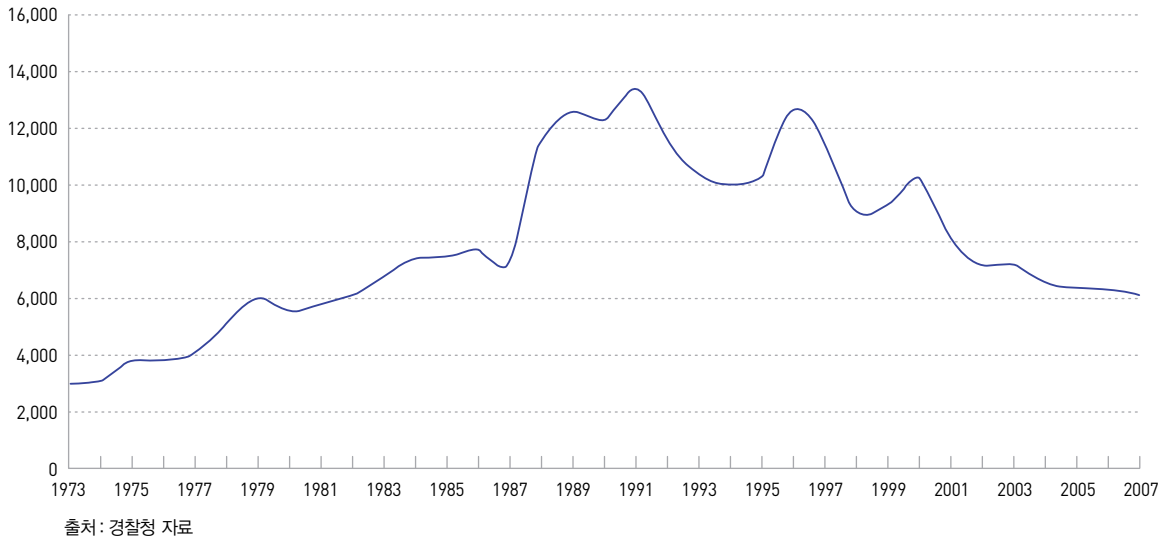
	한국(2005년)	일본(2004년)	독일(2004년)	미국(2004년)	영국(2004~2005년)
연간 실근로시간	2,366	1,789	1,443	1,824	1,669
재해율	2.77	0.25	3.00	3.96	0.59
사고성사망 만인율	1.14	0.30	0.26	0.41	0.07

주 : 사망사고 만인율=(업무상 사고 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한국통계는 2005년도 자료임.

[그림 XI-7] 교통사고 사망자수: 1973-2007

(사망자수)



〈표 XI-2〉 국가 간 자동차 10,000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비교: 2005

국 가	사망자수
한 국	3.4
미 국	1.8
프랑스	1.4
호 주	1.2
영 국	1.0
독 일	1.0
일 본	1.0
스웨덴	0.9
평 균	1.7

출처: 경찰청 자료

사회적 위험

범죄부하량

우리 국민은 최근까지 우리 사회가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한국의 대도시는 야간에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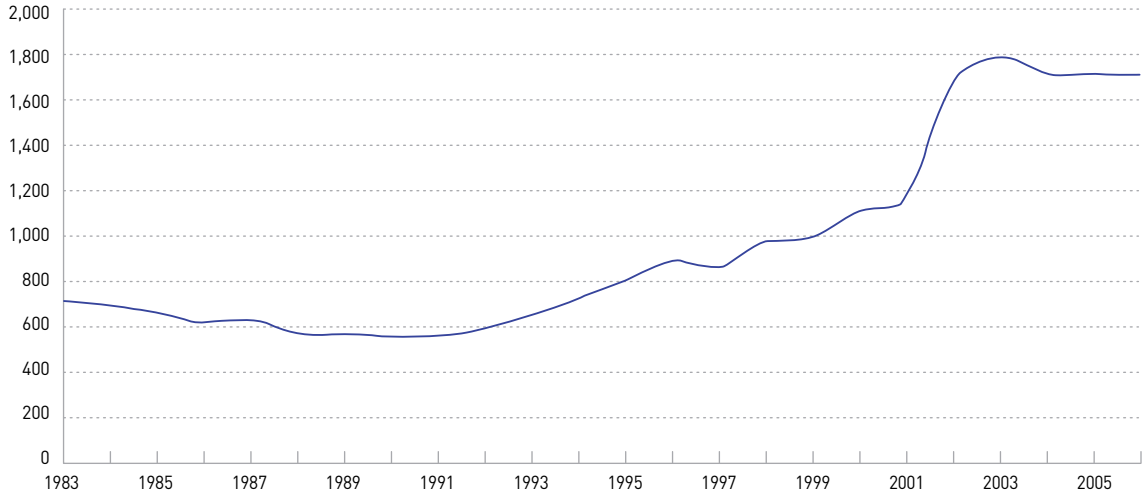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별한 원한관계 없이 무차별적 대상에 대한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뜻하지 않게 범죄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1983년과 2006년 사이에 형법범의 숫자는 285,000명에서 828,00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인구 10만명당으로 따지면 716명에서 거의 2.5배에 가까운 1,714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이한 것은 절도사건의 경우 1994년을 저점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190,000명 수준으로 늘어났고, 살인사건도 1983년의 518명 수준에서 2006년에는 1,000명을 넘어서 2배가 되었다. 강도와 강간사건도 각각 2배와 2.5배로 급격히 증가했다. 폭행과 상해사건도 꾸준히 증가하여 2배 이상으로 증대되었다.

특히 IMF 경제위기를 겪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범죄로 인한 위험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 등 5대 주요 강력범죄 발

[그림 XI-8] 형법범률: 1983-2006

(형법범률)



주: 형법범률=(형법범수÷총인구)×100,0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생건수는 1997년 120,219건에서 2000년 228,394건으로 무려 100,000건 이상 늘어났다. 이 기간 중 5대 주요범죄 발생건수의 증가율은 전체 범죄발생 건수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다.

범죄방지 및 교도능력

1983년부터 2006년 사이에 교도소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2,000명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에 68,000명 수준으로 정점에 달하였다가, 2006년에는 46,000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인구 10만명당으로 따지면 132명 수준에서 96명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반면에 교도관의 숫자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 교도관 1인당 수용인원이 7명에서 3.4명으로 떨어졌다([그림 XI-9]).

안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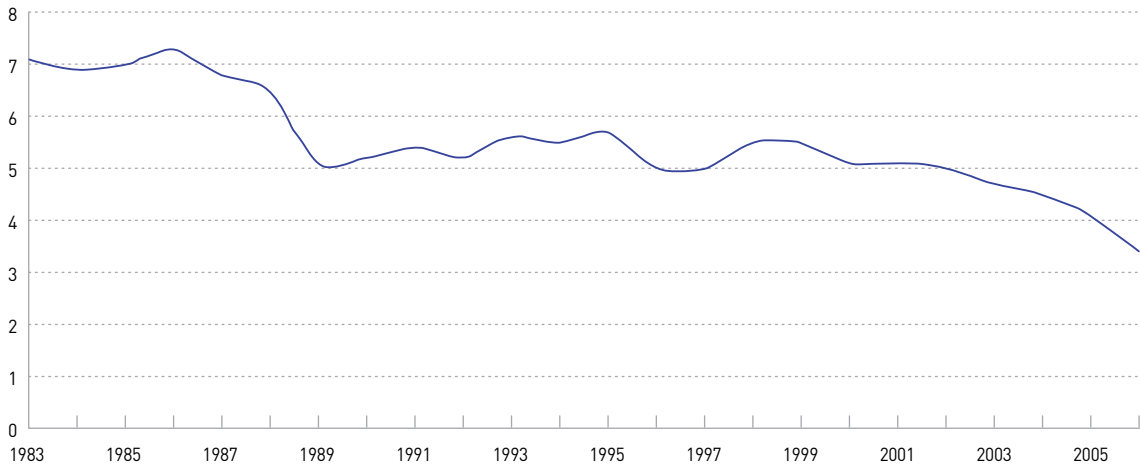
2005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서 사회 안전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바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노약자와 어린이의 보행 시 자동차 위협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3.3%가 이를 불안해했고, 그 다음은 식료품과 약품 등에 59.4%가, 해킹 등의 정보보안에 58.9%가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XI-3). 한국사회에서 자연재해와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전하게 느끼는 반면, 복잡한 교통과 일상적으로 보도되는 먹거리 관련 위험, 그리고 급속한 정보화로 인해 발생하는 해킹 위험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범죄피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1997년 57.2%, 2001년 56.6%, 2005년 57.9%로 큰 변화가 없다. 다만, 도시지역인 동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61.3%에서 59.9%로 줄어든 반면, 농촌지역인 읍면부에서는 40.8%에서 48.7%로 증가하여, 도시지역의 범죄피해에 대한

[그림 XI-9] 교도관 대비 1일 평균 수용인원: 1983-2006

(수용인원수)



출처: 법무부, 『법무연감』, 각 년도

위험감이 줄어든 대신 농촌지역에서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고학력자일수록 두려움을 더 느끼는 경향도 있다.

같은 범죄부문 조사는 범죄로부터의 체감안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야간에 혼자 걷기에 두려운 곳이 있는가를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는 2001년(48.6%)에 비해 2005년(42.6%)에 불안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야간보행에 두려움을

느끼며, 그 주된 이유는 인적이 드물거나(62.7%), 가로등이 없어서(28.0%)라고 응답하였다.

자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가 26.1명(2005년 현재)으로 OECD 국가들 중 자살률 수치가 가장 높다(〈표 XI-4〉).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이 10만명당 24.0명(2004년), 헝가리가 10만명당 22.6명(2003년), 벨기에

〈표 XI-3〉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05

(%)

	안전하다	보통이다	불안하다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18.0	35.9	46.0
건축물 및 시설물	15.8	47.5	36.8
노약자나 어린이가 자동차 위협없이 보행	5.5	31.2	63.3
식료품,약품 등 상품	6.7	34.0	59.4
정보보안(해킹 등)	5.4	35.7	58.9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5

〈표 XI-4〉 자살자수의 국제비교

순 위	국 가	연 도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
1	한국	2005	26.1
2	일본	2004	24.0
3	벨기에	1997	21.1
4	핀란드	2004	20.3
5	에스토니아	2005	20.3
6	크로아티아	2004	19.6
7	프랑스	2003	18.0
8	오스트리아	2003	17.9
9	스위스	2004	17.4
10	체코	2004	15.5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1997년)와 핀란드(2004년)가 각각 21.1명과 20.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에 23.0명으로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6년 통계청의 ‘사망 및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자살은 전체 사망원인 중 5번째로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20대 연령대에서는 다른 사망원인에 비하여 가장 높은 사망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XI-5〉). 이를 성별로 보았을 때는 여성의 경우 10대와 20대에서 사망원인 1순위이고, 남성의 경우 30대 사망원인의 1순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는 1997년 14.1명에서 외환위기 이후 19.9명으로 증가했다가 2000년을 전후해서는 15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그림 XI-10). 그러나 200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26.1명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자살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질병 외 사망원인이 되었던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를 낳게 되었다. 자살이 우울증과 관련되어 있고 역능성의 결여로 인

〈표 XI-5〉 연령대별 사망원인 1순위 사망률: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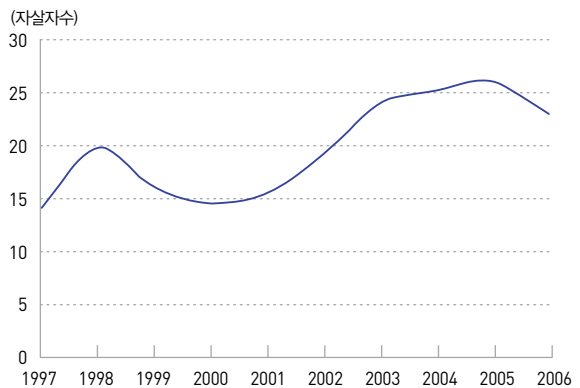
	사망원인	인구 10만명당 사망률
0~9세	운수사고	4.3
10~19세	운수사고	5.3
20~29세	자살	13.8
30~39세	암	18.6
40~49세	암	65.4
50~59세	암	192.2
60~69세	암	471.8
70세 이상	암	1,108.8

출처: 통계청,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 2007

해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급격한 자살률의 증가는 외환위기 이후 어려워진 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 1년 동안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10.3%이며, 자살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48.2%), ‘가정불화’(15.4%), ‘외로움·고독’(12.0%) 순이었으며, 성별로 보면 여자(11.5%)가 남자(9.0%)보다, 연령별로는 40대(12.7%)와 50대(11.6%)가 자살에 대한 충동을 많이

[그림 XI-10]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 1997-2006



출처: 통계청,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 각 년도

〈표 XI-6〉 연령별 자살충동 여부 및 이유: 2006

(%)

	자살 충동 있음	소 계	경제적 어려움	가정 불화	이성 문제 (실연등)	질환, 장애	직장 문제	외로움, 고독	성적, 진학 문제	친구 불화, 따돌림	기타
전 체	10.3	100.0	48.2	15.4	2.7	8.2	6.0	12.0	5.0	0.8	1.7
15~19세	10.1	100.0	6.2	15.5	2.2	1.4	1.0	10.1	56.1	6.0	1.6
20~29세	8.1	100.0	32.5	11.0	7.6	3.5	18.6	18.4	4.4	1.0	3.0
30~39세	10.5	100.0	53.0	19.2	3.6	4.4	6.6	10.6	0.0	0.4	2.2
40~49세	12.7	100.0	62.4	17.2	1.4	4.7	4.5	9.0	0.0	0.1	0.6
50~59세	11.6	100.0	58.6	14.5	1.2	11.0	3.8	9.4	0.0	0.3	1.2
60세 이상	8.3	100.0	41.1	11.2	0.5	26.5	0.9	17.7	0.0	0.2	1.9

출처: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6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학교성적, 진학문제’, 20대는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문제’, 30~50대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불화’, 60대는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정신적 질환, 장애’가 자살충동의 원인이었다(〈표 XI-6〉).

자살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윤리와 규범으로부터 이탈한 행위로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혼란스

럽게 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인 지표로 환산할 수 없는 심각한 손실이다. 자살은 사회의 통합정도가 낮을 경우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야기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은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이다.

이재열(서울대학교)

참고문헌

- 노동부. 2006. 『산업재해연감』.
- 소방방재청. 2006. 『화재통계연감』.

자연재난, 어떻게 변했나

요 약

- 우리나라의 자연재난 위험도는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높은 수준이 아니다.
- 한반도의 주된 자연재난은 태풍과 집중호우인데 북한은 사회 시스템이 취약하여 남한보다 그 피해정도가 훨씬 더 크다.

자연재난의 피해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 조수(潮水), 대설, 가뭄, 지진(지진해일),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말하며, 이러한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자연재난 피해라고 한다.

최근 10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연평균 약 2조 원에 이르고, 연평균 약 120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이재민은 연평균 약 24,000여 명이나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자연재난은 주로 호우, 태풍, 대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지진이나 해일, 가뭄 등의 피해는 적은 편이다. 수해는 주로 태풍(59%)과 국지성 집중호우(27%)에 의해 발생하며, 최근에는 태풍에 의한 피해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해위험성은 전 국토에 걸쳐 있다.

우리나라를 내습하는 태풍의 이동경로는 어느 정도 유형화할 수 있지만, 정확한 경로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아울러 좁은 국토에 산악지형의 영향으로 국지성 내지 돌발성 집중호우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수해피해가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1일 80mm 이상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과거 20년 전 보다 1.5배 증가한 바 있는데, 14개 계측지점 누적 호우가 1977~1988년 사이에는 연평균 26일이었는데

1997~2006년 사이에는 40일로 늘어났다. 2002년 8월 말에 있었던 태풍 루사(2002. 8.31)는 강릉지역에 1일 강우량 870.5mm에 달하는 집중호우를 뿌렸는데, 이는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량(1,283mm)의 약 70% 수준에 달한 것으로서, 사실상 예측하기 힘든 집중 폭우였다. 태풍의 이동경로나 광역 강우량의 예측기술은 발전하고 있으나 최근 빈번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의 정확한 예측은 더욱 어려워져 이로 인한 피해 가능성 또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홍수 피해액의 분포를 보면 동해안과 남해안 연안, 경기북부, 영남내륙을 중심으로 그 피해가 큰데, 이것은 태풍이 백두대간이 만나는 경사가 심한 지역을 지날 때 산사태나 급류를 일으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명피해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강원도 지역, 영남내륙, 경기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인명피

해가 재산피해와 증첩됨을 보여준다. 경기북부를 제외하고는 인명피해가 15명 이상 발생하는 지역은 대부분 산간도시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인명피해의 원인이 산사태에 의한 매몰, 하천 및 계곡급류에 휩쓸림, 하천범람에 의한 피해 등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 10년의 전체 홍수피해는 지난 30여 년간의 피해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홍수피해는 과거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 및 북한과의 비교

우리나라의 자연재해가 외국에 비해 얼마나 심각한지를 비교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나라마다 유형이 다르고, 그 파급효과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재해보험회사인 Munich Re가 제안한 비교방법은 세계 50대 대도시의 자연재해 위험을 지수화한 것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성이 높은 도시는 도쿄로 710점에 해당한다. 그 다음이 샌프란시스코로 167점, L.A. 100점, 오사카, 고베 및 교토 지역이 92점, 마이애미 45점, 뉴욕 42점, 홍콩 41점, 런던 30점, 파리 25점 등이다. 서울은 15점에 불과하여 매우 안전한 곳으로 평가된다. 대도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연재해의 위험은 사회적인 환경과 긴밀하게 결합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도시화는 구조의 복잡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연재난의 피해를 증대시킨다. 2004년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경우, 뉴올리언스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으며, 중국 쓰촨성의 지진은 일본의 지진 진도와 비슷하였는데 중국에서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다. 뉴올리언스에 심각한 피해를 준 이유로 인종차별과 격리가 지적되고 있

〈표 XI-7〉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
1996-2005

	재산피해(억원)	인명피해	이재민수
1996년	6,180	77	18,686
1997년	2,352	38	6,296
1998년	17,378	384	30,308
1999년	13,678	89	26,656
2000년	7,094	49	3,665
2001년	13,875	82	4,165
2002년	67,749	270	71,204
2003년	47,778	148	63,133
2004년	12,567	14	8,814
2005년	10,498	52	9,914
합 계	199,149	1,203	242,841
평 균	19,915	120	24,284

주 : 피해액은 2005년도 환산액이고, 인명피해는 사망자수를 나타내며, 원인별로 보면 전체 재산피해 중 90%가 수해(태풍, 호우 등), 10%(10년 전체피해액 중 약 2조 원)가 대설, 폭풍설에 의한 것임.

출처 :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2005

으며, 중국 쓰촨성에 큰 피해를 준 이유는 도시가 지진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발전과 저발전 간의 피해 차이는 자연조건이 유사한 남북한 간에도 발견된다. 국제적십자자연맹에 의하면 북한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자연재난으로 숨진 사람의 총수는 380,000명이 넘는 데, 이는 세계 1위의 사망자수이며, 2위인 인도네시아에 비해서도 2.5배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것이다(〈표 XI-8〉). 지난 20여 년간의 자료를 이용해 남북한을 비교해 보면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북한이 남한의 100배가 넘으며, 최근 10년간은 20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민의 경우에도 거의 10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정책과 산림관리, 그리고 경제상황 등이 자연재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그 피해를 증폭시킨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표 XI-8〉 남북한 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수와 이재민수 비교

		남한	북한
1988~1997년	사망자	1,981	229,273
	이재민	365,153	33,501,896
1998~2007년	사망자	1,851	382,905
	이재민	679,937	42,455,209
2007년	사망자	33	720
	이재민	740	1,172,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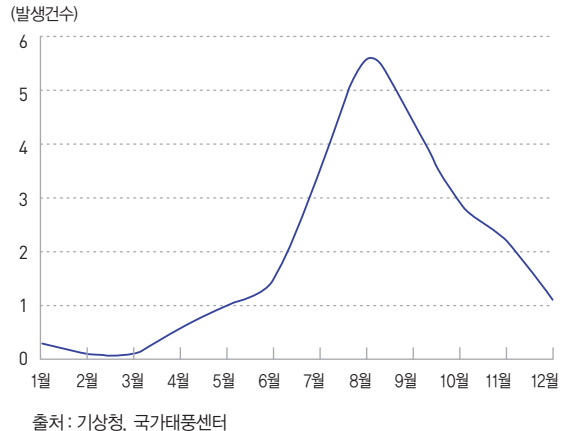
출처: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World Disasters Report*, 2007

태풍피해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가장 큰 자연재해 중 하나는 태풍이다. 태풍은 적도상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이 일으키는 것으로 일본남부를 거치며 대부분 소멸되지만, 한 해 평균 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태풍의 내습이 가장 많은 달은 8월, 7월, 9월의 순이다. 이 때 몰린 태풍이 전체의 91%이며, 아주 드물게는 6월, 10월에도 내습하는 경우가 있다(〈그림 XI-11〉).

〈그림 XI-11〉 월별 평균 태풍발생 건수: 1998~2007



태풍이 큰 피해를 입히는 이유는 대부분 집중호우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태풍은 일시에 많은 비를 뿌리고 산사태를 낳으며, 광범한 지역을 침수시켜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준다.

우리나라에 기상관측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태풍 중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것은 태풍에 대한 대비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던 일제시대에 주로 발생했다(〈표 XI-9〉).

가장 큰 피해를 준 태풍은 1936년 8월에 발생한 3693호 태풍으로서 전국에서 1,232명의 사망·실종자를 냈고, 그 다음이 1923년 8월의 2353호 태풍으로서 1,157명의 사망·실종자를 발생시켰다. 해방 후 가장 큰 피해를 낸 태풍은 1959년의 사라로 849명의 피해자를 냈다.

한편 재산피해액으로 따지면 2002년 8월 말에 발생한 루사로서 5조 8,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

〈표 XI-9〉 인명피해 순위로 본 역대 태풍

순위	발생일	태풍명	사망·실종자수
1	1936. 8. 20~28	3693호	1,232
2	1923. 8. 11~14	2353호	1,157
3	1959. 9. 15~18	사라	849
4	1972. 8. 19~20	베티	550
5	1925. 7. 15~18	2560호	516
6	1914. 9. 7~13	1428호	432
7	1933. 8. 3~5	3383호	415
8	1987. 7. 15~16	델마	343
9	1934. 7. 20~24	3486호	265
10	2002. 8. 30~9.1	루사	246

출처: 소방방재청 통계자료

켰고, 그 다음이 2003년 매미로서 4조 7,000억 원, 그리고 2006년 에위니아의 1조 8,000억 원순이었다.

〈표 XI-10〉 재산피해 순위로 본 역대 태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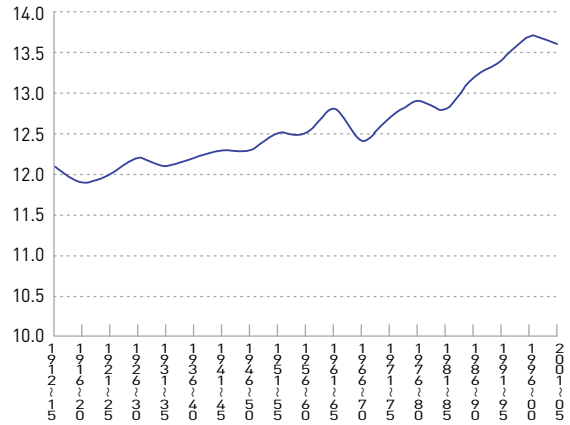
순위	발생일	태풍명	재산피해액(100만원)
1	2002. 8.30~9.1	루사	5,832,922
2	2003. 9. 12~13	매미	4,680,546
3	2006. 7. 9~29	에위니아	1,834,428
4	1999. 7. 23~8. 4	올가	1,203,187
5	1987. 7. 15~16	델마	670,557
6	1995. 8. 19~30	재니스	616,378
7	1991. 8. 22~26	글래디스	355,163
8	1998. 9. 29~10. 1	야니	308,647
9	2000. 8. 23~9. 1	프라피론	283,304
10	1959. 9. 15~17	사라	276,027

주: 재산피해액은 2006년 환산가격 기준임.

출처: 소방방재청 통계자료

[그림 XI-12] 5개년 평균 기온의 변화: 1912~2005

(섭씨온도)



주: 6개 관측지점(서울, 인천, 강릉, 대구, 목포, 부산)자료

출처: 기상청 자료

일제시대에는 인명피해가 컸던 반면 최근으로 올수록 재산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문명화되고 각종 도로나 건물, 농지와 철도 등 핵심기반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재해가 사회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잘 말해준다.

태풍피해가 증대하고 있는 배경에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구 온난화가 자리잡고 있다. 1912~2005년간의 6개 관측지점(서울, 인천, 강릉, 대구, 목포, 부산) 자료 분석 결과,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온난화와 도시화 등의 영향으로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XI-12]). 강수량도 장기적으로는 증가 추세에 있어서 한반도의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바뀌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재열(서울대학교)

참고문헌

- Münchener Rück, Munich Re Group, Megacities-Megatrends : Trends and challenges for insurance and risk management

증가하는 ‘흉악범죄’

요 약

-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흉악범죄’는 증가하여 왔는데, 그 중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강간(성폭력)이고 그 다음으로는 강도, 방화, 살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 살인과 강도는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강간(성폭력)과 방화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06년 통계를 통해 볼 때 ‘흉악범죄’ 중 비중이 가장 큰 강간(성폭력)의 경우 범죄자는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대와 40대가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범죄에 대한 뉴스를 들으며 살아간다. 늦은 밤 혼자 택시를 탄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나 아동을 성추행한 사건, 으스스한 골목에서의 강도피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노의 표출로 보이는 ‘묻지마 살인’과 ‘묻지마 방화’ 사건에 대한 뉴스를 접한다. 이러한 뉴스는 범죄에 대한 (때로는 과도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며 일상생활에서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한다. 이렇듯 범죄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나아가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범죄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해가 거듭될수록 범죄가 늘어나고 흉악해지고 있는가?

한 사회의 범죄의 양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로 이용되는 것은 국가 형사사법기관이 공표하는 공식범죄통계(official crime statistics)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식범죄통계는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이다. 『범죄분석』은 한 해 동안 경찰과 검찰이 인지하고 검거하여 수사하고 기소한 범죄사건과 범죄자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데, 범죄발생건수와 검거인원, 범죄유형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범죄분포, 처분형태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 단계의 형사사법기관에서 백서

나 연감의 형태로 관련 범죄통계를 공표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경찰백서』, 『법무연감』, 『사법연감』 등), 또 『범죄분석』에 수록되어 있는 통계자료를 가공하고 설명을 추가한 『범죄백서』가 매년 법무연수원에서 발간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공식범죄통계가 우리 사회의 범죄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통계자료를 읽어내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공식범죄통계는 형사사법기관이 인지하여 기록한 범죄사건과 범죄자이다. 신고되지 않거나 인지되지 않고 묻혀버리는 소위 ‘숨어 있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공식통계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공식통계는 실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라기보다는 실제 발생한 범죄, 시민의 신고의식, 그리고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적 대응이 모두 반영된 합작품이다. 실제 범죄사건이 더 늘어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사건이 신고되고 더 많은 범죄가 인지된다면 공식통계에서의 범죄건수는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의 성폭력, 강간사건의 증가가 실제 발생의 증가인지 아니면 신고율과 범죄발견의 증가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식통계의 수치를 이해함에 있어서 공식범죄통계의 이러한 한계를 유념해야 한다.

『범죄분석』에서는 2002년까지는 강력범죄에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유인, 체포감금을 종류별로 분류하지 않고 포함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강력범죄를 둘로 나누어 살인, 강도, 강간, 방화를 강력범죄 중 ‘흉악범죄’로, 나머지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유인, 체포감금을 ‘폭력범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강력범죄 유형 중에서 일반시민들의 삶에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는 범죄유형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살인이나 강도, 강간과 성폭력, 그리고 방화, 즉 ‘흉

악범죄’이다. 이 범죄유형은 피해의 심각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전체사회의 질서와 안전의 관점에서 그 의미가 다른 유형의 범죄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크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의 ‘흉악범죄’ 추세를 공식통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흉악범죄’의 추세

먼저 흉악범죄의 발생건수를 보면 1996년에 12,000여 건이었던 것이 10년 후인 2006년에는 21,000여 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표 XI-11〉). 1996년 이후부터 2001년까지 증가를 보이던 발생건수는 2002~2005년 사이에 다소 등락했으나, 2006년에는 10년 중 가장 많은 발생건수를 기록하였다.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로 계산되는 발생률 수치도 같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96년에는 인구 10만명

〈표 XI-11〉 ‘흉악범죄’ 발생 추이: 1996~2006

	발생건수	발생률
1996년	12,155	26.7
1997년	12,967	28.2
1998년	15,416	33.3
1999년	15,633	33.5
2000년	17,780	37.8
2001년	18,480	39.0
2002년	17,759	37.3
2003년	20,416	42.7
2004년	19,539	40.7
2005년	19,941	41.4
2006년	21,006	43.5

주: 1) 발생건수는 살인, 강도, 강간(성폭력 포함), 방화건수의 합임.

2)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임.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당 26.7건이었던 ‘흉악범죄’가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에는 10만명당 39건을 기록하였다. 2002년에는 그것이 37.3건으로 약간 감소하였지만 2003년에는 10만명당 42.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10만명당 40.7건과 41.4건으로 약간 감소하였지만 90년대 후반의 수치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에는 10만명당 43.5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약간의 등락이 있긴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흉악범죄’는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흉악범죄’의 유형별 추세

‘흉악범죄’를 범죄의 종류별로 즉 살인, 강도, 강간, 방화의 10만명당 발생건수를 보자(〈표 XII-12〉). 먼저 살인을 발생건수로 보면 1996년에 연간 10만명당 690건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1,000건을 약간 넘어서고 있어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했다고 할 수 있으나, 2000년경부터는 그다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인 발생률 추이를 보더라도 10만명당 1~2명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급격한 증가나 감소는 보이지 않는다.

강도는 1996년에 3,586건에서 2006년에 4,684건으로 10년 사이에 1,000여 건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3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서서 2006년에는 10만명당 9.6건으로 10년 전인 1997년의 수준과 비슷한 상황이 되었다.

살인과 강도의 발생건수와 발생률이 10여 년 동안 안정적이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반해 강간(성폭력 포함)과 방화의 발생건수와 발생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강간범죄는 ‘흉악범죄’ 중 발생건수와 발생률에서 단연 선두에 있는 범죄이다. 발생건수는 1996년에 7,100여 건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13,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여준 것이다. 발생률도 1996년에는 10만명당 약 16건 정도이던 것이 2006년에는 10만명당 약 28건으로 두 배 가까운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생건수와 구성비율의 증가를 액면 그대로 성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성범죄 발생의 증가와 함께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의 변화로 신고율의 증가, 아동성학대와 성폭력범죄에 대한 불관용 경향 등이 더 많은 범죄를 ‘찾아내도록’ 한 것일 수도 있다.

끝으로 방화범죄도 강간(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발생건수와 발생률에서 모두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6년에 721건이었던 방화범죄는 1998년부터는 1,000건을 넘어섰으며 2000년대에 와서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90년대 후반과 비교하여 볼 때 발생건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10만명당 발생률도 급격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면 ‘흉악범죄’를 범죄종류별로 나누어 살펴 보았을 때, 가장 많은 건수와 가장 높은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범죄는 강간(성폭력)이며, 그 다음이 강도, 방화, 살인의 순이다. 지난 10여 년간의 추세를 보면 살인과 강도는 큰 변화가 없거나 감소경향을 보이는 데 반해서 강간(성폭력)과 방화는 증가를 보이고

〈표 XI-12〉 ‘홍악범죄’ 유형별 발생건수와 발생률: 1996~2006

	살인		강도		강간(성폭력 포함)		방화	
	건수	발생률	건수	발생률	건수	발생률	건수	발생률
1996년	690	1.5	3,586	7.7	7,158	15.7	721	1.6
1997년	789	1.7	4,282	9.1	7,120	15.5	776	1.7
1998년	966	2.1	5,407	11.5	7,886	17.0	1,157	2.5
1999년	984	2.1	4,712	10.0	8,830	18.9	1,107	2.3
2000년	964	2.0	5,349	11.1	10,189	21.7	1,278	2.7
2001년	1,064	2.2	5,546	11.5	10,466	22.2	1,375	2.9
2002년	983	2.0	5,953	12.3	9,435	19.8	1,388	2.9
2003년	1,011	2.2	7,327	15.1	10,365	21.7	1,713	3.5
2004년	1,082	2.2	5,762	11.9	11,105	23.1	1,590	3.3
2005년	1,091	2.2	5,266	10.8	11,757	24.4	1,827	3.7
2006년	1,064	2.2	4,684	9.6	13,573	28.1	1,685	3.4

주: 1) 강간은 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중 강간에 해당하는 사건의 합임.

2) 방화건수는 방화건수와 실화건수의 합임.

3)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임.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김지선 외(2007)에서 재인용하여 재구성

있다. 이 두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간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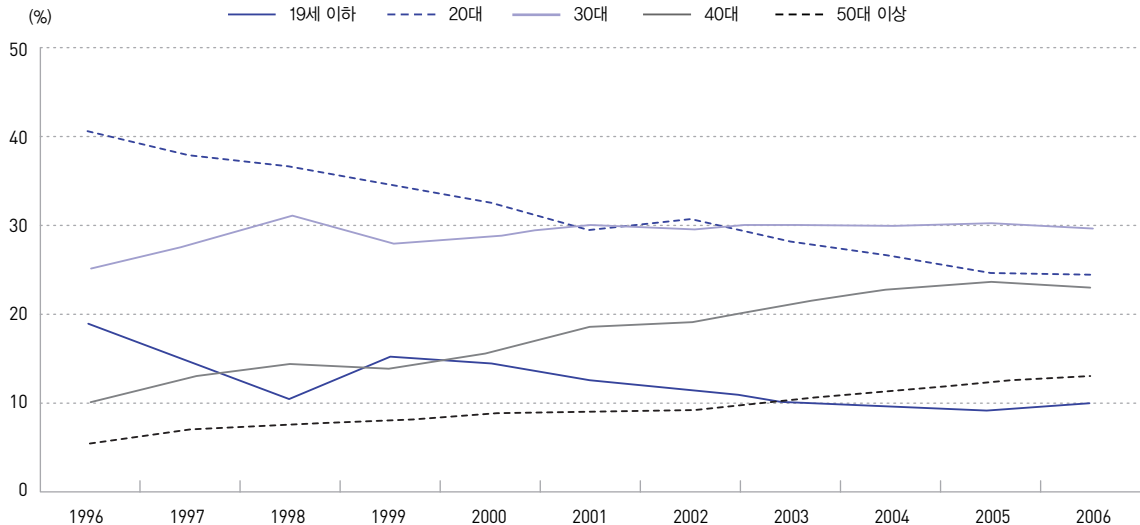
‘홍악범죄’ 중 발생건수가 가장 많으면서 증가추세에 있는 강간(성폭력)범죄와 관련해서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자. 일반 사람들은 강간(성폭행)범은 주로 젊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젊고 성적 욕구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10대와 20대의 젊은 남성들이 저지르는 범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식통계상에 나타나고 있는 강간범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 30대, 40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2006년의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집단은 30대이고(29.6%), 그 다음이

20대(24.2%)와 40대(23.1%)가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고 50대 이상이 13.1%로 10대(10%)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강간범의 연령 분포 추이를 보면 19세 이하 강간범죄자의 비중은 10년 전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보이고 20대는 1990년대 말까지는 강간범죄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3년을 기준으로 하여 30대의 비중이 20대의 비중보다 높아지면서 20대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XI-1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현상은 40대와 50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0대와 20대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과는 반대로 40대와 50대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01년 이후에는 40대가 10대보다 더 많은 비중을

[그림 XI-13] 강간범죄자의 연령분포 추이: 1996-2006



주: 성폭력 포함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에서 재구성

차지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부터는 50대가 10대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같이 강간범죄자의 연령구성의 변화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탐색은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주요 국가 강간범죄율 비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강간이 ‘흉악범죄’ 중 대표적인 범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강간범죄율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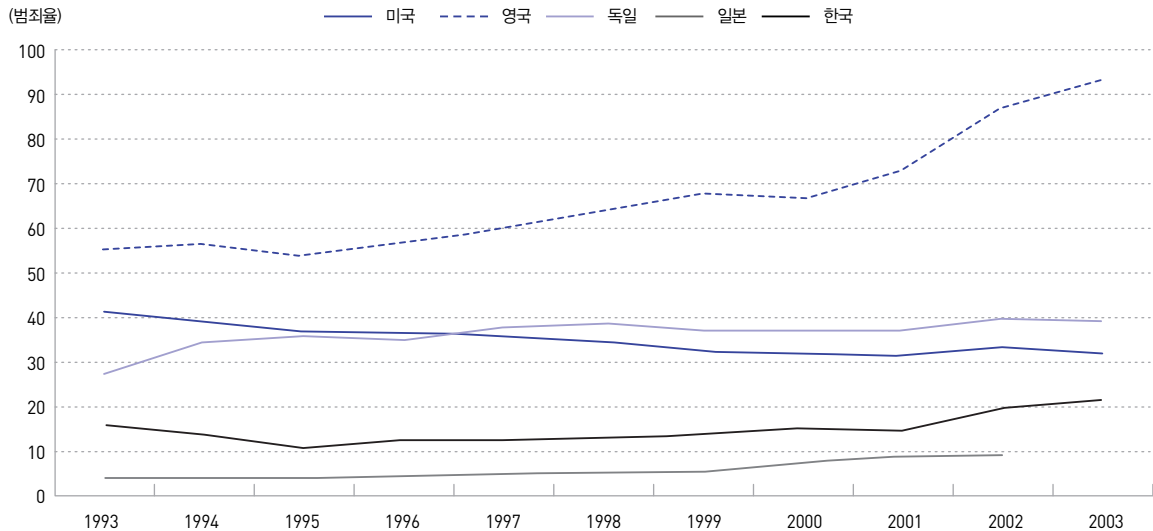
최근의 추세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입수가능한 가장 최신자료라고 할 수 있는 주요 국가의 강간범죄율 자료는 우리나라의 강간범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그림 XI-14]). 2003년을 기준으로 영

국의 경우는 10만명당 93건, 독일은 40건, 미국은 32건 등으로 한국의 22건보다 훨씬 발생률이 높다. 반대로 일본의 강간범죄율은 1993년에 10만명당 4건에서 2003년에 9건으로 증가하였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범죄율을 보여주고 있다. 향간에 우리나라의 강간범죄율이 미국에 이어 세계 제 2위라는 소문이 있기도 하였지만 통계상으로 보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흉악범죄’는 그 피해정도나 일반인에게 주는 공포의 면에서 삶의 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특히 최근에 강간(성폭력)과 방화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연이은 아동성폭력과 사회적 불만표출로써의 방화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법 제정과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사건과 방화사건의 원인을 개인적인 수준에서만 찾아 범

[그림 XI-14] 주요 국가의 인구 10만명당 강간범죄율: 1993-2003



주: 일본은 2003년 자료 부재

출처: 최인섭, 『주요국가의 강력범죄 발생추세 비교분석』, 2004

죄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폭력을 부추기거나 방관하는 문화를 개선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증가시키는 계층간의 갈등이나 빈

부격차 등을 줄이려는 사회적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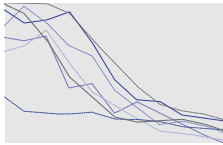
윤옥경(경기대학교)

참고문헌

- 김지선 외. 2007.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최인섭. 2004. 『주요국가의 강력범죄 발생추세 비교분석』.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의 사회동향 2008

Korean Social Trends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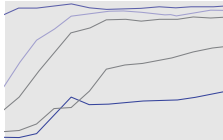


Population

Household & Family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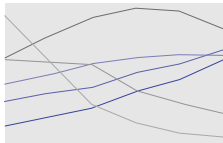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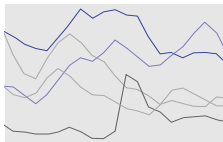
Housing & Transportation



Health

Welfare

Environment



Social Security

Social Cohesion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 이재열 292

투표참여의 감소와 세대 간 차이 • 김 욱 303

가치관과 일상생활에서의 세대격차 • 배 영 309

XII. 사회통합

Social Cohesion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사회통합은 사회의 해체나 갈등의 반대개념이다. 사회통합의 정도는 크게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측면의 통합은 선거과정 참여가 토대가 된다. 자신의 의견을 정치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하게 되며,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이념과 이해관계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인물과 정당을 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통합을 약화시키는 갈등의 해결을 위해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 특히 이익 갈등이나 고충이 있을 때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처리과정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 고충처리 신청 및 해결건수, 그리고 개업 변호사의 수나 법률구조 상담건수 등을 검토하여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의 응집성은 자원봉사, 기부, 헌혈 등의 이타적 행위와 일반인과 제도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다. 이들에 대한 사회지표로 다양한 전국단위 설문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넷째,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법치주의 영역이다. 이는 한 사회의 행위자들이 공통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토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국제투명성협회의 부패인식지수를 이용하여 우리의 부패 정도를 국제비교할 수 있고, 또한 매년 측정된 공공기관 청렴도 자료를 활용하여 기관별 청렴도 추이를 볼 수 있으며, 그 외 불법폭력시위 등을 법치주의를 검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불평등도 살펴보고자 한다. 빈부격차나 남녀 간의 차별, 혹은 세대 간 차이의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가계소득통계, 남녀평등지수(UNDP), 여성권한지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참여 : 선거참여율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정치과정에 얼마나 반영시키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 의사결정과정에 시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투표, 소환제도, 공청회 등의 발생 횟수와 국민의 참여 정도가 조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료의 부실로 가장 기본적인 투표율만을 살펴보았다.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지난 1992년의 대선에서 81.9%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1997년에는 80.7%, 그리고 2002년 대선에서는 70.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전인 1992년과 1996년에는 투표율이 각각 71.9%와 63.9%였는데, 외환위기 그 이후인 2000년과 2004년에는 각각 57.2%와 60.6%로서 저조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경우에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광역의원 선거나 기초의원 선거에서 모두 1990년대에는 60% 내외로 유지되던 투표율이 이후에는 50%대로 낮아졌다. 이러한 투표율의 하락은 지속적인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제도정치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참여율은 낮아지고 있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불신이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갈등해소

국민고충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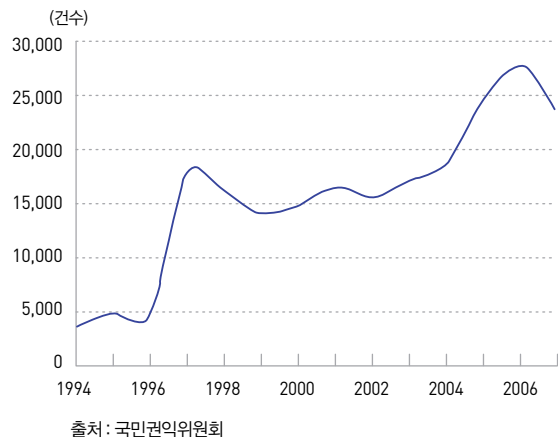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적이거나, 부당 또는 소극적인 처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

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한다. 고충민원의 접수건수는 [그림 XII-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94년 3,530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에 17,841건으로 정점에 이른 후, 주춤하였다가,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7년에는 23,681건에 달했다. 이처럼 고충처리접수가 늘어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식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전체 접수된 민원 중 99%가 처리되었는데, 처리된 민원 중 54.9%에는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14.3%는 이송 또는 이첩이 되었고, 11.7%는 조정 합의되었으며, 7.5%는 공람종결 또는 취하결정 되었다.

지난 1994년부터 2007년까지 14년간 접수된 민원 219,944건을 원인별로 따져 보면, 이유가 확인된 것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부기관이나 투자기관의 거부 또는 소극적 처분이 24,502건으로 11.14%에 해당하며, 그 다음이 개인 간의 사적 관계 24,362건(11.07%), 위법·부당한 처분 및 규제 17,513건(7.96%), 신청인의 불합리한 개인주장·요구 14,799건(6.73%), 각종 행정문의 및 건의 14,112건(6.42%) 등의 순이었다.

[그림 XII-1] 국민고충민원 접수건수: 1994-2007



발생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생한 것이 81,342건으로 전체의 37%,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것이 75,012건으로 34.1%,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생한 것이 29,509건으로 13.4%를 차지했다.

중앙행정기관의 부처별로 보면 전체 81,342건 중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이 각각 13,859건(17.0%)과 12,964건(15.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검찰청 7,974건(9.8%), 국세청 7,499건(9.21%), 노동부 6,267건(7.7%), 교육인적자원부 6,261건(7.69%)의 순이었다. 이는 규제업무와 관련된 부처에 민원사항이 집중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법률구조와 상담

법률구조와 상담의 수준은 개업변호사의 공증사무소가 얼마나 되는가로 가늠해볼 수 있다. 개업변호사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사람들이다. 공증사무소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특정사실과 법률관계를 확인, 보관해주는 제도이다.

개업변호사는 1998년까지 약 5% 미만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확대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매년 9~12%씩 급증하고 있으며, 공증사무소도 1997년 216곳에서 매년 10~20곳씩 증가하여 2007년에는 379곳에 이르고 있다(표 XII-1). 개업변호사나 공증사무소 숫자의 증가는 국민들로 하여금 저렴하고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변호사와 공증사무소의 지나친 개입은 거래비용의 증가를 가져와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효율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증가속도보다 소송사건의 증가율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7년과 2007년 사이에 인구는 6.4% 증가하였으나, 소송사건은 28.3% 증가했다. 소송사건 중 소송요건을 갖춘 경우에 다루어지는 소송사건인 본안사건은 76.8%까지 상승한 반면, 본안 외 사건은 등락을 거듭했지만 -11.6%까지 줄었다. 그리고 등·초본발급건수를 제외한 등기사건의 경우에는 42.3%나 늘어났다.

총 사건 접수건수는 1997년 인구 10,000명당 3,125건에서 2006년에는 3,846건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1,136건에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비소송사건은 2,000건에서 2,70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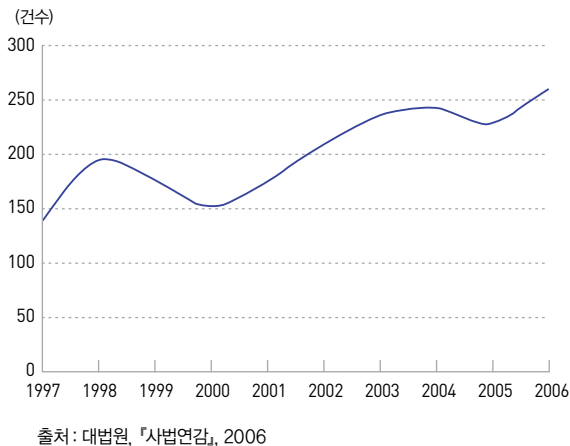
본안사건에서는 민사사건은 139건에서 260건으로 증가했고(그림 XII-2), 가사사건은 10건에서 9건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형사사건은 38건에서 46건으

〈표 XII-1〉 개업변호사 및 공증사무소 증가 추이: 1997-2007

	개업변호사수	공증사무소수
1997년	3,364	216
1998년	3,521	230
1999년	3,887	244
2000년	4,228	267
2001년	4,618	278
2002년	5,073	298
2003년	5,586	317
2004년	6,300	333
2005년	6,997	341
2006년	7,603	354
2007년	8,143	379

출처: 법무부(www.index.go.kr)

[그림 XII-2] 인구 10,000명당 민사사건 접수건수: 1997~2006



로 다소 늘어났다. 민사사건만 거의 두 배로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우리 사회가 개인들 간의 소송이 많은 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 법률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에는 소송 이전에 조정이 되던 갈등들이 제도적인 절차를 거쳐 해결되는 과정으로 더 많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송의 증가는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긍정과 부정의 차원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타적 활동과 사회적 신뢰

기부, 헌혈 및 자원봉사

2007년 겨울 발생한 태안 앞바다 허베이스트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로 지역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연 인원 140여만 명이 참여한 전 국민의 열성적인 방재자원봉사활동은 전 세계에 큰 인상을 주었다. 피해 지역의 공동체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정상을 찾게 된 것은 이런 감동적인 자원봉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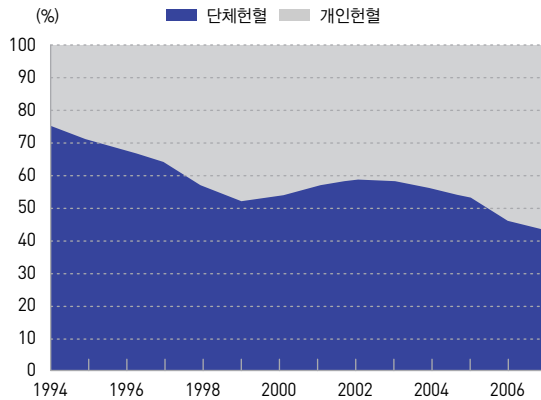
그러나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비율은 2003년 14.6%에서 2006년 14.3%로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시기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복지시설 관련 자원봉사가 48.5%로 가장 활발했고, 그 다음이 환경보전과 범죄예방(26.7%), 국가 및 지역행사에서의 자원봉사(11.3%), 자녀교육관련 봉사(10.6%), 재해지역돕기(6.8%) 등의 순이었다(통계청, 2007).

‘사회통계조사’는 2006년에 최초로 후원여부(기부항목)를 조사하였는데, 결과를 보면 전체 인구의 31.6%가 기부를 했다. 후원방법들의 빈도(복수응답 포함)는 사회복지단체(43.3%), 언론기관(28.8%), 종교단체(21.3%), 직장(15.3%), 대상자에 직접 전달(11.9%) 순이었다. 후원방법별 후원횟수는 종교단체를 통한 경우가 5.1회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5회), 직장(4.2회), 언론기관(3.5회), 사회복지단체(3회) 등의 순이어서, 조직적인 후원의 형식과 절차를 갖춘 기관을 이용한 기부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7).

헌혈자는 1998년부터 2003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2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증가를 했으나, 그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최근 들어 헌혈자수가 감소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헌혈부적격자가 늘고, 헌혈을 기피하는 풍조도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과거에는 군부대나 학생 중심의 단체헌혈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단체헌혈비중이 컸었다. 그 비중은 1994년의 75%에서 점차 줄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43.1%에 불과하게 되었으며, 개인헌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56.9%에 달했다(그림 XII-3). 이처럼 집단 압력이 작용하는 단체헌혈의

[그림 XII-3] 헌혈자 중 개인헌혈과 단체헌혈의 비중:
1994-2007



출처: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통계연보』, 각 년도

비중이 줄어들고 자발적인 개인헌혈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참여의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헌혈률은 5.3%(2003년)로 미국, 독일, 일본 등과는 비슷한 수준이고, 캐나다, 호주 등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대인신뢰와 제도신뢰

삶의 질이 높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는 사회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2001년의 ‘세계가치관조사’에서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한국 사람의 비율은 27.3%인데, 이는 OECD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반인에 대한 신뢰가 OECD에 속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인 미덕이라고 생각되었던 따뜻함과 결속력이라는 전통적인 도덕적 자원이 그동안의 고도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빠르게 고갈되었으나 체제나 시스템 수준에

〈표 XII-2〉 일반신뢰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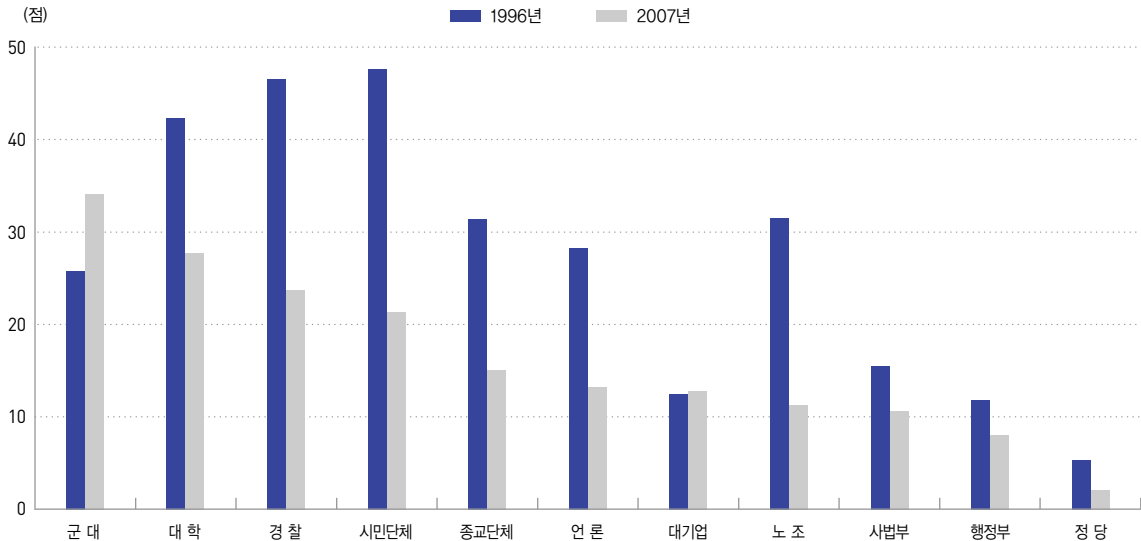
국 가	신뢰도(%)
덴마크(1999년)	66.5
스웨덴(1999년)	66.3
이란(2000년)	65.3
네덜란드(1999년)	59.8
중국(2001년)	54.5
인도네시아(2001년)	51.6
일본(2000년)	43.1
동독(1999년)	42.6
베트남(2001년)	41.1
캐나다(2000년)	38.8
미국(1999년)	35.8
서독(1999년)	32.9
이탈리아(1999년)	32.6
영국(1999년)	29.8
한국(2001년)	27.3
프랑스(1999년)	22.2
멕시코(2000년)	21.3
싱가포르(2002년)	16.9

주: 신뢰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세계가치관조사(www.worldvaluesurvey.org)

서 구현되어야 할 공정성과 정당성은 확보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단은 한국보다 경제발전의 수준이 훨씬 낮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오히려 일반적 신뢰의 수준이 높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도, 그리고 아시아의 후발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낮은 대인신뢰는 한국이 처한 심각한 사회적 자본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는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이용이 가능한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졌는데, 특히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심각하게 하락하였다(그림 XII-4). 정당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1996년 5.3

[그림 XII-4] 기관에 대한 신뢰도 : 1996, 1997



주: 신뢰도는 각 기관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조사,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데이터아카이브 활용

점에서 2007년 2.9점으로 떨어졌다.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지난 10년간 각각 11.4점에서 8.0점과 15.5점에서 10.1점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여타 기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언론매체에 대한 신뢰도는 28.8점에서 13.3점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종교에 대한 신뢰도는 31.7점에서 16.5점으로,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점수도 31.9점에서 10.6점으로 낮아졌다. 대학에 대한 신뢰점수는 지난 10년간 42.0점에서 28.0점으로 떨어졌으며, 경찰에 대한 신뢰점수는 47.5점에서 24.0점으로,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점수도 48.8점에서 21.6점으로 낮아졌다. 군에 대한 신뢰만이 26.8점에서 33.9점으로 높아졌다. 이렇듯 신뢰의 하락현상은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군대에 대한 신뢰도만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제 군이 더 이상 정치

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제자리를 잡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제도에 대한 신뢰문제와 관련해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기관일수록 국민들로부터 더 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영향력과 신뢰 간의 역 상관 증상은 사회의 질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정부정책의 비일관성이나 공직자의 부패 등이 경제적 번영과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패와 불법시위

부패지수와 공공기관 청렴도

낮은 신뢰와 투명성의 결여는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투명성협회(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자료를 통해 볼 때, 정부부문의 부패 정도에 대한 국민인식은 외환위기 이후에 미약하나마 향상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비교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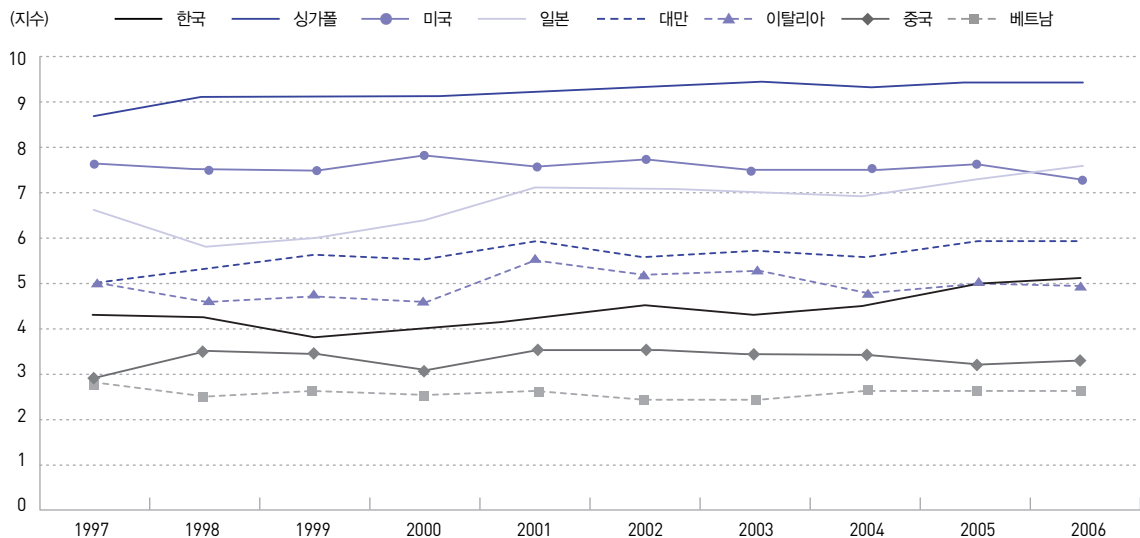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부터 매년 1회씩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는데 이는 IMD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의 부패 관련 설문조사 및 전문가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다. CPI는 공공부문에서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직위의 남용'으로 정의한다. CPI의 국가별 순위는 새로운 국가가 추가되거나 제거됨으로써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 순위를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국가별 점수는 해당 국가의 부패인식 정도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국가의 순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06년도 우리나라 CPI점수는 발표 실시(1995년) 이후 최고인 5.1점이지

만 국가순위는 조사대상 163개국 중 42위에 머물고 있다(그림 XII-5). OECD 국가 평균은 2005년 7.15점에서 2006년에는 7.18점으로 향상되고 있다.

한 연구(차문중, 2007)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한국이 OECD 수준의 준법의식을 가졌다면 최소 1% 이상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도 있다. 제도주의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법치주의의 확립과 준법정신이 자리잡는 것은 경제행위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다고 한다. 고신뢰 사회에서는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해지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1987년에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절차적인 차원의 민주화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사회적 갈등이나 집합행동은 크게 줄어

[그림 XII-5] 부패인식지수: 1997-2006



주: 완벽한 투명성=10점
출처: 국제투명성협회, 각 년도

들지 않았다. 오히려 다양한 집단들이 정해진 규칙이나 합의에 승복하지 않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그러나 투명한 규칙이 존재하고 이에 대해 승복할 수 있는 권위가 존재한다면, 집단들 간의 대화나 타협이 훨씬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투명성은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투명성과 신뢰는 ‘사회의 도덕적 용량’을 재는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는 사회자본이 가진 기능 중 규범과 효과적인 사회적 제재의 원천이 되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집합행동의 논리에 따르자면, 규범이 강한 사회에서는 공공의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부정적인 제재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시민적 규범이 강력한 사회에서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하는 사회구성원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규칙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 대의제로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불법시위

불법폭력시위 및 경찰부상자수는 집회시위문화의 현주소를 가늠하고, 준법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향후 집회시위 관리 대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자료가 된다. 불법폭력시위는 집회참가자가 불법·폭력행위를 행한 시위를 말하며, 불법폭력시위 발생비율은 한 해 발생한 전체집회 대비 지수로서 낮을수록 평화적인 집회양상임을 나타낸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비하면 집회와 시위도 평화적인 기조로 안정화되고 있으나, 일부의 시위는 여전히 과격폭력의 양상을 띠고 있다. 연평균 불법폭력시위는 1997년까지는 연간 500~800건 정도였는데, 1998

〈표 XII-3〉 불법폭력시위 발생건수 및 부상 경찰관수 : 1993-2007

	전체집회 발생건수	불법폭력 시위 발생건수	부상 경찰관수
1993년	6,390	267	1,080
1994년	8,753	588	2,128
1995년	6,857	809	1,203
1996년	6,510	811	1,882
1997년	6,179	664	1,016
1998년	7,684	67	166
1999년	11,750	129	484
2000년	13,012	105	582
2001년	13,083	215	673
2002년	10,165	118	287
2003년	11,837	134	749
2004년	11,338	91	621
2005년	11,036	77	893
2006년	10,368	62	817
2007년	11,904	64	202

출처: 경찰청, 『경찰백서』, 각 년도

년 이후에는 100건 내외로 줄었고, 2004년 이후로는 100건 이하로 줄어들었다(〈표 XII-3〉). 이에 따라 경찰관 부상자수도 1990년대 초반 1,000명이 넘는 수치를 오르내리다가, 1998년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경찰관이 부상당하고 있다.

사회 불평등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

사회심리적 역능성은 개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감과 역동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첫 번째로 주관적인 계층귀속감과 계층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을 보기로 하겠다. 2006년 가구주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주관적 계층귀속감은 상층 1.5%, 중간층 53.4%, 하층 45.2%로 나타났는데, 2003년과 비교해 보면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변동이 없으나, 중간층은 감소하였고, 하층은 45.2%로 2003년(42.4%)보다 2.8%p 증가하였다(〈표 XII-4〉).

〈표 XII-4〉 주관적인 계층귀속감의 변화: 1999, 2003, 2006 (%)

	상	중	하
1999년	1.1	54.9	44.0
2003년	1.4	56.2	42.4
2006년	1.5	53.4	45.2

출처: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각 년도

본인과 자식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물어본 결과는 ‘희망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격차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표 XII-5〉).

〈표 XII-5〉 주관적 계층귀속감에 따른 본인과 자식세대 계층 이동가능성에 대한 인식: 2006 (%)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			자식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높다	낮다	모르겠다	높다	낮다	모르겠다
상층	58.0	30.1	11.9	60.0	22.7	17.3
중층	34.6	43.7	21.6	46.0	28.0	26.0
하층	18.2	50.8	31.1	32.0	30.3	37.7
전체	27.5	46.7	25.7	39.9	29.0	31.2

출처: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6

첫째, 일생 동안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면, 본인세대에 비해 자식세대의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이어서 자신의 성취에 대한 역능감은 상대적

으로 적은 반면, 자식세대의 역능성에 대한 기대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상층으로 갈수록 본인과 자식세대의 이동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하층으로 갈수록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계층에 따른 역능성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회심리적 역능성의 위축현상은 직업선택 요인에 대한 변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2006년 15세 이상 인구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안정성(32.6%), 수입(31.7%), 적성·흥미(12.0%)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의 경우 2002년 21.5%보다 10.2%p, 그리고 1998년 18.2%보다는 12.5%p나 증가하였다. 직업의 적성이나 보람, 안정성과 발전성 등의 내재적 가치보다는 수입 위주의 직업선택 경향이 변진다는 것은 경쟁의 격화로 인한 체감 취업난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남녀불평등

사회의 통합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척도 중 하나는 남녀 간 격차이다. UNDP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인간개발지수(HDI)는 2006년 기준으로 0.912로서 세계 26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남녀 간 HDI의 격차를 측정하는 남녀평등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는 99.2%로서 세계 75위이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남녀 간 기대수명의 차이가 109.8%로서 33위이며, 초·중등·대학교 진학률의 차이는 86.7%로서 156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녀 간 격차는 조금씩 해소되는 경향이 있다. 여성 국회의원 비중은 1996년의 3%에서 지난 2004년 총선에서는 13%로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여성지방의원 비중도

〈표 XII-6〉 UNDP 남녀평등지수 및 여성권한척도의 한국순위와 점수: 1999-2006

	남녀평등지수		여성권한척도	
	순위	점수	순위	점수
1999년	30위	0.845	78위	0.336
2000년	30위	0.847	63위	0.323
2001년	29위	0.868	61위	0.358
2002년	29위	0.875	61위	0.378
2003년	30위	0.873	63위	0.363
2004년	29위	0.882	68위	0.377
2005년	27위	0.896	59위	0.479
2006년	25위	0.905	53위	0.502

출처: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 2008

1995년의 2%에서 2006년에는 15%로 늘어났다. 남녀 간 고등교육진학률의 격차도 1995년에 9% 차이에서 2000년에는 8% 차이로 줄었고 2006년에는 남성 66%, 여성 61%로 약 5%의 차이로 줄어들었다. 남성 임금대비 여성의 임금은 1995년의 58%에 비해 2000

〈표 XII-7〉 연도별 인터넷 이용률: 1999-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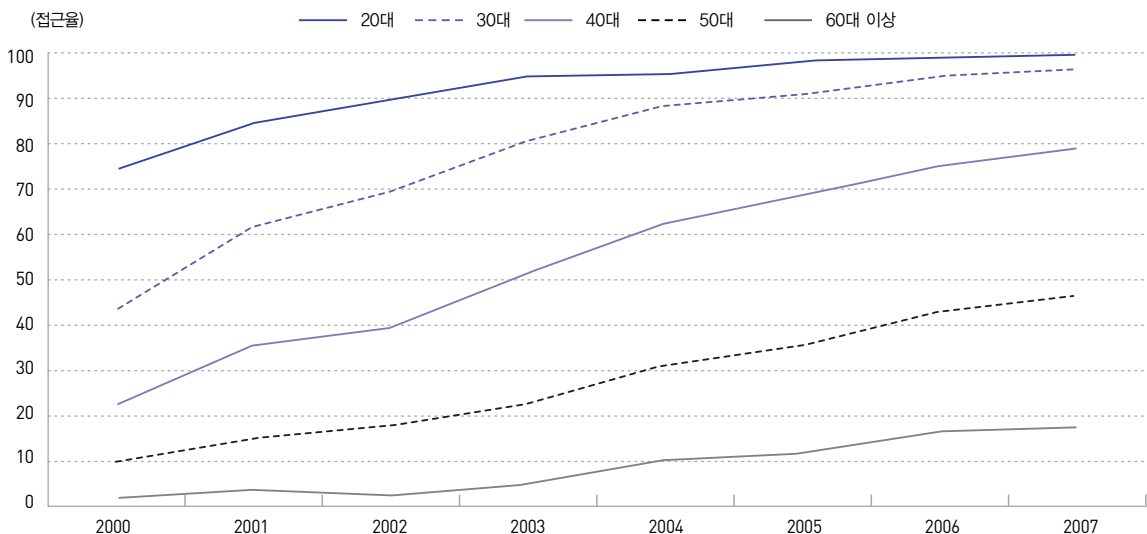
	이용률
1999년	22.4
2000년	44.7
2001년	56.6
2002년	59.4
2003년	65.5
2004년	70.2
2005년	72.8
2006년	74.8

주: 만 3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을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출처: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 (isis.nic.or.kr)

년대에 들어 63%대로 상승하였다. 이렇듯 많은 자료에서 남녀 간 격차는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여 왔다. 그러나 여성의원 비율, 고위직 간부의 여성비율, 전문직종사자 비율 등으로 측정되는 여성권한척도 (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는 0.502

[그림 XII-6] 연령별 인터넷 접근정도 추이: 2000-2007



출처: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 (isis.nic.or.kr)

로서 75개국 중 53위에 해당하는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보화의 세대 간 격차

한국의 인터넷 접근율은 세계 6위 수준이다. 2005년 기준으로 1위인 아이슬란드의 경우 87%이며, 스웨덴(76%), 네덜란드(74%), 호주와 페로스제도(70%)에 이어 한국은 68%이다. 한편 인터넷에 대한 접근정도는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지난 1999년에 22.4%에 불과했던 것이, 2001년에는 56.6%, 그리고

2006년에는 74.8%에 이르게 되었다(〈표 XII-7〉).

다만 문제는 증가의 속도에서 연령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10대 청소년과 20대의 경우에는 거의 100%에 가까운 접속률을 보여주고 30대는 90% 수준에 도달해 있는 반면, 40대 이후 노년층으로 갈수록 인터넷 접속률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서(〈그림 XII-6〉) 급속하게 도래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능력발휘에 있어 세대 간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반영해준다.

이재열(서울대학교)

참고문헌

- 차문중. 2007. “법 질서의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최근 우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KDI 정책포럼〉.
- 통계청. 2007. 『2007 한국의 사회지표』.

투표참여의 감소와 세대 간 차이

요 약

- 민주화가 진전되어 가고 있지만, 유권자의 투표참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 이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널리 퍼졌던 동원된 투표의 감소와 젊은 층의 저조한 투표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와 더불어 선거에서의 투표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정치는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투표율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 민주화의 진전이 오히려 투표율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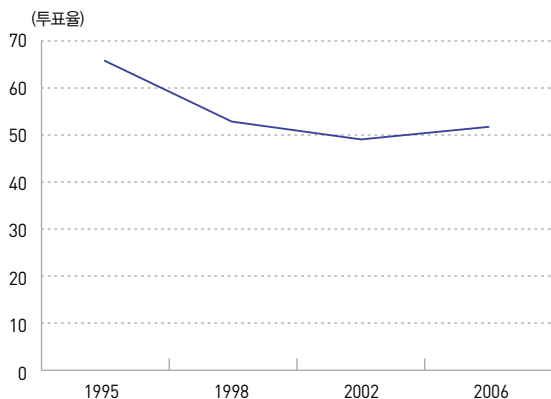
이러한 역설적으로 보이는 현상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하나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동원투표 때문에 투표율이 기형적으로 높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탈물질주의적 가치의 대두로 인한 투표참여 외에 다른 정치참여의 중요성이 증대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투표참여의 저하가 민주정치에 있어서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투표율의 감소 추세

민주화 이후 투표율 감소 추세는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1987년 이후 실시된 주요 선거에서 투표율은 뚜렷하게 감소하여 왔다. 선거의 유형에 따라 투표율이 다르기 때문에 각 선거 유형별로 변화를 살펴봐야 하는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를 막론하고 모든 유형의 선거에서 투표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1995년 제1회 선거에서 68.5%의 투표율을 기록한 뒤 1998년 제2회에서는 52.7%로 무려 15%p 정도 감소하였으며, 2002년 제3회 선거에서는 48.9%로 또 다시 약 4%p 감소하였다(그림 XII-7). 그러다가 가장 최근의 2006년 제4회 선거에서는 51.6%를 기록하여 안정화 내지 반전의 기미를 나타냈다.

[그림 XII-7] 지방선거 투표율 변화: 1995-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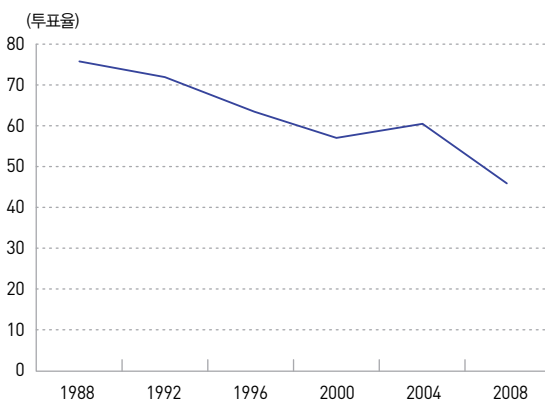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www.nec.go.kr), 2008. 8. 24.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75.8%의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인 이래, 1992년 14대 총선에서 71.9%, 1996년 15대 총선에서 63.9%, 그리고 2000년 16대 총선에서 57.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그림 XII-8). 그러다가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60.6%로 다시 약간 상승하였으나, 가장 최근의 2008년 18대 총선에서 다시 46.0%로 급속하게 감소하였다.

대통령선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987년 13대 선거에서 89.2%를 기록한 이후, 1992년 14대에서 81.9%, 1997년 15대에서 80.7%, 2002년 16대에서 70.8%의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투표율이 계속 하락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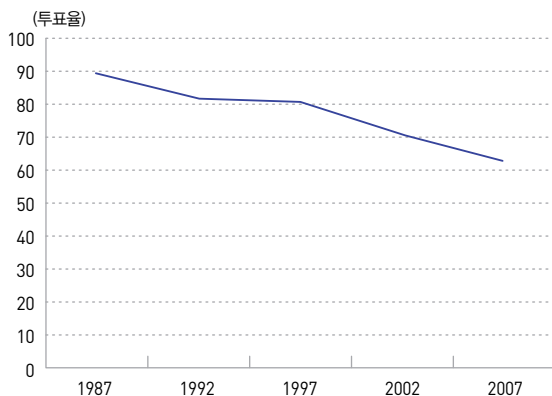
[그림 XII-8]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변화: 1988-2008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www.nec.go.kr), 2008. 8. 24.

였다(그림 XII-9). 게다가 가장 최근의 2007년 17대 선거에서는 63.0%를 기록하여 하락 추세를 유지했다.

[그림 XII-9] 대통령선거 투표율 변화: 1987-2007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www.nec.go.kr), 2008. 8. 24.

물론 단기적으로 투표율 변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선거 이슈, 선거 경쟁의 정도, 투표일 날씨 등이다. 그러나 20여 년에 걸쳐서, 그리고 모든 선거유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투표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단기적 요인 외에 보다 근본적인 장기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

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장기적 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동원투표의 감소와 도저촌고 현상의 소멸

이러한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전반적인 투표율 하락 추세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미시적인 수준에서 던지면, 왜 한국의 유권자는 민주화 이후 투표 참여를 덜 하고 있는지 의문일 것이다. 먼저 가장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답변은 민주화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많은 유권자가 정치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가, 민주화가 달성되고 난 이후에는 그리 커다란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답변은 그럴 듯하게 보이나, 실제로 민주화 이후 한국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도가 줄어들었다는 경험적 증거는 찾기 어렵다.

보다 중요한 원인은 근대화 및 민주화로 인하여 보다 자율적인 정치문화가 형성됨에 따라 과거 권위주의 시절 널리 퍼졌던 소위 ‘동원투표’가 감소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동원투표란 유권자의 자발적인 의지보다는 외부의 압력에 크게 영향을 받아 투표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이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한국이 기형적이라고 할 만큼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이러한 동원투표 현상이 민주화 이후 점차 줄어든 것이다.

동원투표가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발견되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도시에서 투표율이 낮고 농촌에서 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도저촌고(都低村高)’ 현상의 소멸이다. 이 현상은 물론 상대적으로 정치적 관심이 낮은 농촌 유권자들이 외부적 압력에 의해 투표장으로 향하는 동원투표 때문에 발

생하였던 현상이다. 최근의 선거에서는 도시 유권자와 농촌 유권자의 투표율 차이가 거의 사라졌다(〈표 XII-8〉).

〈표 XII-8〉 도시규모별 투표여부(2006년 지방선거)

(%)

	투표했다	투표안했다
대도시	63.3	36.7
중소도시	55.4	44.6
읍면지역	62.1	37.9
전 체	60.2	39.8

출처: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06년 지방선거 설문조사 자료

물론 자율적인 정치문화가 형성됨에 따라 자발적인 투표참여도 증가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 참여의 통로가 넓지 않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투표 참여가 커다란 중요성을 갖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참여는 다양한 정치참여 형태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투표참여는 다른 참여에 비해 비용은 적게 들지만 효과 또한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자율적인 유권자일수록 투표참여에 비해 비용과 효과가 모두 큰 다른 유형의 정치참여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우리보다 더 자율적인 정치문화를 갖고 있는 서구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도 투표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물론 정당일체감의 약화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많은 자율적 유권자들이 투표참여보다는 보다 효과적인 다른 유형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서구사회의 정치문화 변동을 연구한 잉글하트(Inglehart)에 따르면,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유권자일수록 투표참여와 같은 단순한 형태의 참여보다 거리 시위, 서명 운동 등 보다 적극적 형태의 참여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Inglehart, 1990).

세대 간 투표율 차이

한국에서도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탈물질주의의 부상이 투표율 저하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영향은 세대 간 투표율 차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한국에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 투표율 차이가 극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20대 유권자와 50대 이상 유권자 간 투표율의 차이는 무려 35%p에 달하고 있다(표 XII-9)).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선거에서 연령은 투표 참여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08년 18대 총선 투표율 분석에 따르면, 20대 전반은 32.9%, 20대 후반은 24.2%, 30대 전반은 31.0%, 30대 후반은 39.4%, 40대는 47.9%, 50대는 60.3%, 그리고 60세 이상은

65.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여기서도 20대 후반 유권자와 60세 이상 유권자의 투표율 차이는 40%p 이상이다.

젊은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이 기성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젊은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인생 주기에서 그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적 특성, 즉 ‘인생 주기’ (life cycle) 효과 때문이다. 젊은 유권자는 일단 상대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적다. 아직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각종 정부 정책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같은 이유로 인해 투표 참여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정치체제에 대한 충성심 측면에서도 중·장년층에 비해 부족하다.

이러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주기 효과와 더불어, 특히 한국에서 젊은 유권자의 저조한 투표참여율의 원인이 되는 것이 이들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이다. 사실 탈물질주의적 가치관 자체가 투표참여에 반드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탈물질주의란 후기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안정된 직업, 경제성장 등과 같이 근대사회에서 중요했던 물질적인 가치 외에 환경보전, 인권, 세계평화 등과 같이 보다 추상적이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들을 중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가치들을 중시한다고 해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한국의 독특한 정치사회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이 투표참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기존의 정치질서가 기성세대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형성

〈표 XII-9〉 연령별 투표여부(2006년 지방선거)

	투표했다	투표 안했다
20대	40.8	59.2
30대	52.7	47.3
40대	64.0	36.0
50대 이상	75.8	24.2
전 체	60.2	39.8

출처: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06년 지방선거 설문조사 자료

되어 있다고 볼 때, 젊은 유권자들로서는 기존 정치질서에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투표참여라는 전통적 방식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의 정치참여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투표참여율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형의 정치참여(자발적 선거운동, 시민운동, 새로운 의제 설정, 대중 시위 등)에서는 젊은 층의 참여가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또 다른 특성은 어떤 정치적 혹은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참여하기보다는 참여 자체를 통해서 어떤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참여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투표참여는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젊은 층에게 있어서 그리 커다란 만족감을 주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지만, 그 대신 보다 많은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정치참여(시민운동, 대중 시위 등)에 이들 젊은 층이 이끌릴 가능성이 높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중요성, 그리고 이러한 탈물질주의가 젊은 층의 투표참여(혹은 보다 넓게는 정치참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섣부른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의 젊은 유권자 층은 기성세대와는 구별되는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투표참여를 비롯한 그들의 정치적 행태 전반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투표율 감소, 문제인가?

최근 들어 계속 감소하는 투표율은 많은 이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강제투표를 제안하기도 한다. 민주주의가 유권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낮은 투표율은 분명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투표율이 어느 정도 유권자의 정치불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도 분명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의 투표율 감소가 부정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투표율을 부풀렸던 동원투표의 감소를 반영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부상에 따른 투표 참여 외에 다른 유형의 정치참여(시민운동, 시위 등)가 갖는 중요성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1990년대 이후 투표율의 감소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러한 추세가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한국의 투표율은 비록 감소하고 있지만, 그 수치가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는 대통령선거이며, 국회의원선거는 의원내각제 국가의 의원선거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한국의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을 의원내각제 국가의 의원선거 투표율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민주화 이후 적어도 대통령선거에서 70% 이상의 평균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투표율이 가장 높은 편인 서구 민주국가의 평균 투표율 77%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다.

〈표 XII-10〉 민원서비스 만족도: 1999, 2003, 2006

(%, 증감은 %p)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	매우불만
1999년	5.5	19.2	47.6	24.3	3.5
2003년	9.6	26.3	42.3	18.1	3.8
2006년	11.9	26.6	41.4	16.1	4.0
증 감 (2006년-1999년)	6.4	7.4	-6.2	-8.2	0.5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게다가 투표참여의 감소는 민주화에 따른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감 증대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 실제로 정치체제에 대한 만족감의 중요한 지표의 하나인 민원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99년, 2003년, 그리고 2006년 세 번에 걸쳐 실

시된 ‘사회통계조사’ 자료에 의하면(〈표 XII-10〉), 민원서비스에 매우 만족하는 국민의 비율이 1999년 5.5%에서 2006년 11.9%로 6.4%p 증가하였고, 약간 불만족하는 국민의 비율은 각각 6.2%p와 8.2%p 감소하였으며, 매우 불만족하는 국민의 비율은 3.5%에서 4.0%로 거의 비슷하였다.

이같은 민원서비스에 만족하는 비율 증대는 민주화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체제에 대한 만족감이 상승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체제에 대한 만족감이 투표참여의 지속적인 감소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민주정치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정치체제에 만족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김 욱(배재대학교)

참고문헌

- Inglehart, Ronald,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가치관과 일상생활에서의 세대격차

요 약

- 젊은 세대와 나이 많은 세대 간에는 가족가치와 정치이념에 서뿐만 아니라 일과 여가로 대표되는 일상생활 행태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 정보매체의 이용 종류와 매체별 이용시간에 있어서도 세대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젊은 세대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은 반면에 노·장년층은 TV를 보는 시간이 길다.

세대차이(Generation Gap)는 과거부터 있어왔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차이의 정도가 확대됨과 더불어 새로운 양상이 부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의 세대차이는 주로 가치관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었다. 이때의 가치관 차이는 청소년과 중·장년층이 체화하고 있는 전통적 지식과 사회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레 가치관의 전수와 이행이 이루어지면서 인식과 가치관의 차이는 해소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보화 기기 및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해 기술적 정보와 일상적 지식에 있어서 오히려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즉, 일상생활에 있어서 기성세대에 의존적이었던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보의 활용에 기반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세대를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세대 간의 가치관과 행태 및 인터넷 이용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치관과 세대차이

먼저 유교문화의 영향력 및 개인주의 가치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조사 자료를 가지고 가족가치, 성역할규범, 가부장가치에 대한 연령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기로 한다.

출산기피, 혼전동거, 이혼 등은 유교적인 문화가 지배적인 환경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예상했던 대로, 이에 반대하는 비율은 고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는데 특히 출산기피나 혼전동거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젊은 층에서는 이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는데, 이런 태도는 기존의 가치관과 차별적이라 할 수 있는 개인주의 가치관을 반영한다. 성역할 규범을 물어본 항목에서는 연령집단별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내의 역할을 남편 내조로

묶어둔다거나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각각 가정일과 경제활동 영역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젊은 층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부계 계승, 출가 외인의 관념, 가족주의 등 가부장적 가치를 묻는 항목에서도 연령집단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가족주의 경향은 젊은 연령층에서도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었으나 출가외인의 관념에 동의한 비율은 20~30대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가족이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와 함께 세대별 의식의 차이를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이 북한에 대한 생각이다. 북한에 대한 태도 차이를 보면, 40대 이하 연령집단에서는 북한을 지원 혹은 협력대상으로 보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었으나, 50대 이상 연령집단에서는 북한을 경계 혹은 적대대상으로 보는 응

〈표 XII-11〉 가족가치, 성역할규범, 가부장 가치에 대한 연령집단별 차이: 2006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에 반대하는 비율	6.9	47.6	56.1	72.5	80.9
2) '결혼 의사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에 반대하는 비율	24.0	39.9	48.9	64.3	68.8
3)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면 이혼이 최선이다'에 반대하는 비율	17.4	19.5	26.7	25.5	44.7
4) '아내는 자신보다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에 찬성하는 비율	6.7	20.6	28.9	42.9	60.1
5) '남편 할 일은 돈 벌기, 아내 할 일은 가정 돌보기'에 찬성하는 비율	6.4	12.6	18.1	39.3	57.1
6) '가계를 잇기 위해 아들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에 찬성하는 비율	16.8	19.3	29.4	51.0	75.5
7)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에 찬성하는 비율	2.4	8.5	15.0	33.6	54.2
8) '자신보다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우선시해야 한다'에 찬성하는 비율	31.8	41.4	54.2	59.7	73.6

주: 이 표에 제시한 비율은 각 의견에 대해 총 7점 척도 중 '전적으로', 혹은 '상당히' 찬성(1, 2, 3번 항목의 경우에는 반대)하는 응답자의 비율임.

출처: 김상욱 외, 『한국종합사회조사 2006』, 2007

〈표 XII-12〉 북한에 대한 인식: 2006

(%)

	지원 대상	협력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모름/무응답	합계
20대 이하	17.4	45.4	27.4	7.9	1.8	100.0
30대	22.1	44.5	27.8	4.4	1.3	100.0
40대	17.4	39.4	33.2	7.9	2.1	100.0
50대	18.4	27.6	37.8	15.8	0.5	100.0
60대 이상	13.6	21.2	35.5	22.7	7.0	100.0

출처: 김상욱 외, 『한국종합사회조사 2006』, 2007

답자가 절반을 넘었다(〈표 XII-12〉). 북한에 대한 호의적 반응이 20대뿐만 아니라 30~40대에서도 높게 나타난 결과는 386세대의 효과 때문일지도 모른다.

특정조사 시점에서 연령집단별 태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횡단적 조사결과가 세대차이의 명백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지만 참고자료로서의 의미는 충분히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사결과는 세대계승과 세대갈등, 사회변동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북한에 대한 연령집단별 인식의 차이를 예로 들면, 그 차이는 잠재적으로 세대갈등을 내포하는 것

이다. 그러한 인식의 차이는 구체적 사안을 둘러싸고 가정, 직장 등 일상생활 현장에서 세대 간 의견 충돌이 나타날 수 있고, 사회적 비용과 함께 다양한 차원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차이는 세대계승의 관점에서 보아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세대가 역사의 무대에서 서서히 퇴장하고 그 대신 우호적 태도를 갖는 세대가 새로이 진입하면, 남북관계는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맞을 수 있다.

〈표 XII-13〉 일의 가치에 대한 찬성도와 시간사용 선호도 : 2005

	항 목	2030세대(점수)	5064세대(점수)
일의 가치에 대한 찬성도	일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2.94	3.26
	돈을 벌 필요가 없더라도 보수 받는 일을 하고 싶다	3.76	3.66
시간사용 선호도	수입이 생기는 일을 하는 시간	3.57	3.61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3.74	3.62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3.34	3.22
	여가활동 시간	3.77	3.47

주: 1) 5점 척도의 평균점수임.

2) 일의 가치에 대한 찬성도는 '매우 찬성' 5점, '다소 찬성' 4점, '찬성도 반대도 아님' 3점, '다소 반대' 2점, '매우 반대' 1점으로 부여함.

3) 시간사용 선호도는 '지금보다 매우 많이' 5점, '지금보다 다소 많이' 4점, '지금 쓰고 있는 만큼' 3점, '지금보다 다소 적게' 2점, '지금보다 매우 적게' 1점으로 부여함.

출처: 최숙희, 『중·고령자의 근로관에 관한 국제비교』, 2008

일과 여가에 있어서의 세대차이

일과 여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젊은 세대의 경우 일이 단지 돈벌이 수단이라는 인식보다는 “돈을 벌 필요가 없더라도 보수 받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의견에 더욱 동조하고 있어 근로에 대해 경제적 동기 이상의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기성세대는 근로의 목적으로 경제적 요인이 중요함을 나타낸다(〈표 XII-13〉).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시간 배분 시 젊은 세대는 여가활동 시간을 가장 늘리고 싶어하고, 그 다음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그리고 수입이 생기는 일을 늘리고 싶어 한다. 반면, 기성세대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가장 늘리고 싶어 하지만, 수입이 생기는 일을 하는 시간을 늘리고 싶어 하는 것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에 비해 물질적 가치에 대한 선호보다는 삶의 질을 고양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중시하고 있는 경향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매체 활용에서의 세대차이

대중정보매체는 가정과 학교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사회화 메커니즘의 하나이다. 따라서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써, 또한 주요 정보를 경험하고 채택하기 위한 도구적 의미에서 매체의 활용이 가치관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30대 이후의 세대는 기초 사회화 과정을 거친 다음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기초 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획득과 상호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인터넷의 특성은 청소년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사회질서와 규범을 학습시키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량과 함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요한 정보의 원천으로서 인터넷이 가지는 의미와 세대 간의 차이는 얼마나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고찰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통적인 매스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인쇄신문의 이용률은 세대 간에 큰 차이가 있다(〈표 XII-14〉). 20대 이하와 30대 이상의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

〈표 XII-14〉 연령별 신문 이용정도: 2007

(%)

	인쇄신문 이용					인터넷신문 이용				
	거의 매일	1주일에 3~4회	1주일에 1~2회	2주일에 1회	합계	거의 매일	1주일에 3~4회	1주일에 1~2회	2주일에 1회	합계
10대	20.9	22.7	36.2	20.1	100.0	32.7	31.0	28.9	7.4	100.0
20대	32.4	26.3	29.8	11.5	100.0	48.1	30.0	17.8	4.1	100.0
30대	44.4	23.8	25.3	6.5	100.0	44.5	27.1	22.7	5.7	100.0
40대	55.0	21.7	18.8	4.6	100.0	44.2	25.5	23.0	7.3	100.0
50대	53.9	20.8	20.3	5.1	100.0	46.9	25.1	20.8	7.2	100.0
60대	58.4	18.5	17.6	5.5	100.0	47.2	20.7	23.1	9.1	100.0
전체	47.9	22.3	22.8	7.1	100.0	44.0	27.8	22.2	6.0	100.0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7

는데, 이는 청년층이 기본적으로 뉴스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인터넷 신문에 대한 접근이 손쉬워진 데에서 기인한 대체효과가 나타난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인터넷 신문의 경우 10대를 제외하고는 이용률에 있어서 세대 간 차이는 크지 않다. 20대의 인터넷 신문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매체의 대체효과로 보여진다.

TV시청은 신문과 마찬가지로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이용률이 커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표 XII-15〉). 특히 평일의 경우에는 10대의 평균 이용시간은 1.66시간에 그치고 있는데 비해 60대 이상에 있어서는 3.55시간을 나타내고 있어 절대시간에 있어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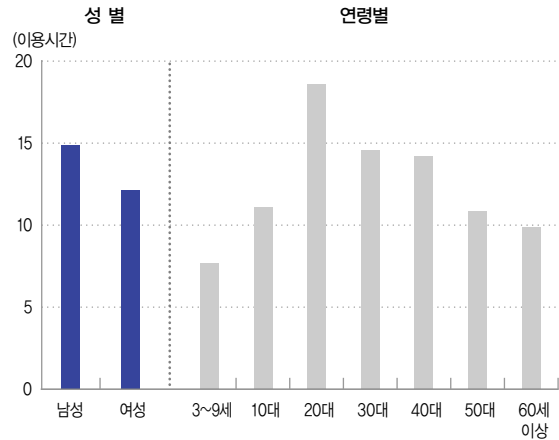
인터넷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매체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이용률과 이용량에 있어 모두 10대와 20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0대의 경우 인터넷 이용률은 99.3%에 달해 거의 모든 20대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용시간에 있어서도 20대는 주 평균 18.8시간으로 가장 길다. 반면 40대는 이용시간에 있어서 14.3시간

〈표 XII-15〉 연령별 TV 이용시간: 2007

	평일 TV시청 시간	주말 TV시청 시간
10대	1.66	3.36
20대	2.48	3.69
30대	2.56	3.75
40대	2.55	3.58
50대	2.85	3.70
60대	3.55	4.12
전체	2.73	3.74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7

[그림 XII-10] 성·연령별 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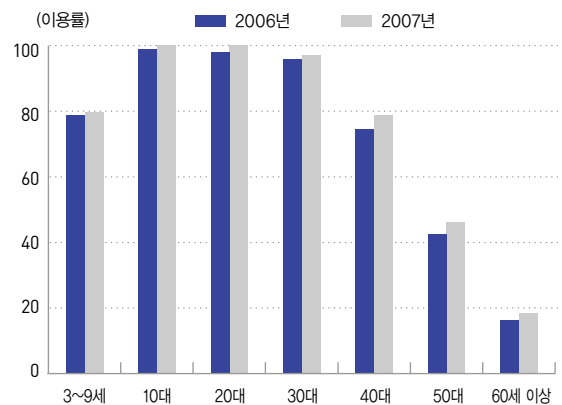


출처: 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07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2008

이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79.2%를 나타내고 있어 다섯 명 중 한 사람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

50대와 6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은 각각 46.5%와 17.6%이며, 인터넷 이용시간은 각각 11.1시간과 9.9시간으로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의 정보격차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XII-11]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2006, 2007



출처: 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07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2008

〈표 XII-16〉 정보격차지수: 2004-2007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격차지수 (점수)	대비수준 (%)	격차지수 (점수)	대비수준 (%)	격차지수 (점수)	대비수준 (%)	격차지수 (점수)	대비수준 (%)
접근격차 지수	33.7	66.3	26.5	73.5	17.1	82.9	9.9	90.1
질적활용 격차지수	79.3	20.7	70.3	29.7	60.5	39.5	59.4	40.6

출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격차백서」, 2008

또한 정보 격차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보다는 질적인 차원에서의 격차라고 할 것이다. 매년 다각적인 차원에서 정보격차의 양상을 파악하고 있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자료에 의하면 양적인 차원의 정보접근과 질적 활용지수에 서의 세대간 격차는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세대 간 정보접근 격차는 일반국민의 접근지수(정보화수준 측정 점수)를 100으로 하고 이에 대한 노·장년층의 접근지수 수준 비율로 산출될 수 있다. 이때 접근 격차지수가 100(점)에 가까울수록 일반국민과 노·장년층 간 정보접근 격차가 큰 것을 의미한다. 양적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화수준을 의미하는 접근지수는 컴퓨터·인터넷 이용 필요 시 접근가능성, 컴퓨터 기종 및 인터넷 접속속도, 정보통신기기 보유정도 등의 측정 항목을 가중 계산하여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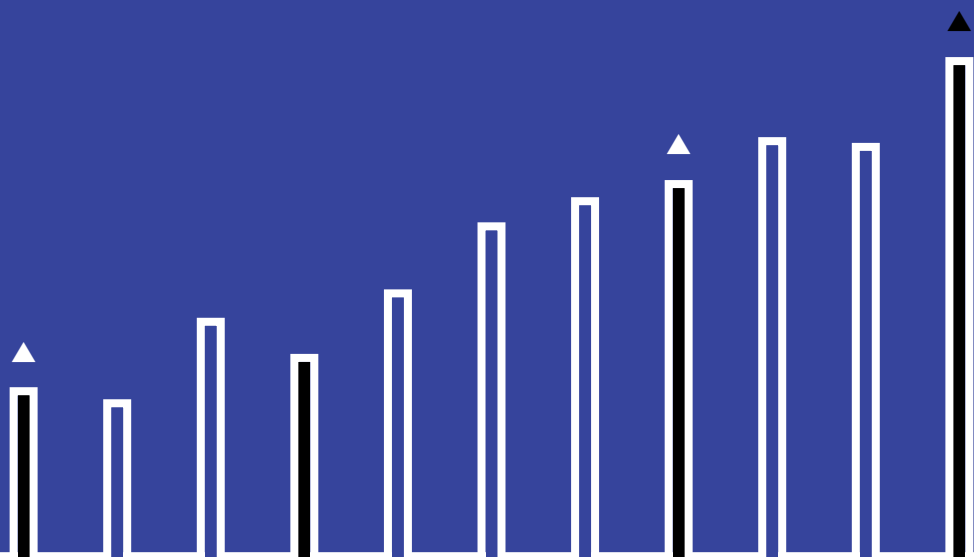
반면 질적인 차원의 이용에 관한 격차를 나타내는 질적 활용 격차는 일반국민의 질적 활용지수(질적 활용 부문의 정보화수준 측정 점수)를 100으로 하고, 일반국민 대비 노·장년층의 질적 활용지수 수준을 측

정한 것이다. 격차지수가 100(점)에 가까울수록 일반국민과 노·장년층 간 질적 정보 활용 격차가 큰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이용된 질적 활용지수는 컴퓨터·인터넷의 일상생활 부문별 도움 정도와 컴퓨터·인터넷 세부 권장용도별 이용 정도 측정 항목을 가중하여 산출한다.

2004년부터 최근까지의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정보 접근에 있어서는 세대 간 격차가 급속하게 해소되어 2007년의 경우 일반국민 대비 90.1%의 수준까지 노·장년층의 정보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XII-16〉). 반면 정보활용에 대한 측면은 격차의 정도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접근지수에 비해 훨씬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최근의 수치가 아직도 40.6%에 그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정보이용에 있어서의 격차는 세대 간의 소통을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모색이 절실히 요구된다.

배 영(송실대학교)



한 국 의 사 회 동 향 2 0 0 8 Korean Social Trends 2008

용어해설



용어해설

1. 인 구

총인구 :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11월 1일 0시 현재시점)에서 파악된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총인구(외국인 포함)를 말함.

연앙추계인구 :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인구동태율(출생, 사망, 이민율 등)을 반영하여 매년 7월 1일 현재로 추계한 인구임. 추계방법에는 수학적 방법과 조성법이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조성법을 이용하였음.

인구성장률 : 인구성장률은 출생, 사망에 의한 자연증가율과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율의 합으로 특정시점에서 비교되는 시점까지의 증가율임.

$$\text{연평균 인구성장률} = \sqrt{\frac{\text{비교년도}}{\text{특정년도}}} - 1 \times 100$$

조출생률 :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의 총 출생아수를 당해연도의 총인구(7월 1일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임.

$$\text{조출생률} = \frac{\text{특정 1년간의 출생아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조사망률 :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 총사망자수를 당해연도의 총인구(7월 1일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임.

$$\text{조사망률} = \frac{\text{특정 1년간의 사망자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자연증가율 : 인구의 이동을 제외한 출생과 사망의 차이에 의한 자연증가분을 총인구(7월 1일 연앙인구)로 나눈 1,000분비로서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음.

자연증가율 = 조출생률 - 조사망률

중위연령 및 국민평균연령 : 중위연령은 총인구를 연령별로 나열할 때 정 중앙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연령이고, 국민평균연령은 총인구의 산술평균 연령임.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 혼인상태는 호적 또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배우관계로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되고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는 아래와 같이 산출함.

$$\text{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 \frac{\text{혼인상태별 인구}}{\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시·도별 인구구성비 : 총인구(인구주택총조사 인구)에 대한 행정구역상 각 시·도에 거주하는 인구의 백분비임. 수도권 인구비율은 총인구에 대한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백분비임.

성비 :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로 표시되며 출생아의 성비는 출생성비라고 함.

연령별 출산율 : 출산력 수준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가임연령층(15~49세)의 여성을 연령집단별로 나누어 해당연령층 여성 1,000명당 출생아수로 산출함.

$$\text{연령별 출산율(ASFR)} = \frac{\text{모의 연령별 출생아수}}{\text{당해 연령별 여자인구}} \times 1,000$$

합계출산율 : 여자 1인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으로 산출함.

$$\text{합계출산율(TFR)} = \frac{\sum_{t=15}^{49} (\text{ASFR})_t}{1,000}$$

기혼부인의 평균 출생아수 : 15세 이상 기혼부인(이혼, 사별 포함) 1인당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하며, 가임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과는 다름.

성 및 연령별 사망률 : 성 및 연령별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입.

성 및 연령별 기대여명 : 어떤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생존년수를 말하고 출생시의 기대여명을 평균수명이라고 함.

국내인구 순이동률 : 인구주택총조사에서 5년 전 거주지와 현거주지를 기준으로 시·도 단위 이상 이동한 인구의 해당 시·도 인구에 대한 비율임.

순이동자수 = 전입자 수 - 전출자 수

$$\text{순이동률} = \frac{\text{순이동자수}}{\text{현거주자인구(5세 이상)}} \times 100$$

II. 가족과 가구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를 말하며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됨.

혈연가구: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

비혈연 5인 이하 가구: 혈연관계가 없는 5인 이하의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집단시설가구: 기숙사,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특수 병원 등 사회시설에서 생활하는 가구

비혈연 6인 이상 가구: 혈연관계가 없는 6인 이상의 사람들이 동일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

가구원수 및 평균 가구원수: 가구형태를 가구원수 기준으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가구로 구분하고 평균 가구원수는 일반가구 총가구원수를 총일반가구수로 나누어 계산함.

$$\text{평균 가구원수} = \frac{\text{일반가구 총가구원수}}{\text{총일반가구수}} \times 100$$

가구주: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비혈연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 중 한 사람(대표자)이 가구주가 됨.

성별 가구주 비율

$$\text{여자(남자)가구주비율} = \frac{\text{여자(남자)가구주가구수}}{\text{일반가구수}} \times 100$$

세대수별 가구 형태: 혈연가구의 가족 세대수를 기준으로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4세대 가구로 구분함.

-1세대 가구: 가구주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② 형제자매, ③ 부부 + 기타 친척)

-2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 자녀, ② 한부모 + 자녀, ③ 부부 + 양친, ④ 부부 + 한부모, ⑤ 부부 + 자녀 + 부부의 형제자매 등)

-3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 자녀 + 양친(또는 한부모), ② 양친(또는 한부모) + 부부 + 자녀 등)

-4세대 이상 가구: 가구주와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 이상에 걸쳐 사는 가구

가족의 형태: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 직계가족 및 기타가족으로 구분함.

-핵가족: 부부만의 가족, 부부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족,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

-직계가족: 부부와 양친(또는 한부모)부모로 구성된 가족, 부부와 양친(또는 한부모)부모, 자녀로 구성된 가족

-기타가족: 위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우

조혼인율: 1년간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text{조혼인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혼인건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조이혼율 :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

$$\text{조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이혼건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재혼건수 : 양쪽 모두 재혼인 경우만 집계함.

이상자녀수 : 15~44세 유배우 부인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수로서 전국표본조사를 통해서 파악됨.

노인의 거주가구 형태 : 노인의 거주가구는 혈연가구(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상), 비친족 가구, 1인가구 형태로 구분됨.

III. 교 육

25세 이상 인구의 학력구성비 : 25세 이상 성인인구에 대한 각 교육단계별 졸업자의 구성비를 나타냄. 재학생 및 중퇴자의 경우는 바로 아래 단계로 계산함.

$$\text{25세 이상 인구의 학력구성비} = \frac{\text{25세 이상 인구 중 졸업자수(중퇴자, 재학생 포함)}}{\text{25세 이상 성인인구}} \times 100$$

유치원 취원율 : 유치원 취원율은 4~5세 인구수(추계 연앙인구)에 대한 유치원 취원자의 비율임. 유치원은 국·공·사립 유치원을 모두 포함함.

$$\text{유치원 취원율} = \frac{\text{유치원 아동수}}{\text{4~5세인구}} \times 100$$

취학률 : 취학적령인구(추계연앙인구)대비 취학자의 비율임. 취학적령은 초등학교 만 6~11세, 중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로 하였음.

$$\text{취학률} = \frac{\text{취학자수}}{\text{취학적령인구수}} \times 100$$

진학률 :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text{진학률} = \frac{\text{상급학교 진학자수}}{\text{졸업자수}} \times 100$$

학업중단율 : 각 학교급별로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그밖의 기타 사유로 인해 제적, 중퇴 및 휴학한 학생의 비율임(94년~99년에는 학업중단자에 유학·이민자가 포함되었음).

$$\text{학업중단율} = \frac{(\text{제적} + \text{중퇴} + \text{휴학자수})}{\text{재적학생수}} \times 100$$

학급당 학생수 : 학급당 학생수는 학교급별 학생수를 학급수로 나눈 수치로 학생수는 재적(在籍) 학생수(휴학자 포함) 기준임.

$$\text{학급당 학생수} = \frac{\text{총학생수}}{\text{총학급수}}$$

공교육비 : 공교육비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회계절차를 거쳐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국·공·사립 각 학교급의 교비(인건비, 운영비, 시설사업비

등)와 육성회비를 포함하는 교육경비를 말함.

고등교육 접근율 : 25세 이상의 성인인구 중 대학 입학 경험자의 비율임.

$$\text{고등교육접근율} = \frac{\text{25세 이상 성인 중 고등교육기관 입학경험자}}{\text{25세 이상 전체 성인}} \times 100$$

연령별 고등교육 이수율 : 연령별 인구 중 고등교육기관 이수자(졸업자)의 비율임.

$$\text{고등교육이수율} = \frac{\text{해당연령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text{해당연령별 인구}} \times 100$$

IV. 노 동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를 포함한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text{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취업자 : 조사대상 기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

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포함하는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됨.

상용근로자 :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임시근로자 :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 :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자영자 :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고용주 : 유급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에게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18시간 이상 도와준 자

단시간근로자 : 근로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 파견, 용역, 가내, 호출 또는 독립도급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정해졌거나 계속근무시간이 1년 미만으로 기대되는 근로자

산업별 주당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일수

$$\text{주당 근로시간} = \text{월평균 근로시간수} \times \frac{7}{30.4}$$

$$\text{월평균 근로시간수} = \frac{\text{총 실근로시간수}}{(\text{전월말근로자수} + \text{당월말근로자수})/2}$$

산업별 월평균 임금수준

$$\text{월평균 임금수준} = \text{월급여총액} + \frac{\text{연간특별급여}}{12}$$

평균 근속년수 : 개별 근로자가 조사 당시 취업하고 있는 직장에서 근무해온 기간(년수)의 평균값임.

직장유지율 :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동일한 직장에 남아 있는 근로자의 비율로 이 보고서에서는 5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생애근로경력 :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과거의 근로경력임.

임금상승률 : 전년도 대비 임금총액의 상승률로 이 보고서에서 임금은 명목임금을 사용하였으며 임금총액은 정액급여와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를 모두 포함한 것임.

생산성 증가율 :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량 1단위(1인)당 명목부가가치임.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가공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만든 자료를 사용하였음.

V. 소득과 소비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 국가 영역 내에서 가구,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의 결과로 창출된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서 합계한 것.

국민처분가능소득(National Disposable Income, NDI) : 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나타낸 것으로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국민순소득(NNI)에 교포송금과 같이 생산활동과는 관계가 없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소득(국외수취경상이전)은 더하고 클레임 등 외국에 지급한

소득(국외지급경상이전)은 뺀 것.

- 국민처분가능소득(NDI) = 국민순소득(NNI) + 대외순수취 경상 이전

개인처분가능소득(Personal Disposable Income, PDI) : 개인이 임의로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하며, 국민소득을 분배측면에서 본 지표임.

- 개인처분가능소득(PDI) = 개인소득(PI) - 직접세 - 경상이전 지급

도시근로자의 가구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 및 가구원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보수(근로소득), 자영업으로부터의 가계전입소득 및 사업이윤과 부업소득(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적 수입(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 이전소득, 비경상소득(퇴직금 일시불, 복권당첨금, 상속금) 등 실질적인 현금 및 현물 소득의 합산한 소득임.

농가소득 : 농가 정의에 부합되는 가구의 소득으로 농업소득, 농외소득(겸업소득, 사업외 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임.

농업소득 : 농가의 당해연도 농업생산활동의 최종성과이며 투입된 생산요소에 대한 총보수를 의미하며 농업조수입(농산물 판매수입, 생산물 중 자가소비 평가액, 대동식물 증식액, 재고농산물 증감액)에서 농업경영비(농업지출현금, 현물지출 평가액, 농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 재고생산자재 증감액)를 차감한 금액

농외소득 : 농업 이외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성과로서 겸업소득(농사외의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과 사업외소득(사업외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을 합산한 금액

이전소득 : 농가가 비경제 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서 공적보조금(연금 등)과 사적보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

비경상소득 :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등 비경상적 소득

지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 내에서 새로이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1인당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

$$1\text{인당 GRDP} = \frac{\text{경상 GRDP}}{\text{연앙인구}}$$

소비지출 항목 : 소비지출은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 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소비지출은 조세부담금, 공적연금납부금, 사회보험납부금, 주거용건물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분됨.

내구재 : 예상 사용수명이 1년 이상인 재화

준내구재 : 의류, 신발 등과 같이 예상 사용수명이 1년 내외의 것으로 내구재에 비하여 구입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

비내구재 : 예상 사용수명이 1년 미만인 재화

평균소비성향 :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text{평균소비성향} = \frac{\text{소비지출}}{\text{처분가능소득}} \times 100$$

국민총처분가능소득(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 GNDI) : 국민총소득에 국외순취경상이전을 더한 소득, 또는 국민처분가능소득에 고정자본소모를 더한 개념임.

국민총처분가능소득 = 국민처분가능소득 + 고정자본소모

소득 5분위 배율 : 도시근로자가가구를 소득별로 20%씩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높은 5분위 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 소득으로 나눈 배율임.

$$\text{5분위 배율} = \frac{\text{상위 20\% 소득}}{\text{하위 20\% 소득}}$$

소득집중도(지니계수) : 지니계수는 0에서부터 1까지로 나타나며, 0인 경우는 완전균등분배이고 1인 경우는 완전불균등분배임.

VI. 문화와 여가

문화예술시설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시설은 공연시설(공연장, 영화관, 야외음악당),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관(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문화

원, 국악원, 전수회관), 기타문화시설로 구분됨.

공연장 입장률 : 음악관(회), 연극관(회), 무용, 영화관 등을 1년에 1회 이상 가본 사람의 비율임. 음악관(회) 관람에는 상설음악관은 물론 상설공연장소, 야외음악회 등 장소에 관계없이 연주회, 성악, 판소리, 대중가요 등 음악회에 입장한 것을 모두 포함함.

전시장 입장률 : 박물관·미술관에 1년에 1회 이상 관람한 사람의 비율임. 박물관에는 사설박물관을 포함하고 미술관은 사설미술관과 화랑을 포함함.

스포츠 관람률 : 각종 스포츠를 1년에 1회 이상 관람한 사람의 비율

시간 도서 발행실적 : 한국의 도서분류기준인 십진분류법(Korea Decimal Classification)에 따라 아동, 학습참고서는 포함시켰고, 만화, 팜플렛, 정부 및 연구기관 간행물, 정기간행물, 초·중·고 교육용 국·검인정 교과서는 제외되었음.

독서인구 비율 : 조사대상인구 중 1년간 1권 이상 책(주간지, 월간지 등 잡지류 포함, 교과서 및 참고서 제외)을 읽은 사람의 비율임.

일반서적 독서 : 교양서적류, 직업과 관련된 서적류, 생활·취미·정보서적류, 기타(백과사전, 육아사전 등)서적 등을 포함하고 교과서 및 참고서류는 제외함.

교양서적 독서 : 과학, 종교, 철학, 문학, 역사, 지리, 예술 서적 등

평균 독서량: 1년 동안 책을 읽었던 사람의 총 독서량을 전체 조사대상인구로 나누어 산출하였음.

VII. 주거와 교통

주택보급률: 일반가구수(총가구에서 단독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비율.

• 가구수는 주택공급 대상가구(일반가구 중 단독, 비월연가구를 제외한 보통가구)를 말하며, 주택수는 빈집을 포함한 수임.

$$\text{주택보급률} = \frac{\text{주택수}}{\text{일반가구수}} \times 100$$

연간 주택건설실적: 공공 및 민간 부문 주택건설을 모두 포함함. 공공주택은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민간주택업체 등에서 건설한 주택으로 국민임대,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의 방법으로 공급됨.

주택투자율: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주거용건물 건설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

$$\text{주택투자율} = \frac{\text{주택 투자}}{\text{실질 GDP}} \times 100$$

주택유형: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영업용(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등의 유형이 있음.

– **단독주택**: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모두 포함함.

– **아파트**: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 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다세대주택은 세대(가구)별로 분리하여 각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룸.

– **연립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영업용(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 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 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됨.

주택의 점유형태: 주택의 점유형태로는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원세, 사글세, 무상 등이 있음.

– **자가**: 법률상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소유로 되어 있는 집을 말하며, 집을 구입한 후 대금이 완불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됨.

– **전세**: 일정액의 현금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세금을 내고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로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를 말함.

— **보증부 월세**: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를 말함

— **무보증 월세**: 보증금이 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의 집세를 내는 경우를 말함.

— **사글세**: 미리 몇 개월치의 집세(방세)를 한꺼번에 내고 그 금액에서 매월 1개월분의 집세(방세)를 공제하는 경우를 말함.

— **무상**: 관사나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함.

거처의 시설형태: 한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거처의 주된 시설의 형태를 말하며 형태구분은 다음과 같음.

— **부엌시설**: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취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며, 입식부엌은 조리(취사)시설, 싱크대 등 현대식(입식)시설을 갖춘 부엌이 해당되며, 재래식은 싱크대 없이 재래식 아궁이 등을 갖추고 있는 부엌이 해당됨.

— **화장실 시설**: 수세식은 정화조를 갖추고 수도시설에 의하여 배설물을 씻어 내리는 시설이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 수세식 이외의 화장실시설을 재래식이라고 함.

— **목욕시설**: 목욕시설을 갖추고 따뜻한 물이 공급되면 온수시설, 그렇지 않으면 비온수시설로 함.

주택에 대한 만족도: 거주하고 있는 주택자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

로 거주지역에 관한 것이나 이웃관계 등과 같은 주택 외적 제요인은 포함시키지 않음.

주택에 대한 불만이유의 종류: 주택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약간 불만 또는 매우 불만이라고 응답한 하였을 경우의 불만이유로 일조·통풍불량, 주택노후, 주택협소, 난방시설불량, 부대시설 미흡, 상·하수도 시설 미흡 등이 제시됨.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인근 교통시설, 각종 편익시설, 주변환경, 공해 등 거주지역 전반에 대한 만족도의 측정으로 여기에는 거주지역 주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요인이 포함됨.

거주지역에 대한 불만이유: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약간 불만, 매우 불만이라고 응답하였을 경우 불만이유는 교육여건이 안 좋음, 교통사정이 안 좋음, 주변환경이 안 좋음, 공해, 먼 편익시설, 범죄발생 등으로 구분하여 질문함.

주택마련 방법: 조사 당시 주택소유여부와 관계없이 과거에 자기집이 있었거나 현재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의 가구주에게 자기소유의 최초주택을 마련할 때 주택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였는지를 파악하여 각 방법(자금원천)의 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함. 주택 마련 방법들은 아래와 같음.

— **부모 및 친척 보조**: 부모, 형제, 처가, 기타 친척 등이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매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보조한 경우로 동산, 부동산을 포함함.

— **저축** : 각종 금융기관의 예(적)금, 만기보험금, 갯돈 등을 포함하며 보관상 일시적으로 예금한 경우의 것은 제외함.

— **융자 및 사채** : 금융기관, 직장,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말하며 직접 빌리지는 않았지만 융자금이나 사채금을 안고 주택을 구입한 금액도 포함되며 장기 융자금이나 장기사채의 일부가 상환된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마련시기 기준으로 상환된 금액은 제외함.

— **퇴직금·보상금** : 퇴직금, 연금, 각종 사고로 인하여 받은 보험금, 국가, 사회단체로부터 받은 각종 보상금

— **재산매각** : 자기소유의 동산(채권, 증권 등) 또는 부동산을 매각한 돈이나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과 수몰지역 보상금과 같은 재산의 피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은 보상금도 포함함.

— **중여 및 상속** : 주택 전체를 무상으로 얻거나 혹은 상속받은 것을 말하며, 법적인 상속 혹은 실질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임.

• 세를 살다가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의 경우 전세금 마련방법을 원천별로 분류함.

가구당 월평균 교통비 지출비율 : 도시가구 소비지출 중 교통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로 공공교통지출과 개인교통지출이 포함됨.

— **공공교통비** : 버스, 택시, 기차, 항공 및 기타 공공교통 운송료, 보관료 등을 포함함.

— **개인교통비** : 자전거, 자가용차, 오토바이 및 개인교통

유지·수리비 등을 포함함.

$$\text{가구당 월평균 교통비지출 비율} = \frac{\text{교통비지출액}}{\text{소비지출액}} \times 100$$

자동차 등록현황

$$\text{1인당 자가용승용차 보유대수} = \frac{\text{자가용승용차 등록대수}}{\text{추계인구}}$$

$$\text{1가구당 자가용승용차 보유대수} = \frac{\text{자가용승용차 등록대수}}{\text{추계인구}}$$

통근인구 : 12세 이상 인구 중 매일 정기적으로 직장 에 근무하러 다니는 인구를 말함.

통학인구 : 12세 이상 인구 중 정규학교(원)뿐만 아니라 입시준비학원, 이·미용학원, 양재학원, 각종 기술 학원 및 직업훈련원 등에 다니는 인구를 말함.

VIII. 보 건

영아사망률 : 연간 태어난 출생아 1,000명당 만 1세 미만에 사망한 영아수

모성사망비 : 출생아 10만명당 모의 사망자수

건강수명 : 평균수명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주관적 건강평가 :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및 사회적

으로 안정된 상태(Social Well-being States)라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음.

유병률 : 표본조사에 의해서 산출되는 지표로서 파악 질환의 발생 시기를 불문하고 일정 기간(2주간) 중에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서 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질환의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어린이 : 잘 놀지 못하고 병원이나 약물치료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정도
- 학생과 직장인 : 공부나 직장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
- 주부 등 : 평소에 하던 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
- 장기질환자 및 기타 심신장애자
- 유병률에 대한 조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각되지 않는 질병은 조사하기 힘들고 계절적 질병(예 : 감기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 등의 단점이 있음을 유의하여 이용하여야 함.

유병일수 : 조사대상기간(2주일)중 병으로 평상시의 활동에 부분적 내지 전반적인 지장이 있었던 일수. 이 지표는 개인의 건강문제를 기능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의 입장에서 본 것으로 비교적 종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

와병일수 : 유병자가 조사대상기간(2주일) 중 질병으로 만나질 이상 누워 있었던 일수 말하며, 결근, 결석, 입원일을 포함함.

사망원인별 사망률 : 인구 10만명당 고혈압성 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병 등 질환별로 사망한 사람의 수를 말함.

음주인구 비율 : 조사대상인구 중에서 음주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흡연인구 비율 : 조사대상인구 중 흡연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운동실천율 : 1회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한 사람의 비율

신체중량지수(BMI) : 신장에 대한 체중의 비율임. 일반적으로 성인 남녀의 경우 지수가 25정도면 정상이고 수치가 커질수록 비만함을 의미함.

의료인력 현황 :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 약사로 구분하여 1인당 인구(연앙추계인구)수로 산출함.

- 실제 활동 중인 의료인력수가 아니라 면허 등록자수를 기준으로 지표를 작성하고 있음.

과부담 의료비 지출 : 가구의 총 소비지출에서 기초생계지출로 볼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식료품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의료비 지출이 40% 이상인 경우임.

GDP 대비 국민의료비 : 경상금액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국민의료비 비율

- 국민의료비: 보건 의료 서비스 및 물품 구입을 위해 지출된 총액임

공공의료비 : 공공의료비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보험 등에 의해 지출된 보건 의료비를 말함.

IX. 복 지

사회보험 : 보험료를 받아 해결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을 시행하고 있음.

공공부조 : 사회보험에 의해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 자활능력이 없는 빈곤계층을 국가가 부조해주는 제도로써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사회복지서비스 : 아동, 노인, 장애인, 부랑자, 여성 등 특정 집단의 사회적 욕구에 서비스하기 위한 제도로써 우리나라는 시설보호사업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건강보험 부담액 및 건강보험 급여액 : 건강보험부담액과 건강보험급여액의 지표는 건강보험 적용인구 대비로 아래와 같이 산출됨.

— **건강보험부담액** : 건강보험적용인구 1인당 1년간의 건강보험료

$$\text{1인당 건강보험부담액} = \frac{\text{건강보험 총부담액}}{\text{연평균 건강보험 적용인구}}$$

— **건강보험급여액** : 건강보험적용인구 1인당 평균적으로 급여된 액수임.

$$\text{1인당 건강보험급여액} = \frac{\text{총급여액}}{\text{연평균 건강보험 적용인구}}$$

공적연금 수혜자와 급여비 : 공적연금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소득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이며, 우리나라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주요 지표로는 공적연금수혜자 비율과 공적연금 평균급여비가 있음.

$$\text{공적연금 수혜자 비율} = \frac{\text{공적연금 수혜자수}}{\text{공적연금 가입자수}} \times 100$$

$$\text{1인당 공적연금 평균급여비} = \frac{\text{연금별 급여비}}{\text{연금별 수혜자수}}$$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 국민연금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자영업이 주 계층인 지역 가입자 중에서 신청에 의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납부 예외를 승인한 자들을 의미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보호수급자 비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보호수급자가 각각 전체인구(7월 1일 연앙인구) 중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파악하는 지표임.

$$\begin{aligned} \text{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 \\ \frac{\text{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text{총인구}} \times 100 \end{aligned}$$

$$\text{의료급여 대상자 비율} = \frac{\text{의료급여 대상자수}}{\text{총인구}} \times 100$$

노인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율과 복지시설 수용자 비율 : 노인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율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비율이고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비율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노인복지시설 수용자의 비율임.

노인복지생활시설 : 노인복지생활시설로는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 및 유료노인양로 시설 등이 있음.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치료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유료양로 및 유료노인양로 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보육시설 : 어린이의 보육시설로는 국·공립시설, 민간시설, 직장시설 등이 있음.

— **국·공립시설** : 국가가 지원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

— **민간시설** : 민간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보육시설

— **직장시설** : 직장에서 시설하고 운영하는 보육시설

— **가정** : 규모는 작으나 가정에서 자신의 아동과 같이 또는 소수의 인원을 보육

장애인 출현율 : 인구 100명당 장애인 수

장애인등록률

$$\text{장애인 등록률} = \frac{\text{등록장애인수}}{\text{추정장애인수}} \times 100$$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의미함.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에 발표되며 다음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됨.

차상위빈곤계층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잠재적 빈곤계층

X. 환 경

환경지속성지수 :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ESI)는 세계경제포럼(WWF)에서 2001년부터 발표하는 환경지수로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파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임.

농지면적감소율 : 토지(농지)사용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전체 농지면적에 대한 감소된 농지면적의 비율임.

$$\text{농지면적 감소율} = \frac{\text{감소면적}}{\text{농지면적}} \times 100$$

도시화율 : 한 국가의 도시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국가의 총인구에 대한 도시지역 인구의 비율임.

$$\text{도시화율} = \frac{\text{도시인구}}{\text{총인구}} \times 100$$

수도권집중도 : 전국 대비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인구집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전국 인구에 대한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주민등록인구기준)의 비율임.

$$\text{수도권집중도} = \frac{\text{수도권 인구}}{\text{전국 인구}} \times 100$$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 물질 또는 액체물질로 아황산가스(SO₂),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₂), 먼지(TSP),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의 배출량을 말함.

1인당 오수발생량 : 하루에 발생하는 국민의 1인당 오수발생량

상수도 보급률과 1인당 급수량 : 급수인구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급수시설이 정비된 지역 내에 거주하여 수도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를 의미하며 상수도 보급률은 총인구에 대한 급수인구의 백분율로, 그리고 1인당 급수량은 1일 총급수량을 총인구로 나눈 수치임.

$$\text{상수도 보급률} = \frac{\text{상수도 급수인구}}{\text{총인구}} \times 100$$

$$\text{1일 1인당 급수량} = \frac{\text{1일 총급수량}}{\text{총인구}} \times 100$$

- 총인구 :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행정구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인구
- 급수량 : 상수도 시설을 가동하여 하루 동안 공급한 급수량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 에너지 수급은 1차 에너지와 최종에너지로 구분되는데 1차 에너지란 오랜 세월 동안 역학적인 절차의 반복으로 형성된 천연상태의 에너지로 전환과정을 거치지 않은 에너지를 말하고,

최종에너지는 최종 소비 부분의 에너지 이용설비에 알맞은 형태로 생산된 에너지를 말함.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 각종 에너지의 열량을 석유 1톤당 열량값인 107 Kcal로 환산한 지표임.

아황산가스(SO₂) : 대기오염의 주된 물질로 환경기준은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5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이하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 물 속의 미생물이 산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유기물을 분해, 안정시키는 데 요구되는 산소량으로 물의 유기오염의 지표 중 한가지임.

주요 도시의 오존(O₃)오염도 : 오존은 「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 제2조②」에 따라 대기오염 경보대상 오염물질로 지정된 물질로 환경기준은 연간 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이하이고, 1시간 평균농도 0.12ppm 이상 시는 주의보, 0.3ppm 이상 시는 경보, 0.5ppm 이상 시는 중대경보를 발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임.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됨.

하수도 보급률 : 하수도 보급률은 총인구에 대한 총하

수처리인구의 백분율로 측정됨.

$$\text{하수도 보급률} = \frac{\text{총하수처리인구}}{\text{총인구}} \times 100$$

환경보호지출 :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EPER :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venues)통계는 환경보호활동을 위해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가 부담한 지출액과 환경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수입액을 경제주체별 및 환경영역별로 추계한 통계임.

XI. 안 전

홍악범죄 발생건수 : 법무부에서는 2003년부터 강력 범죄 중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유인, 체포감금 을 폭력범죄로 분류하고 살인, 강도, 강간, 방화를 홍 악범죄로 분류하여 각각의 발생건수를 구분하여 집계하고 있음.

교통사고 : 교통사고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 하는 도로에서 차와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를 말함. 단, 1984년부터 통계는 인적피해 사고만을 의미하여 물적피해사고는 포함하지 않음. 인적피해 사고 중 사망은 교통사고 발생시부터 30일 이내(1999년 이전까지는 72시간 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음. 따라서 교통 사고 통계에서 사망과 보건 부문에서 나오는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선행사인에 의한 사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자연재해 : 자연재해는 호우, 폭풍, 태풍, 해일, 폭설 (우박)에 의한 재해를 말함.

피해액 : 전답 등의 침수와 건물, 선박, 농경지, 농작물, 공공시설(도로, 하천, 수도, 항만, 학교, 철도, 수리, 사방, 조림, 통신, 전력 등), 축대, 가축, 동산 등의 물적 피해 액수(경상가격 기준)

사망자수 : 산사태, 건물붕괴, 급류, 선박침몰, 기타 등의 발생원인에 따른 사망자와 실종자수의 합계임.

XII. 사회통합

법률구조 :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 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 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임. 법률구조대상자는 농·어민, 월평균 수입 1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이하의 공무원 및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 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호대상자등)임.

사회적 이동 : 사회적 이동은 사회적 지위 또는 계층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대 간(세대와 세대사이) 이동과 세대 내(당대) 이동으로 구분됨.

주관적 계층 : 사회조사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응

답자의 계층 소속 의식으로 ① 상의상 ② 상의하 ③ 중의상 ④ 중의하 ⑤ 하의상 ⑥ 하의하 등 6분법으로 구분될 수 있음.

자원봉사 참여율 : 15세 이상 인구 중 자원봉사 참여 자수가 차지하는 비율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995년부터 매년 1회씩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임.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매년 각국의 교육수준과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조사해 인간개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임.

남녀평등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 : 남녀평등지수(GDI)는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국가별로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하여 발표하는 지수임.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 여성권한척도(GEM)는 유엔개발계획에서 국가별로 여성의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측정하여 고위직에서의 남녀평등정도를 평가한 것임.

인터넷의 양적 활용지수 :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여부와 하루 평균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 측정 항목을 가중 계산하여 산출함.

인터넷의 질적 활용 격차지수

$$\text{질적활용격차지수} = 1 - \left(\frac{\text{대상소외계층질적활용지수}}{\text{일반국민질적활용지수}} \right) \times 100$$

인터넷 이용률 : 만 3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을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인터넷 접속률 : 전체 가구 중 실제 인터넷 접속여부와 관계없이 XDSL, 케이블 모뎀, 아파트랜, 무선랜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

『한국의 사회동향 2008』 연구기관과 연구진

연구용역기관 : 에스콰이아학술문화재단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협력기관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진

연구책임자 : 석현호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강상진 (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

구혜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박경숙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수진 (통계개발원)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이희길 (통계개발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조병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진호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연구보조원 : 김대훈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윤수연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이가영 (한국사회과학자료원)

